

인천 청렴 이음

Vol.3

반부패 청렴 매뉴얼

20
21

인천 청렴 이음

Vol.3

반부패 청렴 매뉴얼

20
21

민선7기 인천시는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 중심의 행정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갑질, 부정청탁, 금품수수, 직위의 사적 이용, 직무 관련 정보 이용 등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고 자발적인 친절을 실천하는 등 『청렴이 기본인 도시, 인천』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인 청렴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여전히 과거 행정의 답습, 부조리, 불공정 등이 어두운 그림자처럼 웅크리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환경과 날로 높아지는 시민 여러분의 바램은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행정 수행, 전문성 강화, 보다 적극적인 업무 수행 등 공직사회의 더 큰 변화와 혁신을 촉구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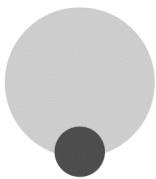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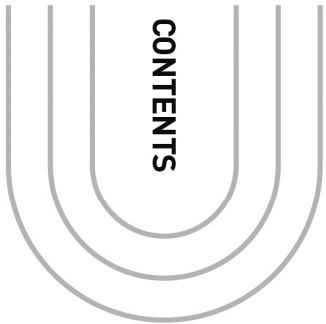
『2021 인천청렴이음』은 인천독립 40주년(민선7기 3주년)을 맞이해서 청렴행정을 통해 축적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이러한 잠재적 위협요소와 변화에의 촉구에 대한 답을 찾고자 마련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 보호 및 부패행위 신고 등을 정리한 메뉴얼은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의 준수·의무사항을 알리고 위반신고 등의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21년 인천시의 다양한 반부패·청렴시책 등을 안내·공유함으로써 인천시 산하 기관과 관내 전 유관기관까지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고 청렴행정을 제도화하여 전반적인 인천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도 기대합니다.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모든 공직자들이 두 편의 자료를 행정 현장에서 적극 활용함으로써 청렴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더욱 높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 7.

인천광역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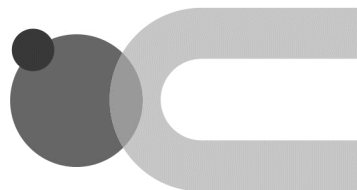
박남춘



PART 1	청탁금지법	1
PART 2	공무원 행동강령	121
PART 3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255
PART 4	신고·조사 및 보호보상	287
PART 5	부패영향평가	343
PART 6	청렴 취약분야 모니터링	369
부 록 1	반부패·청렴정책	425
부 록 2	청렴인천 다짐	569
부 록 3	관련 법령	575

PART 1 청탁금지법

제1장 총론	3
Ⅰ. 청탁금지법 개요	5
1. 목적	5
2. 개념	5
Ⅱ.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6
1. 적용대상기관	6
2. 적용대상자	6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9
Ⅰ. 부정청탁의 금지	11
1. 부정청탁의 주체	11
2.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	11
3. 부정청탁의 방법	13
4. 부정청탁의 성립요건	14
Ⅱ. 부정청탁 대상직무	16
1.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	16
2. 부정청탁의 7가지 예외사유	26
Ⅲ. 부정청탁 처리 절차	27
1. 부정청탁의 처리 절차	27
2.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28
Ⅳ.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30
1. 징계	30
2.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30



참고. 부정청탁의 확인 및 상담·신고처리 세부절차	32
1. 부정청탁의 확인 절차	32
2. 부정청탁 자가 진단 Check List 1~4 목록	33
3. 부정청탁의 상담 및 신고 처리 절차	36
제3장 금품등 수수 금지	37
I. 수수 금지 금품 등	39
1. 제재대상이 되는 수수 금지 금품 등	39
2. '동일인'과 '1회'의 의미	39
3. 회계연도	40
4.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	40
5. 금품 등	41
6. 금지행위	42
II. 수수 금지 금품등 예외사유(8가지)	43
III.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50
1.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반환	50
IV.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52
1. 외부강의등의 범위 판단기준	52
2. 용역·자문 대가의 규율	52
3. 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제한	53
V.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54
1. 징계	54
2. 형사처벌	54
3. 과태료 부과 및 취소	55
4. 몰수·추징과 징계부가금	59
5. 양벌규정	59
6. 재심의(이의) 신청	60

참고. 신고 처리 및 조치 세부절차	61
1. 수수금지 선물 확인 및 신고·조치 처리	61
2. 수수 금지 음식물 확인 및 신고·조치 처리	67
3. 수수 금지 경조사비 확인 및 신고·조치 처리	72
4. 예외사유 제6호(직무관련 공식적 행사)	76

제4장 주요 사례 79

I.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주요 사례	81
1. 공직자등 해당여부	81
2. 공무수행사인 인정 여부	85
3. 기타	88
II. 부정청탁 주요 사례	90
1. 부정청탁의 성립요건	90
2. 부정청탁의 대상직무	92
3.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100
III. 금품등 수수 금지 주요 사례	102
1. 금품등, 직무관련성의 의미, 금품등의 가액 평가	102
2.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106
3.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114
4. 외부강의 등 주요사례	116

PART 2 공무원 행동강령

제1장 행동강령 이해 123

I. 행동강령이란?	125
1. 행동강령의 의의	125
2. 공무원 행동강령의 필요성	125



제2장 행동강령 실무	129
I. 총칙	131
제1조 (목적)	131
제2조 (정의)	132
제3조 (적용 범위)	137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138
제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141
제5조의2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147
제5조의3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149
제5조의4 (가족 채용 제한)	151
제5조의5 (수익계약 체결 제한)	153
제5조의6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155
제6조 (특혜의 배제)	158
제7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159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162
제9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163
제10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164
제10조의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165
제11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167
제12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171
제13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174
제13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	180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181
제14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184
제14조의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192
제1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95
제16조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208
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	212
제18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214
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215

제20조 (징계 등)	220
제21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221
제22조 (교육)	224
제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225
제24조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227

PART 3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I.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및 구성	257
II. 이해충돌방지법 내용	259
1. 총칙	259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264
3.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278
4. 징계 및 벌칙	284

PART 4 신고·조사 및 보호보상

I. 신고접수·처리 일반	289
1. 개요	289
2. 신고대상	289
3. 신고처리	294
4. 처리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302
II. 신고자 보호	305
1. 개요	305
2. 신고자 보호지침 표준안 주요내용	305
3. 신고자 비밀보장	308
4. 신고사건 처리 단계별 유의사항	311
5. 신고자 보호제도의 안내	313



Ⅲ. 신고자 보상	315
1. 개요	315
2. 보상·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요건	315
3. 업무처리 절차	316
4.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추천	318
5. 부정청탁·금품등 수수신고 및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추천	319

PART 5 부패영향평가

Ⅰ. 부패영향평가 개요	345
1. 개요	345
2. 평가방법	346
3.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347
4.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356
5. 관련법령	364
6. 관련서식	366

PART 6 청렴 취약분야 모니터링

제1장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371

Ⅰ.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373
1. 추진개요	373
2. 2020년 추진실적	374
3. 2021년 추진계획	376
4. 점검 및 평가	379
Ⅱ.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지표	380
1. 2021년 시 자체 평가지표	380
2. 2021년 군·구 평가지표	3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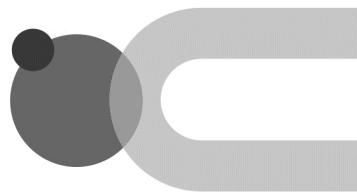
Ⅲ. 참고	392
1. 청백-e시스템 예방행정 시나리오 목록(102종)	392
2. 자기진단 표준업무 목록(30종)	396

제2장 청렴 마일리지 제도 397

Ⅰ. 청렴 마일리지 제도 운영	399
1. 추진개요	399
2. 2020년 추진실적	399
3. 2021년 개선사항	400
4. 2021년 추진계획	401
5. 2021년 운영평가	402
Ⅱ. 청렴 마일리지 평가지표 및 세부기준	405
1. 2021년 평가지표	405
2. 2021년 평가지표별 세부기준	407

제3장 청렴 해피콜 제도 415

Ⅰ. 청렴 해피콜 제도 운영	417
1. 추진개요	417
2. 2020년 추진실적	417
3. 2021년 운영계획	419
Ⅱ. 청렴 해피콜 대상업무	421
Ⅲ. 청렴 해피콜 설문지	422
Ⅳ. 청렴 해피콜 관련서식	423



부 록 1 반부패·청렴정책

제1장 청렴도 측정 427

I.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429
II. 2020년도 청렴도 측정 성과	431
III. 2021년도 주요 추진방향	432
IV. 2021년도 청렴도 측정 세부계획	433
1. 측정 대상기관(안)	433
2. 측정 업무	435
3. 측정모형	436
4. 결과발표	438
V. 향후 추진일정	439

제2장 부패방지 시책평가 445

I.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개요	447
1. 개요	447
2. 기본방향	448
3. 202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주요내용	448
4. 추진일정	452
II.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지표	461
III. 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497
1. 총평	497
2. 지표별 평가결과	500

제3장 반부패·청렴 종합계획 543

I. 반부패·청렴 종합계획 545

1. 2021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체계 547

①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 인천 548

1)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활동 및 제도개선 강화 548

2) 다방향 소통행정으로 시민의견 수렴 본격화 549

3)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홍보 캠페인 전개 552

② 스스로 실천하는 청렴 인천 553

4) 공직자 스스로 실천하는 청렴활동 다양화 553

5) 고위직 청렴활동 참여로 청렴리더십 강화 555

6) 청렴해피콜·청렴문자로 부패유발요인 사전 차단 556

③ 공정투명한 청렴 인천 557

7)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 시행 557

8) 다양한 신고채널과 예방감찰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559

9) 취업심사취업제한제도 운영 560

④ 도약하는 청렴인천 561

④ 도약하는 청렴인천 562

11) 청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청렴이음 한마당』 개최 5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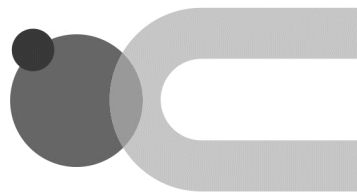
12) 『인천형 청렴 가치관 확립』을 위한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563

1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통한 반부패 시스템 정착 564

14) 청렴매뉴얼 『청렴이음』 최초 제작 565

15) 『생활속 100가지 청렴』 일상화 566

2. 향후계획 5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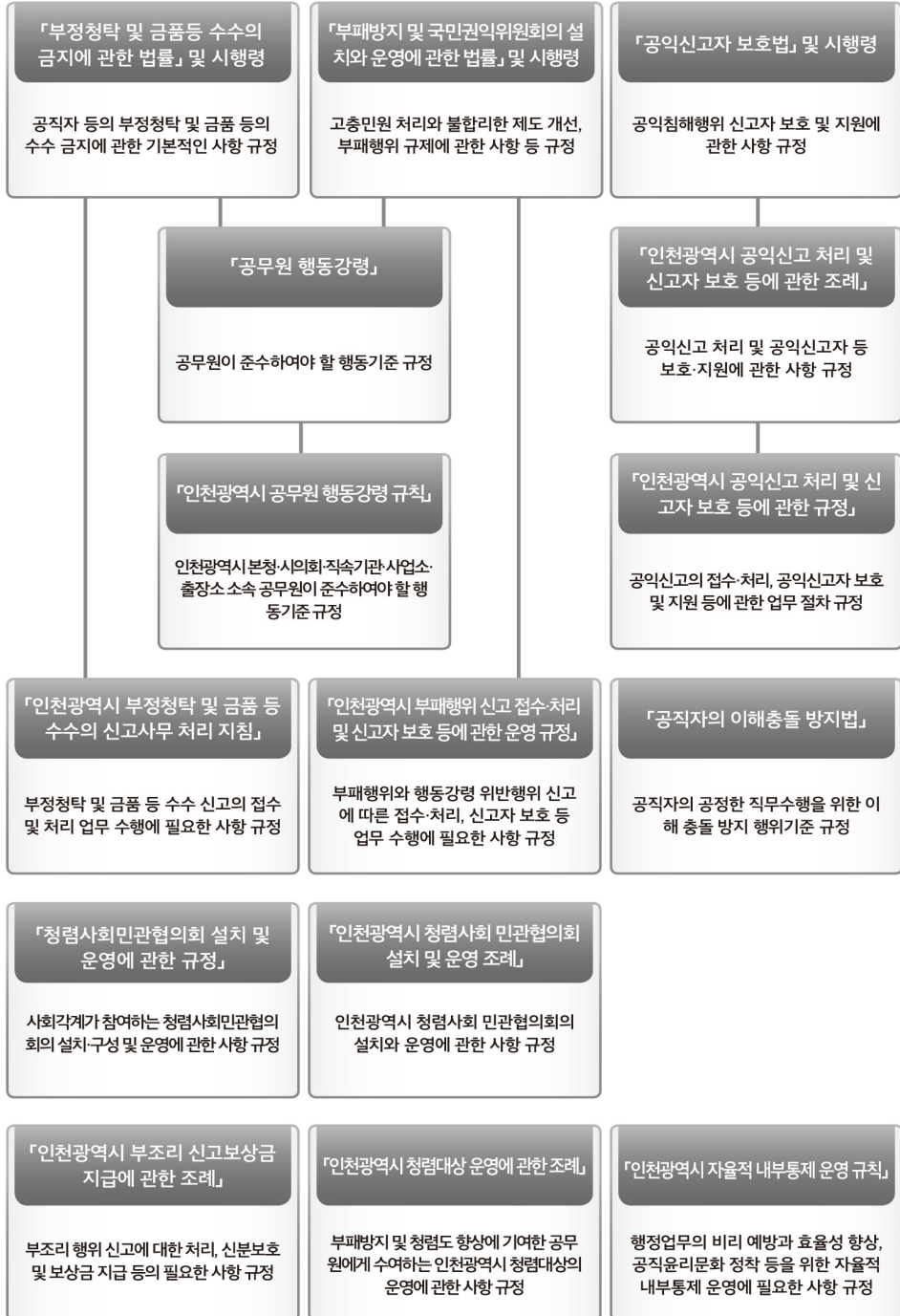
부 록 2 청렴인천 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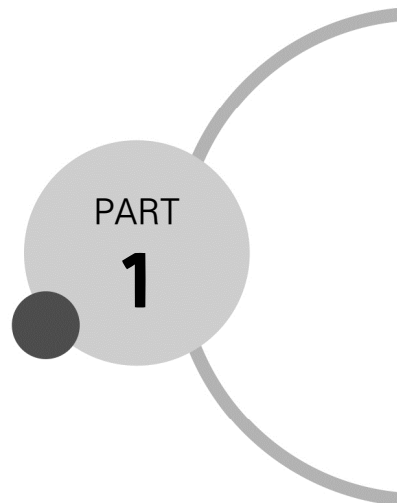
I. 2021년 청렴서약서(업무담당자)	571
II. 2021년 청렴서약서(고위공직자)	572
III. 공직자 ‘이것만은 지킵시다’	573
IV. 청렴액자 다짐서	574

부 록 3 관련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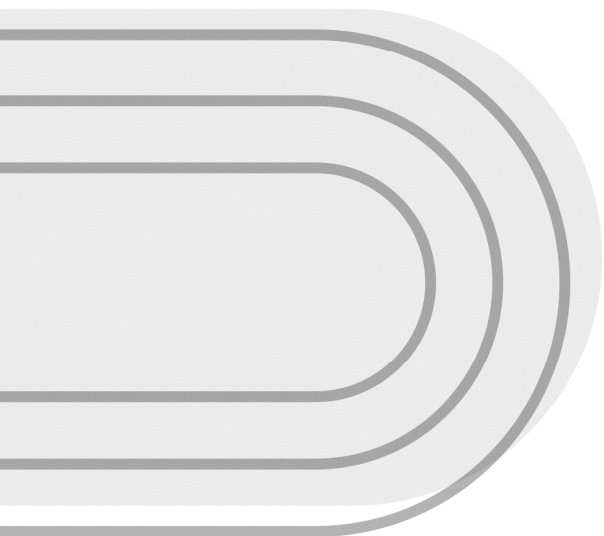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577
2. 인천광역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 지침	602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605
4. 공무원 행동강령	621
5.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634
6.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652
7. 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655
8. 인천광역시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658
9. 인천광역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규칙	660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667
11. 인천광역시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725
12.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	730
13.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765
14.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770
15.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778

■ 반부패·청렴 관련 법규(18) : 법령 9, 조례 4, 규칙·규정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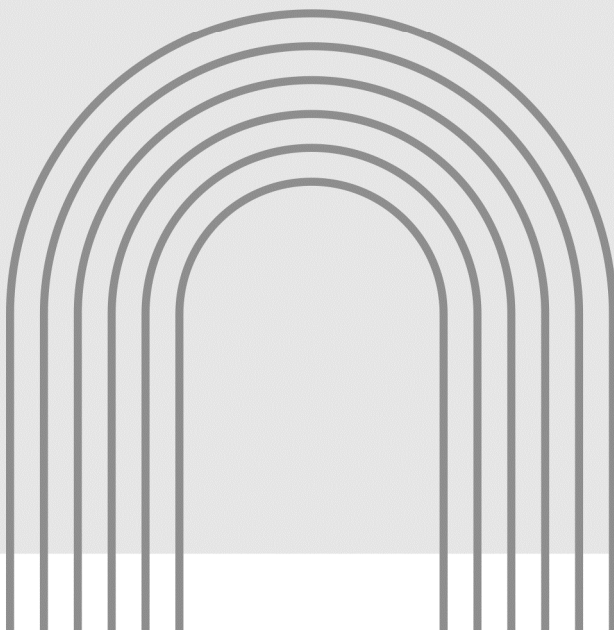
청탁금지법





제1장

총론



I 청탁금지법* 개요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함)

1 목적

-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개념

■ 부정청탁의 금지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금지되는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14개로 구체화(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 다만,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부정청탁 예외사유(7개) 규정(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 금품 등 수수금지

-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수수 시 형사처벌
-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 시 과태료 부과
-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금품등은 제외(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II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1 적용대상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교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2 적용대상자

■ 공직자등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른 법률에 따라 임용·복무·신분보장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 사법연수생(법원조직법), 공중보건의사(농어촌의료법), 청원경찰(청원경찰법)
 -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 공무원도 해당
 - ※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법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임직원
 - ※ 임원(이사·감사)은 상임·비상임 포함, 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도 해당
 - ※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직원은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이 아님
-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는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직원은 공공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 포함)

■ 공무수행사인

-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법령의 범위에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규칙을 포함)과 법령의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
 -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방송법」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신문법」에 따른 편집위원회, 「신문법」에 따른 독자권익위원회 등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 포함, 법인·단체의 소속 구성원인 개인은 포함되지 않음
 - ※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록·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록 및 등록갱신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3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 「경관법」상 건축물의 경관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건축법」상 공사감리자의 감리,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검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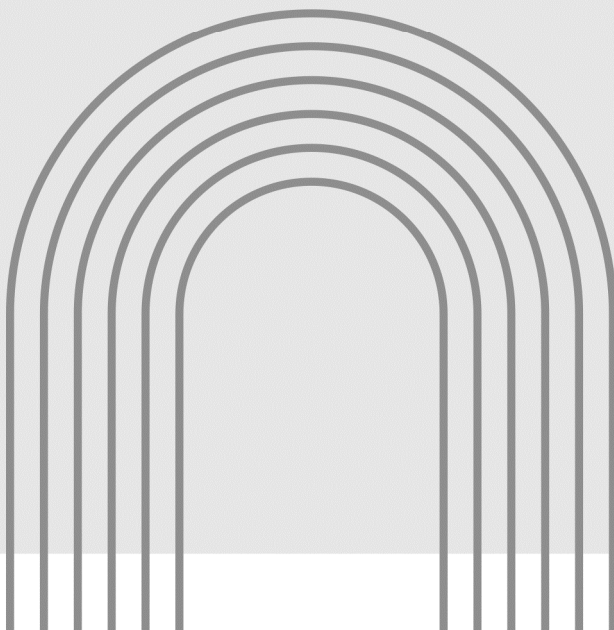
■ 기타

-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를 금지
- (일반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일반인
 - 법인·단체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인 종업원 외에 법인·단체도 양벌규정(법 제24조)에 따라 제재 대상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I 부정청탁의 금지

1 부정청탁의 주체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행위를 금지(법 제5조제1항)
- ‘누구든지’는 실제 청탁행위를 할 수 있는 자를 전제로 하므로 자연인만 해당하고 자연인을 통해 행위하는 법인은 제외
 - ※ 형법 제355조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중략〉…**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 법인 소속 임직원(자연인)이 업무에 관하여 실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법 제24조(양벌규정)에 따라 제재대상

2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

■ 부정청탁의 상대방과 범위 확정의 필요성

- 부정청탁이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14가지 대상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부정청탁의 상대방은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임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최초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
 - 신고절차를 따를 경우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으므로 **선량한 공직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
- 공직자등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법 제21조)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의 범위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 외에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등을 포함
 - 또한, 내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권을 위임한 경우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도 포함
 - ※ 내부 규정에 따라 전결권이 위임된 경우 대외적 명칭은 기관장이고 외부에서는 전결권이 누구에게 위임되었는지 알 수도 없으며, 전결권을 위임하였더라도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사 표시 및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
-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지시 등을 통하여 사무를 처리한 경우
 - 상급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지시를 통해 사무를 처리하는 그 자체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므로 형사처벌 대상
 - 상급자의 지시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의 성격도 가지므로 하급자는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 지시에 따른 경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형사처벌 대상
- 다만,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직책에 있는 공직자등’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포함되지 않음
 - ※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직책에 있는 공직자등’까지 포함시킬 경우 신고의무의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질 우려
 -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직책에 있는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전달한 경우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

3 > 부정청탁의 방법

Part 1

청탁 금지법

■ 직접 청탁의 의미

-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하는 부정청탁이 금지됨
- 다만,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금지되는 행위와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가 불일치
-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과 과태료 부과 대상인 제3자를 통한(위한) 부정청탁의 구분이 중요
-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이익·불이익)가 직접 청탁행위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의미

※ 자신에게 귀속되는 이익이나 불이익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반사적인 경우는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

■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

- 부모·자녀 등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도 그에 따른 효과(이익·불이익)가 제3자인 부모·자녀 등에게 직접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
- 자녀를 위한 부정청탁도 자녀가 미성년자인지 성년자인지를 불문하고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

■ 법인 소속 임직원의 업무 관련 부정청탁

- 제3자를 위한 청탁인지 여부
- 실제 청탁행위를 할 수 없는 법인의 경우 소속 임직원이 업무에 관하여 한 부정청탁이 제3자를 위한 청탁인지 여부가 문제
- 법인과 임직원은 별개의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이므로 법인 소속 임직원(대표권 있는 자를 포함)의 청탁은 법인을 위한 것이며 결국 그 효과도 법인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

- 대표권 있는 임직원의 **대표권에 부정청탁행위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종업원의 부정청탁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의제 불가

※ 범죄행위의 경우 법인의 기관인 임직원의 행위가 법인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

- 법인 소속 임직원의 업무 관련 청탁을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으로 보는 경우 법인은 언제나 제재대상에서 제외되어 입법취지가 몰각

● 업무 관련 부정청탁을 한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 청탁금지법 제24조(양벌규정)에서 행위자인 종업원 외에 사업주인 법인도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법인 자체는 실제 위반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인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없지만**,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임직원 외에 법인도 처벌한다는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도 제재 가능**

- 청탁금지법 제24조의 양벌규정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위자와 법인 모두를 처벌하는 특별규정
-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에 관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 (종업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개별 **벌칙조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 (법인) 양벌규정(법 제24조)에 따라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지 않은 이상 **과태료 부과 대상**

4 부정청탁의 성립요건

■ 법령을 위반하여

● 법령의 범위

- 부정청탁의 성립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에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을 포함. 또한, **조례·규칙도 포함**(헌재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412·662·673(병합))
- 법령에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일반 법령도 포함. 또한, 각종 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절차법도 포함

※ 예시 : 교통영향평가를 생각하고 건축허가를 내 주도록 청탁한 경우, 청문을 거치지 않고 각종 사업인가를 내 주도록 청탁한 경우 등

-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훈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의 위반은 곧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음
- 비례원칙, 신의성실 원칙 등과 같은 일반 법원칙은 개별 법령의 해석·적용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있으나, 법령의 매개 없이 일반 법원칙이 바로 법령을 위반하였는지의 판단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 ‘정상적인 거래관행’의 의의 및 판단기준

- 다른 부정청탁행위와 달리 공공기관의 재화·용역 관련 부정청탁행위는 ‘법령을 위반하여’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
 - 공공기관의 재화·용역의 거래는 법령에서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요건으로 규정
-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부정청탁이 없었다면 이루어졌을 통상적인 거래 조건을 의미
 - ※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났는지 여부는 행위의 의도·목적,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다른 사람이 받는 피해, 공공기관의 내부기준이나 사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특별한 사정 없이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행위에 해당
- 판례는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거래의 상황, 거래자의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상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

Ⅱ 부정청탁 대상직무

1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

- ① 인·허가·면허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
- ②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직무
- ③ 채용·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 ④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 직무
- ⑤ 각종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직무
- ⑥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 ⑦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 ⑧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 ⑨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 ⑩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 관련 직무
- ⑪ 병역 관련 직무
- ⑫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 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 ⑭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등 관련 직무

■ 인·허가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호)

- 인가·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인가·허가·면허·특허 등 법률상 열거된 행위 외에도 지정·등록·신고 등 열거된 직무에 준하는 직무도 포함
- 제1호 대상직무의 유형 및 주요 사례
 - (인가)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
 - ※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 설립인가, 「고등교육법」상 사립대학 설립인가 등

- (허가)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개인의 자유를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회복하여 주는 행위
 - ※ 「건축법」상 건축허가,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영업허가, 「골재채취법」상 골재채취허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점용허가 등
- (면허) 일반인에게 허용되지 않는 특수한 행위를 특정 사람에게만 허가하는 처분 내지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을 행정기관이 허가하는 것
 - ※ 「의료법」상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면허, 「공중위생관리법」상 이·미용사 면허 등 개인의 자격을 부여하는 각종 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각종 사업면허 등
- (특허) 특정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인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정행위(실정법상 면허·허가 등)
 - ※ 특허기업의 특허, 공물사용권의 특허, 광업권·어업권, 「약사법」상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등
- (승인) 인가적 성질을 가지는 행위로 예컨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이 이에 해당
 - ※ 건설·건축 부문에서의 개발관련 사업계획·실시계획 승인, 산업·경영 분야에서의 사업·공사계획 승인, 안전과 관련한 형식 승인 등
- (검사)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법률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해당 시설물·기기 등이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는 제도
 - ※ 품질·기기·시설물·수질 등 안전성 확보 검사, 개발사업 등에 따른 시설 준공 후 검사
- (검정) 교원자격 검정, 국가기술자격 검정,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등과 같이 인적 능력을 확인하는 경우를 위해 주로 규정
- (시험) 자재 등 물품 등의 적격시험, 농약 등 성분시험, 형식승인시험 기타 질병관리본부·국립환경과학원 등 각종 시험기관에 대한 시험의뢰 등
- (인증) 어떠한 문서나 행위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적 기관이 증명하는 행위
 - ※ 인증은 크게 품질·기술 등 인증, 기업·사업장 인증, 사업자 인증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확인)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에 관해 의문이 있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 공권적으로 판단하여 확정하는 행위
 - ※ 당선인 결정, 교과서검인정, 소득금액의 결정, 무효등확인심판의 재결, 벤처기업 해당여부 확인 등

■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경·면제 관련 부정청탁(제2호)

-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범칙금·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제1호의 인가 또는 허가를 취소하는 행위

- (조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의 충족이나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해 국민·주민에 대해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징수하는 재화

※ 국 세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방위세, 관세 등

지방세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판매세, 도시계획세 등

- (부담금) 특정 공익사업과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그 사업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금전

※ 특정 공익사업으로 이익을 받는 자가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금(「하천법」, 「항만법」), 특정 공익사업을 하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도로법」, 「하천법」, 「하수도법」), 손괴자 부담금(「도로법」, 「항만법」) 등

- (과태료)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 행정질서벌을 의미

-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과태료), 민사상 과태료(「민법」상 과태료), 징계벌로서의 과태료(「변호사법」)

- (과징금)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

- (이행강제금) 대체적·비대체적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수인의무의 불이행 시 일정액수의 금전이 부과될 것임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이행의 확보를 도모하는 강제수단

※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나 제거를 위한 강제금, 토지(시설) 이용 행위에 대한 강제금, 금융자산 처분에 대한 강제금 등

- (범칙금) 일정한 위법행위의 범법자에게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하면 처벌이 종료되는 특별한 과형절차(통고처분절차)

※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 제도, 「도로교통법」, 「출입국관리법」상 범칙금 등

- (징계) 민간 자격소지자에 대한 징계, 초·중고·대학 학생 및 보호소년에 대한 징계, 국가 위탁사무 기관의 직원에 대한 징계, 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 일반회사의 직원에 대한 징계 등

■ 인사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제3호)

-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들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채용·승진·전보 뿐만 아니라 징계·보직·임명·시험·전출·전입·평가 등 공직자들의 인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

구분	주요 내용
채용	공무원등의 채용관련 응시자격, 채용절차, 후보자 추천, 채용권자 등을 규정
승진	승진임용 예정인원, 승진 자격, 근무평정, 특별승진 심사 절차 등을 규정
전보	전보제한 사항, 전보절차, 배치기준, 인사교류, 파견, 겸직 제한 등을 규정
징계	징계 사유, 절차, 직권 면직 요건, 징계권자, 소청 제도 등을 규정
시험	임용과 승진 시험의 시험과목, 실시 방법, 시험 면제, 합격 결정 등을 규정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제4호)

-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 되도록 하는 행위
- (심의·의결·조정 위원회) 심의·의결과 같은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의미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정부위원회 및 중요정책 결정 등과 관련한 심의·의결 성격의 위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가 다수
 - 지자체의 경우 법률에서 위임된 사무와 관련한 위원회,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결 등), 기금관리위원회, 위임·위탁기관의 경우 수탁사무에 대한 심의적 성격의 기구
 -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의 경우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개정,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을 심의하며,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 「방송법」상 시청자위원회의 경우 방송편성 및 프로그램 내용 등에 관해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가능

● (시험·선발 위원) 각종 국가자격시험 위원 또는 제5호의 각종 공공기관의 수상·포상·우수기관·우수자 등의 선발위원 선정 업무

※ 공무원 임용시험 위원, 개방형직위 중앙선발위원회 위원, 국가기술자격시험위원, 공인회계사·변호사·행정사 등 시험위원, 시도장학생선발위원회 위원 등

■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제5호)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뿐만 아니라 표창, 유공자 선정 등 각종 포상제도 및 선발제도가 모두 포함

● (포상) 포상은 크게 산업분야, 체육·문화분야, 일반행정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각 부처별로 다양한 포상제도를 운영 중

※ 지자체의 경우 주민 중 공로가 있는 시민에게 부여하는 상(시민상, 군민상, 구민상, 의회사)이 많고, 농업·어업·축산 등 각 분야의 개인·단체 대상 포상이 많으며, 교육 분야는 장학·선발이 많음

● (선발) 대부분이 장학관련 분야이고 기업분야 우수자 선발·지원, 임업후계자 지원 등이 있음

● (수상) 지자체 조례·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 전국과학전람규칙(수상작품 시상), 올림픽기장령(올림픽기장 수여), 문화예술진흥법(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시상), 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자력개발의욕이 왕성하고 업적이 현저한 자 시상), 국가유공자에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문화상 시상)

● (선정) 대부분 우수기업 등을 발굴·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운영하는 관계로 대부분 산업분야에 치중

■ 입찰·경매 등 직무상 비밀 누설 관련 부정청탁(제6호)

●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의미

- (직무상 비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 등의 직무상 비밀
엄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형법」 제127조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누설죄를 규정하여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함
- (입찰)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 입찰 관련 예정가격 누설 금지의무를
부과
- (경매) 국가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하는 경매(공경매)와 사인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경매(사경매)가 있음
 - 자산관리공사법 제25조제3항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임직원과 경영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과
- (개발) 국토개발, 각종 공사에 대해 ‘개발’의 경우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부과
- (군사) 각종 법령에서 군사상 비밀유지, 군사작전 보호 등의 기밀 유지의무를
부과
- (특허) 특허청의 실용신안, 특허, 디자인보호, 발명진흥 등과 관련하여 비밀 유지의무
부과
- (시험) 각종 자격검정·국가기술자격 시험과 관련 비밀 유지 의무 부과
- (과세) 과세와 관련한 금융정보 보호 등 필요에 따라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부과

■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제7호)

-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 되도록 하는 행위
- 다른 부정청탁행위 유형과 달리 ‘계약 관련 법령’으로 규정하여 법령의 분야를
한정하고 있음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과 같은 계약에 관한 일반법뿐만 아니라 개별법령에서
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보조금·장려금 등 배정·지원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제8호)

-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보조금)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
 - 민간이전(보조금)의 종류는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자본보조, 사회복지보조 등
- (장려금) 취업·고용 장려금, 연구·개발 장려금, 정책적 장려를 위한 장려금 등이 있음
 - 지자체의 경우에는 화장 장려금, 장례식장 운영 장려금, 취업장려금, 출산장려금 등이 있음
- (출연·출자금)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를 두고 있음
- (교부금)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교부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의 재정지원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교부금
 - 그 외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지도 담당 단체에 교부금 지급 등이 있음
- (기금) 기금은 특정목적 및 시책추진을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

■ 공공기관의 재화·용역 매각·교환 등 관련 부정청탁(제9호)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를 요건으로 하는 다른 부정청탁행위와 달리 공공기관의 재화·용역 관련 부정청탁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
- 특별한 사정없이 공공기관의 내부 기준, 사규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난 행위에 해당
- (매각) 정부재산 매각과 관련한 내용이 가장 많고, 간척지·공적자금 등 정부사업 과정에서 발생된 재산 매각, 기타 장기 보관 물품에 대한 매각 등이 있음
- (교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범위 내에서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 교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사용) 국·공유재산 사용,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기타 주파수 공동사용 등
- (수익) 법률로 설립한 공제회·재단·연구원·단체·시설 등의 수익사업, 선수권대회나 국제대회 등과 관련한 회장 등 수익사업, 국·공유재산 사용·수익 등
- (점유) 무단점유 금지, 무단점유 시 무단점용료·변상금 부과 등

■ 학교의 입학·성적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0호)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 하도록 하는 행위
- 각급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사립학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의미
- (입학) 법령에 정한 입학자격, 입학정원,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등 학생선발방법 등에 관한 업무뿐만 아니라 편입학, 전입학, 재입학 및 소외·취약계층 입학 우대 등의 업무도 포함
- 입학자격이 없는 자를 입학시키거나 학생선발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입학·편입학·전입학 시키거나 선발, 선정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
- (성적·수행평가) 성적·수행평가 조작, 진급·수료·졸업 등 기준 미달자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한편, 학교 성적을 조작해 달라는 청탁은 「형법」 제314조제1항의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음

※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아버지가 성적처리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교사에게 부탁하여 딸의 시험성적을 조작한 사례에서, 「형법」상 교장의 내신성적 평가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로 판시(울산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4고단899 판결)

■ 징병검사·부대배속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1호)

-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병역판정검사) 「병역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징병검사의 판정기준, 병역면제, 징병검사·입영기일 연기 등
- (부대배속) 「병역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현역병 입영,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 (보직부여) 「군인사법」 장교의 보직 및 해임, 「병역법」상 병력동원 소집의 후순위 조정 등

■ 각종 평가·판정 결과 조작 등 관련 부정청탁(제12호)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평가) 민간부문 또는 공공기관 대상 평가, 자산가치 평가 등
 - 민간부문 평가를 통한 시장질서 형성, 민간 영역에 대한 국가 지원, 배상·보상 관련 평가, 등급 부여 평가 등
 - 공공부문 대상 평가는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등의 효과성 검증, 지원 수준 결정 등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다수
- (판정) 등급기준의 충족여부에 대한 판정, 각종 시험·검사의 합격여부 판정, 기타 행정적 차원의 업무 수행을 위한 판정으로 나뉨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판정,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검사결과 적합여부 판정, 「도로법」상 매수대상토지의 판정, 「감사원법」상 변상책임의 판정 등

■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관련 부정청탁(제13호)

-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행정절차법」 제2조제3호)
 - ※ 「건축법」상 위법건축물 관리실태 등 지도·점검, 「먹는물관리법」상 먹는물 수질관리 지도,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 취급기준 이행 및 조리사·영양사 준수사항 이행지도 등
- (단속) 풍속영업, 식품·위생, 환경, 도로교통 분야에서의 단속 등
 - ※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단속, 「건축법」상 건축중인 건축물의 위법시공 단속, 무허가·미신고 건축물 단속,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등급미분류 게임물「등급거부 게임물 등의 수거·폐기·삭제 등
- (조사) 법령 준수 또는 위반행위의 확인, 정책결정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수집, 법령상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한 조사 등
- (감사) 국회·감사원·행정기관 등의 감사 등

■ 수사·재판·심판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4호)

-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수사)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부터 수사 종료에 해당하는 종결처분까지 모든 과정에서의 처분들을 포함
 - 수사과정에서의 각종 강제처분(체포·구속·압수·수색·검증 등) 뿐만 아니라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 등 수사종결처분의 경우도 포함
- (재판) 각급 법원(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의 재판, 군사법원의 재판 및 국민참여재판을 포함
 -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관, 판사, 군판사뿐만 아니라 재판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재판연구관, 법원직원, 배심원의 직무를 포함
- (심판) 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조세심판·특허심판·소청제도 등)으로 구분

- (결정) 수사·재판·심판 등과 관련되거나 이와 유사한 준사법적인 각종 결정을 의미
- (조정·중재) 분쟁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중개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
- (화해)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로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되는 계약

2 부청청탁의 7가지 예외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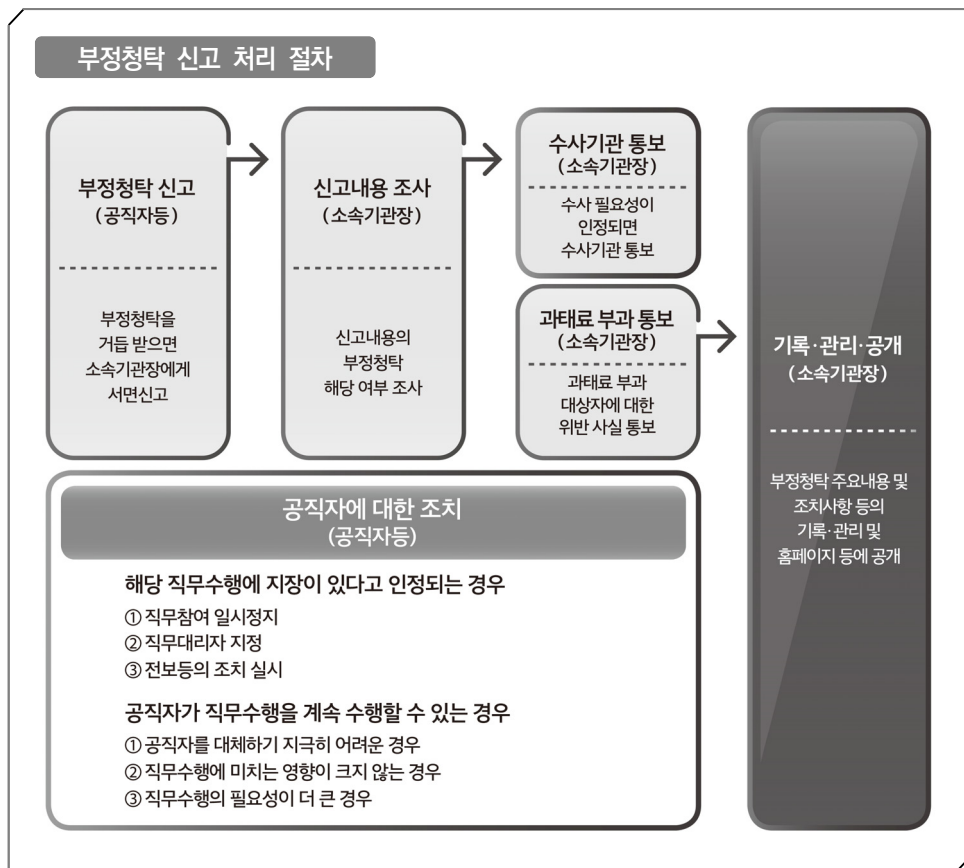
■ 7가지 예외사유

- 법 제5조제2항에서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7가지 경우를 규정
 -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제1호)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
- (제2호)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 (예시) 공개된 장소에서의 피켓 시위, TV·신문 등의 언론매체를 통한 요구, 공문을 통한 공개적 요구
- (제3호)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
 - ※ (예시)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
- (제4호)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 (제5호)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과 증명 등 신청 및 요구
- (제6호) 질의와 상담을 통한 법령 또는 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 (제7호)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제7호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는 형식적으로 제1항의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되더라도 부정청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위축되는 것을 막고 있다.(헌재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412·662·673(병합))

Ⅲ 부정청탁 처리 절차

Part
1청
탁
금
지
법

1 부정청탁의 처리 절차



■ 부정청탁에 대한 거절의무(1차)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최초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거절의무를 부과(법 제7조제1항)
- 인간관계의 단절이나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대한 고민 없이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부정청탁의 신고(2차)

-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 발생(법 제7조제2항)
 - 신고절차를 따를 경우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
- 동일한 부정청탁인지는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공직자등을 기준’으로 부정청탁 내용의 본질적 동일성 여부로 판단
 - 선량한 공직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절차를 마련한 취지에 따라 동일한 부정청탁의 범위를 공직자등의 입장에서 설정
- 이해당사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청탁을 직접 1회 한 후 제3자를 통하여 다시 한 경우, 2회에 걸쳐 제3자를 통하여 한 경우 모두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동일한 부정청탁에 해당
- 여러 명의 법인 소속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법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동일한 부정청탁에 해당

2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 조치의 내용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사전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의심을 차단
-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외에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대통령령에 위임
- 법률에 규정된 조치 중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은 직무 배제 정도가 일시적이나, ‘전보’는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

■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 소속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다만, 소속기관의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할 필요

IV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 징계

-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적으로 징계처분을 해야 함
-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공직자등이 한 경우 이 법(제5조) 위반이므로 징계대상에는 해당

2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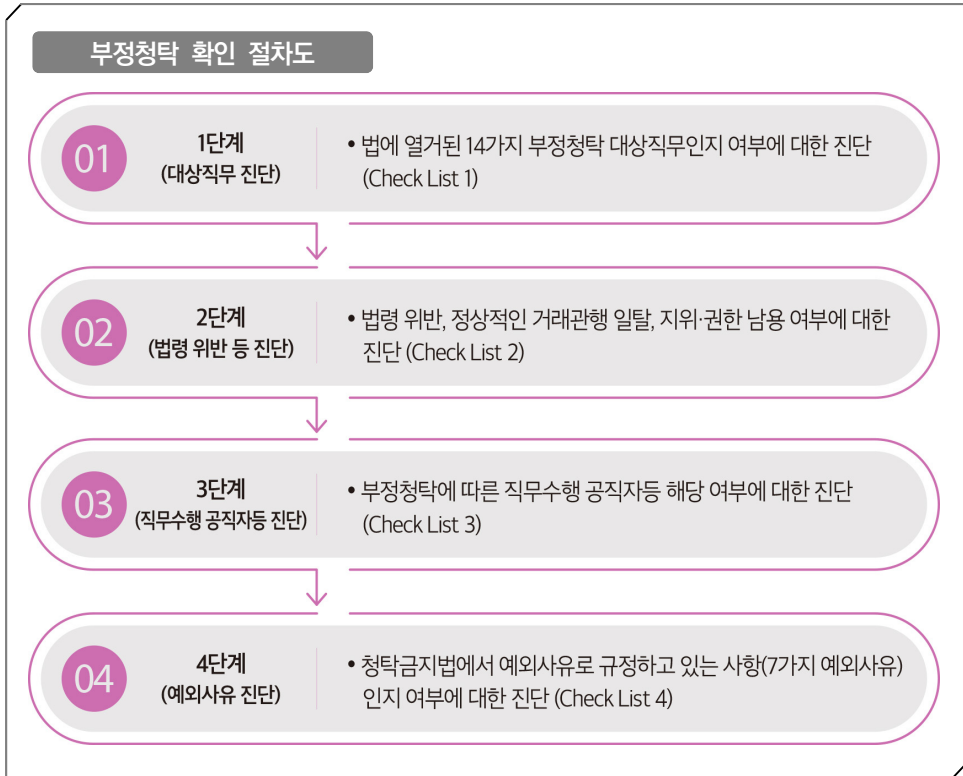
-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거나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
 -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공직자등이 아닌 자는 2천만원 이하, 공직자등은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 자신을 위하여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 ※ 청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반사적 이익 등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청탁임
-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

부정청탁에 따른 제재		
구성 요건		제재 수준
행위 주체	유 형	
이해당사자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제재 없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인(私人)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등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 수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는 소속기관의 장이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위반사실을 통보(법 제23조 제7항)하면 관할법원이 재판(결정)을 통하여 부과

참고 : 부정청탁의 확인 및 상담·신고처리 세부절차

1 > 부정청탁의 확인 절차



※ Check List 1~3까지 진단 과정을 거쳐 모두 체크(✓)되어야 부정청탁행위에 해당. 다만, Check List 4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체크(✓)가 있는 경우 부정청탁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2 > 부정청탁 자가 진단 Check List 1~4 목록

■ Check List 1

- 'Check List 1' 법에 열거된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 중에서 체크(✓)가 1개 이상일 경우에는 Check List 2의 항목을 진행

체크	체크 항목
<input type="checkbox"/>	•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
<input type="checkbox"/>	•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직무
<input type="checkbox"/>	•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들의 인사 직무
<input type="checkbox"/>	•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 관련 직무
<input type="checkbox"/>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 직무
<input type="checkbox"/>	•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관련 직무
<input type="checkbox"/>	•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 관련 직무
<input type="checkbox"/>	•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 지원 등 관련 직무
<input type="checkbox"/>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거래 등 관련 직무
<input type="checkbox"/>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직무
<input type="checkbox"/>	•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직무
<input type="checkbox"/>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직무
<input type="checkbox"/>	•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input type="checkbox"/>	•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체크(✓)가 없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이 아니므로 다음 단계를 진행하지 않고 종료

■ Check List 2

- ‘Check List 2’ 법령 위반, 정상적인 거래관행 일탈, 지위·권한의 남용 중에서 체크(✓)가 1개 이상일 경우에는 Check List 3의 진단을 진행

	체크	체크 항목
법령 위반	<input type="checkbox"/>	• 14가지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률
	<input type="checkbox"/>	• 14가지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대통령령
	<input type="checkbox"/>	• 14가지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국무총리령, 부령
	<input type="checkbox"/>	• 14가지 대상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고시·훈령 등
	<input type="checkbox"/>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일반법령 또는 각종 소송법, 심판법, 「행정절차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의 절차법
	<input type="checkbox"/>	• 조례·규칙(「지방자치법」 제23조에 따라 제정한 규칙)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정상적인 거래관행 일탈	<input type="checkbox"/>	•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input type="checkbox"/>	•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
	<input type="checkbox"/>	• 다른 사람이 받는 피해, 행위의 의도·목적, 당사자의 지위 및 관계, 재화 및 용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청탁이 없었다면 이루어졌을 통상적인 거래조건
지위권한 남용	<input type="checkbox"/>	• 14가지 대상직무에 관하여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난 행사
	<input type="checkbox"/>	• 14가지 대상직무에 관하여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의 행사

※ 체크(✓)가 없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이 아니므로 다음 단계를 진행하지 않고 종료

■ Check List 3

- 'Check List 3'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의 항목 중에서 체크(✓)가 있을 경우에는 Check List 4의 진단을 진행

체크	체크 항목
<input type="checkbox"/>	• 부정청탁 대상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
<input type="checkbox"/>	• 부정청탁 대상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들의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등 상급 공직자등
<input type="checkbox"/>	• 부정청탁 대상직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들의 결재선상에 있지는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의 상급 공직자등

※ 체크(✓)가 없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이 아니므로 다음 단계를 진행하지 않고 종료

■ Check List 4

- 'Check List 4' 부정청탁 예외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체크(✓)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음

체크	체크 항목
<input type="checkbox"/>	•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input type="checkbox"/>	• 공개적으로 공직자들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input type="checkbox"/>	•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input type="checkbox"/>	•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input type="checkbox"/>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input type="checkbox"/>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input type="checkbox"/>	•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체크(✓)가 1개 이상일 경우에는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예외사유 해당 여부 판단이 애매한 경우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3 부정부탁의 상담 및 신고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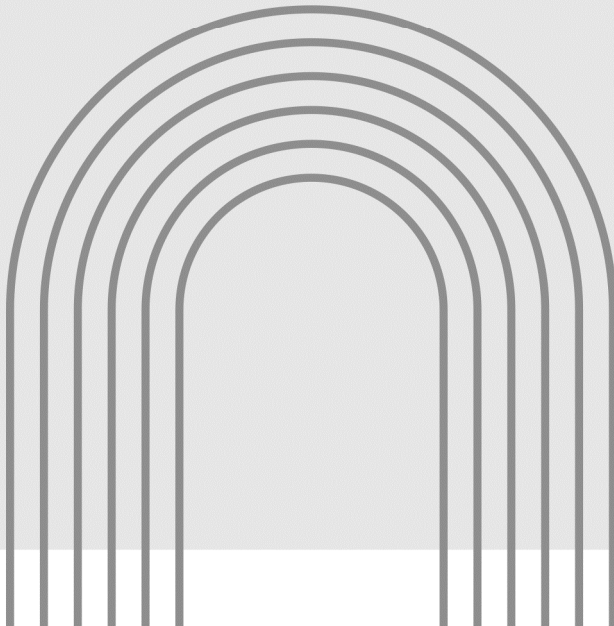
부정부탁 상담·신고 처리 절차

- 01 **각종 청탁**
 - 공직자들에게 제기되는 내·외부의 다양한 요청행위
 - 편의 및 특혜 제공 요청, 단순 업무 진행절차 문의 등 다양
- 02 **부정부탁 여부 확인**
 - 부정부탁인지 단순한 부탁인지를 먼저 파악
 - Check List 1~4에 대한 자가진단을 통해 부정부탁인지 아닌지 여부를 명확히 파악
- 03 **청탁 대응**
 - 공직자에게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청탁이 들어올 경우에는 청탁 대응 매뉴얼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거절
- 04 **청탁상담 모니터링**
 - 청탁자의 청탁내용을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 청탁자의 청탁사항을 주관적 판단(가감)없이 사실 그대로 상담
 - 청탁상담 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 실시(전담자 관리)
 -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은 기관장 보고 등 조치
- 05 **신고 및 조치**
 - 동일한 부정부탁을 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 신고는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이유 및 내용 등 서면신고 (전자문서 포함)
※ 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 함께 제출
 - 소속기관장은 문제될 사항을 예상하여 직무참여 일시중지, 직무대리자 지정, 전보 등 조치 가능
 - 기관장이 부정부탁을 받은 경우 청탁방지담당관이 기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직접 조치 실시
- 06 **사후관리**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부정부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 공개
 -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및 부당이익의 환수



제3장

금품등 수수 금지



I : 수수 금지 금품 등

1 > 제재대상이 되는 수수 금지 금품 등

-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인 경우
 -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 시 **형사처벌 대상**
- 1회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직무와 관련이 없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음
 -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대가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 대상

2 > ‘동일인’과 1회’의 의미

■ 동일인

- 동일인 여부는 금품등을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

■ 1회

- 1회는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 수를 고려하여 판단
 - ※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 가능
- 의도적으로 분할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자연적 의미의 행위 수로만 보면 1회로 보기 어렵지만, 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1회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음

3 회계연도

- 회계연도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의미
 - 제공자의 경우도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적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임
 - ※ 다만, 학교의 회계연도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

4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

-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형법」상 뇌물죄의 직무관련성*과 같은 의미
 - *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써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는 것으로 상당히 넓은 개념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은 향후 개별적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임
- 청탁금지법상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
 -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
- 판례는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가 금품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직무관련성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판시

- 직무관련성 판단 시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 조항

구분	내용	조항
금품등 수수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금지	제8조제2항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금지	제8조제4항
외부 강의등	•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금지	제10조제1항

5 > 금품 등

-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 및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
 - (재산적 이익)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 (편의 제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
 - (경제적 이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 ※ 성(性)매매, 장학생 선발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 등도 포함

6 금지행위

■ 공직자등의 경우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
 - 요구는 공직자등이 상대방에게 금품등의 교부를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상대방이 응하였는지는 불문
 - 동일인에 대하여 금품등을 요구·약속한 후 이를 받은 경우에는 포괄하여 1개의 위반 행위(받는 행위)가 성립

■ 제공자의 경우

-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
 - 제공은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족함
 - 동일한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의 제공의 의사표시·약속한 후 이를 제공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1개의 위반행위(제공 행위)가 성립
- 제공자가 공직자등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위반행위 성립 가능

II : 수수 금지 금품등 예외사유(8가지)

■ 제1호(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등이 제공하는 금품등)

- 제1호의 예외사유는 공공기관이 소속 또는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상급 공직자등과 하급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공공기관 소속 및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 사이에서만 성립 가능
- 상급 공직자등이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위로·격려·포상 등 목적상 제한이 존재

■ 제2호(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포함한 그 '이하'를 의미
-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가액범위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축의금·조의금 5만원으로 설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 1)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 선물은 10만원,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상 제한이 있음
 -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
-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물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음

-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 가액과 상관없이 가액기준 내라도 형사처벌 대상(「형법」상 뇌물죄)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청탁금지법 위반)임

※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함

■ 제3호(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제3호 예외사유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정당한’은 ‘이치에 맞아 올바르고 마땅한’이라는, ‘권원’은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인 원인’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음
- ‘정당한’ ‘권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권원의 존재 여부와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필요

※ 정당성은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필요

- 즉, 권원의 존재 자체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 정당한 권원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증여 외에도 사용대차, 무이자 소비대차** 등도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제외될 수 있음

■ 제4호(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의미
- 혈족은 자연혈족(직계혈족, 방계혈족) 외에 법정혈족(입양)도 포함
-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아님

■ 제5호(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 등)

-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나,
 -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
 -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의 위반행위 성립 범위가 중요한 쟁점
 - 또한,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의 의미와 판단기준이 중요한 쟁점
 - 단체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제공한 금품등
 - 단체가 정하는 기준 범위 내에서는 허용되는 부분이므로 초과한 부분만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
- ※ 단체에 대해 대표성을 갖는 자가 대표해서 기준에 따라 제공해야 하고 소속 회원 개인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제6호(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
 - 공식적인 행사의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만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주최자가 아닌 제3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 여부,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부, 공문·메일 등 공식적인 초청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단체·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뿐만 아니라 개인이 주최하는 행사도 포함

구체적 판단기준	
행사 목적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가 주최자 업무 및 사업의 시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 행사의 목적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는지 여부 * 식사, 향응, 접대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경우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로 보기 어려울 것임 • 사전에 행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
참석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참석자 선정 경위가 적정한지 여부 • 참석자와 행사의 목적·내용이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 행사 목적상 특정 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도 가능 * 특정 집단 내에서도 일부 대상만이 참석하는 등 참석 대상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공식적 행사 가능성이 낮음
공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행사의 결과에 대한 사후 공개가 있는 경우 비공개로 주최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공식 행사 가능
준비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청기관의 공문, 메일 등 공식적인 초청이 있는지 여부 •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 제7호(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 제7호의 예외사유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특정인이나 특정군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공직자들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아 예외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의 의미가 중요한 쟁점
-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
-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함

■ 제8호(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법령) 「정치자금법」의 후원금, 「영유아보육법」의 양육수당·보육수당, 「공무원연금법」의 요양비·재해부조금, 「의료법」상 허용되는 경제적인 이익, 「도서관법」상 기부금품 등
 -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하더라도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경우 뇌물성 인정
- (기준) 금품등을 받는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의 사규 등의 내부기준에서 수수를 허용하는 금품등만 예외사유에 해당
 - 금품등을 받는 공직자등이 소속한 기관의 내부기준을 의미하는 것이지, 제공자 측이 제공을 허용하는 내부기준이 아님
- (사회상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금품등은 예외사유
 -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금품수수 금지조항의 의의와 함께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직무관련성의 내용,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청탁금지법 상 '사회상규' 개념은 「형법」제20조의 사회상규 개념과 통일적으로 해석 필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피고인의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A가 축의금으로 낸 돈 10만원을 사후에 전달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A와 개인적으로도 친분관계를 맺어온 사이였다면 비록 A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라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위 금원이 축의금을 빙자하여 뇌물로 수수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사례(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도2774 판결)
2	민원상담 봉사활동으로서 행한 서류작성 대행행위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제2항 등 관계 법령이 열거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할지라도,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사례(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도1912 판결)
3	시청 문화관광과 소속 영상지도계장인 피고인이 오랜 친구인 공소외인으로부터 45,000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를 제공받은 사안에서, 공소외인과 피고인과의 어릴 때부터의 관계, 만날 때의 복장, 피고인의 담당업무의 변경, 식사비용이 45,000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사교적 의례에 속하는 향응이라는 사례(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37 판결)
4	종합건설본부 도로과에 근무하는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31,500원의 식사를 제공받은 사안에서,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관계, 특히 사건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함께 번갈아 가면서 식사하는 일이 있었는데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식사비용을 번갈아가면서 부담한 점, 식사비가 31,500원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사교적 의례에 해당한다는 사례(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722 판결)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한 사례	
1	노동청 해외근무국장으로서 해외취업자 국외송출허가 등 업무를 취급하던 피고인이 접대부 등의 국외송출을 부탁받고 시가 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접대 받은 경우, 비록 접대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이를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항응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뇌물성을 띤다고 본 사례(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1499 판결)
2	재건축추진위원장이 피고인이 재건축조합의 조속한 설립인가를 위해 이를 관할하는 구청의 주택과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18,750원과 12,000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한 경우, 피고인과 공무원 사이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는 없었던 점 및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것이 단순히 사교적, 의례적 범위 내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사례(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8779 판결)
3	비록 위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액이 금 200,000원으로서 비교적 소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주차관리원의 채용이라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알선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므로 이를 단순히 사교적인 의례에 속하는 경우라거나 보호하여야 할 미풍양속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865 판결)
4	은행 지점장인 피고인이 제공받은 항응이 도합 금 83,500원 상당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증뢰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그로부터 항응을 제공받은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항응 이외에도 수차례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사례(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144 판결)
5	군(郡)이 발주한 경지정리사업 공사의 시공 감독 등 군 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지휘 감독업무를 담당하여 온 부군수가 부군수실에서 위 공사의 도급업자로부터 위 공사에 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서 같은 달 25일 거행하는 원고의 차남 결혼축의금 명목으로 금 500,000원을 교부받은 사례(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262 판결)
6	후보자가 선거구 내 거주자에 대한 결혼축의금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한 금액인 3만 원을 초과하여 5만 원을 지급한 경우, 후보자가 모친상시 그로부터 받은 같은 금액의 부의금에 대한 답례취지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미풍양속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도983 판결)
7	제3자가 정당추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특정인을 지지하도록 부탁할 목적 하에 타인의 술값 4만 원을 지불한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 있는 행위이거나 위법성이 없는 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05 판결)
8	가요담당 방송프로듀서가 직무상 알고 지내던 가수매니저들로부터 많게는 100만원 적게는 20만원 정도의 금품을 28회에 걸쳐 받은 것이 의례적이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는 사례(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688 판결)
9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탈세행위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그 변호사비용과 벌금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여도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보편화된 관례라고 할 수 없다는 사례(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466 판결)
10	국회의원이 단순히 민원인의 자료협조 요청에 응하여 이 사건 자료를 제공하는 그치지 않고 이 사건 자료 제공의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이러한 국회의원의 행위가 형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8852 판결)

11	병원 약제부장이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화식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는 등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약제부장과 의약품 도매상 사이에 업무적인 관계 이외에 개인적으로 명절이나 연말에 금원을 수수할 친분관계가 없으며, 수수된 금액이 상당하고 매우 정기적으로 금품 수수가 이루어지는 등 금원의 수수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는 직무행위의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뇌물이라는 사례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12	피고인의 군수로서의 인사에 관한 직무의 내용, 피고인과 부하직원 간의 관계, 인사 청탁의 내용, 피고인이 돈을 교부받은 시기가 인사발령을 앞둔 시기인 점, 피고인의 동의에 따라 승진서열을 무시하고 원하는 대로 승진이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받은 돈이 50만원에 불과하고 인사청탁과 함께 설날 세뱃돈의 형식을 빌려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뇌물성이 인정된다는 사례(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13	국립대 교수가 고가의 병풍, 금원양 등을 의례적인 결혼축하 및 인사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종전에는 해당 교수와 금품 제공자의 접촉이 빈번하지 않았고 고가의 물건을 선물하는 일도 없었던 점, 결혼 6개월 경과 후 결혼선물명목으로 제공한 점, 금품이 고가품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교수 신규채용과 관련하여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사례(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Ⅲ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1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반환

■ 신고의무

- 공직자등은 자신이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음
 - ※ 신고사항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이유, 제공자의 인적사항·금품등의 종류와 가액·반환 여부 등 신고의 내용(법 제13조제3항)
- 허위 신고·무책임한 신고의 통제를 위해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경우 이를 함께 제출 필요
- 신고는 소속기관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능

■ 수수 금지 금품등의 반환·인도 의무

- 공직자등 자신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지체 없이’ 반환·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금품등을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도록 해야 함
- 다만, 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도록 해야 함
 - ※ 인도하는 경우 : 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신고 및 반환·인도의 시기

- 신고 및 반환은 ‘지체 없이’ 해야 하는데,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
 -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
- ‘지체 없이’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 필요

■ 신고 및 반환·인도의 효과

- 공직자등이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반환·인도하면 제재대상에서 제외(필요적 면제)
 - 신고하거나 반환·인도함에 따라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지체 없이’하였는지가 중요
- 다만, 공직자등이 자진하여 신고하였으나 ‘지체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제재를 감면(임의적 감면)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

■ 소속기관장의 처리 등

- (반환 등 요구)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 의사표시를 하도록 해야 함
 -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 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 관할 법원에 통보, 징계절차의 진행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 신고한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그 배우자로 하여금 반환하도록 요구
-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해당 공직자등에게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의 조치 시행 가능
 -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소속기관의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
 - ※ 예외사유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법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직무의 중지·취소 등 필요한 조치 가능

IV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1 외부강의등의 범위 판단기준

-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임
 -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외부강의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외부강의등은 제10조의 규율대상에서 제외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이어야 함
 -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
-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어야 함
 -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이상 강의·강연·기고는 전달방법의 예시에 불과하고 그 외에 다양한 전달방법이 있을 수 있음
 -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음

2 용역·자문 대가의 규율

-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자문의 대가는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 특히,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필요
 - 용역·자문 계약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 필요
 - ※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

3 > 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제한

■ 신고 및 제한

- 공직자들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을 한 경우는 제외
 - ※ 기획재정부 등에서 시달한 공통 예산지침을 적용하고 있어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므로 신고 불필요
 - 외부강의등 신고는 통보 형식의 등록을 의미하는 것이지, 소속기관장의 승인·결재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며, 사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
- 소속기관장은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공직자들의 외부강의등을 제한 가능

■ 초과사례금의 신고 및 반환

- 공직자들이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할 의무 발생

구 분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와 임직원
1시간당 상한액	40만원	100만원
사례금 총액한도	60만원 ※ 1시간 상한액의 150/100 초과 불가	제한 없음

- 초과사례금을 받은 공직자들이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 위반 시 제재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공직자들의 의무	신고의무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의무	반환의무
위반 시 제재	징계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	
		모두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500만원 이하)	

※ 여러 차례에 걸쳐 초과사례금을 수수했을 경우, 수수행위마다 별개의 과태료 부과 요청

V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 징계

- 공공기관의 장 등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공직자등에게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청탁금지법 제21조)
 -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공직자등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
- 공공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 필요(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3조)
- 금품등이나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을 수수한 경우에도 금품등을 신고 및 반환·인도 하면 징계대상에서 제외
 - 공직자등이 신고등 절차를 따를 경우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공직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

2 형사처벌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등
 - 공직자등이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
- 자신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지체 없이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재대상에서 제외
-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3 > 과태료 부과 및 취소

Part 1

청탁 금지법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수수(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공직자등
 - 자신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 **외부강의등 초과 사례금(과태료 500만원 이하)**
 -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을 받고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 **(과태료 부과 통보)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
 - 관할법원이 소속기관장의 위반사실 통보에 따라 **재판(결정) 형식으로 과태료를 부과**
 - 소속기관장은 위반행위를 한 소속 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도 통보 가능**하며,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에 대해서도 통보 가능함
 -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다른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장에게 함께 통지해야 함(법 시행령 제45조)
 - 위반행위를 한 공직자등이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자진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금품등을 반환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의 위반행위는 성립**
 - 자진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제공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통보 필요**
 -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제1항)

위반사실 통보 공문 예시

수신 ○○○○ 지방법원
(경유)

제목 청탁금지법 위반사실 통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조제○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그 위반사실을 통보합니다.

- 붙임. 1.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
2. 첨부서류 목록 체크

행정사무관

협조자

시행

우

전화번호

접수

팩스번호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		
위반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위반 법조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0조제0항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분량이 많을 경우 별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반자의 인정여부 (구체적으로 기재)	<input type="checkbox"/> 인정 ()	
	<input type="checkbox"/> 부인 ()	
위반사실 통보의 구체적 사유	 (분량이 많을 경우 별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1. 2. 3. <div style="text-align: right;">등 총 매</div> (첨부서류는 별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0조제0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그 위반 사실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장

첨부서류 목록 체크

(해당란에 ■ 표시)

1. 관련자의 진술	<input type="checkbox"/> 신고자 ¹⁾ 에 대한 문답서(면담 조사서) 또는 진술서 등 <input type="checkbox"/> 위반자 ²⁾ 에 대한 문답서(면담 조사서) 또는 진술서 등 <input type="checkbox"/> 목격자에 대한 문답서(면담 조사서) 또는 진술서 등 <input type="checkbox"/> 위반자가 관련자와의 대질을 원한 경우 대질 조사서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
2. 객관적인 증거물	<input type="checkbox"/> 사진, 영상, 녹음물 <input type="checkbox"/> 영수증 <input type="checkbox"/> 기타 ()
3. 그 밖의 자료	<input type="checkbox"/> 다른 조사기관(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그 조사자료 전부 <input type="checkbox"/> 위반자가 제출한 해명자료 <input type="checkbox"/> 위반자에 대한 처벌 여부 및 처벌 수준을 결정하는 데 참작할 만한 자료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모든 자료
4. 소속기관장의 의견	<input type="checkbox"/> 위 필수 첨부자료 중 제출하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³⁾ <input type="checkbox"/>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 <input type="checkbox"/> 위반자에 대한 처벌 여부 및 처벌 수준에 관한 의견

1) 위반행위 상대방 또는 목격자가 신고자일 경우에는 신고자의 진술로 갈음함

2) 제3자를 통하여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경우 그 제3자,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그 배우자,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행위자 등에 대하여서도 위반자에 준하여 진술을 확보하여야 함

3) 예컨대, 관련자의 진술 거부, 목격자 부존재, 위반자가 대질을 원하지 아니함, 증거물 제출 거부, 증거물 부존재, 다른 조사기관의 조사 부존재, 해명자료 미제출 등

- (과태료 부과 취소) 과태료를 부과받은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도록 규정(법 제23조제1항 단서,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 제5항 단서)
-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안에 대하여 「형법」 등 다른 법률이나 청탁금지법에 따라 다시 형사처벌 가능
 - ※ (예시)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를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후 대가성이 밝혀져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사실이 드러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4 물수·추징과 징계부가금

- (물수·추징)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금품등은 몰수하되,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
- (징계부가금)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있는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않음

5 양벌규정

- 법인등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법인등의 업무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22조제1항제3호, 제23조제5항제3호,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등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청탁금지법 제24조)
- 법인등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 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양벌규정 적용 제외

6 재심의(이의) 신청

- (이의신청) 조사 등의 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로 부터 조사 등의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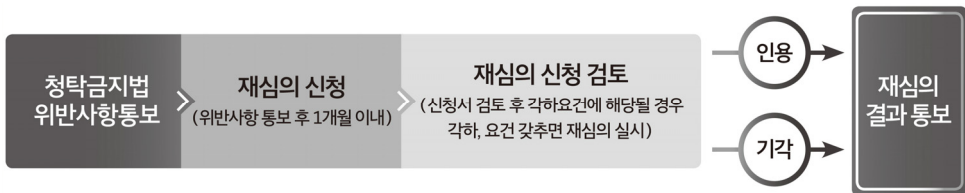
- 신고자는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조사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경위와 이유를 적은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 가능**
- 이의신청을 받은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와 재조사 결과의 통지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 할 수 없음**

● 소속기관 재심의(이의) 신청

- (감독기관 조치) 청탁금지법 신고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한 경우 이의신청 기회 부여
- (재심의 여부 결정) **사실관계의 변동 여부**, 당초처분이 관계 법령 및 해당 기관의 **양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같은 사안에서 관련자가 다수인 경우 **관련자 간 형평에 맞게 처분이 내려졌는지 여부**, 동일한 사안에 대한 새로운 증거나 자료의 제출 여부 등 종합적 검토하여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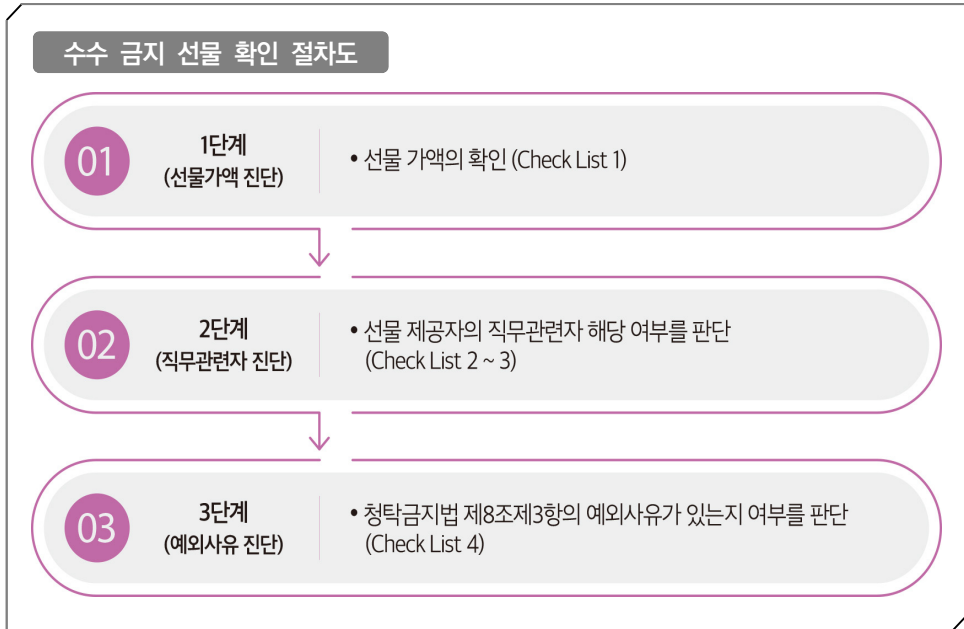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준용

- 재심의(이의) 신청 절차



참고 : 신고 처리 및 조치 세부절차

1 > 수수금지 선물 확인 및 신고·조치 처리



※ 선물 수수 가능 여부는 Check List 1~4 진단 과정을 거쳐 결정

- 공직자등이 선물을 받은 때에는 수수가 금지된 선물인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함
- 받을 수 있는 선물인지 여부는 위의 절차에 따라 구체적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수수 금지 선물 자가 진단 Check List

☞ 선물 가액, 직무관련성, 목적 등 자가진단에 있어 애매한 경우 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 Check List 1(선물 가액 자기진단)

- 'Check List 1' 선물의 가액을 확인

체크	체크 항목
<input type="checkbox"/>	• 1회 100만원(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input type="checkbox"/>	• 1회 100만원 이하

첫 번째 항목에 체크(✓)한 경우 곧바로 Check List 4를 진행하고 두 번째 항목에 체크(✓)한 경우 Check List 2부터 진행

● Check List 2(직무관련성 자기진단)

- 'Check List 2' 구체적 직무관련성 판단

체크	체크 항목
<input type="checkbox"/>	• 각종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input type="checkbox"/>	•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형벌부과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 절차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input type="checkbox"/>	•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 절차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input type="checkbox"/>	•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 절차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input type="checkbox"/>	• 재판·심판·결정·평가·판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 절차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input type="checkbox"/>	•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 절차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input type="checkbox"/>	•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 절차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input type="checkbox"/>	• 각종 계약 체결 또는 이행 절차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input type="checkbox"/>	•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 절차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input type="checkbox"/>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 등 거래 절차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input type="checkbox"/>	•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절차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input type="checkbox"/>	•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 절차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체크(✓)가 없을 경우에는 Check List 3을 진행하고, 체크(✓)가 1개 이상인 경우 Check List 4를 진행

● Check List 3(직무관련성 자기진단)

- 'Check List 3' 일반적 직무관련성 판단

체크	체크 항목
<input type="checkbox"/>	•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input type="checkbox"/>	•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input type="checkbox"/>	•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input type="checkbox"/>	•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체크(✓)가 1개 이상인 경우 Check List 4를 진행하고, 체크(✓)가 없을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는 1회 100만원 이하의 선물 수수는 허용되므로 진단절차 종료

● Check List 4(법상 허용되는 선물 자기진단)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체크	체크 항목
<input type="checkbox"/>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선물
<input type="checkbox"/>	•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선물
<input type="checkbox"/>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농수산물, 농수산물가공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
<input type="checkbox"/>	•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선물
<input type="checkbox"/>	•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선물
<input type="checkbox"/>	•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선물
<input type="checkbox"/>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input type="checkbox"/>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선물

체크(✓)가 1개 이상일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선물 수수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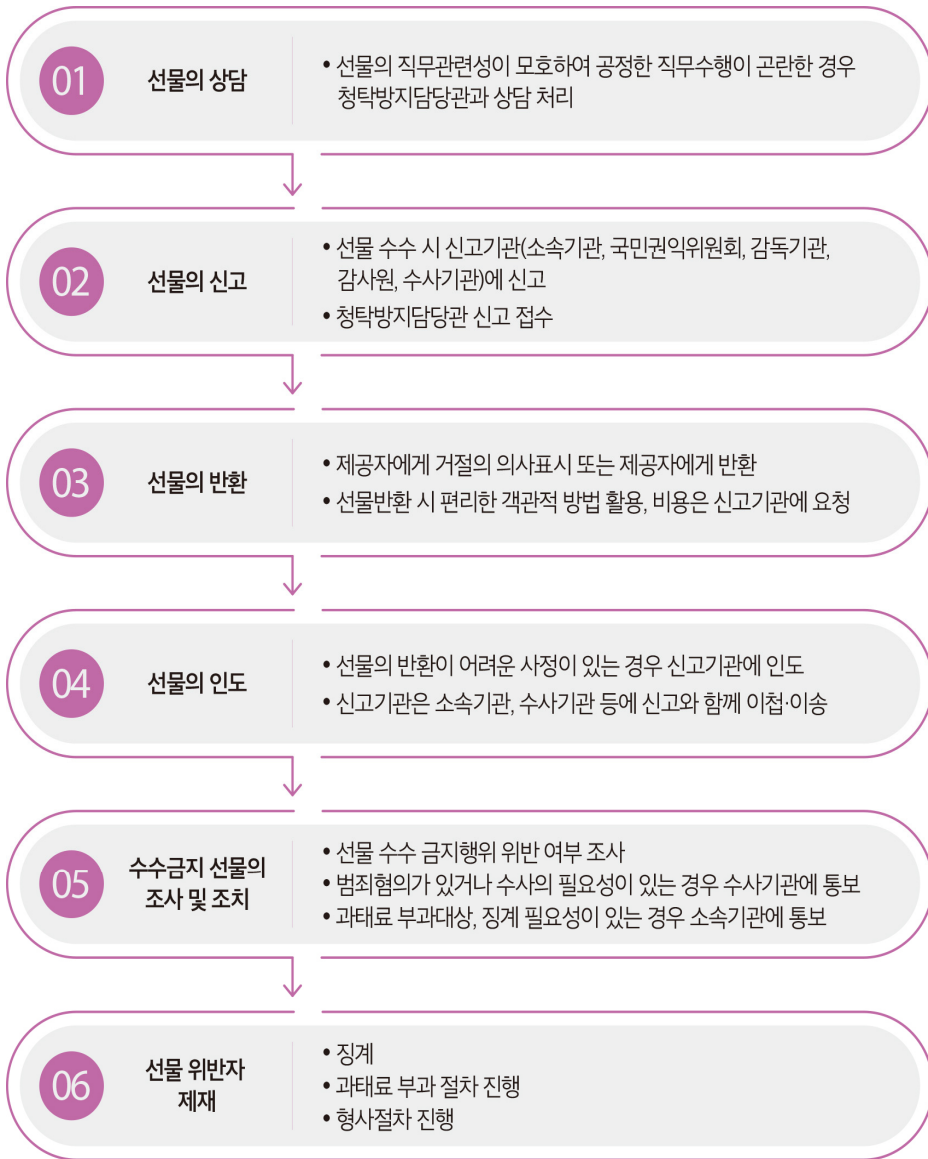
선물 가액이 1회 100만원을

- ▶ Check List 4의 항목(예외사유) 중 어느 하나에 체크(✓)가 있는 경우 수수 허용

선물 가액이 100만원 이하

- ▶ Check List 2 또는 3의 항목(직무관련성) 중 체크(✓)가 없는 경우 수수 허용
- ▶ Check List 2 또는 3의 항목(직무관련성) 중 체크(✓)가 1개 이상이지만 Check List 4의 항목(예외사유) 중 어느 하나에 체크(✓)가 있는 경우 수수 허용
- * 다만, Check List 4의 세 번째 항목에 체크(✓)가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는지 판단 필요

● 선물 신고 처리 및 조치 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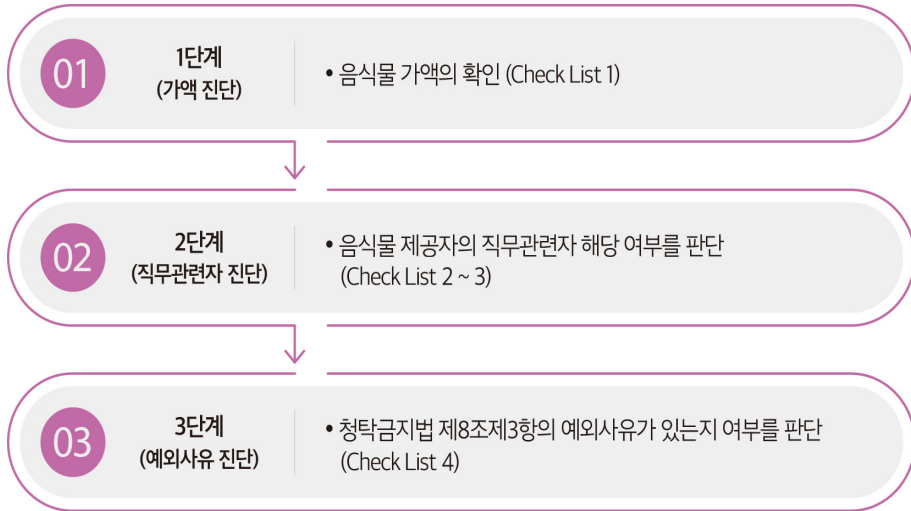


2 > 수수 금지 음식물 확인 및 신고·조치 처리

Part 1

청탁금지법

수수 금지 음식물 확인 절차도



※ 음식물 수수 가능 여부는 Check List 1~4 진단 과정을 거쳐 결정

- 공직자등이 음식물을 받은 때에는 수수가 금지된 음식물인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함
- 받을 수 있는 음식물인지 여부는 위의 절차에 따라 구체적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수수 금지 음식물 자가 진단 Check List

☞ 음식물 가액, 직무관련성, 목적 등 자가진단에 있어 애매한 경우 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 Check List 1(음식물 가액 자기진단)

- 'Check List 1' 음식물의 가액을 확인

체크	체크 항목
<input type="checkbox"/>	• 1회 100만원(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input type="checkbox"/>	• 1회 100만원 이하

첫 번째 항목에 체크(✓)한 경우 곧바로 Check List 4를 진행하고 두 번째 항목에 체크(✓)한 경우 Check List 2부터 진행

● Check List 2(직무관련성 자기진단)

- 'Check List 2' 구체적 직무관련성 판단

체크	체크 항목
<input type="checkbox"/>	• 각종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input type="checkbox"/>	•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형벌부과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 절차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input type="checkbox"/>	•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 절차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input type="checkbox"/>	•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 절차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input type="checkbox"/>	• 재판·심판·결정·평가·판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 절차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input type="checkbox"/>	•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 절차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input type="checkbox"/>	•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 절차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input type="checkbox"/>	• 각종 계약 체결 또는 이행 절차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input type="checkbox"/>	•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 절차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input type="checkbox"/>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 등 거래 절차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input type="checkbox"/>	•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절차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input type="checkbox"/>	•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 절차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체크(✓)가 없을 경우에는 Check List 3을 진행하고, 체크(✓)가 1개 이상인 경우 Check List 4를 진행

● Check List 3(직무관련성 자기진단)

- 'Check List 3' 일반적 직무관련성 판단

체크	체크 항목
<input type="checkbox"/>	•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input type="checkbox"/>	•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input type="checkbox"/>	•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input type="checkbox"/>	•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체크(✓)가 1개 이상인 경우 Check List 4를 진행하고, 체크(✓)가 없을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는 1회 100만원 이하의 음식물 수수는 허용되므로 진단절차 종료

● Check List 4(법상 허용되는 음식물 자기진단)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체크	체크 항목
<input type="checkbox"/>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input type="checkbox"/>	•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input type="checkbox"/>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input type="checkbox"/>	•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음식물
<input type="checkbox"/>	•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input type="checkbox"/>	•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input type="checkbox"/>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input type="checkbox"/>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음식물

체크(✓)가 1개 이상일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음식물 수수가능

음식물 가액이 1회 100만원을

- ▶ Check List 4의 항목(예외사유) 중 어느 하나에 체크(✓)가 있는 경우 수수 허용

음식물 가액이 100만원 이하

- ▶ Check List 2 또는 3의 항목(직무관련성) 중 체크(✓)가 없는 경우 수수 허용
- ▶ Check List 2 또는 3의 항목(직무관련성) 중 체크(✓)가 1개 이상이지만 Check List 4의 항목(예외사유) 중 어느 하나에 체크(✓)가 있는 경우 수수 허용
- * 다만, Check List 4의 세 번째 항목에 체크(✓)가 있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는지 판단 필요

3 > 수수 금지 경조사비 확인 및 신고·조치 처리

수수 금지 경조사비 확인 절차도

01

1단계
(경조사비 가액 진단)

• 경조사비 가액의 확인 (Check List 1)

02

2단계
(직무관련자 진단)

• 경조사비 제공자의 직무관련자 해당 여부를 판단
(Check List 2 ~ 3)

03

3단계
(예외사유 진단)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의 예외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
(Check List 4)

※ 경조사비 수수 가능 여부는 Check List 1 ~ 4 진단 과정을 거쳐 결정

- 공직자등이 경조사비를 받은 때에는 수수가 금지된 경조사비인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함
- 받을 수 있는 경조사비인지 여부는 위의 절차에 따라 구체적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수수 금지 경조사비(결혼·장례에 한정) 자가 진단 Check List

☞ 경조사비 가액, 직무관련성, 목적 등 자가진단에 있어 애매한 경우 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 Check List 1(경조사비 가액 자기진단)

- 'Check List 1' 경조사비의 가액을 확인

체크	체크 항목
<input type="checkbox"/>	• 1회 100만원(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input type="checkbox"/>	• 1회 100만원 이하

첫 번째 항목에 체크(✓)한 경우 곧바로 Check List 4를 진행하고 두 번째 항목에 체크(✓)한 경우 Check List 2부터 진행

● Check List 2(직무관련성 자기진단)

- 'Check List 2' 구체적 직무관련성 판단

체크	체크 항목
<input type="checkbox"/>	• 각종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input type="checkbox"/>	•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형벌부과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 절차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input type="checkbox"/>	•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 절차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input type="checkbox"/>	•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 절차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input type="checkbox"/>	• 재판·심판·결정·평가·판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 절차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input type="checkbox"/>	•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 절차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input type="checkbox"/>	•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 절차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input type="checkbox"/>	• 각종 계약 체결 또는 이행 절차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input type="checkbox"/>	•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 절차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input type="checkbox"/>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 등 거래 절차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input type="checkbox"/>	•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절차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input type="checkbox"/>	•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 절차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체크(✓)가 없을 경우에는 Check List 3을 진행하고, 체크(✓)가 1개 이상인 경우 Check List 4를 진행

● Check List 3(직무관련성 자기진단)

- 'Check List 3' 일반적 직무관련성 판단

체크	체크 항목
<input type="checkbox"/>	•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input type="checkbox"/>	•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input type="checkbox"/>	•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input type="checkbox"/>	•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체크(✓)가 1개 이상인 경우 Check List 4를 진행하고, 체크(✓)가 없을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수수는 허용되므로 진단절차 종료

● Check List 4(법상 허용되는 경조사비 자기진단)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체크	체크 항목
<input type="checkbox"/>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
<input type="checkbox"/>	•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
<input type="checkbox"/>	• 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화환·조화는 10만원 이하)의 축의금·조의금
<input type="checkbox"/>	•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경조사비
<input type="checkbox"/>	•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
<input type="checkbox"/>	•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
<input type="checkbox"/>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경조사비
<input type="checkbox"/>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조사비

체크(✓)가 1개 이상일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경조사비 수수가능

경조사비 금액이 1회 100만원을

- ▶ Check List 4의 항목(예외사유) 중 어느 하나에 체크(✓)가 있는 경우 수수 허용

경조사비 금액이 100만원 이하

- ▶ Check List 2 또는 3의 항목(직무관련성) 중 체크(✓)가 없는 경우 수수 허용
- ▶ Check List 2 또는 3의 항목(직무관련성) 중 체크(✓)가 1개 이상이지만 Check List 4의 항목(예외사유) 중 어느 하나에 체크(✓)가 있는 경우 수수 허용

* 다만, Check List 4의 세 번째 항목에 체크(✓)가 있는 경우 부조 목적이 인정되는지 판단 필요

4 예외사유 제6호[직무관련 공식적 행사]

■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제6호) 해당 여부 Check List

● Check List 1(행사목적 및 내용)

<input type="checkbox"/>	• 행사가 주최기관 업무 및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
<input type="checkbox"/>	• 행사의 목적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input type="checkbox"/>	• 사전에 행사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음

● Check List 2(참석대상)

<input type="checkbox"/>	• 행사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참석자 선정 경위가 적정하였음
<input type="checkbox"/>	• 참석자와 행사의 목적·내용이 연관성이 있음
<input type="checkbox"/>	• 참석자를 특정하지 않았음
	• 행사의 목적상 참석자를 특정할 합리적 이유가 있음

● Check List 3(공개 여부)

<input type="checkbox"/>	• 행사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짐
	• 비공개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음

● Check List 4(준비 절차)

<input type="checkbox"/>	•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input type="checkbox"/>	• 주최자의 공문, 메일 등 공식적인 초청이 있음

● Check List 5(통상적인 범위)

<input type="checkbox"/>	• 다른 동종·유사 행사에서 제공되는 수준, 행사 장소,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함
<input type="checkbox"/>	•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

● Check List 6(일률적 제공)

<input type="checkbox"/>	•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참석자에게 제공
<input type="checkbox"/>	•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으로 차등하여 제공

☞ Check List의 모든 항목에 체크(✓)된 경우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제공·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

■ '직무 관련 공식적인 행사' 관련 해석 사례

● 공식적 행사로 인정된 해석 사례

- 지진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관광의 안전함을 언론 기사로 홍보하기 위해 관광전문기자협회에 의뢰해 참가 언론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지진 피해상황 및 관광 활성화 방안 브리핑·취재, 민간 업계의 관광 활성화 노력 및 관광객 모습을 취재하는 행사
- 연구재단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운영자 교육을 전국 대학교 직원 약 250명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경우
- 전국 시·도 교육청 과학과 교육전문직 및 수석교사, 교육부 업무담당자 및 연수 강사 등 약 220여명이 참석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신설되는 통합과학 과목 관련 연수
- 지역 기업인과 기관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최신 트렌드 및 경영정보 제공을 위해 1996년 창립하여 매월 1회 호텔에서 지역 기업인, 기관장, 상공회의소, 은행 임직원, 회원 등 300여명을 참석대상으로 조찬강연의 형태로 진행하는 경제포럼
- 글로벌 IT기업이 세계 각국의 기자, 비즈니스 및 기술 선도 기업 및 리더, 데이터 분석 전문가, 미디어 관계자들(우리나라는 미국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 특파원)을 참석 대상으로 초청하여 진행하는 글로벌 포럼
- 지역구의원, 지자체장 및 지역주민 등 300여명을 참석대상으로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기지 및 공급배관 건설공사 착수를 기념하는 착공식 행사
- 미국에 소재한 세계적인 IT기업에서 AI의 현재 기술에 대하여 토론하는 등의 목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전문기자만 초청하는 AI데이 행사(참석한 여러 국가 기자들에게 차별 없이 교통, 숙박 등을 제공)

-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가전 박람회인 IFA의 최신 정보를 미리 접하고, 소비자 가전분야 기술발전 동향 및 세계 가전업계 흐름을 조명해 보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 가전, IT 분야 매체에 초청장을 보내고 초청장을 받은 매체의 소속 기자 중 스케줄이 가능한 기자가 참가신청을 하여 참석대상으로 선정한 베를린 가전 박람회
- 국제구호단체가 특정 국가의 아동센터 설립 10주년을 기념하여 아동센터 발전과 변화양상 취재를 위해 아동센터 설립 시에 현장 취재를 진행했던 언론사를 참석대상으로 선정한 기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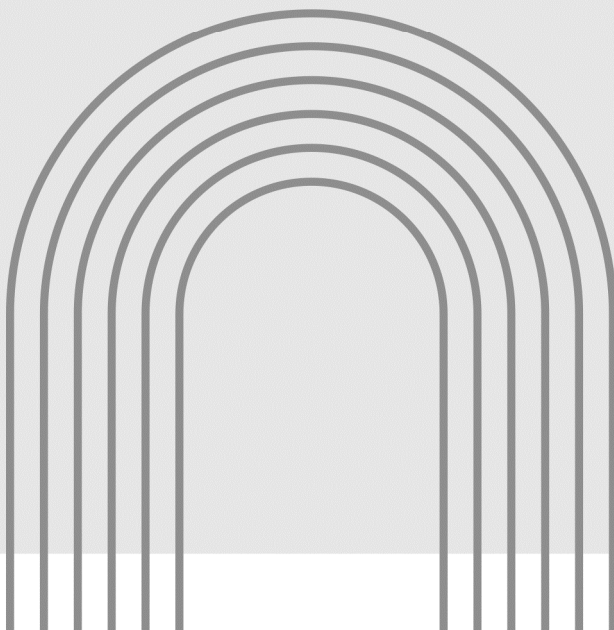
● 공식적 행사가 부정된 해석 사례

- 공공기관장이 주관하여 언론사 대상 오만찬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언론사 데스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 민간기업이 골프장을 만들어 오픈행사를 하면서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등 **특정 공직자**들에게만 사전에 골프라운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협회가 지역 건축분야 도청 및 교육청 공무원, 관리사협회 회원 및 그들의 가족 등 500명을 초청하여 개최하는 체육대회(축구, 줄다리기, 800m계주, 레크레이션 경기로 구성)



제4장

주요 사례



I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주요 사례

1 > 공직자등 해당여부

**Q1 공무원 임용유예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합격하고 임용유예 후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수험시절 다녔던 학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공무원 임용유예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요?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입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은 임용유예자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직자등이 아닌 일반국민이 장학금을 제공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임용·복무·신분보장 등에있어 공무원 으로 인정된 사람
 - 경력직공무원(일반직, 특정직)과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 별정직)이 있음
 -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사법연수생(「법원조직법」 제72조),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 공중보건의사(「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청원경찰(「청원경찰법」 제5조)



무기계약 근로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유관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공무원과 유사·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요?



(공직유관단체 근무 무기계약 근로자) 공직유관단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공직자등'에 포함되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근무 무기계약 근로자)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공무직근로자)들은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볼 수 없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구분	적용대상	적용대상 아님
행정기관	•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기간제근로자, 공무직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
공직유관단체	• 계약직 등 비정규직 임직원	• 용역(도급)업체의 임직원



재건축 조합장 등의 '공무수행사인' 인정 여부(제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개발사업(재개발, 재건축 등)의 조합장, 임원, 조합원 등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명시적으로 재건축 조합장 등에게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재건축 조합장 등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공무수행사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록·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사 등록 및 등록갱신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업무,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 접수업무 등을 위탁받은 한국주택협회



Q4

외국공무원이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관에서는 아시아 개발도상국 재무부·중앙은행 소속 고위 공무원(외국인) 대상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는데, 위 초청 외국 공무원들에게 국가예산으로 3만원 초과 오찬 및 만찬, 5만원 초과 기념품, 호텔 숙박비 등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외국공무원에게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요?



A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공무원이 금품등을 수수하더라도 동법으로 규율되지 않습니다.

● 청탁금지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속인주의 :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대해 적용
 - 대한민국 국적 공직자등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해당 대한민국 공직자등에게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됨
- 속지주의 :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
 - 공직자등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해당 공직자등과 청탁을 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한 외국인 모두에게 청탁금지법이 적용됨



공직자등의 이중지위(민간기업의 대표 겸 공직유관단체 사외이사)

민간기업 대표가 공직유관단체의 사외이사(비상임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시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지요? 사외이사 직무와 무관하게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도 금지되나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민간기업 대표는 공직자등에 해당(공직유관단체의 사외이사)하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직자등이 민간기업 대표의 지위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이상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2 > 공무수행사인 인정 여부

**공공기관의 내규로 설치된 위원회 위원의 '공무수행사인' 인정 여부**

공공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법령'이 아닌 '내규'에 의해 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인데, 이와 같은 위원회에 위촉된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하는지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 그러나, 별도의 근거 법령없이 내규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지원받는 단체의 '공무수행사인' 인정 여부**

군민체육대회 참가 경비 및 면민체육대회 개최 경비 중 일부를 ○○군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읍·면 체육회'(○○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권한 위임·위탁 사항 없음)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경비의 일부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공무수행사인의 유형(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 (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제3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제4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재건축 조합장 등의 '공무수행사인' 인정 여부(제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개발사업(재개발, 재건축 등)의 조합장, 임원, 조합원 등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명시적으로 재건축 조합장 등에게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재건축 조합장 등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사 감리업무담당자의 '공무수행사인' 인정 여부(제4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한 공사의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요?



감리는 「건축법」 등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해당(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4호)하므로, 공공분야나 민간분야의 주택, 건설 감리를 담당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과 달리 공무수행사인이 담당하는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적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따라서, 공무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활동 등은 청탁금지법으로 규율되지 않습니다.



이장 및 통장의 '공무수행사인' 인정 여부

이장 및 통장이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이장 및 통장의 업무가 법령에 의해 공공기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위탁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장 및 통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무수행사인의 이중지위(변호사 겸 공무수행사인)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이면서 「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된 ◇◇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A가 행정심판과 무관한 형사사건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후, 의뢰인 B로부터 승소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선물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A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므로(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 A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의 지위와 변호사로서의 이중지위를 가집니다.

다만,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과 달리 공무수행사인이 담당하는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가 적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사안에서 A가 받은 선물은 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법무법인의 변호사로서 받은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 기타

**공무원의 배우자인 회사 임원이 5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공무원의 배우자인 회사 임원 A가 하청업체 직원이 사 온 5만원 이상의 음료수 등을 제공받아 직원들과 함께 나눠 먹었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4항).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회사 임원으로서 동 회사의 하청업체 직원으로부터 음료수 등을 받은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경우만 수수를 금지
- 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으로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
- 공직자등은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
 - ※ 공직자등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받은 금품등의 가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
-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의 제재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



Q2

공직자들의 배우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자의 처벌

공무원 A의 배우자 B가 A의 직무와 관련하여 시공업체 사장으로부터 5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수수하였습니다. 공무원 A는 배우자 B의 금품등 수수사실을 안 후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시공업체 사장에게 금품등을 반환하여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배우자 B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시공업체 사장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누구든지 공직자들에게 또는 그 공직자들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서는 아니 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5항제3호).



Q3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우리 회사(민간기업)에서는 소속 임직원에게 매년 10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혜택, 회사 보유 콘도이용권, 명절선물, 경조사비(30만원), 회사제품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저의 배우자가 공무원인데 받아도 될까요?



민간기업의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와 해당 회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민간기업에서 소속 임직원에게 내부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각종 혜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Q4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공직유관단체 직원 A가 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만난 민간기업 직원 B에게 추석 명절선물을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



사안에서 금품등(명절선물)을 제공받는 자는 민간기업의 직원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위 사안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II 부정청탁 주요 사례

1 > 부정청탁의 성립요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게 청탁을 한 경우

A기자는 평소 친분이 있는 공직자 B과장에게 콘도 예약을 부탁했고, B과장은 리조트 업체에 근무하는 고교동창 C상무에게 같은 내용의 부탁을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부정청탁의 상대방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A기자가 B과장을 통하여 청탁한 일반 기업체 상무(C)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직자 B과장이 콘도 예약업무를 직무로서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B과장에 대한 부정청탁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 행동강령」 등 다른 법령의 위반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부정청탁 행위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

학부모 A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에게 자신의 아들 성적을 몰래 올려달라는 부정청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되나요?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 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청탁 내용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학부모 A는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2항).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할 것이며(청탁금지법 제7조제1항),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청탁금지법 제7조제2항),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



부정청탁이 공직자등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군청 담당공무원 B에게 토지형질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신청 후 해당 토지가 관련 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식당을 운영하는 담당공무원 B의 선배 C에게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의 전달을 부탁했으나, 선배 C는 이를 담당공무원 B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부정청탁을 요청한 A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을 한 것인가요?



청탁금지법 제5조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자에게 청탁의 전달을 부탁했으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의 부정청탁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우선 구매 요청 행위

저는 장애인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 구매담당자에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령에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조항이 있으니 이에 따라 구매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시 구매담당자는 이러한 구매 요청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구매요청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위반'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비율 조항을 지켜달라고 요청한 것만으로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2 부정부탁의 대상직무



인·허가 등 처리 관련 부정부탁(제1호)

○○건설회사 소속 직원 A가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구청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했습니다. 며칠 후 A와 같은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 B가 동일한 내용의 청탁을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에게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부정부탁에 해당하는지요?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부탁 대상직무(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합니다.

건축허가 관련 직무는 위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는바, 건축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부탁에 해당합니다.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은 처음 부정부탁을 받은 경우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청탁금지법 제7조제1항), 직원 B로부터 동일한 부정부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청탁금지법 제7조제2항),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원 A와 B가 담당공무원에게 한 부정부탁의 효과는 법인에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부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각각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것입니다. ○○건설회사는 청탁금지법 제24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등 처리 관련 부정부탁(제1호)

- 인가·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함
- 인가·허가·면허·특허 등 법령에서 열거된 행위 외에도 지정·등록·신고 등 열거된 직무에 준하는 직무도 포함



인사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제3호)

자신을 위해서 직접 희망부서, 승진 등 인사 고충 및 상담을 인사담당자 또는 상급자에게 하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 금품등 수수는 없다고 전제함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다면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사담당자나 상급자에게 자신의 인사고충이나 인사상담을 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법령을 위반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을 승진시켜줄 것을 부탁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공직자등의 경우에는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

인사담당자 또는 상급자가 거절·신고의무(청탁금지법 제6조)를 이행하지 않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며(청탁금지법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

● 직접 청탁의 의미

- 자신을 위하여 직무 수행 공직자등에게 직접(제3자를 통하지 않고)하는 부정청탁을 말하며 부정청탁행위에 따른 법적 효과가 직접 청탁행위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의미함
- 과태료 부과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직접 청탁행위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

● 제3자를 위한 청탁의 의미

- 부모·자녀 등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도 그에 따른 효과가 제3자인 부모·자녀 등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청탁에 해당함



인사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제3호)

○○부처 국장 A의 자녀 B가 ◇◇공기업에서 실시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특별채용에 응시하였는데, A는 해당 공기업 인사담당자 C에게 자신의 자녀 B가 응시하였으니 면접점수를 높게 주어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C는 B의 면접점수를 높게 주어 B가 합격했다면 A, B, C는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 B는 A에게 인사청탁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가정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 등 공직자들의 인사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다면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는 제3자인 자녀 B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에게 해당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청탁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이며,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

자녀 B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공기업의 인사담당자인 C는 A의 부정청탁에 따라 면접점수를 높게 주어 A의 자녀 B가 채용되도록 직무를 수행하였는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대상(청탁금지법 제22조제2항제1호)이며,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

● 인사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 과태료 부과 사례

1. 채용 관련 자료 요청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과 5>

A는 B를 위하여 자신이 ○○부 재직시절 부하직원이었던 C와 D에게 경력직 채용 시험과 관련한 면접질문 자료를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B는 A에게 부탁하여 그를 통하여 D에게 관련 자료를 구해달라는 청탁을 함

▶ 처리결과 : 과태료 A 10,000,000원, B 5,000,000원

2. 직원 채용 청탁 전화 <수원지방법원 2018과 52>

위반자 A는 B시 산불감시원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채용담당자에게 채용 인사에 관하여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성 전화 통화를 함

▶ 처리결과 : 과태료 5,000,000원

3. 제3자를 통해 본인의 승진 청탁 <청주지방법원 2018과 165>

위반자 A는 본인의 승진을 위해 B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제3자인 C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냄

· 처리결과 : 과태료 3,000,000원

4. 승진심사위원들에게 소속 직원들의 승진 청탁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과 1303>

A, B는 2017년도 하반기 ○○○소방본부 지방소방교 승진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승진심사위원들에게 소속 직원들의 승진 인사에 영향을 미치도록 청탁성 전화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 처리결과 : 과태료 각 500,000원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제5호)**

퇴직예정자가 상훈담당공무원에게 자신의 퇴직포상에 대한 추천을 부탁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1. ○○사에서 퇴직예정인 주사 A가 본인에게 추천 제한 사유가 있어 상훈 관련 법령상 추천을 받을 수 없음에도,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공직심사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 등을 인정받아 추천받을 수 있도록 상훈담당계장 B에게 부탁하는 경우
2. 지역주민이 위 주사 A가 공직심사위원회에서 퇴직포상 대상자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위와 같은 내용으로 B에게 부탁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포상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5호)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1 관련)

주사 A가 상훈담당계장 B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A는 이해당사자로서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징계대상에는 해당할 것입니다(법 제21조). B는 거절·신고의무(법 제7조)를 이행하지 않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법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법 제21조).

(질의2 관련)

지역주민은 제3자인 주사 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법 제23조제2항), B는 거절·신고의무(법 제7조)를 이행하지 않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법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법 제21조).

● 부정청탁의 거절의사 및 신고의무(청탁금지법 제7조)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최초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함
- 공직자등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함



입찰·경매 등 직무상 비밀 누설 관련 부정청탁(제6호)

섬유 관련 사업자 A는 경쟁업체에서 신소재 섬유 관련 특허출원을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업자 A는 해당 특허출원 사건에 대한 특허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의 친구인 변리사 C에게 관련 특허 정보를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변리사 C는 담당공무원 B에게 이를 부탁하였으나, 담당공무원 B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A, B, C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6호는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의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등을 위반하여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는 제3자(C)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3항).

B는 변리사 C의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므로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청탁금지법 제7조제1항).

C는 제3자(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2항).



계약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제7호)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A는 ○○국립대학교에서 시설 방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해당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친구 B를 통해 '계약 담당 직원 C에게 공사금액을 소액으로 찌개는 방법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서 A를 공사 계약당사자로 선정해 줄 것을 청탁'하였고, 이 청탁내용에 따라 A가 공사 계약당사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A, B, C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7호는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령 등을 위반하여 공사 및 금액을 분할하여 특정인을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선정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는 제3자(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3항).

B는 제3자(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

C는 A의 부정청탁에 따라 A를 공사계약 당사자로 선정하였으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청탁금지법 제22조제2항제1호)이며,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

●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제7호)

- 계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다른 부정청탁 유형과 달리 ‘계약관련 법령’으로 규정하여 법령의 분야를 한정하고 있음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과 같은 계약에 관한 일반법뿐만 아니라 개별법령에서 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함

●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부정한 청탁’을 인정한 판례

- 물품구매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공사 자재과장과 직원이 물품납품계약을 한국보훈복지공단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주고 편의를 보아주면 사례하겠다는 청탁을 받은 경우(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도 665판결)
- 병원에 소속된 의사가 특정 의료용구를 구입하게 하여 달라거나 특정약품을 많이 사용토록 처방을 넣어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한 청탁이라는 사례(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 413판결)
- 병원대학교수들이 출판사를 운영하는 A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자를 교재로 채택하거나 교재로 사용할 편집책자의 출판을 위 출판사에 맡겨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경우(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도 2090판결)



보조금·장려금 등 배정·지원 등 관련 부정청탁(제8호)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민 또는 특정단체 등을 위한 사업의 예산편성 반영을 예산 편성 부처의 업무 담당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되는지요?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8호).

보조금·장려금 등 배정·지원 등과 관련 없는 일반적인 예산편성·심의는 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의 부정청탁 금지 대상 직무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예산편성·심의가 아니라,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 등을 할 것을 전제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정청탁 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장려금 등 배정·지원 등 관련 부정청탁(제8호)

예산편성 기간에 예산업무 담당 과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고향선배를 예산편성 업무를 담당하는 부하직원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의 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산편성 업무 담당공무원에게 고향 선배 등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단순한 ‘소개’를 넘어서서 위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또는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벗어나서라도’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요청을 한 경우라면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되는 바, 행동강령 위반여부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관련 부정청탁(제13호)

시·구 단속공무원이 「도로교통법」 제35조 등에 따라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와중에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단속공무원에게 ‘내가 시장과 친분관계가 있으니, 이번 한번만 못 본 척 하고 위반사실이 없던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단속공무원이 위반사실을 묵인했다면 단속공무원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령상의 주정차 단속업무는 제5조제1항제13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주정차 위반 단속에 적발된 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를 한다면 부정청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자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단속공무원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6조 위반으로 형사처벌(청탁금지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징계(청탁금지법 제21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부정부탁의 예외사유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제1호)

일반국민 A가 국회의원 B에게 법률 제·개정을 제안·건의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부정부탁에 해당하나요?



일반국민 A가 국회의원 B에 대해 법률의 제·개정을 건의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 열거된 부정부탁의 대상직무로 보기 어려워 부정부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부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바, 일반국민 A가 국회의원 B에게 법률 제·개정을 건의하는 행위가 동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부정부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제2호)

청탁금지법 제5조제2항제2호의 조문 중 ‘공개적으로’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요? SNS 등에 ‘특정한 행위’를 공개적으로 명시해 놓고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부탁을 하는 경우도 해당하는지요?



‘공개적으로’는 물리적·장소적 개념이라기보다 청탁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며, 공개된 장소에서의 피켓시위 또는 TV·신문 등의 언론 매체를 통한 요구는 공개적인 요구에 해당됩니다.

SNS에 게시함으로써 청탁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제5조제2항제2호)로서 부정부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부탁할 경우는 SNS에 글을 올리는 행위와 별도로 부정부탁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제2호)

-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며, 형식적 요건(공개적으로 요구)을 갖춘 이상 요구하는 내용과 관계없이 예외사유에 해당함



법정기한 내 처리요구 등(제4호)

민원인 A는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구청에 증축 허가를 신청한 상태인데, 자신의 친구인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B를 통해 진행상황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건축법령상의 건물 증축허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제5조제1항제1호의 ‘인가·허가·면허 등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해당하므로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증축허가 관련 업무의 진행상황에 대해 확인·문의한 것이라면, 법 제5조제2항 제4호의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로서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Ⅲ 금품등 수수 금지 주요 사례

1 > 금품등, 직무관련성의 의미, 금품등의 가액 평가



Q1 교통편의 제공이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감기관에서 감사기관 공직자의 기관 출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요?



교통편의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 나목의 '금품등'에 해당하고,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교통편의 제공의 경우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대체 수단을 이용할 경우 과도한 이동 시간 소요 등으로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나, 사안의 경우 당사자 간의 관계, 수수 시기 및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상 허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범위(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제공
-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고향친구 B가 공무원인 A에게 결혼 축하 의미로 15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선물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청탁금지법 제8조에 위반되나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가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로부터 1회 100만원 범위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더라도 같은 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과 병원의 할인 혜택 협약체결 허용 여부

본인은 ○○시 소속 공무원입니다. ◇◇종합병원에서 우리 시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진료비를 감면해주겠다고 협약을 맺자고 합니다. 협약을 맺고 진료비 할인 혜택을 받으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청탁금지법상의 공공기관과 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할인 혜택은 할인 혜택제공으로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며, 외부압력 등에 따라 협약을 체결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에서 과도하지 않으며, 다른 기관, 직종에도 다변화된 마케팅 차원의 단체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수혜자의 범위가 본인 외에 가족, 친지 등까지 과도하게 확장된 경우라면 사회통념의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더불어, 협약체결 주체 사이에 지도·단속, 민원처리, 입찰참여, 인·허가 등 직접적인 현안으로 인해 밀접한 직무 관계를 가지게 되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할인 혜택 제공행위가 대가성이 있거나 부정청탁과 결부되어 있다면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1회’의 의미

○○언론사 직원과 업무 관련 협의 후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였고, 3일 후 다시 만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였을 경우에 각각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2호의 가액 범위를 넘지는 않으나 합산되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요?



청탁금지법상 1회의 제공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시간적 계속성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일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나 시간적 계속성 등을 인정하기 어려워 1회로 평가되기 어려우므로, 3만원 이하의 식사 제공과 5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각각 별개의 행위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가액 범위 내의 식사·선물을 제공한 것이라면 두 행위 모두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공공기관 내 상·하급자)

A국 B부서 상급자(과장)와 C국 D부서 하급자(사무관)를 동료로 보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간주할 수 있는지요?



공공기관 내 직무상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하급자와 상급자 간에는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직무상 지휘·감독관계가 아닌 경우 당사자 간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공공기관 내 하급자의 직속과 또는 국 이외에 다른 과, 국의 상급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인사·감사 부서, 인사위원회 위원 등)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골프접대의 가액 평가

민간기업 직원 A, B, C는 인허가 담당공무원 D와 함께 골프장에서 법인 무기명 회원권으로 골프를 치고 무기명 회원에게 적용되는 비용(4인 20만원)을 각자 5만원씩 냈습니다. 위 골프장의 회원이 아닌 일반인의 골프 비용이 25만원인 경우 공무원 D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금품등을 제공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직자등이 골프 할인 혜택을 받는 경우 골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자와 할인혜택을 받는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할인혜택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골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공직자가 할인 혜택을 받는 것만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골프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음식물 3만원 초과 부분 각자내기의 경우 가액 평가

중앙부처의 A사무관과 산하 공공기관 소속 B부장, C팀장 3명이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1인당 5만원이 나왔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음식물 접대 허용 상한액이 3만원이므로 B부장이 9만원을 결제하였고, 1인당 5만원 중 3만원을 넘는 2만원 부분은 참석자들이 각자내기(더치페이)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받나요?



3만원 초과 부분은 각자내기(더치페이)를 했으므로, 음식물 접대 허용 상한액인 3만원 범위 내에서 식사 접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 실제 각자내기(더치페이)한 부분에 대한 현금 보상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영수증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가액 범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호 접대의 경우 공제·상계 여부

공공기관 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상급자 A와 하급자 B가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 B가 식사비용으로 7만원을 부담하였는데 A가 5만원 상당의 와인을 식사 시 제공하였다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는지요?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 시 상호 접대에 따른 공제·상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나 상호 접대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해 있으며, 실질적으로 한 장소에서 식사 등을 하고 각자내기를 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상호 접대에 따른 공제·상계가 인정된다면 A는 B로부터 1만원의 음식물을 접대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 당사자가 함께 향응을 한 경우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 그 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으로 산정

2 >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상급 공직자등이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직원 결혼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의 가액 범위인 5만원을 초과하는 10만원의 경조사비를 자신의 명의로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요?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장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10만원의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것입니다.

●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등이 제공하는 금품등

- 제1호 예외사유는 공공기관이 소속 또는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상급자와 하급자는 원칙적으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공공기관 소속 및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 사이에서 성립 가능

※ 「정부조직법」 등 여러 법령에서 인사·복무·징계 등의 지휘감독권 등에 대한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므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 필요

- 상급 공직자등이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위로·격려·포상 등 목적상 제한이 존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명절선물

업무 관계로 알게 된 공무원 A에게 명절선물을 보내려고 합니다. 현재는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A에게 명절선물을 보내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범위(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물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상 제한이 있는바,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
-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물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가액 범위 내의 선물을 수회 제공받은 경우

공무원은 청탁금지법상 가액 범위 내의 선물이라면 여러 번 받아도 되나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으로서 5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는 것이며(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제2호), 목적상 제한이 있으므로 가액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수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액 범위 내의 선물을 수회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선물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나, 수회에 걸쳐 선물을 받음으로써 목적상 제한을 벗어나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이 '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가증권의 범위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패밀리레스토랑 외식상품권(3만원)이나 커피전문점 기프트콘(1만 5천원)이 유가증권에 해당되나요?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 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안의 상품권이나 기프트콘은 유가증권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18. 1. 17.)으로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2호의 '선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관련 판례

-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 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임(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483 판결)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의미

직무관련자 A가 식당에 미리 결제를 해 두고 공직자등에게 연락하여 해당 식당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A는 함께 식사하지 않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여기서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므로(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미리 결제만 할 뿐, 공직자등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되는 ‘음식물’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직속 부서장에 대한 경조사비 제공의 허용 여부

공무원 A가 자신의 근무평정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장 B의 경조사(모친상)에 경조사비(조의금)를 제공해도 되나요?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 범위 내의 경조사비(5만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법 시행령 별표 1).

※ 축·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은 10만원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축·조의금과 화환(조화)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축·조의금은 5만원을 넘을 수 없음(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부조의 목적의 경우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금품등 제공시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우려가 있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가액 범위 이내의 금품 제공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조사비의 경우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인사, 평가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시기에도 동일 기관 소속 상급자에게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 기준 내의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입찰참가업체가 공공기관 업무담당자에게 선물 제공

A공공기관은 내부 전산망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고자 입찰공고를 하였고 B업체 등이 참여하였는데, A공공기관의 계약담당자에게 B업체의 영업담당자가 5만원 상당의 추석 명절선물을 제공하였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바, 사안과 같이 입찰진행 등으로 직무밀접도가 높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 범위 이하의 선물제공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금품등 수수 관련 과태료 부과 사례

1.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 주류 등을 제공받음 <청주지방법원 2018과 165>

위반자 A는 E식당, F유흥주점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G, H로부터 460,000원 상당의 식사, 주류 등을, J식당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K회사 L로부터 37,500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받음

▶ 처리결과 : 과태료 2,000,000원

2. 금품등 제공 의사를 표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과 110>

위반자 A는 2017년 설명절 경에 자신의 근무상황을 관리하는 ○○중 교감 B에게 시가 10만원 상당의 장뇌삼을 제공하려 하였고, 같은 해 추석명절 경에 자신의 채용 및 근무내용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C에게 시가 7만원 상당의 유과를 제공하려는 의사표시를 함

▶ 처리결과 : 과태료 500,000원



100만원을 초과하여 어려운 처지의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동료 5명이 21만원씩 건어서 어려운 동료에게 105만원을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 건가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하여는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약사항의 금품등이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

-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친분관계의 원인이나 계기, 교류·접촉 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히’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함
 - 제공 주체는 그 소속 구성원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시된 단체의 구성원에 한정되지 않고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자도 해당
 - 고향친구, 학교나 직장 선후배 등 단순한 지연·학연·혈연 등의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히 친분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어려운 처지) 공직자등 자신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도 포함

※ 질병·재난 등의 사유가 아니라 주식투자, 자녀의 해외유학 등 다른 사유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는 제외



공식적 행사 해당여부

A해운회사는 선박 노선 개통식을 ○○항에서 열 예정이고, 이를 취재할 국내 해운담당 기자들을 초청하고자 하는바, 국내 모든 해운담당 기자들에게 안내메일을 보낸 후 참가를 희망하는 기자들 중 선착순 또는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참여 기자들에게는 ○○항까지의 교통과 식사(참석자들에게 제공되는 뷔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됩니다.

-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행사가 주최 측의 업무 및 사업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행사의 목적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사의 목적과 무관하게 실질이 외유성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공식적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단순한 ‘기관방문, 실태조사, 현지조사, 사례연구, 견학’ 등 명목의 행사는 공식적인 행사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참석자 선정의 경우 해당 행사에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참석기회를 폭넓게 보장하여야 하고, 행사 여건 등에 따라 참석자를 제한할 경우에는 행사의 성격·목적에 비추어 참석대상을 해당 분야 전문가로 한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집단을 그루 대표하는 자를 참석자로 선정하여야 하는바, 행사에 참석하고자 하는 자들이 대표성을 가진 일부를 자체 선발, 순번제 또는 추첨 등의 공정한 방식으로 선정한다면 ‘공식적’ 요건에 더욱 부합할 것입니다.

사안의 행사가 위와 같은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기념품·홍보용품의 의미

공공기관 구매 계약 담당자입니다. 거래업체인 민간업체에서 광고성 물품(예 : 법인명이 들어간 마우스패드 등)을 업체홍보자료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왔습니다. 위 물품을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나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7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기념품·홍보용품의 범위

-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함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도서관법)

사회복지관이 거래처로부터 복지관 내 도서관에 비치할 도서를 후원받는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관 내 도서관에 제공되는 금품등이 「도서관법」 제9조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예외사유

- 다른 법령·기준에서 금품등 수수를 허용하거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

● 다른 법령에 따라 금품등 수수를 허용하는 사례

- 「정치자금법」의 후원금, 「영유아보육법」의 양육수당·보육수당, 「공무원연금법」의 요양비·재해부조금, 「의료법」상 허용되는 경제적인 이익, 「도서관법」상 기부금품 등
- 다른 법령·기준에서 금품등 수수를 허용하거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

3 >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지체 없이’의 의미

공직자 A가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받고 두 달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불안하기도 하고, 내사 등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 나중에 신고하고 돈을 돌려주었을 경우 공직자는 면책되나요?



공직자들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 제2항).

공직자 A의 경우 두달 정도 돈을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지체 없이 신고·반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지체 없이 신고·반환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고·반환이 지체되기는 하였으나, 자진하여 신고·반환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5조제3항).

● 신고 및 반환·인도의시기

- 신고 및 반환은 ‘지체 없이’ 해야 하는데,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
-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

※ ‘지체 없이’의 판단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징계 해당 여부

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은 공직자가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받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신고와 반환 의무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수 금지 금품의 제공 또는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공직자 등이 금품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신고의무는 이행하지 않았다면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공직자들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 또한 공직자들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청탁금 지법 제9조제2항).

한편,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

따라서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공직자들이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9조제1항 위반으로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양벌규정의 법인 면책사유 판단 주제

과태료 부과관련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민간법인과 임직원에게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요청을 하고자 할 때, 행정기관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기 전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의무'를 해당 법인이 다하였는지를 행정기관에서 조사하여 법원에 요청하라는 내용인지요?



청탁금지법 제24조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22조제1항제3호,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또는 제23조제5항제3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하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비추어 양벌규정에 따른 제재 또는 면책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바, 이는 법원의 재판사항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양벌규정

- 법인 등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법인 등의 업무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22조제1항제3호, 제23조제5항제3호,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등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청탁금지법 제24조)
- 법인등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양벌규정 적용 제외

4 > 외부강의 등 주요사례



Q1 공청회, 간담회 등에서 사회자 역할의 외부강의 해당 여부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 또는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합니다.

청탁금지법상 강의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아나운서가 지역축제 행사에서 사회를 보는 경우와 같이 단순히 행사의 순서에 따라 진행만 하는 경우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Q2 강의관련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공무원이 대학이나 대학원의 한 학기 강의를 전담하고 강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도 받는지요?



공무원이 대학(교)의 시간강사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하거나,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1장).

이러한 출강은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해야 할 것입니다. 출강에 대한 대가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인바,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의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외부강의등의 신고 의무 및 면제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의 신고제외 대상으로 '요청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립대학과 국립대학교병원의 경우 교육청 소속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들 기관도 국가로 보아 외부강의등 신고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직자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국립대학법인 또는 국립대학교 병원 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

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①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

※ 국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이에 해당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의 신고대상 여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등 A에게 A의 모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A의 직무와 관련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A는 재능기부형식으로 사례금 없이 강의를 하였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이 개정(2020. 5. 27. 시행)되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바, 사안과 같이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종전 외부강의등을 실시하기 전(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것을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면 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이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기준을 보면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기관의 규정을 의미하는지, 초청한 외부강의자 소속기관의 규정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 별표 2 제2호 라목에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별표 2 제2호 라목의 '공공기관'은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을 의미합니다.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강의 요청기관에서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을 초과하는 금품등은 일비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용역 수행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

우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소속직원이 타 국가연구기관에서 발간하는 보고서 중 한 부분을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대가는 400만원이고 기간은 1개월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사항에 해당하는지, 개인 용역으로 신고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며, 이 경우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실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보고서 작성 행위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가 아닌 경우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실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가 아닌 경우는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절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타 국가연구기관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례금을 제공받는 것이 기관별로 마련된 행동강령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P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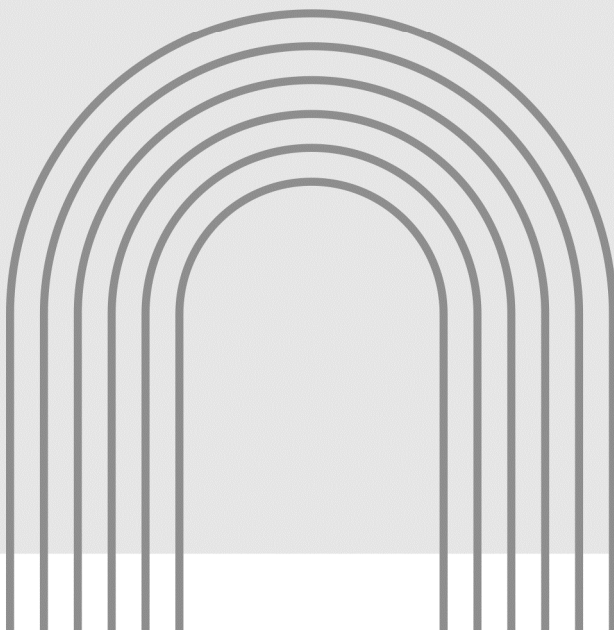
2

공무원 행동강령



제1장

행동강령 이해



I 「행동강령」이란?

1 행동강령의 의의

- 강령(code)이란 원래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기를 이르는 말로서 정치집단이나 사회단체의 기본이념이나 기본방침을 나타내며 근래에는 특정한 조직이나 전문가 집단이 지향하는 가치를 명문화하여 공표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음. 즉, 강령에 윤리 혹은 행동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그 구성원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가치, 기준, 열망 또는 행동방향 등을 천명하는 것임.
-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 내외에서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규정임. 개별 공무원이 특정한 가치를 인식하는 경험을 겪기 전에 바람직한 가치를 습득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함.

2 공무원 행동강령의 필요성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무원 개인의 이해나 관심에 따라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됨. 이러한 공무원들에게는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기대되는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과 원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제시가 필요.
- 공무원의 역할과 중요성의 증대
 -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이 수행하는 역할과 그 영향력은 어느 영역보다도 크고 중요하며, 공무원의 그릇된 행동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 또한 매우 크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바람직한 의식과 행동을 담보하기 위해서 행동강령의 제정이 요구됨.
- 공무원의 상징성과 “축소(절제)된 사생활의 원칙”의 적용
 -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들에게는 국민의 높은 기대감과 더불어 ‘모범’이라는 강한 상징성 또한 부여됨. 이에 ‘축소(절제)된 사생활의 원칙’이 적용됨.

● 공무원의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과 원칙의 제시

- 사회의 변화는 갈수록 그 속도를 더하고 있으며, 이는 공직사회에서도 예외가 아님.
이로 인하여 다양한 가치관들이 표출되고 있으며,
- 이와 같은 상황에도 공무원이 바람직한 공적 가치(public value)를 유지하고 윤리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기대되는 바람직한 행동의 방향과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부패 발생 사전 예방

- 「공무원 행동강령」은 이처럼 부패행위는 아니지만 부패유발의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바람직하지 않은 요인들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를 규제함으로써 부패 발생을 억제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함.

● 공무원의 윤리성과 정부의 신뢰성 제고

- 행동강령 자체가 공무원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직접적으로 높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윤리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음.

● 거래비용 절감과 저비용 고효율의 시스템 구축

- 공무원 윤리의 확보와 정부 신뢰도 제고는 정부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나아가서 정책의 수용과 성공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함. 따라서 「공무원 행동강령」은 단순히 가치 규범적 차원에서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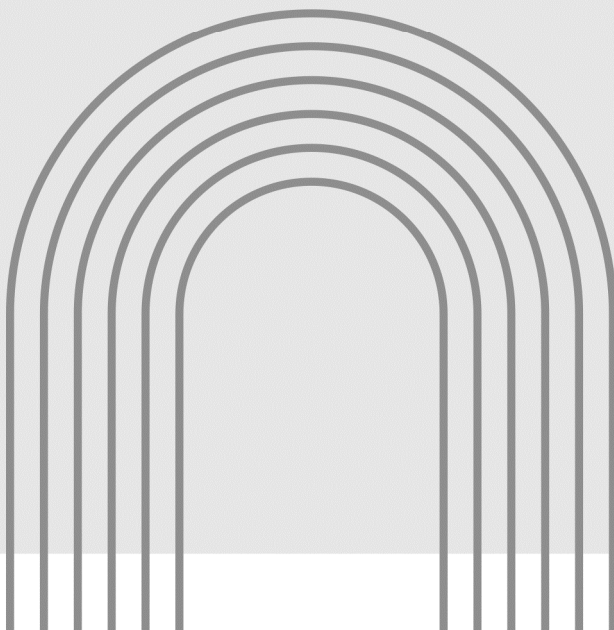
〈표 1〉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의 변천 과정

연번	일 자	주요 내용
1	2003. 2.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제정·공포 - 행정부 소속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
2	2003. 5.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 시행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각각의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시행
3	2003.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가 각각의 규칙으로 소속 공무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시행
4	2005. 12.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차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위반행위 신고창구 확대, 알선·청탁 금지 및 외부강의 신고 등 보완
5	2008. 2.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차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개정
6	2008. 11.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차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종교편향 금지 추가
7	2008.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차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직무관련자 범위 확대, 이해관계 직무 범위 확대,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규정 신설 등
8	2016. 9.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차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관련 행위기준 조정 등
9	2018. 1. 16. (‘18.4.17.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6차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이해충돌방지 규정, 민간 분야에 대한 청탁금지, 직무관련자 등에 대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 규정 신설
10	2018. 12. 24. (‘18.12.24.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7차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공공부문 갑질(부당한 요구) 금지, 감독기관의 출장, 연수 등 활동과 관련한 경비 지원·과잉의전 등 요구 금지규정 신설



제2장

행동강령 실무



I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근거) 2001. 7. 24. 제정된 부패방지법 *

* 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공무원 행동강령」

- 2003. 2. 18. 제정(2003. 5. 19. 시행)

• 『공무원의 청렴 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대통령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제12조(기능)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직자 행동강령), 제9조(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등), 제10조(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아.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7조(직무관련자 등의 범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에 따른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의 범위를 기관별 특성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 내용 해설

- (직무) 법령 등에 의하여 개인에게 부여된 업무뿐만 아니라 행동강령 제정 취지상 일시적으로 타인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거나, 사실상 타인의 업무 처리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도 포함
- (직무관련자)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직무관련자의 판단 기준
 - 직무관련자인지 여부는 개별 공무원의 직무 내용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
 - 직무관련자가 '단체'일 경우에는 단체의 구성원 중 직무상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자만 직무관련자에 해당
 - 지도·감독 관계에 있는 정부투자·출자·출연기관, 관련 법인 등에 소속된 업무담당자는 상급기관 업무담당자의 직무관련자에 해당
 - 직무관련자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는 대리인도 포함
-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의 직무관련자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정·질의·고충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 사업계획의 수립, 도로개설 여부의 결정, 횡단보도의 위치 결정 등 정책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실질적 이해관계가 형성되는 자를 의미. 즉, 정책 결정이나 사업의 집행을 직접적 원인으로 하는 이익 또는 불이익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 직무관련자 관계가 성립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부패방지를 위하여 기관별 특성에 맞게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를 직무관련자로 지정 가능

직무관련자 규정 사례

- 재판, 형집행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검찰청)
- 위원회 소관 법령 및 규정에 의한 조사를 개시하려는 것이 명백하거나 조사·심사·의결 중인 개인 또는 단체,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계류 중인 개인 또는 단체, 공정거래법 제64조의2(포상금의 지급)와 관련한 신고자 또는 제보자(공정거래위원회)
-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신고하는 중이거나 신청·신고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자문위원 위촉 후보자, 훈·포상 심사 대상자 및 대상협의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경찰관서에 복무중인 전투경찰순경·의무경찰의 부모·형제자매(경찰청)
- 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및 취소, 인원의 배정,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의 편입 및 취소, 복무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병무청)
-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 또는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조달청)
- 민법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방송통신위원회)
-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협의의 대행자 및 대상사업 시행자(환경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 또는 해당 심판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이나 직원, 청구인의 변호사 그 밖의 심판청구의 대리인 등(국민권익위원회)

-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함

●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2호의 직무관련공무원

-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공무원

직무관련공무원 규정 사례

- 수사지휘업무와 관련된 다른 기관의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검찰청)
- 기타 병무행정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공무원(병무청)
- 위조상품 단속·보조금사업 담당자와 다른 기관의 해당 업무 담당자(특허청)
- 구매계약·시설공사계약·설계심의·공사관리 등 조달업무를 요청한 공무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조달청)
-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동 협의를 요청하는 다른 행정기관 공무원(환경부)
- 예산·성과관리·조직·법령·통계조정·제안·민원·제도개선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통계청)
- 민원조사 업무나 행정심판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국민권익위원회)

● ‘금품등’에는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 및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이 포함됨

- 재산적 이익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 접대·향응 및 편의 제공 :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 경제적 이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 취업 제공 : 직위·직책 여부 또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업무처리, 조언·자문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보급 등을 받는 경우를 의미

●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제1호 나·라·사목, 제2호 본문)

- 직접적 이익이란 법령에 의해 보호받는 이익을, 불이익이란 법령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이익의 침해를 의미

- '직접적인 이익'은 '간접적 이익'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실상 이익·반사적 이익은 행동강령상 직접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 참고 자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일반민원
 - 1) 법정민원 : 법령·훈령·예규·고시·지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 2) 질의민원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3) 건의민원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4) 기타민원 :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 나. 고충민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하급자의 직무관련자는 상급자의 직무관련자에도 해당되는지?



소관 업무 담당공무원 외에 해당 업무 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함. 즉, 하급자의 직무관련자는 상급자(결재라인에 있는 계장, 과장, 국장 등)의 직무관련자에도 해당함.



공무원이 소속 기관의 업무가 아닌 타 기관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회적으로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평가 대상 업체와 직무관련자 관계가 성립하는지?

예시 甲시의 공무원 A가 乙시의 건설공사 터키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것을 A의 직무로 볼 수 있는지?



공무원의 '직무'에는 법령 등에 의하여 개인에게 부여된 업무뿐만 아니라 행동강령 제정 취지상 일시적으로 타인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됨. 따라서 타 기관의 업무를 일회적으로 수행할지라도 평가 대상 업체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관련자임.



제3조 (적용 범위)

이 영은 국가공무원(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과 지방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4조(형식)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을 기관별 행동강령의 준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내용 해설

-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대상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게 적용 (임기제 공무원도 적용)
 - 「공무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 행정부 소속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므로,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 각 부처의 장·차관,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일반직·특정직 공무원 등이 적용대상이 됨
 -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그 신분·직무상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행위기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적용
 -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 의무경찰, 군복무 중인 사병, 직업상담원, 일용직, 임시직, 비상임위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아니나**, 필요시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또는 해당 직종의 관련 규정에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 근거를 명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 기관별 행동강령 적용범위
 -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기관별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
 - 파견공무원은 파견근무 중인 기관의 행동강령을 적용 받으며, 징계 등의 절차는 파견공무원의 원 소속 기관의 규정을 적용(「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자체 규칙으로 제정한 행동강령을 적용(「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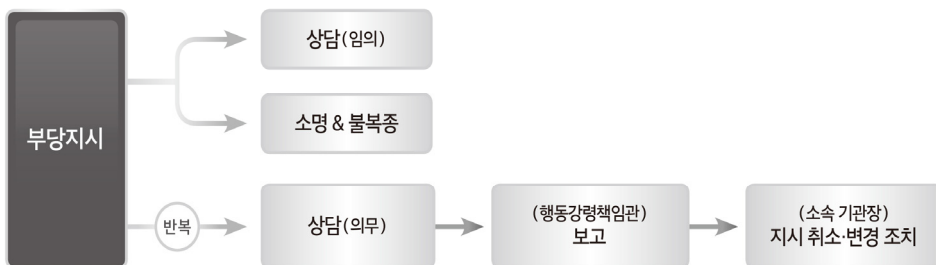
-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공직자는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 내용 해설

● 처리 절차



- ①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부당한 지시)를 하였을 경우

* 부당한 이익이란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 또는 공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취득한 이득 등을 의미하며 금전적 이득뿐만 아니라 무형의 이득도 포함

- ② 하급자는 당해 상급자에게 거부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 거부*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가능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 지시를 거부하였음에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경우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함

- ③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 확인 후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

- ④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시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 수행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에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 가능

● 소명 및 상담방법

- 형식 :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 이에 상당하는 방법

* 소명내용은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권익구제의 증빙자료로 활용되므로 구두소명은 지양하고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명하도록 함

- 소명내용 : 자신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 등

- 방법

- ① 상급자에게 소명 : 별지 제1호 서식
- ② 행동강령 책임관 상담 : 별제 제2호 서식

■ 예시

-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면서 납품업체의 부탁을 받고, 부하 검사공무원에게 하자품에 대하여 합격 처리토록 부당지시
- 대형 건물 건축사업을 승인함에 있어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부하 공무원에게 사업승인 해 주도록 부당지시
- 수학여행 업체 선정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특정 여행업체와 계약하도록 부당지시
- 포상대상자 선정업무와 관련하여 당초 평가기준과 달리 특정인의 평가항목별 점수를 상향 기재토록 지시



행동강령책임관은 필요시 부당지시와 관련된 내용을 기관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비밀 유지 및 신분 보장 의무와 어긋나지 않는지?



행동강령책임관과의 상담이 위반행위 신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상담의 경우에도 상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반행위 신고자에 준하여 비밀보장을 해야 함.

※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제3항에 의하면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과 관련한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가 있으므로, 상담자의 신분을 언급함으로써 상담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하였다면 이는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됨.



행동강령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상급자가 지시하는 경우 부하직원은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움. 이에 따른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지?



상급자의 지시일지라도 불복종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채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뿐만 아니라 지시에 따른 부하직원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함.



제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역할을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9조 (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 ①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제6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제1항제6호,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수관계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주식·지분, 자본금의 소유는 소유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1.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2.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3.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제7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제1항제7호,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자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2. 소속 기관의 퇴직공직자(임직원)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3.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4.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0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방법 등)

- ①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직무관련자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제1항,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2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직자에 대한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되거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 대상이 되거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5조제2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직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3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5조제3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시 해당 공직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확인·조치 내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제3항에 따른 현황,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확인·조치 내역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 내용 해설

●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

- 사적이해관계가 있음을 안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제5조제1항)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신설)
2. 공무원의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신설)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신설)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신설)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민법」 제779조상의 가족 :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적 이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참고자료

- 직무관련 업무 : 민원, 행정처분 등의 신청서, 이의신청, 심판, 소송 등 제기 증명서, 계약서, 소집 증명서 등
- 친족 관계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증 등
- 재직 및 경력 증명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 명단, 근로계약서 등
- 대리, 고문·자문 수행 : 위임장, 고문역 또는 자문 역할 관련 근로계약서, 자문계약서 등
- 소유 관계, 거래 내역 : 재무제표, 주식이동사항 명세서, 주주 명세서 등

●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

- ①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제5조 제2항) 대한 직무재배정 등 조치 신청
→ 별지 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신청,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게서 의견을 받을 수 있음.
→ 소속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공직자는 지체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 ③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제5조 제3항)는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별지 제6호 서식)

● 사적 이해관계 관리절차

-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신청된 사항을 기초로 구체적인 사안마다 직무배제의 필요성을 판단
- ①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②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③ 직무재배정, ④전보 조치를 통해 관련 직무에서 배제
- 이해충돌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예외적으로 해당 공무원에게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토록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함

직무 계속 수행 사유(제5조제3항)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신고,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 사항, 소속 기관의 장의 조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 등에 관한 현황 기록·관리(별지 제7호 서식)

< 4촌 이내의 친족 예시 >

구분	범 위
혈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혈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존속 : 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외)고조부모 - 직계비속 : 자, (외)손, (외)증손, (외)고손 ■ 방계혈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제자매 -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질, 종손, 생질, 이손 -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 백숙부, 고모, 외숙, 이모 -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외)종형제, 이종형제
인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혈족 ■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 또는 남편

예시

- 자신의 친동생이 대주주인 건설회사의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
- 건축심의위원회에 참여한 공무원이 자신의 사촌 동생이 신청한 건축허가를 심의
- 대형시설공사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K교수가 자신의 배우자가 직접 관여하고 있는 A회사에 최고 평가점수를 주어 공사업체로 선정되게 해 줌

**제5조에서 말하는 사적 이해관계의 의미는?**

‘사적 이해관계’란 공직자가 개인적으로 맺고 있는 연고관계(혈연, 지연, 학연, 직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유대관계 등) 및 사적 이익(공직자 및 그와 연고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금품등)을 말함. 이러한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함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중 한 명(국장)이 1년 전에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업체가 보조금 지원 대상업체 후보에 포함되어 있음.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3호는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연직 위원이라 할지라도 당해 심의업무 등과 관련하여 그러한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신고하여야 함



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담당자의 배우자가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 사적 이해관계 신고의무가 있는 것인지?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을 용역사업 업무담당자의 직무관련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행동강령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 따른 신고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이 용역사업 담당자에 대하여 직무상 열후적 위치에 있지 않고, 직무관련자를 정의하고 있는 제2조제1호각목에 해당하지 않음



공무원 A가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같은 부서 동료인 B의 사촌이 인허가를 신청하였음. 이 경우 공무원 A가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행동강령 제5조의 사적이해관계 신고 의무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인허가 업무 담당자인 A는 자신의 사촌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을 뿐, 같은 부서 동료 B의 사촌은 A와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행동강령 제5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제5조의2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고위공직자”라 한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소속 기관의 장(소속 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 및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사항
-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1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제2항이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제2항,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6조제2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내용 해설**●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제출**

-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민간 분야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 제출 (별제 제8호 서식)
- 고위공직자 규율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법적 책임에 상응하도록 고위공직자의 범위 명확화
- 정부, 지자체, 국공립학교,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에서의 활동은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 해당하지 않음

고위공직자의 범위(제5조의2제1항)

1.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 및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업무활동 내역서 기재사항 및 관리

-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과 그 업무내용, 관리·운영 사업의 내용 등 내역서에 기재할 업무활동 내역 구체화
- '단체'란 「비영리민단단체 지원법」에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의미하며, 고용계약을 맺고 상시적으로 근무하여 급여를 수령한 경우뿐 아니라, 해당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그 단체를 위한 활동을 한 경우에도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함

업무활동 내역서 기재 사항(제5조의2제2항)

1.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과 그 업무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내용

- 소속 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업무활동 내역서를 보관·관리

※ 내역서에 기재된 고객 등이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자로 **이해충돌 상황 발생시 고위공직자의 직무 회피 등의 근거로 활용** 가능

※ 고위공직자가 기관장인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이 내역서를 제출받아 보관·관리

- 업무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 위임장,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 등

■ 예시

- B구청장은 공직 임용 전 자신이 근무했던 C기업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소속기관이 C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영향력 행사
- D시장은 '18.6월 지방선거에 따라 처음으로 공직에 취임, 30일 이내에 공직 취임 전의(3년 이내)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음

**제5조의3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 내용 해설

- 부패 또는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예외적으로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 제1항 제1호에서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라는 것은 보고, 신고,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노무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의미함

금지되는 영리활동 등(제5조의3제1항)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

-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영리활동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활동을 중지·종료하도록 조치

■ 예시

- 교육공무원이 교육과정 개발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사적으로 자문을 하고, 직무 관련자인 사업 수탁 연구원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480만원을 수수
- 모 기관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직무관련 협회 임원으로 임명되고, 회의참석수당, 자문수당 등의 명목으로 해당 협회로부터 금품등 수수
- A시청 도시개발 담당 공무원이 관내 B건설업체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하여 수차례 조언을 제공하고 350만원을 수령



제5조의4 (가족 채용 제한)

-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내용 해설

-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담당자, 산하기관 담당자가 소속 기관, 산하기관 등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 (인사업무 담당자)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 ※ 인사업무 담당자에게는 인사업무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 포함
 - (산하기관 담당자) 산하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 ※ (산하기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공무원 권한 유형별 가족 채용 제한 〉

구 분	해당 공무원	가족 채용 제한기관
고위 공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관급 이상 공무원 ■ 광역·기초지자체 장 ■ 교육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기관 ■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산하기관
인사업무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기관
산하기관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하기관 지휘·감독·규제·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기관의 산하기관

■ 예시

- 모 군청 간부공무원은 군청 사무보조원 채용과 관련하여, 특정 응시자가 자신의 머느리임을 수차례 알리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최종 합격 처리됨
- 모 지방자치단체 고위공무원이 계약직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조카가 합격되도록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영향력 행사
- 산하기관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그 산하기관의 감독부처 소속 간부 공무원이 자신의 조카를 채용하도록 추천
- 모 중앙부처 산하기관은 직원 채용 시 중앙부처 공무원의 청탁을 받고 공무원 자녀를 부정 채용



공무원 행동강령에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채용 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음. 여기에서 산하기관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을 말하는지?



산하기관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다른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임원 선임시 승인·추천하거나 임명·위촉하는 다른 공공기관등이 해당됨



공립대 교수A의 배우자가 A와 같은 대학의 시간강사로 근무(매년 계약)하는 것이 행동강령상 '가족채용 제한'에 위반하는 것인지?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단순히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하였다고 하여 '가족채용 제한'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당해 공직자가 ① 고위공직자 또는 인사업무 담당자(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포함)인지 여부와 ② 채용과 관련하여 실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제5조의5 (수의계약 체결 제한)

-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고위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내용 해설

- 고위공직자, 계약업무 담당자, 산하기관 담당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 등과 수의계약 체결하는 행위 제한
 - **(고위공직자)** ①고위공직자 본인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 산하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②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금지
 - **(계약업무 담당자)** ①계약업무 담당 공무원 본인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②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금지
 - **(산하기관 담당자)** ①산하기관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본인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②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금지

〈 공무원 권한 유형별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구 분	해당 공무원	계약체결 제한대상	대상기관
고위 공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관급 이상 공무원 ■ 광역·기초지자체 장 ■ 교육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가족 ■ 특수관계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기관 ■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산하기관
계약업무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업무 담당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기관
산하기관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하기관 지휘·감독·규제·지원업무 담당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기관의 산하기관

- 일반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되는 공개경쟁 절차에 의한 계약체결은 예외적으로 허용

■ 예시

- 모 군의원이 실제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를 타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속이고, 수의계약(37회 6억1,000만원)을 체결토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 모 군수는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건설업체에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여 지방계약법을 위반
- 모 시청 구매계약 담당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800만원 상당의 전산용품을 구매

**제5조의6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한정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신고 방법 등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2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의 신고)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6제1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사적 접촉의 유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할 수 있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 ②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내용 해설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접촉대상)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소속 기관의 퇴직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 '직무관련자'는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됨
 - (접촉유형)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적 접촉
 - ※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
- 행동강령 제5조의6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 하였다고 해서 행동강령 상의 다른 의무 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님. 즉,

제5조의6에 따라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의 내용이 다른 법령이나 행동강령 상의 다른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함

※ 직무관련자인 퇴직자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았을 경우 행동강령 제5조의6에 따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이고,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위반 여부도 고려되어야 함

-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의 경우라 하더라도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운영지침 제12조 제1항 제4호 관련)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사회상규에 따른 예외)

- 퇴직자 자녀의 결혼식 등 경조사
- 경조사 이외의 돌잔치, 환갑, 회갑 등
- 공무와 무관한 동창회, 친목 모임, 종교행사 등의 사적 모임에서 퇴직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
- 공청회, 간담회 등 기관에서 주관하는 공무 관련 행사에서 퇴직자의 참석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자가 참석한 경우
- 타 기관 주관 공식 행사에서 서로 우연히 만난 경우

- 구체적인 신고 대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신고 방법 등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함
 - 기관장은 소속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신고대상 사적 접촉의 유형을 추가할 수 있음

제한되는 접촉 형태 예시

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식사·음주 등 향응(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
5.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정하는 행위

- (신고방법) 사전 서면 신고, 단,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함 (별지 제9호 서식)

■ 예시

- 모 중앙부처 과장인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인 퇴직 선배로부터 골프모임 초대를 받고 모임에 참석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음
- 모 시청 소속 공무원이 직무관련 협회의 임원으로 재취업한 퇴직자로부터 향응 수수(미신고)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 퇴직 공무원과 함께하는 여행은 모두 사전 신고대상인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여행은 사전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임.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여행의 목적, 평소 퇴직 공무원과의 관계, 일상생활과의 밀접성, 비용 부담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제1항의 '소속 기관'의 범위는?



행동강령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에서 말하는 '소속 기관'의 범위는 동일한 행동강령을 적용받는 모든 기관을 의미함. 따라서 본부 재직자가 동일한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는 지방청 등에서 퇴직(퇴직 후 2년 이내 한정)한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갖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이 됨



제6조 (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내용 해설

● ‘특혜’의 의미

- ‘특혜’란 법령 등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인을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차별하여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
- 직무수행 상대방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의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특혜라고 볼 수 없으며, 다른 경쟁자와 비교하여 또는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요건에 위반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제적·사회적 이익 등을 주어야 함

● 위반행위 성립

-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기초로 청탁이나 은연 중의 압력 또는 개입 등을 할수있는 정도의 친분관계가 존재하여 직무수행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판단의 근거가 됨
 - ※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은 구체적인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아님. 예컨대 지연의 경우 고향의 범위(군 단위 또는 시·도 단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연을 기초로 하여 정실개입의 개연성이 있는 정도의 관계가 존속하고 이와 같은 관계가 부당하게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쳤느냐가 판단의 근거가 됨

■ 예시

- 학교장이 비공개 특별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단독으로 응시한 자신의 자녀를 과학실험보조원으로 채용
- 모 기관 운영국장이 기관장의 고교 동창인 교수에게 5천만원 상당의 수의계약 용역 발주
- 기초지자체 과장이 지역 언론사 관계자 甲의 청탁을 받고, 甲과 연관성이 있는 연구원 乙이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에 고액의 위탁 교육비 지출



기관 내 종교모임이 특정 종교인과의 오찬 모임을 마련하고 기관장에게도 참석을 요청해 왔음. 기관장이 해당 오찬 모임에 참석할 경우 행동강령 위반인지?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므로, 사례와 같이 직무와 무관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내용 해설

-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수당, 사업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됨
 - ①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② 소속 기관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예산의 목적이 반영되어 편성된 예산안이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 후, 세출예산에 계상된 내역·용도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한 것을 의미함
 - 허위·과다 청구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을 수령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 할 것임
- ‘재산상 손해’란 소속 기관의 재산적 이익 또는 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키는 등의 일체의 손해를 의미

■ 예시

- 일선기관의 부서장들이 부서운영비를 점심값 등 사적용도로 사용
- 일선기관의 기관장들이 ‘기타운영비’의 경조사비 예산을 소속 직원들의 경조사비 이외에 사적 용도의 경조사비에 지출
- 격려금, 활동비, 직원 출장비, 장비구입비 등을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회식비, 경조비, 과운영비 등으로 사용
- 업무추진비용 관용카드로 단란주점 등 유흥주점에서 70여회에 걸쳐 2,000여만원을 사적용도로 사용
- 신고자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부서운영비 등에 사용
- 관사·독신자숙소 관리비, 부대 운영비 등 2,000만원 유용
- 관용카드로 40여회에 걸쳐 자신의 카드연체대금 변제 등 사적 사용

- 대원 급식용 쌀 20여 포대를 납품받는 대신 거래처에서 250여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부서운영비 등으로 사용
- 직원 복리후생비 예산으로 유관기관 등에 창립기념품을 제공

■ (참고) 클린카드 제도

- ‘클린카드 제도’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인 직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단란주점, 골프장 등 특정 가맹점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법인카드(업무추진비)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 각 기관은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하여야 함
 - ▶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에는 원칙적으로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음
 - ▶ 권익위가 권고한('07.10월, '11.10월, '14.10월) 의무적 제한업종과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가하여 선정한 제한업종에서는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음
- 의무적 제한업종
 - ①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 일반유흥주점(룸싸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바 등)
 - ▶ 무도유흥주점(클럽, 극장식 주점, 나이트클럽, 스탠드바, 카바레 등)
 - ※ 의무적 제한업종이 아닌 ‘기타주점’에서 음주목적의 부적정 사용 제한(권고)
 - ②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③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④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주점업 〉

분 류	예 시
일반유흥주점업 ↓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	가라오케(접객원있는), 가요방(접객요원이있는), 가요주점(단란주점), 카페(접객원있는), 나이트싸롱(접객원있는), 노래주점(접객요원이있는), 노래타운(접객요원이있는), 단란주점(접객원있는), 락카페(접객원있는), 록카페(접객원있는), 룸살롱(접객원있는), 룸싸롱(접객원있는), 맥주홀(접객원있는), 바(접객원있는주점), 비어홀(접객원있는), 서양식일반유흥주점(접객원있는), 서양식접객주점운영, 술집(접객원있는), 요정(접객원있는), 유흥주점(접객원있는), 일반유흥주점(접객원있는), 주점(요정등한국식유흥점), 주점(접객원있는), 카페(접객원있는), 각테일바(접객원있는), 한국식유흥주점(접객원있는), ROCK카페(접객원있는)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극장식주점(무도시설있는), 극장식카바레(무도시설있는), 카페(무도시설있는), 나이트싸롱(무도시설있는),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운영, 락카페(무도시설있는), 무도유흥주점, 성인나이트클럽운영, 술집(무도시설있는), 스탠드바(무도시설있는), 외국인무도유흥주점, 유흥주점(무도시설있는), 일반유흥주점(무도시설있는), 주점(무도시설있는), 주점(무도유흥: 카바레, 나이트클럽), 카바레(무도시설있는), 카페(무도시설있는), 클럽(무도시설있는), 한국식유흥주점(무도시설있는)
기타 주점업 ↓ 접객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기타의 주점	간이음식점(주류판매가주된경우), 간이주점(소주방, 호프등), 까투리(주점), 꼬치전문점, 단란주점(접객원이없는경우), 대포집(주점), 막걸리집, 맥주전문점(치킨호프포함), 민속주점, 민속주점운영(접객요원없음), 사케전문점, 생맥주집운영, 선술집(간이주점; 고정식), 셀프호프, 소주방운영, 소주전문점(소주방등), 실내포장마차, 오펜바(주점), 와인바, 치킨호프점(술판매가주된경우), 토속주점(막걸리, 동동주등), 투다리(주점), 포장마차운영(고정식), 호프집(주점)



클린카드의 부적정 사용(제한업종, 심야 사용 등)도 행동강령 위반인지?



업무추진비는 클린카드 사용이 원칙임. 따라서 클린카드로 사용이 제한된 업종 등에서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면 행동강령 위반임.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직자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내용 해설

- **정치인** : 정당의 간부, 국회의원, 선출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 **정당 등** : 정당, 후원회, 각종 정치단체 등
 - (정당) 「정당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의 중앙당, 당헌·당규 상의 기구
 - (후원회)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정치자금법」 제3조)
 - (정치단체) 정치 사조직 포함
- **처리 절차**
 -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



소속 기관의 장이 정치인 등의 부당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 처리절차는?



소속 기관의 장이 정치인 등의 부당한 청탁을 받았을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여금 기록·관리토록 하고 행동강령책임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제9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 내용 해설**● 금지 행위**

- 공무원이 자신의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중간매개자인 타인을 통해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
- 공무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 ('인사'의 범위) 임용·승진·전보는 물론 포상·징계·시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직위의 이용)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의미
- (위반 여부 판단) 공무원이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위반행위가 성립하며, 개입의 결과가 실현될 것을 요하지 않음

■ 예시

- 모 군청 공무원 A가 자신의 5급으로의 승진을 정치인 B에게 부탁하고, B가 군수에게 A의 승진을 청탁
- 모 시청 국장 C가 7급 직원 D의 부탁을 받고 총무과장 E에게 D의 승진을 청탁
- 공무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자신의 근무평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말해달라고 부탁

**자신의 인사와 관련하여 상급자에게 상담하는 행위가 행동강령 위반인지?**

청탁이 아닌 단순 인사 상담을 본인이 직접 상급자에게 하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 다만,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위반임.

**제10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내용 해설

- (직위의 직접 이용) 타인이 아닌 본인에 의해 직위가 직접적으로 이용된 경우를 의미
- (이익) 경제적 이익 외에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포함
(특정인에게 유리한 상황, 사회적 명성, 우호적 평판 등)
- (위반행위 성립) 공무원이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며, 어떠한 이익 등이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위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은 아님

■ 예시

- 모 시청 공원녹지과장이 직무관련 조경업체에 부탁하여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조경장비를 구입해 주도록 이권개입
- 모 군청 환경관리과장이 관할 구역 내 골프장에 전화하여 자신의 직위를 거론하며 자신의 친구가 주말 특정 시간에 부킹할 수 있도록 해 줌
- 신규 채용 직원 연수원에서 교육기간 중 인근 은행 직원이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 금융상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위



지방의회의원의 경조사를 구청직원이 구청 내부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지방의회의원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구청 직원이 경조사를 내부통신망에 게시하였다면 행동강령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에 위반될 수 있으며, 의원의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에 위반될 수 있음.

- 경조사 축·부의금 봉투에 기관 명칭과 직위를 기재하는 행위 (요건②·③ 미해당)
- 금융기관, 인터넷 사이트 등 가입시 자신의 소속 기관 명칭과 직위를 기입하는 행위 (③ 미해당)
- 친구나 업무상 관련자 또는 일반인에게 명함을 제공하는 행위 (③ 미해당)
- 친구인 변호사 사무실에 “사시 △△회 ○○○”로 명기한 화분을 게시 (④ 미해당)
- 업무와 무관한 지인의 개업식에 기관 명칭과 직위를 기재한 축전을 보내는 행위 (요건③ 미해당)



본인 소관 직무와 무관한 내용의 도서에 기관명과 직위를 기재한 추천사를 써주는 경우는?

예시 미술 관련 도서에 국토부 모 과장이 추천사 작성, 공무원 수험서적에 현직 공무원이 추천의 말 작성)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도서의 판매를 장려할 목적으로 기관 명칭 및 직위를 기재하여 추천의 글을 작성하는 것은 직무가 아닌 사안에서 타인의 이익을 위해 소속 기관의 명칭 또는 직위를 게시한 것이므로 행동강령 위반임.



현직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저서를 집필하여 출간하고 저자 프로필란에 본인을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속 기관과 직위를 기재한 경우 행동강령 위반인지?



저자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경력(프로필)을 알리기 위하여 경력란에 여러 경력 중의 하나로 단순 기재한 것이라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임.



공무원이 경조사의 통지를 하면서 직위를 명시하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경조사를 알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자신의 직위를 명시하는 것은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행위가 아니므로 행동강령 위반이 아님.



공무원이 취미활동의 일환으로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게재하면서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알리는 행위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규정에 위반하는지?



물품의 판매 등 홍보 목적이 아닌 한, 자신의 신분을 소개하기 위해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밝히는 것은 행동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제11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정하는 행위

■ 내용 해설

- ‘청탁’은 청탁자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를 의미
- ‘알선’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중개를 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며, ‘알선’도 넓은 의미에서 ‘청탁’에 포함
-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하는 알선·청탁 등 행위의 제한
 -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의 유형(제11조제3항)

1. (금전출연)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인사·징계)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업무상 비밀)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행위)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거래행위)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채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평가, 판정)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수상·포상)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정하는 행위

● 위반 여부 판단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함으로써 위반행위가 성립하며, 알선·청탁의 대가로 뇌물(재산적 가치가 없는 이익도 포함)이나 재물(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을 수수하지 않았더라도 행동강령 위반
- 알선·청탁한 사항의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행동강령 위반행위 성립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의 금지' 와의 차이

- 청탁금지법은 모든 청탁이 아니라 인·허가 등 14가지 부패 빈발분야의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부정청탁행위만을 규율대상으로 규정
- 행동강령에서는 법령 위반 뿐만 아니라 내부기준 위반 등을 포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일체의 알선·청탁 등을 금지

■ 예시

유 형	부정청탁 사례
1호 (금전 출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원 마련 위해 사기업에 금전적 지원 요청, 출연 요구 ■ 기업에 비용을 부담케 하는 준조세 관행(미소금융, 미르재단) ■ 부실기업에 대한 대출 요구
2호 (인사, 징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기업 사장(임원 등) 퇴진·교체 요구 등 인사에 간섭 ■ 회사 고문(자문)자리 요구 ■ 민간기업에 특정인 채용 및 보직 변경 요구
3호 (업무상 비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공개 기업정보(공시 전의 경영실적, 사업계획 등) 유출 ■ 경영정보, 영업비밀, 기술정보 제공 요청하여 경쟁사의 조직, 인력 정보 등 유출
4호 (계약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기업에 특정업체와 계약 체결하도록 요구 ■ 특정업체 납품 요구, 일감 배정 요구 ■ 특정업체의 광고, 협찬 요구(특정 업체 선정, 특혜 부여) ■ 특정 기업 기술 이용 요구(소프트웨어 개발) ■ 거래업체 선정 시 통상 거쳐야 하는 제품시험과 입찰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계약 체결하도록 함 ■ 특정업자와 공모하여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 줌으로써 그 특정업자가 공정한 자유경쟁 없이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함
5호 (거래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조건 변경 ■ 대출금리 인하 요구 ■ 항공편 좌석 편의, 골프장 예약, 병원 입원 예약 ■ 협력사와의 납기기한 연장 및 입고가 인상 등
6호 (평가, 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특혜 및 학사 혜택(성적 평가 등) 부여
7호 (수상, 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인의 작품을 민간기업이 시행하는 공모에 선정되도록 청탁 ■ 장학생 선정하여 장학금 지급
8호 (감사,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한 결과를 조작, 위법사실 은폐

■ 참고 자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나. 제1호 라목(「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

- 한국은행
- 공기업
- 정부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



공무원이 공직 취업예정자(지자체장 당선자) 신분인 자에게 취업 후 당해 기관에 지인의 취업을 부탁하였다면 행동강령 위반인지?



청탁 행위가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것이라면, 청탁의 직접 상대방(지자체장 당선자)이 공무원 신분인지 여부는 따지지 않으므로 지인의 취업을 부탁한 공무원은 행동강령 위반임.



기관장이 인사 차 찾아온 고향 후배와 환담 중 청사시설 보수 업무 담당국장을 불러 고향후배에게 보수계획을 브리핑하도록 한 후 “후배의 민생해결을 위해 일을 맡겨보라”고 하였음. 현재 동 사업의 시행사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기관장의 고향후배가 동 사업을 맡게 될지 여부는 미정인데 행동강령 위반인지?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하였다면, 알선·청탁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행동강령 위반임.

**제12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4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공기관의 장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을 직무분야별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 내용 해설

-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정보의 귀속이나 출처가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정보를 의미
 -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접근이 차단되어 한정된 관계자가 독점하고 있는 상태의 정보, 즉 정보에의 접근 및 열람에 있어 관련 공무원이 일반인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할 것임
- 소관 분야별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 규정내용 :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검토가 필요한 기관 예시

- 주식 등 유가증권 거래 규제 :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국세청, 중소기업청, 금융감독원, 각급 기관의 기금 운용부서 등
- 부동산 거래(투자) 규제 :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설 담당부서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예시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국토교통부훈령 제913호, 2017. 8. 24. 개정)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③ 제1항에서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 또는 계획과 관련한 정보로서 최초 검토단계에서부터 당해 계획이 일반 국민에게 공포시까지의 정보를 말한다.

1. 국토교통부문 투자계획의 수립 및 분야별 투자계획의 조정
2.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등 국토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중략)
15. 그밖에 제1호 내지 제14호에 준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과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

■ 참고 자료(직무관련 정보 이용 거래 제한 관련 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6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① 공직자가 제7조의2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예시

- 공무원이 코스닥 미등록기업을 조사하면서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량의 주식을 취득한 후 거액의 차익 실현
- P시청의 도시개발국장 Y는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친인척 명의로 계획구역 내 부동산을 다량 취득한 후 차익 실현
- 건설행정부서 공무원 K는 그린벨트 해제정보를 이용하여 헐값에 토지를 매입한 후 매각해 수익원의 차익 실현
- 세무담당 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기업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타 기관의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재산상 투자를 도운 경우 행동강령 위반인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정보의 귀속이나 출처가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재산상 투자를 도왔다면 행동강령 위반임.



기관장이 2년 전 국책사업 발주 결재를 한 직후 관련 기관의 주식을 다량 매입하였다가 6개월 전에 매도하여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었음. 기관장은 최종 결재권자로서 소속 기관의 모든 업무를 다루는 직원인데 행동강령 제12조가 적용되는지?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는 당해 직무와 관련된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기관장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음.



제13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 내용 해설

- **공용물(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에 의해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제공되는 물건(예 : 청사, 관사, 공용차량, 건설중기 등)
- **예산 사용에 의한 부가서비스**

예시 항공마일리지, 기관의 법인카드 등을 사용함으로써 적립된 포인트, 기관전화 사용에 의한 콜 보너스, 물품구입에 따른 사은품 등

- **‘사적인 용도의 사용·수익’**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용물(재산)의 제공 목적을 벗어나 개인적 편의나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

■ 예시

- 공용차량을 당해 공무원이 출퇴근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가족이 사용
- 소방·군용헬기, 행정지도선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
- 관사를 전대하여 임대료를 받는 행위
- 직무와 상관없이 인근 식당에 점심을 먹으러 가기 위해 공무수행용 차량을 이용
- 공용차량용으로 지급된 유류를 공무원 개인차량에 주유
- N시청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를 빼내어 간부공무원 S의 개인 별장 신축현장에 사용
- 업무용으로 배정된 소형트럭을 개인의 주말 농장에 사용
- 공용 비품인 TV를 기관장의 집에서 사용
- 공무원 L은 공용 세탁기를 집에 가져다 사용
- 교육원 공무원들이 생활관 기숙사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공휴일 무상 대여

■ 참고 자료

●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2019.1.)

- 공공요금, 유류비 지급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인트는 당해 경비에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하여야 함(예시 : 공용차량 주유시 받은 쿠폰으로 유류비 지급)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을 신용카드 등을 통해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캐시백(cash back) 등 부수적인 수익이 있을 경우 전액 국고로 세입조치 하도록 카드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5호, 2019. 5. 28. 시행)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별도의 인센티브카드(포인트 카드 등)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 책임 하에 발급하고 인센티브를 관리함
- 카드사나 금융기관 외에 대형할인점, 문구점 등에서 구매금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인센티브로서 세입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무용품 등의 구매나 불우이웃 돕기 등 행정용으로 사용 하여야 함

● 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시행)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10조제2항 본문
 -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
 -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행정안전부)
 - 업무용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는 등 공무원의 사용을 제한함
 - 다만, 중앙행정기관인 차·청의 차장이나 고위공무원 '가'등급의 소속기관장 등 업무용차량 지정활용 대상자가 업무현장에서 퇴근하거나, 통상적인 근무시간 이전·이후에 업무현장 방문 및 회의 참석 등 업무와 긴밀하게 연계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출퇴근에 활용 가능
 - 공용차량을 일시적으로 직원 동호회 지원, 대중교통 연계 직원 출퇴근 지원 등 차량의 당초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이 있어야 함
- ※ 공용차량의 사적사용은「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해 징계 등 처분이 가능하므로 차량운영에 주의

●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기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67호(2019.1.25.) 중 발췌)】

구 분	기 준
관리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의 지급 주체와는 관계없이 2006.3.1 이후 공무원여행에 의해 발생한 마일리지 * 공무원여행에는 국내와 국외를 포함
관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일리지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신고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 및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출장자 등”이라 함)은 공무원여행 전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축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e-사람” 등이라 함)에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활용 등 변경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 항공마일리지 세부관리방안(중앙인사위원회 급여후생과 -1317, '06.7.21)에 근거한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는 폐지한다. (다만, 「e-사람」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기능이 탑재될 때까지 유지)
활용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자 등은 항공권 예약 시에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스 항공권 확보’에 우선 활용하고, 보너스 항공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좌석승급(업그레이드)’에 활용한다. - 보너스 항공권 활용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등정액, 중간(비즈니스)정액 및 2등(이코노미)정액 지급대상자가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해당 좌석의 보너스항공권을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선을 이용하는 2등정액 지급대상자가 해당 좌석의 보너스 항공권이 없는 경우 중간좌석의 보너스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 항공좌석 승급(업그레이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등정액 및 중간(비즈니스)정액 지급대상자가 아래 단계의 좌석에 해당하는 정액을 지급받고,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1등석이나 중간(비즈니스)석으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V.2.다.1)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2등정액 지급 대상자가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공무 출장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한단계 높은 항공좌석(비즈니스)의 보너스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2등 정액을 지급받고 중간석(비즈니스)으로 좌석을 조정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회의, 통상협상 등(단순 현지조사, 세미나 참석 등은 제외)의 대표단의 일원 · 항공여행 시간이 5시간(편도)이상 · 이코노미 좌석 탑승이 곤란한 질환(척추질환 등) 보유 * 진단서 등 건강상태 입증자료 제출 필요 · 동행하는 1등정액 또는 중간(비즈니스)정액 지급대상자와 떨어져 혼자 이코노미 좌석에 탑승 · 3년 이내에 정년퇴직 예정 - 부가서비스 등 이용 기준(담당부서에 이용내역 증거서류 제출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장자는 필요한 경우, 초과수하물, 리무진버스, 렌터카, 호텔숙박 등 공무원여행과 관련된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관장이 인정한 공익목적으로 공적 항공마일리지 이용할 수 있다. - 공적 항공마일리지 맞춤형 복지 점수 구매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일당 구매가격은 20원으로 하고, 최소 구매단위는 50마일(1 포인트에 해당)로 한다. 다만, 개인이 보유한 총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3만 마일 미만인 경우 마일당 구매가격은 10원으로 한다. 이 때 최소 구매단위는 100마일로 한다.

구 분
기 준

활용방법

- 구매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매월 25일까지 맞춤형 복지 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맞춤형 복지 운영부서에 구매신청을 하고*,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마일리지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 구매신청 시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첨부(e-사람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련 출력물 등)
- ** 맞춤형 복지 관리시스템 등으로 마일리지 담당이 직접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할 수 있다.
- 마일리지 담당부서는 매월 말일까지 해당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구매 공무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양수받은 공무원은 “e-사람” 등에서 해당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차감한 후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참고 : 공적 항공마일리지 맞춤형 복지 점수 구매절차

공무원 (희망자)	맞춤형 복지 운영부서	마일리지 담당부서	공무원	마일리지 담당부서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신청 (맞춤형 복지 관리시스템 등에서 복지비용청구)	맞춤형 복지점수 차감	공적 항공 마일리지 개인양도	공적 항공마일리지 양수 및 사적전환 (e-사람시스템에서 해당 구매분 차감)	공적 항공 마일리지 구매점검 및 사후관리
(매월 25일)	(매월 25일)		(매월 말)	

- 공적 항공마일리지 현금 구매 기준
- 마일당 구매가격은 20원으로 하고, 최소 구매단위는 50마일로 한다.
다만, 개인이 보유한 총 공적 항공마일리지 3만 마일 미만인 경우 마일당 구매가격은 10원으로 한다. 이 때 최소 구매단위는 100마일로 한다.
- 구매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마일리지 담당부서에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구매신청 시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첨부
(e-사람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련 출력물 등)
- 마일리지 담당부서는 희망 공무원이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확인 후 구매 확정을 하고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 확정서(별지 제9호 서식)를 발급한다.
- 구매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세외수입 담당부서에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 확정서를 제출하고, 공적 항공마일리지 상당액을 징수 요청한다.
- 세외수입 담당부서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구매 확정서를 확인하고 공적 항공마일리지 상당액의 납입 고지서를 발급한다.
- * 세입과목 : 재화및용역판매수입-잡수입- 기타잡수입
- 구매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납입 고지서 납부 후 납부영수증을 마일리지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마일리지 담당부서는 납부영수증 확인 후 “e-사람” 등에서 해당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차감한 후 사적 항공마일리지로 전환한다.

구 분	기 준																				
활용방법	<p>※ 참고 : 공적 항공마일리지 현금 구매절차</p> <table><tr><td>공무원 (희망자)</td><td>마일리지 담당부서</td><td>공무원 (희망자)</td><td>세외수입 담당부서</td><td>공무원 (희망자)</td><td>마일리지 담당부서</td></tr><tr><td>공적 항공 마일리지 구매 신청 (별지 제8호 서식)</td><td>공적 항공 마일리지 구매 확정 (별지 제9호 서식 발급)</td><td>구매확정서 (별지 제9호 서식) 제출 및 공적 항공 마일리지 상당액 징수 요청</td><td>납입 고지서 발급</td><td>납입 고지서 납부 후 마일리지 담당부서에 납부 영수증 제출</td><td>공적항공 마일리지 사적전환 승인 (e-사람 시스템에서 해당 구매분 차감)</td></tr></table> <p>- 공적 항공마일리지 항공시간 등가교환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환을 신청하는 공무원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교환 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 및 마일리지 증빙자료*를 마일리지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환하고자 하는 항공사의 마일리지 보유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공적 항공마일리지 보유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첨부· 교환을 신청하는 공무원은 마일리지 담당부서에 공적 항공 마일리지 교환 가능여부를 확인 받고 e-사람 시스템에서 해당 마일리지를 변경 입력하여야 한다. <p>※ 참고 : 공적 항공마일리지 교환절차</p> <table><tr><td>공무원(희망자)</td><td>마일리지 담당부서</td><td>공무원</td><td>마일리지 담당부서</td></tr><tr><td>공적 항공마일리지 교환 신청</td><td>공적 항공마일리지 교환 가능여부 확인</td><td>공적 항공마일리지 항공시간 교환 (e-사람시스템에서 해당 마일리지분 변경 입력)</td><td>공적 항공 마일리지 교환점점 및 사후관리</td></tr></table>	공무원 (희망자)	마일리지 담당부서	공무원 (희망자)	세외수입 담당부서	공무원 (희망자)	마일리지 담당부서	공적 항공 마일리지 구매 신청 (별지 제8호 서식)	공적 항공 마일리지 구매 확정 (별지 제9호 서식 발급)	구매확정서 (별지 제9호 서식) 제출 및 공적 항공 마일리지 상당액 징수 요청	납입 고지서 발급	납입 고지서 납부 후 마일리지 담당부서에 납부 영수증 제출	공적항공 마일리지 사적전환 승인 (e-사람 시스템에서 해당 구매분 차감)	공무원(희망자)	마일리지 담당부서	공무원	마일리지 담당부서	공적 항공마일리지 교환 신청	공적 항공마일리지 교환 가능여부 확인	공적 항공마일리지 항공시간 교환 (e-사람시스템에서 해당 마일리지분 변경 입력)	공적 항공 마일리지 교환점점 및 사후관리
	공무원 (희망자)	마일리지 담당부서	공무원 (희망자)	세외수입 담당부서	공무원 (희망자)	마일리지 담당부서															
	공적 항공 마일리지 구매 신청 (별지 제8호 서식)	공적 항공 마일리지 구매 확정 (별지 제9호 서식 발급)	구매확정서 (별지 제9호 서식) 제출 및 공적 항공 마일리지 상당액 징수 요청	납입 고지서 발급	납입 고지서 납부 후 마일리지 담당부서에 납부 영수증 제출	공적항공 마일리지 사적전환 승인 (e-사람 시스템에서 해당 구매분 차감)															
공무원(희망자)	마일리지 담당부서	공무원	마일리지 담당부서																		
공적 항공마일리지 교환 신청	공적 항공마일리지 교환 가능여부 확인	공적 항공마일리지 항공시간 교환 (e-사람시스템에서 해당 마일리지분 변경 입력)	공적 항공 마일리지 교환점점 및 사후관리																		
활용절차	<p>- 출장자 등은 항공운임 신청 전에 본인이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해당 항공사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운임 신청시 그 확인결과가 기재된 항공운임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정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상 지정된 증빙자료 :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기재된 항공사 홈페이지 예약신청 결과 출력물 및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 중앙행정기관의 부서별 회계담당공무원은 항공운임지급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항공운임을 지급한다.																				
관리방법	<p>-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e-사람」 등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마일리지 세부관리방안(중앙인사위원회 급여후생과 -1317, '06.7.21)에 근거한 「항공마일리지 기록카드」는 폐지한다. (다만, 「e-사람」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기능이 탑재될 때까지 유지) <p>- 중앙행정기관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담당부서는 소속공무원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마일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5년 이내 정년퇴직 예정자 또는 10만마일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고 해당자에게 정기적으로 보유마일리지를 고지하여 활용을 독려하여야 한다.</p>																				

구 분	기 준
관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담당부서는 소속공무원의 개인별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현황을 매분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 파견자에 대해서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관리하되, 원 소속기관 복귀시 관련서류를 이첩하도록 한다. - 부처간 전출입자는 전 소속기관에서 관련서류를 새로이 이동하는 기관에 이첩하도록 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종전 근무기관이 관리하였던 해당 공무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이관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재임용 후 14일이내에 「e-사람」 등에 입력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헌법기관에서 근무 후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과 같은 날에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 재직 중에 정무직 등에 내정되어 공무원을 퇴직하고 법령상의 임용절차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 공무원 여비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활용 현황 등(개인별 자료는 제외) 관련 자료를 「e-사람」을 통해 통합하고, 관련제도의 개선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내용 해설

-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금지
 - 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약속하는 경우로 구체화
- 예외적으로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적용 제외

■ 예시

- 청소업체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이 업체 미화원들로부터 자신이 입주할 아파트 청소 편의를 제공받음
- 군 간부가 자기 논의 벼를 수확하면서 ○○사단 신병훈련을 마치고 대기 중이던 훈련병들을 동원하여 노동력을 사적으로 이용
- 모 군청 간부공무원은 기관 행사인 1박2일 과정의 워크숍 진행 과정에서, 심야시간에 부하 직원에게 라면을 끓여오도록 지시
- 교육청 소속 공립 유치원 원장이 자신의 자녀 결혼식(공휴일)과 관련하여 행정실 직원들에게 하객들이 내는 축의금 접수 및 정리를 부탁
- 중앙부처의 일선기관 상급자가 자신의 세탁물을 하급자로 하여금 세탁소에 맡기고 찾아오도록 지시
- 모 기관장이 자신의 정원에 나무를 심으면서 소속직원들을 동원
- 군 간부가 공관병에게 과수채취를 지시하는 행위
- 공무원이 청사 관리소장에게 개인 자전거 운반을 지시하는 행위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내용 해설

● ‘갑질’의 개념 규정

-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하급기관 등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금지되는 ‘갑질’ 행위의 유형 구체화

- 공무원이 소속된 조직 내부에서 또는 조직 외부(공무원 vs 민원인, 공무원 vs 소속·산하기관)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을 5개 유형으로 구체화하여 금지

〈 금지되는 갑질 행위(제13조의3) 각호 〉

금지유형	금 지 행 위
(외부 직무관련자) 민원인에 대한 갑질	▶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 등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 등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조직 내부) 기관 내 직원간의 갑질	▶ 직무관련공무원에게 ①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거나, ②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외부 직무관련자) 외부 개인/기관·단체에 대한 갑질	▶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상/하 공공기관간)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갑질	▶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보충적 금지) 조직 내·외부, 개인/기관·단체에 대한 포괄적 갑질	▶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기관 내 직원간의 갑질(조직 내부)

-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요구란 법률, 시행령, 직제, 직제시행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부당한 일을 지시하거나 요구하는 경우임
-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란 법률, 시행령, 직제, 직제시행규칙, 사무분장 등에 따라 본인에게 부여된 통상적인 권한과 책임범위(통솔범위) 내에 없는 일을 지시하거나 요구하는 경우임

● 외부 개인/기관·단체에 대한 갑질(외부 직무관련자)

- 공공기관(공무원)이 공직자가 아닌 외부의 개인/기관·단체와의 각종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의 입장인 공공기관(공무원)이 법령상 의무 또는 계약서상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일을 을의 입장인 직무관련자(외부 개인/기관·단체)로 하여금 대신 하도록 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관련 업무를 지연시키는 경우를 말함

●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갑질(상/하 공공기관간)

- 본부(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지방청(지방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간에 발생하는 부당행위, 본부(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산하기관(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는 공직자간에 발생하는 부당행위를 말함

- 상급기관의 공무원(예시 : 본부·본청)이 수행해야 할 업무,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인력 등을 소속기관(예시 : 지방청, 지방사무소)이나 산하기관(예시 : 공직유관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말함

■ 예시

- ○○부 A부서는 업무 관련 산하기관 B, C에게 인력 지원을 요구, 각각 1명씩 총 2명을 인력을 비공식 파견 형태로 지원받아 이들에게 A부서의 업무를 수행토록 함
- A시는 관내 B업체와 공사 계약을 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누락된 부대시설비 등 1,600만원을 B업체가 부담하도록 떠넘김
- △△부 직원은 특별한 현안 없이 수시로 산하기관으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는다면, 부서 회식비용을 산하기관에서 결제하도록 전가
- ◇◇청 간부는 부하 직원들에게 술값을 대신 내도록 하고, 술자리 후 자신의 승용차를 직원이 집까지 대리운전 하도록 함



성희롱, 성폭력도 공무원 행동강령 상 금지되는 갑질에 해당하여 행동강령 위반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인지?



공직자간 성희롱, 성폭력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대통령령) 제3조(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의 신고)가 적용되며, 민원인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등은 국가공무원법(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행위로서 동 법과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므로, 공무원 행동강령이 규율하고 있는 갑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공무원 조직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행위가 공무원 행동강령상 금지되는 갑질 행위에 포함되는지?



조직 내에서의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행위가 단순히 공무원 행동강령 상 금지되는 갑질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폭행, 폭언 등 인격 모독 행위가 벌어진 원인, 구체적 상황 등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인격 모독 행위가 행동강령 상 금지되는 5가지 유형의 갑질 금지와 관련하여 벌어진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신고 대상이 되는 지를 결정해야 할 것임



제14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가액 범위"를 별표 2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② 지방의회의 장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장이 정하는 가액 범위"를 별표 2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3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제3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收受)를 금지하지 않는 금품등의 항목에 공직자의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추가할 수 있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6조(금품등 수수의 신고)

공직자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4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제4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2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내용 해설**● ‘수수 금지 금품등’의 주요 내용**

-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금지**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
 - ※ ‘요구’는 공무원이 상대방에게 금품등의 교부를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대방이 이에 응하였는지는 불문
-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금지

● 주요 요건 해석

- **(동일인)** 금품등의 출처(Source)가 어디인지 또는 누구인지의 문제로서, 동일인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법인도 포함될 수 있음
- **(1회)** 자연적 의미의 행위 수 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 수를 고려하여 '1회' 판단

※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수개의 금품등 수수 행위를 법적으로 1회로 평가할 수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수수 가액 판단

- **(회계연도)** 세입·세출을 구분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을 의미하며, 금품등을 수수한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판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 되는 것이 일반적임(「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

▶ 다만, 학교의 회계연도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에 종료(「초중등교육법」)

※ 금품등 제공자와 수수자가 모두 소속 기관이 다른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가액 산정

-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산정 기준

▶ **금품등** :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제공 및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

▶ **금품등의 가액 산정** : 행위시(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하며,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되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판단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 공무원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8가지 예외사유를 구체화

※ 다른 법령, 특히 「형법」의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사유 성립 가능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 또는 상급자가 제공하는 금품등

▶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금품등 또는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

※ 상·하급자는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기관 소속 공무원 사이에서만 성립

②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예외사유

③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

※ '권원'의 존재 여부와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필요

※ 정당한 권원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증여 외에도 사용대차, 무이자 소비대차 등도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제외될 수 있음

④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 ▶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의미

- 혈족은 자연혈족(직계혈족, 방계혈족) 외에 법정혈족(입양)도 포함
-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

⑤ 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등

- ▶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한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

※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단체가 정하는 기준 범위 내에서는 허용되는 부분이므로 단체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부분만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단체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 자가 대표해서 제공해야 하며, 소속 회원 개인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친분관계의 원인이나 계기, 교류·접촉 기간 및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히'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필요(단순한 지연·학연·혈연 등의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히 친분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 단,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질병·재난 등의 사유가 아니라 주식투자, 자녀의 해외유학 등 다른 사유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는 제외

'단체'의 요건

-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가입, 탈퇴)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⑥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예외사유

※ '공식적인 행사'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 한정되고,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기관에서 주최하여 열리는 행사를 의미 (주최기관의 업무 및 참석자와의 연관성, 초청기관의 공문, 메일 등 공식적인 초청이 있는지 여부, 행사의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참석자 선정 경위가 적정하였는지 여부, 행사 계획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등을 의미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가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일률적'이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 참석자 모두에게 동일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

※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공식적인 행사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이나 이에 준하는 편의에 한정

⑦ 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예외사유

※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

※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함)

※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등도 공정한 방식에 의한 것을 의미하며,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으면 무방

⑧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금품등은 예외사유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는 수수의 동기·목적·시기·경위,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의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공무원의 청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추가할 수 있음

예시

- 외교관례상 선물을 거절하는 것이 결례가 되는 경우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을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정한 최소한의 선물
- 경조사 등 기념일에 참석한 공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 주례를 한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통상적인 금액의 답례품
-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간단한 음식물 또는 교통편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장시간의 업무 협의 중 구내식당에서 식사 또는 간소한 외부 식사
 - 지도·감독기관 방문시 의례상 제공되는 음료
 -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이동하는 경우, 일반 차량 접근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보안 문제 등으로 지정차량으로만 이동이 가능한 경우, 현장 확인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동반 이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제공되는 교통 편의

사회상규 관련 판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8.20. 선고 2003도4732 판결)

● 금품등 수수의 신고(행동강령 제14조 제4항)

-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지체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 (별제 제11호 서식)

●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

-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 처리

※ 징계처분시 징계양정기준(「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별표 4(권익위 예규))을 참작하여야 함

■ 예시

- 교장 240명 가량이 모 금강산 전문 여행사로부터 학생들의 수학여행 사전답사 명목으로 금강산 무료 관광
- 공무원이 직무관련업체의 법인카드를 넘겨받아 과 회식, 직원 야근 식대 등으로 사용
- 자신이 집필한 책의 출판기념회를 가지면서 부하·동료 공무원 및 산하 직무관련자 등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참석자 200여명으로부터 1,000여만원의 찬조금 명목으로 수수
- A도는 직원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2년 동안 청사 내에 입점하고 있는 3개 금융기관들로부터 냉장고 등 2,4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무상 수수하여 체육대회 상품 등으로 사용
- 학교장 B의 강요에 의하여 교사 C가 B에게 향응 제공
- 모 지자체 감사 담당부서 공무원이 감독기관으로부터 정기 감사를 받으며 격려금 명목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금전 전달



금품등 수수시 연간 금액 및 횟수 제한은 없는지?



행동강령 상 횟수 제한은 없으나,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행동강령 위반임.



명절에 직무와 관련된 협회에서 기관이나 부서로 배송되어 온 선물은 받아도 되는지?



특정 직원 앞으로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관이나 부서로 온 선물은 기관장이나 부서장에게 온 선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신고나 반환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임.



성수기 콘도 예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족 여행을 위하여 산하단체 직원을 통해 전망 좋은 콘도를 예약한 경우 이것도 금품등의 수수 금지 위반인지?



콘도 예약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직무관련자에게 전망 좋은 콘도 예약을 부탁하여 이용하였다면 이는 편의제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비록 콘도요금을 자비로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행동강령 위반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자료부터 3만원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천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는?



식사 접대행위와 음료 접대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으므로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이 경우 접대 받은 음식물의 합산 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여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동강령 위반임.



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의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한 2만원만 반환하면 되는지?



가액범위를 초과하는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 전부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받은 선물 전부를 반환해야 함.



업무협조가 필요한 부처 및 부서 방문시 소액의 음료수를 들고 갈 수 있는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허용됨.



감독기관의 공직자가 본인보다 하위 직급인 경우, 예외사유(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금품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



상급자란 단순히 직급상 상위자가 아니라 직무상 명령이 가능한 상사를 의미하므로, 같은 기관 소속 공직자 사이에서만 예외 사유가 성립함. 피감독기관의 상위 직급 공직자가 감독기관의 하위 직급 공직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축제와 관련하여 민간 기업 등이 수건, 생수 등을 협찬할 수 있는지?



각종 협찬의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는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한 협찬으로 허용될 수 있음. 먼저, 절차적 요건으로 공공기관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다음, 실체적 요건으로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제14조의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독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독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독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독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0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2항이나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1조의2에 따라 피감독기관 소속 공직자가 감독기관 소속 공직자로부터 반복하여 부당한 요구를 받고 그 사실을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내용 해설

● 감독기관(감독·감사·조사·평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항 각호)

- 금지행위를 3개 유형으로 구체화

- ▶ 법령 또는 기준(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사규를 말함)에 근거가 없는 금품등의 제공(지원) 요구(숙박, 교통편의 제공 등 포함)
- ▶ 예산의 편성 목적이나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 제공(지원) 요구
- ▶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 요구

● 부당한 지원요구에 대한 피감독기관의 거절 의무

- 감독기관으로부터 위 3개 유형에 해당하는 부당한 지원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요구자에게 알리고 거절해야할 의무를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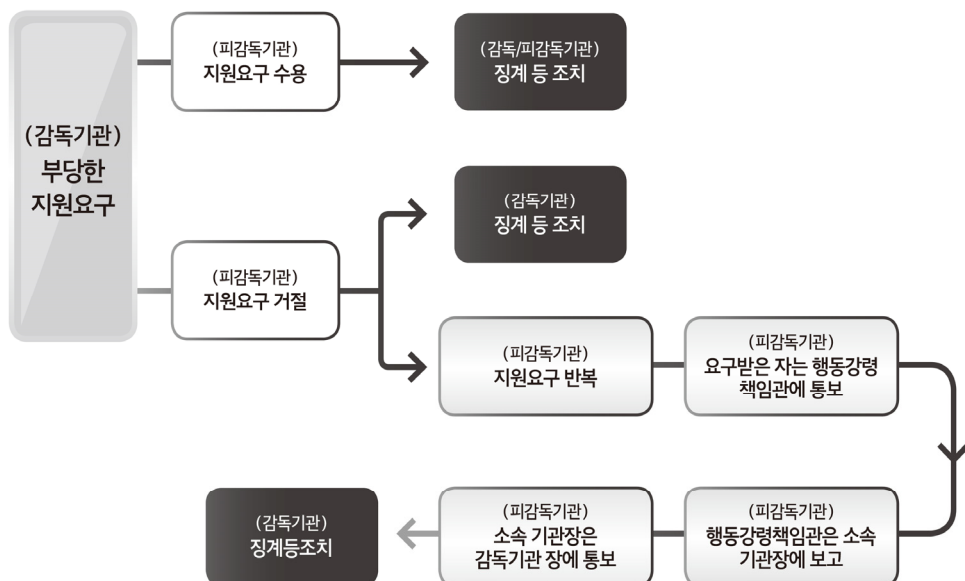
● 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요구에 대한 처리 절차

- ① 피감독기관 공직자가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지원요구를 다시 받은 경우, 해당 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 (별지 제19호의 2 서식)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감독기관의 지원요구가 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보고
- ③ 소속기관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부당한 지원요구를 한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지
- ④ 소속 공직자의 부당한 지원요구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공직자를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감독기관 지원요구의 부당성 판단

- 감독기관의 지원요구가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
- 피감독기관에 편성된 예산의 본래 목적·용도에 부합하는지 여부
- 피감독기관의 예산집행 관련 법령, 지침,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
- 예우·의전 등에 관한 내부 지침, 규정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
- 타 피감독기관이 감독기관에 대하여 제공하는 예우·의전의 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 감독기관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 예시

- A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와 관련하여 물품등의 지원 요청을 받은 B산하기관은 예산의 목적·용도에 맞지 않게 요구 물품을 구매하여 지원
-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해당 업무와 관련된 국제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감독부처의 요청을 받고 감독부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출장단을 구성하여 여비를 지원, 감독부처 공무원은 특별한 역할 없이 국제협력 명목의 해외출장을 다녀옴
- ○○의회 상임위는 해외연수를 가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 직원들을 동행하여 산하기관 직원들이 수행비서 역할을 하게 했다는 비판



감독기관이 공직유관단체가 아닌 민간기관·단체에 공무원의 출장·연수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 지원 요청할 경우에 제14조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제14조의2의 규정은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간에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공무원이 민간기관에 출장·연수와 관련된 소요경비를 요청할 경우에는 공무원이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행하는 알선·청탁 등을 금지하고 있는 행동강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제1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삭제
-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공무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 ⑧ 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금액"을 별표 3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② 지방의회의 장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별표 3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③ 공직자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2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제2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공직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 ⑤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7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제7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4조제7항에 따라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때에는 월 3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검칙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8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① 공직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직자는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내용 해설

● 외부강의등의 범위

- ‘외부강의등’이란 공무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의미
 - ※ ‘공무원의 직무’는 ‘공무원이 그 직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 (직무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
- 행동강령 규율대상인 강의·강연 등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를 의미하며,
-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실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함

〈참고 :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검직허가를 받고 학교에 출강
- ▶ 사회자와의 개별 방송 인터뷰에 응하는 경우
- ▶ 서면심사·서면자문 등에 응하는 경우
- ▶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 업무를 하는 경우
- ▶ 각종 법령에 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회의에 참가
- ▶ 각종 연주회, 전시회 등에서의 연주, 공연, 전시 등 행위

● 신고 대상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

- 공무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 (별지 제12호 서식)
-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에 대해서는 신고할 의무가 없으며, 신고자가 원할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을 하기 전에 사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함
 - ※ 신고를 할 때 공무원은 자신의 인적사항, 요청자 또는 요청기관단체의 이름, 요청 사유, 일시, 장소, 사례금 액수, 강의 주제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사례금 총액 또는 상세 명세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선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함
- 외부강의등을 일정기간 동안 여러 회 수행하는 경우에는 **일괄 신고 가능**
-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이라 하더라도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 *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에 해당
- 2)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 시·도교육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조례에 포함된 직속기관·사업소 등
 - *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에 해당
 - ▶ 국·공립대학교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은 경우, 그 산학협력단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그 대학의 소속기구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 단,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국·공립대학교나 국·공립대학교병원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외부강의등의 제한

-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음
 - ※ 사후신고의 경우 해당 외부강의등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서 제한할 실익이 없으나,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외부강의등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공무원이 장래에 외부강의등을 하는 것을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임
-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대해 월 3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횟수 상한을 규정할 수 있음
 - ※ 공무원은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청받거나 검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외부강의등의 초과사례금 수수 제한

-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초과사례금) 수수 금지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 3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관별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구체적으로 설정(업무 특성에 따라 보다 강화된 기준 설정 가능)

- ① 공무원이 외부강의 등의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함 (별제 제13호 서식)
 - ②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③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함
- ※ 공무원이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운영지침 별표 3)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40만원

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가목에 따른 공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다):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는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호나목의 공직자에 대해서는 총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등(1회의 기준)

지급주체	외부강의등 일자	대상	내용(주제)	1회 초과 인정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문		○
다른 경우	불문			○

- ▶ 지급주체가 같은 경우
 - 외부강의등 일자가 같은 경우
 - ♦ 대상 및 내용(주제)이 동일하면 사례금을 1회 기준으로 지급
 - ♦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
 - 외부강의등 일자가 다른 경우 : 대상,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
- ▶ 지급주체가 다른 경우 : 외부강의등 일자가 다른 이상 대상,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

■ 위반 예시

- 지방의 G기관장은 매주 5회 매월 20회에 걸쳐 학원에 출강하고 미신고
- Y국립대학 K교수는 소속 기관의 승인 또는 신고 없이 고등학교에 시간강사로 출강함과 동시에 일과 후에는 대학입시 준비생들을 지도
- D시청 U국장은 관내 C협회 회원 연수회에 강사로 출강하여 60만원 상당의 강의료를 받고 미신고
- 현직교사 P는 현직교사의 신분을 숨기고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 없이 K고시학원에 매주 토·일요일 출강하여 월 20시간의 외부강의 실시

외부강의등의 범위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외부 강의등에 해당하는지?



공청회, 간담회 등의 회의에서 사회자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더라도 그것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인 이상 외부강의 등에 해당함. 다만, 아나운서가 지역축제 행사에서 사회를 보는 경우와 같이 단순히 행사의 순서에 따라 진행만 하는 행위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공무원이 □□협회가 주관하는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다수를 대상으로 업무 개선 성과를 발표하는 것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공직자가 업무개선 성과를 발표하기 위해 직접 신청을 하여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것이라면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업무개선 성과를 발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교육·홍보·세미나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그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함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것은 그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행동강령에 의해 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공무원이 자신이 졸업한 모교로부터 직무와 무관하게 선배자격으로 후배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강의를 요청받은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 등으로부터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강의가 아닌 경우에는 행동강령 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대학교수가 논문을 심사하거나 서면으로 자문을 요청받은 경우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회의형태에도 해당하지 않는 논문심사나 서면자문은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음



온라인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온라인 강의의 경우 전달매체가 온라인 형식일 뿐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함



공무원이 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 연주·공연 또는 전시를 하는 것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



연주회·전시회에서의 연주·공연·전시는 문화예술행위로서,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방송사가 문화재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문화재 전문가인 공직자에게 원고를 써달라고 요청한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다큐멘터리 방송 제작 관련 원고 작성은 신문·잡지 등에 실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직무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출강(저글링을 잘하여 퇴근 후 청소년들을 지도)할 때에도 신고해야 하는지?



「공무원 행동강령」은 직무와 관련한 강의 등을 외부강의등으로 규율하고 있음. 따라서 직무와 무관한 강의 등의 경우 기관별 행동강령 상 별도의 신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신고 대상은 아님



A기관이 B기관에 위탁한 교육과정에서 B기관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



공무원의 외부강의는 요청서류에 근거하여 허용되므로(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0장) 원칙적으로는 요청서류에 드러난 요청자를 기준으로 외부강의에 해당되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임.(다만, 구체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요청자를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임)



책을 집필하는 것이 기고에 해당하는지?



책을 집필하는 행위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형태가 아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실기 위해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가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



기업 블로그에 원고를 게재하는 것이 기고에 해당하는지?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실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제14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수행한 업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원고료 수수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제14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

외부강의등의 신고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등도 신고대상인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한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일인 2020.5.27. 이후 실시하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는 사례금을 받지 않을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 상의 신고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사전에 신고하는 것도 허용되는지?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일인 2020.5.27. 이후 실시하는 외부강의등에 대해서는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자가 요청자 또는 요청기관단체의 이름, 요청 사유, 일시, 장소, 사례금 액수, 강의 주제 등 신고서에 적시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함



동영상 강의를 촬영한 대가로 받은 강의로 외에, 동영상 수익 발생분의 1%를 2년간 받기로 했는데, 이러한 수입도 신고해야 하는지?



직접적인 강사로 외에 저작권료, 인세 등 부수적인 수입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받는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동강령 상 신고대상이 아님



외부강의등 신고서에 기재하는 사례금은 실수령액인 세후(稅後) 금액인지?



세전(稅前) 금액을 기재하면 됨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하는 외부강의등도 신고대상인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근무시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해야 함



교사가 휴직 중 하는 외부강의등도 신고대상인지?



휴직자의 경우에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신고해야 하며, 초과 사례금 수수 시에도 신고 및 반환해야 함



기관장의 외부강의등은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지?



기관장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서를 제출·관리토록 하되, 지나친 외부강의등의 출강 등은 스스로 자제해야 할 것임



공무원 甲이 매주 4시간씩 사립대학교 강의를 나갈 때 매번 신고를 해야 하는지?



월(연) 평균 횟수와 1회 평균 시간을 기재하여 일괄신고 하는 것도 가능함



공무원이 대학 출강에 대해 검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 하는지?



대학 출강에 대하여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검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검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행동강령상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음 (신고의무 없음)



외부강의등은 신고만 하면 근무시간 중에도 출강할 수 있는지?



「공무원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외부강의등의 신고와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출강을 할 수 있는지(「공무원 복무규정」)는 별개 사안임. 따라서 외부강의등의 신고 여부를 떠나서 근무시간 중의 외부강의등은 출장·연가 등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국·공립대학교 소속 교수가 같은 대학 내 산학협력단에서 요청받은 강의등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



산학협력단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그 대학의 산하기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속 교수가 같은 대학 산학협력단 소속 사업단에서 하는 강의는 외부강의 등으로 보기는 어려움



소속 기관의 산하 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대가를 받아도 되는지?



행동강령에서는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대해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초과사례금의 수수를 제한하고 있음. 산하 기관에서 강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각 기관의 내부규정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공무원이 외부기관으로부터 30분 강의를 요청받은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을 받을 수 있는지?



1시간 이내의 강의의 경우 1시간 상한액이 적용되며, 해당 직급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사례금 수령이 가능할 것임

※ 다만, 개별 기관에서 보다 강화된 기준(ex. 1시간 미만시 사례금 수수 불가 등)을 규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초청기관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한 직원이 소속 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받는 것이 행동강령 위반인지?



초청기관에서 지급하는 강의 대가에 여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속 기관에서 별도로 출장비를 지급받는 것은 여비를 이중지급 받는 행위로서 행동강령 위반임



국립대학교의 의과대학 정교수이면서 동시에 공직유관단체인 국립대학교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을 경우, 해당 공직자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신분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신분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 외부강의의 사례금은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에는 시간당 40만원이며, 교원의 경우에는 시간당 100만원임.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신분과 교원의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기준을 따르면 됨



외국대학,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강의를 하는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외국대학, 국제기구, 국제학술단체 등인 경우에는 해당 외국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사례금을 받을 수 있음



공무원 A가 동일한 날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강의과목은 같으나 대상이 다른 강의를 요청(각각 3시간) 받은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어떻게 되는지?



강의주제·과목이나 수강대상이 다르다면 각 1회의 강의로 볼 수 있으므로 오전강의와 오후강의는 각각 별개의 강의로 볼 수 있음.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하는 경우 공무원 A는 1회 강의당 60만원[40만원+20만원(40만원 $\times \frac{1}{2}$)]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오전·오후강의가 별개의 강의에 해당한다면 A는 각각 60만원을 한도로 사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임

기 타



외부강의등의 횟수 제한은 없는지?



「공무원 행동강령」은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에 대해 기관별로 월 3회의 범위 내에서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요청에 의한 외부강의에서 외부강의 관련규정에 의한 초과사례금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외부강의등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으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다른 외부강의등과 동일하게 적용됨. 따라서, 초과사례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함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강의를 하였으나, 신고대상 외부강의등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징계의 대상이 되는지?



행동강령 위반의 경우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징계대상이 됨. 다만, 행동강령 미숙지로 고의성이 없는 위반의 경우에는 징계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징계는 각급 기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되는 사항임



제16조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을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0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공직자가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2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내용 해설

- (규율대상) 공무원 자신,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비속, 특수관계사업자
 - ※ 공무원의 책임범위 설정과 관련하여 거래 사실을 알 수 있는 범위로 한정
- (거래신고)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금전차용 등 거래 하려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 신고 (별지 제19호 서식)

신고대상 거래행위(제16조)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 거래행위 제외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 *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행위 제외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

- 직무수행이 종료된 후 2년 이내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와 거래를 하려는 경우도 포함
- 다만,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거래 제한 대상에서 제외
 - ※ 「민법」 제777조상의 친족 :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 예외적으로 사전 신고하기 곤란한 경우 사후 신고 가능
 - ※ 공무원 거래 시 : 거래를 마친 날로부터 5일 이내
 - ※ 제3자가 공무원을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 공무원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특수관계사업자 거래 시 :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 (조치사항)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 된 거래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무배제 조치 가능
 - ※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직무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 다만, 공익증진 등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무를 계속 수행하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확인·점검토록 함

〈 거래 신고 관련 변경 사항('18.1.16.) 〉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규율대상	• 공무원	• 공무원,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특수관계사업자
거래제한 대상	•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
거래제한 내용	• 금전차용 • 부동산 무상 대여	• 금전 차용, 유가증권 거래 • 부동산 등의 재산상 거래 •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체결
조치	• 원칙적 금지 • 부득이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	•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 서면 신고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무배제 조치

■ 예시

-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1,500만원을 무이자로 사전 신고 없이 차용
- 모 시청 소속 공무원이 자신의 주택을 건축하면서 사전신고 없이 직무관련자인 관내 건설업자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
- 모 구청 소속 공무원이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민원인을 상대로 금전을 대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음
- 전산 시스템 도입 관련 계약 상대방인 납품업체로부터 주식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액면가로 취득
- 공무원이 직무관련자가 법령위반으로 곤경에 처한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해당 직무관련자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
- 공무원이 직무관련자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임대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었으나, 추후 직무관련자가 되었을 경우에도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지?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는 직무관련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차후에 직무관련자가 되었다면 직무관련자가 되는 시점에 신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직무관련자 관계가 성립하기 전에 차용한 금액을 변제하는 등 거래관계가 소멸된 것이 아닌 이상,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과거에 직무관련자였으나 인사발령 등으로 현재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금전의 차용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지?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현재는 직무관련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금전 등 거래의 상대방이 관련되었던 직무가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거래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 내용 해설

● 통지가 제한되는 경조사의 범위

-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관련되는 결혼, 사망
 - ※ 본인의 승진, 전보, 출산, 돌, 회갑, 칠순 등은 통지가 제한되는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축하금품 등의 수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함

●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대상

-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무원이 아닌 자
- 친족, 前·現 근무기관의 소속 직원(직무 관련 유무 불문)
 - ※ 친족의 범위 : 배우자, 혈족, 인척(민법 제767조)
-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

● 경조사 통지 방법

- 직무관련자·직무관련공무원이 아닌 자 : 통지방법상 제한 없음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신문·방송에 의한 통지**(다만, 보건·의료·세무·건설 등 특정 분야 공무원과 관계되는 매체는 제외)
 - ※ 신문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 방송 : 「방송법」 제2조제1호(텔레비전·라디오·데이터·이동멀티미디어 방송), 제4호(중계유선방송), 제10호(전광판방송)의 규정에 따른 방송
 - ※ 신문·방송의 경조사 관련 내용을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전달하는 것은 개별통지로 보아 금지
- 현재 또는 과거 근무기관 소속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해당기관 내부통신망*** 게시(직무관련자 등 일반인 누구나가 열람 가능한 기관 홈페이지 게재는 불가)

* (내부통신망) 내부직원만 사용하는 전자통신망(인트라넷, 내부메시지 등)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대한 해석

- '기관'은 기관별 행동강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로 판단(동일한 행동강령을 적용받는 범위와 일치)
 - 서울시 등의 경우 본청과 구청(자치구)은 별도 기관으로 간주
 -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지역별 특별행정기관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속 기관을 포함한 전체를 하나의 기관으로 간주
-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범위
 - 직전 근무기관을 포함하여 과거에 근무한 적이 있는 모든 기관을 말함

통지가 가능한 근무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해석

- '소속 직원'은 전직, 현직 직원을 모두 의미함

■ 예시

- K구청 Y국장의 자녀 결혼 청첩장에 축의금 접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 직무관련 업체에 FAX로 통지
- 초등학교 L교사는 학부모들에게 자신의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고, 학생들에게 학부모를 대동하고 참석하도록 독려
- 상급자의 모친상을 직무관련단체인 관내 모든 건축사들에게 FAX로 통지
- 상급자의 경조사를 직무관련 20여개 업체에 통지
- 지자체 도시계획국장이 평소 친분이 있던 관내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업자들에게 아들의 결혼 청첩장을 배포



공무원(A)이 다른 공무원(B)의 경조사를 해당 공무원(B)의 직무관련자에게 통지하는 행위가 행동강령 위반인지?



가. 공무원(B)의 지시 또는 요구·부탁 등에 의하여 공무원(B)의 경조사를 공무원(A)이 대리 통지한 경우

- 공무원(A) :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
- 공무원(B) :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위반

나. 공무원(B)의 지시 또는 요구·부탁 등이 없이 공무원(B)의 경조사를 공무원(A)이 임의 통지한 경우

- 공무원(A) :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및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
- 공무원(B) : 위반 아님

**제18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영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4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을 말한다)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 내용 해설

- 공무원이 알선·청탁 해당 여부, 선물 수수 가능 여부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후 처리토록 함으로써 행동강령 위반 소지 사전 차단함으로써, 부패 위험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
-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 상담결과를 기록·관리

**행동강령 위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공무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 위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보통 감사 또는 윤리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행동강령 위반 신고상담코너를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110콜센터로 상담 가능함.



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1조(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 ① 모든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그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공공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이 접수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7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을 장으로 한다)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31조(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

- ① 공공기관의 장은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2. 징계의결서 사본
- ② 공공기관의 장은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23호 서식을 첨부하여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내용 해설

● 신고주체 : 누구든지 가능

-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신고 가능
(방문·인터넷·우편·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 제출)

● 신고기관

-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사항 (별지 제20호 서식)

- 신고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무고(誣告)성 신고 등에 따른 선량한 공무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명 신고를 원칙으로 함.
다만, 익명 신고의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체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 가능

● 신고 처리

-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가능
※ 소속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3인 이상의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가능
※ 행동강령 책임관은 별제 제21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 가능(「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권익위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별제 제23호 서식을 첨부하여 권익위에 통보하여야 함.

● 신고자 보호

-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의 인적사항,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보호조치

제62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1. 요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⑥ 제5항 각 호의 요구·조회·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조사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 관계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관계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⑨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제62조의2(불이익처분 절차의 일시정지)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구인의 조치 요구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요구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구인의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처분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요구인에 대한 불이익처분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2.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요구인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처분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4조의2(신변보호조치) ①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협조자 보호) 이 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67조(준용규정)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및 제66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6.3.29., 2017.10.31.>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①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62조제7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62조의2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2조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2. 제62조제6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요구·조치 및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62조제7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를 제외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익명으로 신고하여도 조사가 되는지 여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제시하도록 한 것은 무고성 신고 등에 의한 선량한 공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익명의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체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임.



제20조 (징계 등)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8조(징계양정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금품등 수수(收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이 예규 별표 4의 금품등 수수(收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 내용 해설

-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 가능
-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 4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함

〈 금품등 수수(收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운영지침 별표4) 〉

구 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비 위 유 형	수수 행위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동	감봉·정직·강등	강등·해임·파 면	해임·파면	파면
	능동	정직·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정직·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능동	강등·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강등·해임·파면	파면		
	능동	해임·파면	파면		

※ 각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위 표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제21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1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 ① 공직자는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공직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5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제5항 또는 「공직 유관단체 표준안」 제24조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하거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제2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0조제2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33조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반환하는데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제4항,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20조제4항 또는 「공직유관단체 표준안」 제33조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공공기관의 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6조(클린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공직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금품등의 접수·처리를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된 기관별로 클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내용 해설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 신고 사유

- ▶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영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 ▶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영 제14조 제5항)

- 신고 방법 :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 신고

* '지체 없이'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를 의미하며, 지체 없이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를 의미

- 신고 사항 : 신고자의 인적사항, 금품등 제공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 및 이유,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 여부 등

● 수수 금지 금품등의 반환

- 공무원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함

- 반환 비용의 청구 : 공무원이 수수 금지 금품등 반환에 있어 비용이 발생한 경우 증명자료(택배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반환 비용 청구 가능 (별지 제15호 서식)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

- 공무원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함
 - ▶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인도된 금품등의 처리
 - ▶ 소속 기관의 장은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금품등 인도확인서' 작성·관리 (별지 제16호 서식)
 - ▶ 처리 방법(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 ▶ 소속 기관의 장은 처리한 금품등을 '금품등 관리대장'(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①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②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③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별지 제17호 서식)
 - ④ 그 밖의 경우 :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 신고자 우대 등의 조치

- 소속 기관의 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가능



제22조 (교육)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3조(교육)

-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에 대하여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 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항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내용 해설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는 교육과정·교육방법 및 교재를 개발하여 소속 직원이 행동강령에 대한 이해와 실천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무원 신규임용시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조사·점검·단속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

※ 필요시 소책자, 리플릿, 카드 등을 소지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 제작·배포

**제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그 기관과 그 소속 기관 중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 대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 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① 공공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때에는 그 업무 담당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 내용 해설**● 지정 대상기관 : 기관장이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인 기관**

※ 다만, 소속 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지정 가능

● 지정기준 : 행동강령책임관은 부패예방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감사 또는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감사 또는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경우 감사 또는 윤리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중에서 지정 가능

기관별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예시

- 중앙행정기관(부·처·청, 위원회 등), 시·도, 지방교육청 : 감사관·감사담당관 등
- 기초자치단체(시·군·구) : 기획감사담당관·감사담당관 등
- 지역교육청, 지방노동청(사무소) : 관리과장
- 기타 : 경찰서(청문담당관), 초·중·고등학교(교감) 등

☞ 각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소속 기관별로 행동강령책임관을 맡을 공무원의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인사발령 등에 의한 자연인 교체시 별도 담당관을 지정해야 하는 불편 해소

● 기관별 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와 역할

-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영 제23조)
- 행동강령 준수여부 점검,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영 제19조, 제23조)
- 행동강령 관련 상담 및 상담일지 작성
 - ▶ 행동강령 위반여부 상담 및 상담일지 작성(영 제18조, 제23조)
 -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관련 상담(영 제4조)
 -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영 제5조)
 -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관련 상담(영 제8조)
-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영 제23조)

● 행동강령책임관이 없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해당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영 제23조제4항)



제24조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4조(형식)

- ①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령이나 훈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칙으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규칙으로, 지방의회의 장은 조례로 정한다.
- ② 공직유관단체의 기관별 행동강령은 최고결기구의 의결을 거친 사규로 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직유관단체의 실정에 따라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결재로 제정할 수 있다.
- ③ 지방의회의 사무처, 사무국 또는 사무과 소속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장이 정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의 적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을 기관별 행동강령의 준용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5조(명칭)

기관별 행동강령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단체 : 「(기관명) 공무원 행동강령」
2. 지방의회 : 「(기관명) 의원 행동강령」(의원 행동강령을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통합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에 “행동강령”을 포함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3. 공직유관단체 : 「(기관명) 임직원 행동강령」

■ 내용 해설

● 기관별 행동강령의 제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행동강령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함

▶ 기관별 행동강령의 형식 및 명칭

기관 형태	제정 형식	명칭
중앙행정기관	부령 또는 훈령	「(기관명) 공무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규칙	
지방교육자치단체	교육규칙	
지방의회	조례	「(기관명) 의원 행동강령」
공직유관단체	사규	「(기관명) 임직원 행동강령」

-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해당 기관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을 기관별 행동강령의 준용 대상으로 할 수 있음

● 기관별 행동강령 제·개정 통보

-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개정하는 때에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받은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시정권고 가능

※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권고 가능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5조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 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라.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17조 관련)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 40만원

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가목에 따른 공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다):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 3]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28조 관련)

금 액		수수 행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비 위 유 형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동	감봉·정직·강등	강등·해임·파면	해임·파면	파면	
	능동	정직·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정직·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능동	강등·해임·파면	파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강등·해임·파면	파면			
	능동	해임·파면	파면			

※ 각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위 표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1.9.30.〉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1.9.30.〉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인

○○기관 귀중

Part
2
공무원
행동강령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의견서

성명	
소속	
직위(직급)	
담당업무	
의견	

본인은 직무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6호 서식]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이
유
기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기관 귀중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조치 내역서

접수번호		접수일	
업무 담당 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관련 사항	<p>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p> <p>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p>		
확인 사항			
조치 내역			
기타 참고사항			

, 확인점검일

, 확인점검자 (인)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8호 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타					
기타					
<div style="text-align: center;">작성일자 : 20 . .</div> <div style="text-align: right;">신고자 : (인)</div>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 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인 퇴직공무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퇴직 전 소속		퇴직일	
접촉 일시			장소	
접촉 유형	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 음주 등의 향연, 5. 기타			
접촉 사유				
비용 부담자				
참고서류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2호 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_____천원(※ 1회 평균 대가 _____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_____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속에 별도 기재함.
-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_____ 천원(※ 1회 평균 대가 _____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_____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_____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증빙서류 첨부 반환방법 :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5호 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물품)				
	수량(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6호 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7호 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금품등 관리대장

[illegible]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9호 서식]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금액		거래원인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대상		거래 금액			
거래원인					
<div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div> <div style="text-align: center;">신고자</div> <div style="text-align: right;">(서명 또는 인)</div>					
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		

※ 거래원인이란, 계약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법률상의 원인, 즉 권원을 말함. 법률행위 또는 그 밖의 법률사실(예컨대, 상속, 경매, 판결 등)일 수 있음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9호의2 서식] <개정 2019.1. 8.>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20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자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21호 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방문 [] 전화 [] 기타()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 (직급)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23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위반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위반행위	통보받은 문서번호			
	위반내역			

■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

확인자	(직위)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PART

3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I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및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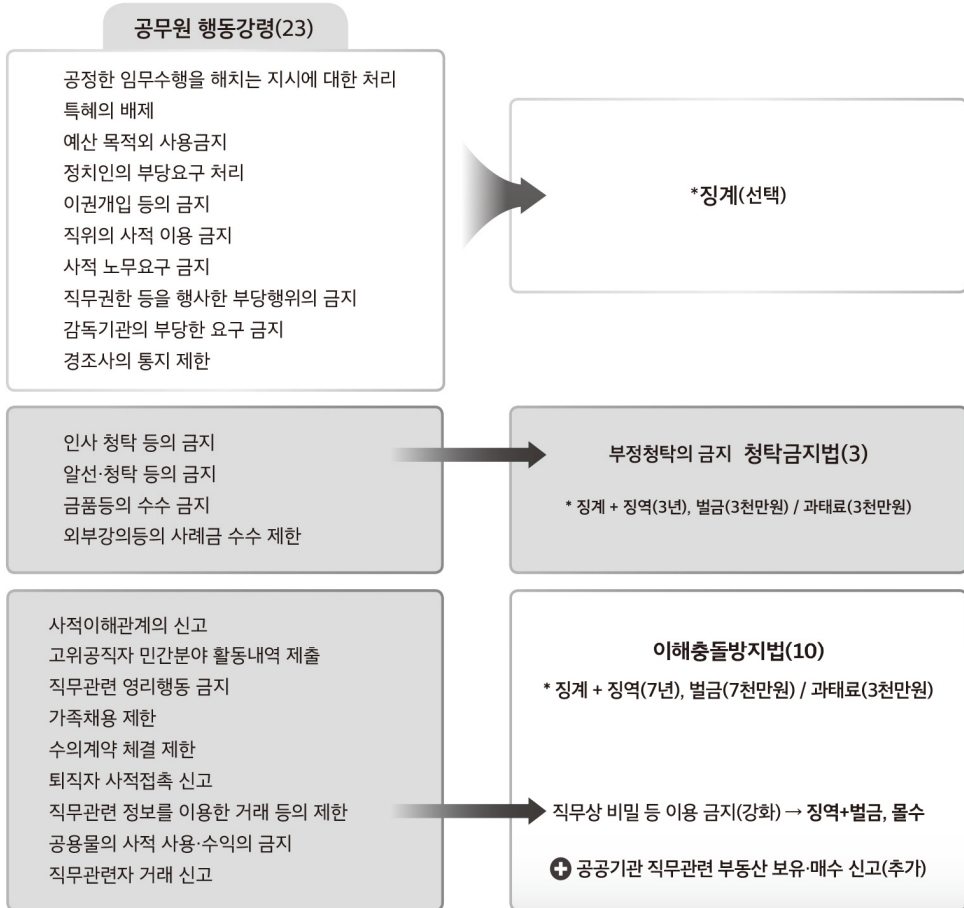
■ 제정 : 2021. 5. 18.(2022. 5. 19. 시행)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

■ 구성 : 28개 조항(10개 행위기준)

제1장 총칙	제2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1. 목적	5.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2. 정의	6.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3. 국가 등의 책무	7.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4. 공직자의 의무	8.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및 공개
	9. 직무관련자의 거래신고
	10.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11. 가족채용 제한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13.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14.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15. 퇴직공직자 사적 접촉 신고
	16.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제3장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4장 징계 및 벌칙
17.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업무 총괄	26. 징계
18. 위반행위의 신고 등	27. 벌칙
19.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28. 과태료
20. 신고자 등의 보호/보상	
21.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22. 부당이득의 환수 등	
23. 비밀누설 금지	
24. 교육과 홍보 등	
25.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 공무원 행동강령-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행위기준 비교



* 이해충돌방지법의 행위기준은 행동강령보다 구체적이고 위반시 징계 등 처벌규정이 강력해짐



Ⅱ 이해충돌방지법 내용

1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적 이익추구
금지

=

이해충돌
방지

→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국민의 신뢰 확보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 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학교
2.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

3.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다.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바.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사.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아.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

자.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차. 지방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카. 다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및 차목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라목·마목·아목 및 차목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한다.

타.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4.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5.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준(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6.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1 공공기관(적용 대상기관)

청탁금지법제2조제1항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다. 교육행정기관
- 라. 공직유관단체
- 마.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바. 각급 국립·공립 학교

※ 청탁금지법의「공공기관」의 범위에서 사립학교(법인), 언론사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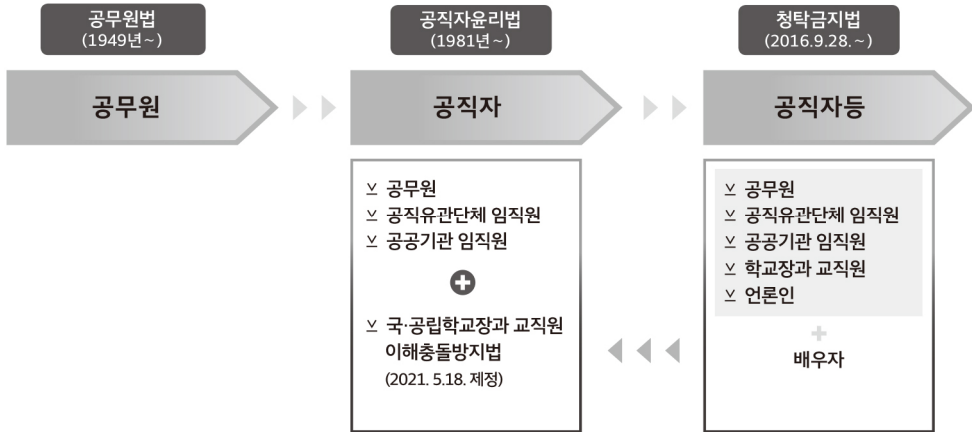
2 공직자(적용 대상자)

청탁금지법제2조제2항

- 가.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나.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다.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

※ 청탁금지법의「공직자등」의 범위에서 사립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제외

■ 「공직자」개념의 변천



3 고위공직자

- 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국회·지방의회 동의를 통해 취임하는 공무원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 다.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 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 바.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 사.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 아.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 **경찰청장**
- 자.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 차. 지방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 카. 다~바목까지, 아목 및 차목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공무원
- 타.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 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4 직무관련자

공무원행동강령제2조제1항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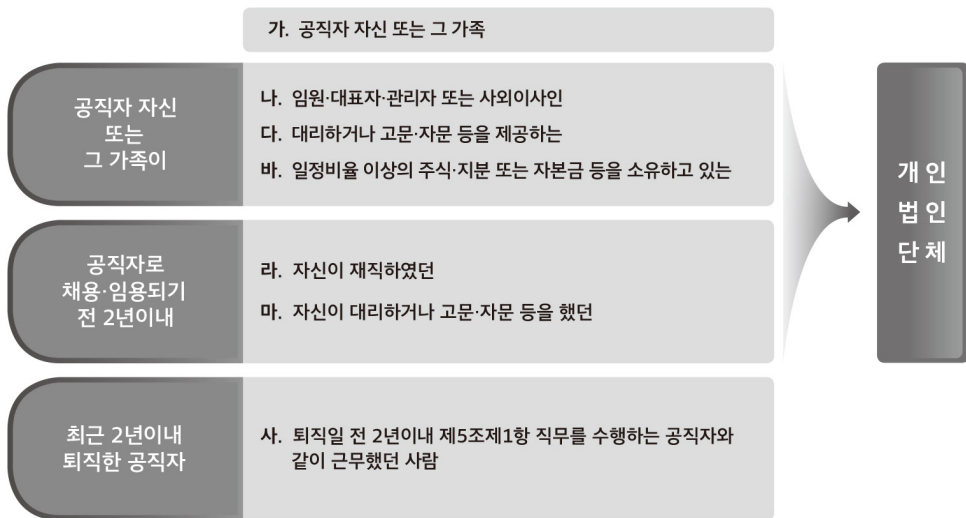
- 가.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법인·단체
- 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단체
- 다.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법인·단체
- 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공무원 행동강령의「직무관련자」

－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개인·법인·단체

* 민원/ 인·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수사, 감사, 감독/ 결정, 검정, 감정/ 징집, 소집, 동원/ 계약/ 정책·사업 등의 결정

5 사적이해관계자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확인·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직무)

- ①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 핵심 10개 조항

신고	5조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회파·기피 신청	과태료
	6조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과태료
	8조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과태료
	9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과태료
제한	10조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과태료
	11조	가족 채용 제한	과태료
	12조	수익계약 체결 제한	과태료
금지	13조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과태료
	14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형사처벌
신고	15조	퇴직공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과태료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와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2.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법령·기준에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공직자가 그 절차에 따른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기피의 절차와 방법, 신고·회피·기피의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무원행동강령제5조

- 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② 직무관련자가 ③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함

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 | | |
|---------------------------|---------------------------|
| ① 인가·허가·면허·특허·지정등 직무 | ⑨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관계되는 직무 |
| ②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 직무 | ⑩ 공직자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직무 |
| ③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 직무 | ⑪ 공공기관의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 ④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처분 직무 | ⑫ 국립·공립학교입학·성적·수행평가직무 |
| ⑤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등 직무 | ⑬ 공공기관 수상, 포상, 선정, 선발직무 |
| ⑥ 보조금·출연금·출자·교부금등 직무 | ⑭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 ⑦ 공사·용역, 물품등의 조달·구매 등 직무 | ⑮ 국회·지방의원의소관위원회직무 |
| ⑧ 수사·재판·심판·조정·화해 등 직무 | ⑯ 그밖에국회규칙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직무 |

신고 및 회피 신청

➡ 위반시 징계+ 2천만원 이하 과태료

② 직무관련자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 | | |
|--------------------------------|------------------------------|
| ①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법인·단체 | ③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개인·법인·단체 |
| ②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법인·단체 | ④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

기피 신청

③ 사적 이해관계자

·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

- ① 자신 또는 그 가족
 ②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인
 ③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
 ⑥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지분·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 개인·법인·단체

· 공직자로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 ④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⑤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했던
 개인·법인·단체
 ⑦ 2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가 퇴직 전 2년 이내
 제5조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같이 근무하는자
 ⑧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민법」 제779조상의 가족 : ①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②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

-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회피·기피 예외사항

- ①의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폐지
- 특정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민원에 따라 서류 발급



제6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①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 자신, 배우자
 2.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①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와 ②부동산을 취급 안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경우

- 공직자 본인, 배우자,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
- 소속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 보유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 매수 후 등기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하여야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함 : 택지개발 및 지구 지정 사업, 산업단지 개발, 도시개발 및 지역개발 사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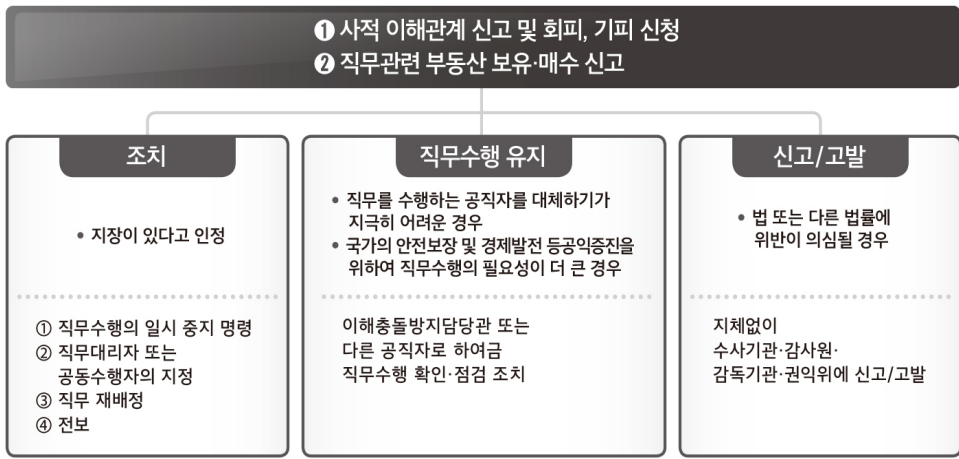
● 위반시,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7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 또는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 또는 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부동산 보유·매수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감사원·감독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확인·점검·통보, 신고·고발의 기록·관리 및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화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관한 조치



● 위반 시,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8조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 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2.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3.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④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활동 내역 제출, 보관·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제출 및 공개

공무원행동강령제5조의2

- 고위공직자는 3년 이내 민간부문 활동내역을 임용·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3년 이내 민간부문 활동내역)
 - ①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 ②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 ③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활동내역 보관·관리, 필요시 공개할 수 있음
- 위반시, 징계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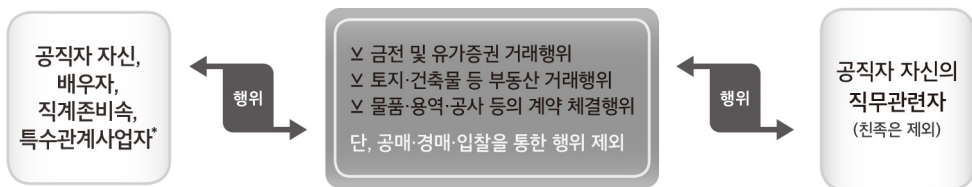
-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 ② 공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있었음을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신고한 행위가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7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 신고의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공무원행동강령제16조

●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 거래행위를 안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

-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 위반시,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공무원행동강령제5조의3

- 직무관련자에게 사적 노무·조언·자문 등 제공하고 대가 받는 행위
- 직무관련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 받는 행위
 - *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허용
-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조언·자문·정보제공 행위
-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 대리(허가 시 가능)
- 직무와 관련 다른 직위에 취임(허가 시 가능)
- 위반 시,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1조 (가족채용 제한)

-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제2조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 나.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 다.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라.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거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 가족채용 제한

공무원행동강령제5조의4

● 공공기관은 다음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음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공직자는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묵인해서는 안 됨

● 가족 채용 제한 예외

①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 합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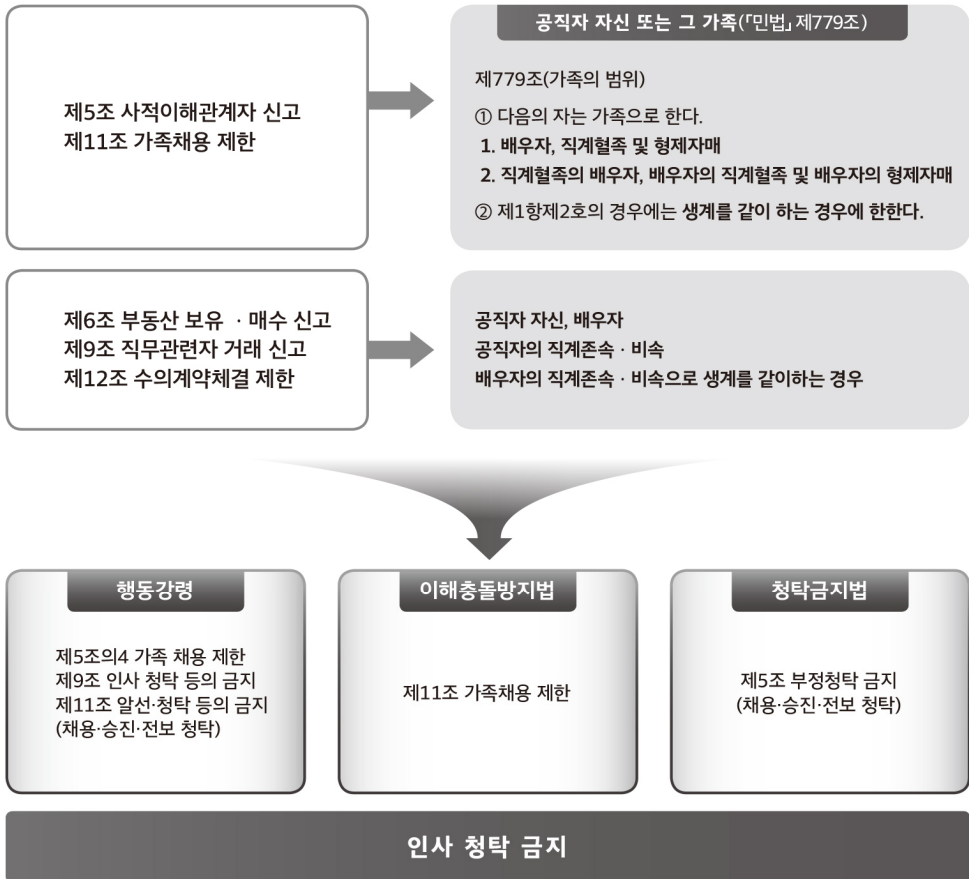
- 법령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이 있는 시험

②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 채용

-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 시 재직하던 직급으로 재임용
-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 인정으로 임용
- 국가공무원 ⇄ 지방공무원으로 직급·직위에 해당하게 임용
- 자격요건 충족만 요구되거나 자격요건 해당 대상자가 없을 경우

● 위반 시, 징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조항에 포함된 가족 범위 비교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무원행동강령제5조의5

- 공공기관은 다음 공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생산자가 1명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 위반시 징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① 소속 고위공직자
-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소속 고위공직자
-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⑤ 해당 공공기관 상임위원 소관·상임위원 직무 국회의원
- ⑥ 공공기관을 행정사무감사·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 ⑦ 1~6호 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⑧ 1~7호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단체
- ⑨ 1~7호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공직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묵인해서는 안 됨

**제13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무원행동강령제13조

- 공직자는 공공기관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공공기관이 소유·임차한 물품·차량·선박·건물·토지·시설 등

● 예외 적용

-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사회상규 관련 판례

(대법원 2004.8.20. 선고 2003도4732 판결)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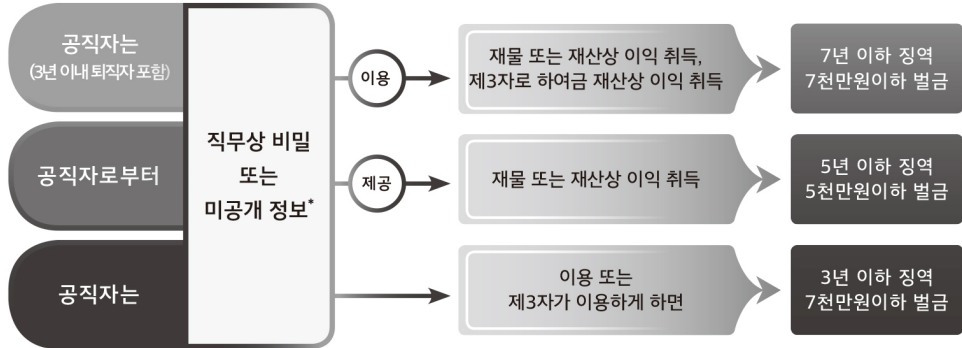
- 위반 시,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①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같다)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공무원행동강령제12조



* 미공개 정보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



제15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 및 신고 방법, 기록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퇴직자 사적 접촉 금지

공무원행동강령제5조의6

-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의 사적접촉 신고 → 퇴직후 2년 이내
 - 사적 접촉 :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 예외 적용 :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 위반 시, 징계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6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14조, 제21조(제5조 및 제14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 제7조, 제14조, 제21조,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는 “공무수행사인”으로,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청탁금지법제11조

● 공무수행사인

1. 법령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개인·법인·단체**
3.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공무상 심의·평가하는 개인·법인·단체**

● 공무수행사인의 행위제한(적용조항)

- 제5조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제7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 제14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제21조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 제22조 부당이익의 환수 등

3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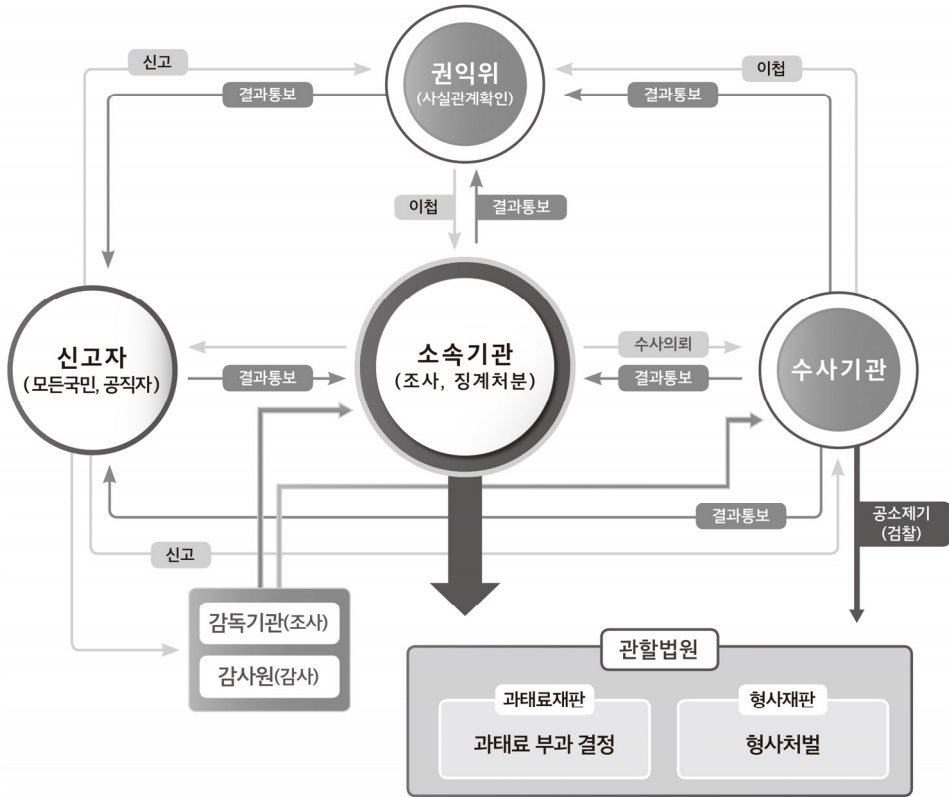
-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 ②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의 처리)

- ①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④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⑦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⑧ 제7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고 및 처리절차





제20조(신고자 등의 보호·보상)

-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
 2. 제1호에 따른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돕는 행위
-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 및 “공익신고자”는 각각 “신고자등” 및 “신고자”로, “공익신고등” 및 “공익신고”는 각각 “신고등” 및 “신고”로, “공익침해행위”는 “이 법의 위반행위”로 본다.
-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⑦ 신고자등과 그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든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에 따른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든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 ⑧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보상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2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본문 중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같은 항 단서 중 “부패행위 신고”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제70조의2제1항 전단 중 “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본다.
- ⑨ 제7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본다.

■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내용을 직접규정 또는 준용
 - 직접규정 : 신고 방해 및 취소강요 금지, 불이익 조치 금지,
 - 자진신고 등에 대한 책임 감면 등
 - 준용규정 : 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특별보호조치 등
-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대상은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하되 지급절차 등은 「부패방지권익위법」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준용
 - 포상금·보상금 지급절차 : 부패방지권익위법 준용
 - 구조금 지급절차 : 공익신고자 보호법 준용



제21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 소속 기관장은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 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 명하고,
 - 불이행할 경우 직무 중지 또는 취소 등 조치
- * (제5조제1항)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 의무, (제6조)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제8조제1·2항)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제9조제1·2항)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제10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제11조제3항) 가족채용 지시·유도·묵인, (제12조제2항) 수의계약 체결 지시·유도·묵인, (제13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금지, (제14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제15조)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제22조(부당이득 환수 등)**

- ①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5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제6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 ②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13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물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 부당이득 환수

- 공직자가 의무를 위반하여 공직자 본인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
 - (제5조) 사적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의무, (제6조)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 (제13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23조 (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의 업무로서 제8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 처리에 관한 업무
2. 제8조에 따른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
3. 제9조에 따른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4. 제15조에 따른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 비밀누설 금지

- 비밀누설 금지대상 업무 담당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비밀 누설 행위를 금지
- 비밀누설 금지 대상 직무
 -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 처리에 관한 업무
 - 제8조에 따른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
 - 제9조에 따른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 제14조에 따른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 위반 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4조 (교육 및 홍보 등)**

-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5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
 3.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
 4.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및 관리
 6.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7.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 ② 이 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신청·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신청·제출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하여야 한다.

■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업무 (* 감사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 등
-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및 관리
- 위반행위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4 > 징계 및 벌칙



제26조 (징계)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징계(필수) + 과태료 OR 형사처벌



제27조 (벌칙)

-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공직자(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행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같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2.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 ⑤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 ⑥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제1항의 경우 그 정을 아는 제3자를 포함한다)가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벌칙(징역 또는 벌금)

구분	위반조항	위반내용
7년 / 7천만원	제14조제1항	직무중 알게 된 비밀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공직자
5년 / 5천만원	제14조제2항	공직자로부터 비밀/미공개 정보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
	제20조제4항	신고자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한 자
3년 / 3천만원	제14조제3항	비밀/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용한 공직자
	제20조제2항	신고자에게 신분상 불이익 조치 한 자
	제20조제4항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미이행자
	제23조	업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년 / 2천만원	제20조제1항	신고 방해 및 취소를 강요하는 자
	제20조제2항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신분상 조치 제외)를 한 자

※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징역과 벌금이 병과되며 위반한 죄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 됨

과태료

구분	위반조항	위반내용
3천만원	제11조제3항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자
	제12조제2항	수익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묵인한 자
	제20조제4항	자료제출, 출석, 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을 거부하는 자
2천만원	제5조제1항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하지 않은 공직자
	제6조제1·2항	부동산 보유·매수를 신고 안한 공직자
	제9조제1·2항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 안한 공직자
	제10조	직무관련 외부활동을 한 공직자
	제13조	공공기관 물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한 공직자
	제20조	신고자에 대한 특별보호조치 결정 미이행자
1천만원	제8조제1항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미제출 고위공직자
	제15조제1항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 안한 공직자



제28조 (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익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
 3.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을 거부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 보유·매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3.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4. 제10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한 공직자
 5. 제13조를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공직자
 6.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고위공직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 ④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PART

4

신고·조사 및 보호보상

법률명 약칭

-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부패방지권익위법
- ②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신고자보호법
- ③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청탁금지법
- ④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공공재정환수법

I 신고접수·처리 일반

1 개요

- 부패·공익침해행위 등은 우리 사회의 안전 및 신뢰의 훼손 등 유형·무형의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킴
 - 신고제도는 부패·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해 누구든지 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 등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임
 -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분보호, 신분보장 등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부패·공익침해행위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임

2 신고대상

■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상기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유형 예시]

부패유형	사례 (예시)
증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 검사 과정에서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 • 행정처분 대상 업체에 처분 경감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행위
향응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의 업무 편의를 봐주고 성접대, 골프 접대를 받은 행위
공금 횡령·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 하여 예산으로 지급 후 업체로부터 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행위
직권남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허가를 하도록 소속 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건축허가 통지토록 한 행위 • 용역업체에 계약과 무관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직무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용도변경을 단속하면서 지인의 불법 용도변경 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행위
비밀누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단속 정보를 평소 친분이 있는 자에게 사전에 누설하는 행위
문서 위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진순위를 조작하여 허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행위
공금 횡령·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외 수입 등을 횡령하는 행위 •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이 중 일부를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예산 및 재정 관련 법령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행위 • 수당을 부당 수령하는 행위 • 특정업체의 특정제품을 명시하여 특정업체가 고가로 낙찰되도록 한 행위 • 지체상금이행강제금 미부과 등
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수를 허위로 늘려 보조금을 편취하는 행위

■ 행동강령 위반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 및 제8조)

-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 내외에서 당면하게 되는 갈등상황에서 추구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준수하여야 하는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범으로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신고접수·처리 대상에 해당됨

[참고 -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내용, 총 23개 행위기준]

공정한 직무수행(11개)	부당이득 수수금지(9개)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지시 처리 절차 규정(§4)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5)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5의2) •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5의3) • 가족 채용 제한(§5의4) • 수익계약 체결 제한(§5의5) •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5의6) • 특혜의 배제(§6)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7)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8) • 인사 청탁 등의 금지(§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권 개입 등의 금지(§10)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10의2) • 알선·청탁 등의 금지(§11)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12) •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13) • 사적 노무 요구 금지(§13의2)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13의3) • 금품등의 수수 금지(§14)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14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5) •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16) • 경조사 통지 제한(§17)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471개* 신고대상 법률에서 징역 등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개정(2021. 4.20.)에 따라 신고 대상법률 467개→471개로 확대

[공익침해행위 분야별 예시]

구분	주요 법령	공익침해행위(예시)
건강	의료법, 약사법 등	•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의료광고,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면허 사항 외 의료행위
	식품위생법	• 위해식품의 제조 및 판매, 식품유통기한 변조 및 식품 인증마크 불법사용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허위표시
	학교급식법	• 원산지 표시 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를 사용하는 행위
안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폭발위험이 있는 가짜 자동차 에어컨 냉매가스를 무허가로 수입·납품 하는 행위
	건설기술관리법	• 불성실한 책임감리 등으로 시설물의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는 행위
	건축사법	•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시공감리를 하는 행위
	해사안전법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는 행위
환경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행위
	대기환경보전법	• 유독물을 사용하는 인쇄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약취방지법	• 약취관리지역에 약취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유해물질, 농약, 축산폐수 등을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소비자 이익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여 유통하는 행위
	개인정보 보호법	• 정부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소비자기본법	• 물품·용역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수,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행위
공정 경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가격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 가격차별 등 불공정거래 행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 공사를 따내기 위해 미군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채용절차법	•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방위산업기술보호법	•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하게 방위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 중소기업 창업투자 회사의 공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사하는 행위
	방위사업법	•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비축하지 아니하는 행위

■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행위

-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위반행위
 - (부정청탁)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 (금품등 수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한 행위,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 초과하거나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행위

■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 공공재정환수법 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위반행위
 - 부정청구등의 종류(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6호)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 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 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③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법인·단체의 기준·규정·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④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 이하 부패공익신고를 중심으로 기술하며,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행동강령 위반 신고, 부정청탁·금품수수 등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등은 관련 법령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음.

3 신고처리

■ 신고접수

-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고하여야 하며, 증거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므로 신고접수 시 이를 확인해야 함

신고 방법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신고의 방법)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 청탁금지법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공무원 행동강령(임직원 행동강령에도 유사내용 규정)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원칙적으로는 신고서는 신고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지만,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임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음
- 누구든지 부패·공익침해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신고가 제출되었을 경우 이를 접수해야 함
- 신고를 접수받은 공공기관은 신고자에게 신고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 여부 확인 등에 관하여 설명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관련 사항은 3. '신고접수시 확인사항' 참조)
- 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은 시스템(청렴포털)을 통한 관리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신고접수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등 접수 및 처리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주의사항

- ① 신고자는 다양한 신고경로를 통해 공공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청렴포털 외의 경로*로 접수된 신고는 청렴포털(구 공공기관 청렴e시스템)으로 전환**하여 관리하여야 처리결과 통보 등 체계적인 신고사건 관리 가능하고, 신고자 보호·보상 연계 등이 용이함
 - * 방문·우편, 국민신문고, 기관 홈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이첩·송부, 타기관 이송·이첩 등
 - ** 청렴포털(구 공공기관 청렴e시스템)에 스캔 등을 통해 서면등록하거나, 국민신문고 등 청렴포털 외 시스템과 연계된 경우 신고시스템에서 전환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신고를 청렴포털로 전환하여 관리하는 경우 국민신문고 답변 등은 기관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 ② 부패·공익신고 등은 신고자 보호·보상이 연계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관련이 되는 사항이므로, 공공기관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원칙

■ 신고접수시 확인사항

- (형식적 요건) 인적사항 등 필수사항 기재 여부 및 증거 등을 첨부했는지 여부
 - 신고서에 인적사항 등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신고내용이 특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신고자에게 요구해야 함
 - 신고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신고하는 익명·가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접수대상이 아님. 다만, 신고 내용에 신빙성이 있고 증거자료가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사는 가능하지만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른 신고는 아님

* 익명·가명신고의 경우 접수·처리하더라도 신고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법상 신고형식이 결여되어 있어 접수·처리 하더라도 신분보장·책임감면 등 신고자 보호·보상은 어려우나, 익명·가명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자를 색출하거나 그 신원을 밝히려는 시도, 피신고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주는 행위 등은 허용되지 않음

- (실질적 요건)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신고가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해 해당 기관에서 조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

주의사항

1 신고자가 공익신고를 비실명 대리신고로 제출한 경우

-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도입되어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제8조의2)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접수가 가능하므로 국민권익위원회(우편·방문)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
- ⇒ 변호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신고자가 해당 기관에서 신고를 접수·처리해 주기를 원할 경우에는 신고자 명의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신고자 명의로 신고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비실명 대리신고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라도 비실명 대리신고로 접수 불가능 (대리 변호사가 동의할 경우 변호사를 신고자로 하여 접수 가능)

2 신고자가 공익신고 외의 신고를 비실명 대리신고로 제출한 경우

- ⇒ 부패신고, 부정청탁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에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신고로 접수·처리됨을 안내한 후 신고자 명의로 접수(신고자 명의 공개를 원치 않고 대리 변호사가 동의할 경우 변호사를 신고자로 하여 접수 가능)

3-1 접수 받은 신고에 대해 기관에서 처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소관기관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이송
- * 신고사건을 이송하는 경우 이송 과정에서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내용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청렴포털(구 청렴e시스템)을 통해 이송하고,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지 않은 기관에 대해 공문 등을 통해 이송하는 경우 첨부문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주의
- 이때 이송은 소관이 아닌 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신고서 자체를 원본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신고자가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한 후 이송해 주기를 원하는 경우 등 원본 전달이 어려운 경우라면 신고자에게 신고기관 안내 후 이송이 아닌 종결로 처리할 수 있음 (종결 처리 후에는 신고자에게 종결 결과 통지)
- 신고를 공문 등으로 이송하는 경우 신고처리절차 및 유의사항(공익신고자보호지침 표준안 서식 8 및 부패신고자 보호지침 표준안 서식 1 참조)을 함께 이송해야 함

◆공익신고자 보호지침 표준안

제20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공공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

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하여,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패신고자 보호지침 표준안

제7조의2(보호·보상제도 안내) 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한다.

1. 제6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2. 제7조제8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③-2. 청렴포털로 접수받은 신고의 이송 동의를 위해 신고자에게 수차례 전화 연락을 했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 신고자 동의 없이 이송할 경우 신고자 비밀보장 등 보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송은 제한됨. 이송 동의 확인을 위해 유선·무선 등 수차례 연락에도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종결처리 할 수 있으나 근거를 남겨 둘 필요
참고로 이와 별개로 증거가 없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종결처리 할 수 있음

④ 신고서 양식에 따른 신고서만 접수해야 하는지

- ⇒ 신고자의 인적사항, 피신고자, 부패·공익침해행위 내용, 신고의 취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형식과 관계없이 신고로 접수할 수 있음. 다만, 전화문의·상담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렵고, 증거 등을 제출하기도 어려우므로 신고자에게 이러한 점을 설명하고 문서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함

⑤ 신고내용이 부패·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신고 접수단계에서 부패·공익침해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신고로 접수하는 것이 신고자 보호제도의 취지에 적합함. 신고자에게 신고방법을 준수하여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적시해 두어야 함. 다만, 신고내용이 공무원의 불친절이나 제도개선 등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처리

-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 신고자 보호법령에서는 신고자 등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따라서 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은 신고처리 과정에서 신고자가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시할 필요가 있음

-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는 2단계로 나눠서 확인

- ① (신고접수기관 조사·처리 과정) 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이 신고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피신고자, 참고인, 이해관계인 등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등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주의 사항

- ① 신고접수 기관의 처리과정에서 내부결재권자 등에게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님
- ②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를 한 경우라도 피신고자 등 제3자에게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는 것은 최소한으로 하고, 청렴포털 등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담당자는 유선 등을 통해 신분공개 관련 사항을 안내

② (신고접수기관 외 조사과정) 신고를 접수한 기관에서 처리를 종료한 후 수사·감사의뢰, 송치, 기소 등 다른 기관에 조사·수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관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전달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

신고자 비밀보장 규정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 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의 사항

- ① 신고자가 타 기관에 대한 신분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신고사건을 전달받은 기관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진술·의견청취 등 가능
 - ②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피신고자나 이해관계자 등 제3자에게 임의로 공개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 아님. 조사·수사의뢰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전달할 필요
- * (안내문구 예시) 신고자가 귀 기관에 대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별도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분정보를 피신고자 등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금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내용의 조사수사

- (조사·수사) 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은 신고내용에 대해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 방법·절차 및 처리기한**에 따라 조사·수사 또는 감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관련 법령에 신고사건의 처리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 기관별 지침에서 처리기간을 별도로 규정하여 처리기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공익신고자보호지침 표준안 제19조제2항, 부패신고자 보호지침 표준안 제7조제7항 참조)

**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서는 각 기관에서 직접 접수한 부패·공익신고사건에 대해 처리기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

● (종결)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음

* 종결사유

- ①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②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③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④ 신고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⑤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종결대상 아님)
- ⑥ 다른 법령에 따라 신고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 ⑦ 신고내용이 부패·공익침해행위,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행동강령 위반,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이 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다른 신고에 해당하면 전환하여 접수·처리 가능)
- ⑧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등

● (취소) 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결로 처리 가능

※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부패·공익침해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음

신고처리 관련 규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공익신고를 받은 때와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조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조사를 중단하고 끝낼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조사기관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종사자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조사기관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또는 이첩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패신고자 보호지침 표준안

제7조(신고의 조사처리) ① 책임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직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공공 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 훈령 제601호)」을 준용할 수 있다.

- ⑥ 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장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 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 ⑦ 책임관은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00일 이내에 처리하되, 부패신고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0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⑧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의 종결)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기관명)이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8.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공익신고자 보호지침 표준안

제17조(신고의 취소)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책임관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제19조(공익신고의 조사) ① 공공기관은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 또는 공익신고를 이첩·송부받은 날부터 00일 이내에 처리하되,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0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공기관이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 조사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⑥ 공공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공공기관은 제1항의 조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⑧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 제1항의 조사 또는 제20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거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 또는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4 처리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처리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공공기관이 직접 접수한 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함

- 결과통보시 신고자에게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문*을 첨부하고, 이의신청 기간 등을 안내

* 안내문은 아래 참고사항, 부패신고자 보호지침 표준안(별지 서식 1) 및 공익신고자 보호지침 표준안(서식 7) 등 참조

- 신고자가 조사결과 또는 종결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함

*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개별 법령에 따른 기간으로 하되, 개별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처리결과 통보시 14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여 안내 가능

참고 사항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분	지급 대상자	지급요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부과금액의 4%~20% 지급)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 : 파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파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 각급기관에서 지급받은 보·포상금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보다 적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부패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부패신고자등은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등과 관련하여 부패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부패신고자 보상제도(예시)

※ 해당기관의 보·포상 제도 기재. 보·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삭제하여도 무방

구분	지급요건
보상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고, 그에 관한 법률 관계가 확정된 경우(최고 00억원의 범위 내에서 몰수, 추징, 환수 금액의 00%)
포상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최고 0억원 이하)

☞ 부패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I 신고자 보호

1 개요

- 부패 공익신고 접수 처리 과정에서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익위는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에 관한 각각의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이하 ‘신고자 보호지침 표준안’)을 배포하여 기관별 신고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기관별 신고자 보호지침 마련 여부와 관계없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제67조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24조에 따라 권익위에서 직접 신고자 보호가 가능하나,
- 신고자 보호 사건이 발생하여 권익위가 개입하기 전 신고 접수처리기관에서 신고자 신분이 공개되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보호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급기관의 신고자 보호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

2 신고자 보호지침 표준안 주요내용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지침 표준안은 각각 부패 공익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지원 등에 관한 공공기관별 개별규정을 마련하도록 권익위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으로서 기관별 사정에 맞게 수정 가능

■ 공직자 신고의무 및 기관(장) 책무

- (공직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익침해행위나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의무가 있음
- (기관(장))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부패척결을 위한 교육 및 신고 장려, 신고자 보호 지원의 책무가 있음

■ 신고센터 설치 및 책임관 지정

- (신고센터) 공공기관은 공익신고의 상담, 접수 처리, 신고자 구제절차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익신고센터를 설치 운영
- (책임관) 공공기관은 부패 공익신고 접수 처리, 신고자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지정

■ 신고 접수처리

- (신고 방법)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내용,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와 함께 증거 등을 함께 제출
- (보완 요구) 책임관은 접수된 신고내용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타기관 이송) 신고내용이 기관 관할에 속하지 않거나 조사권한이 없어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관계 공공기관으로 이송 가능
- (신고 처리) 책임관은 신고처리기한 내에 신고를 처리하고, 조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신고처리기한은 기관별 사정에 맞게 정하고, 신고 조사 처리결과 통보 시에는 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함께 첨부

- (신고 종결)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거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제3항 각호를 준용한 공공기관별 규정(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름)에 해당되는 경우 종결할 수 있음

■ 신고자 비밀보장

-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가 금지됨 (*위반 시 형사처벌)
- 공공기관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직원에 대해 징계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가 권익위에 신분공개경위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

※ 공익신고의 경우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도 공개 금지(위반 시 형사처벌)

■ 불이익조치 금지 및 인사조치 시 우선적 배려

-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됨 (*위반 시 형사처벌)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7호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

- 공공기관은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신고를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징계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가 권익위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
- (우선적 배려) 공공기관은 전직, 전출 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조치 시 신고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함

■ 신변보호

-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권익위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

■ 책임감면

- (징계) 공공기관은 부패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에 대한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행정처분)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로 신고자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신고자가 권익위에 책임감면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공익신고의 경우만 권익위에 책임감면 신청 가능)
- (비밀준수 의무) 신고자 보호 지침에 따라 신고한 경우 다른 법령,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봄

■ 협조자 보호

- 신고와 관련한 감사 수사 조사 등의 과정에서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협조한 자에 대해서도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신고자 보호규정이 적용됨

■ 신고자 보·포상

- (부패신고) 신고자 포상 및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지급은 예산 등 기관별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 방지가 있는 경우 또는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공공기관에서 권익위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가능
 - ※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권익위 외 타 기관 신고의 경우 제68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만 가능(*공공기관 추천 경우에 한함)하고, 제6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 구조금 지급은 불가능
- (공익신고)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상금 구조금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 권익위에 보상금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신고자에게 통지
 -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 방지가 있는 경우 또는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공공기관에서 권익위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가능
 - ※ 공익신고의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지급요건에 해당하면 권익위 신고뿐만 아니라 타기관 신고까지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지급 가능

3 ≫ 신고자 비밀보장

■ 비밀보장 대상자 및 의무자

-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여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누구든지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한 자는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의 대상이 됨
 - (비밀보장 대상자) 공익신고자등, 부패행위·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자 및 협조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공공재정환수법 위반행위 신고자
 - (비밀보장 의무자) 각 기관의 신고사건 처리 담당자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신고와 관련한 비밀은 보장의무가 있음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관련 규정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익신고자 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청탁금지법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등”으로 본다.

◆ 공공재정 환수법

제20조(신고자등의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사건처리 담당자에 의한 신고자 신분 노출

- 신고자의 신분이 조사 담당자에 의해 노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고사건의 조사, 이첩 등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
-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이 의도치 않게 노출된 경우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한 비밀보장의무 위반으로 보고 있고,
- 비밀보장의무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징계요구, 형사고발이 이루어짐

사건처리 담당자에 의한 신고자 신분노출 사례

- 진료비 부당청구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신고 병원에 신고자의 정보를 불필요하게 알려줌으로써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
- 현장방문하여 신고사건 조사 중 컴퓨터 및 프린터 사용시 연결상태를 확인하지 못해 공용 프린터기로 신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인쇄되어 피신고자에게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
- 현장방문하여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피신고 학교의 컴퓨터에 신고 관련 파일을 삭제하지 않아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
- 신고서 및 신고상담 내용을 가지고 현장방문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관계기관 직원이 신고서를 보게 되어 신고자의 신분 노출
- 유통기한 경과식품 신고 사건을 조사하던 공무원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신고업체가 신고자를 인지하게 됨
- 공직유관단체 직원인 신고자가 소속기관의 부패행위를 감독기관에 신고하였는데, 감독기관 담당자가 '소속기관으로 이송하지 말아 달라'는 신고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소속기관 감사팀으로 이송하여 신고자 신분을 소속기관에 노출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데, 담당 공무원이 일반 민원으로 판단하고 답변서에 요구인의 성명을 제목에 포함시켜 회신함으로써, 대국민정보공개 포털에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

4 신고사건 처리 단계별 유의사항

■ 신고 접수 단계

- 신고 접수 시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신분공개 부동의시 신고자 및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내용에 관한 노출공개보도 금지
 - 조사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신고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피신고자가 누가 신고자인지를 추측할 수밖에 없는 사건인 경우, 신고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 후 조사 개시
- 법령 등에 따라 조사권한이 있는 경우 직접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관할이 아닌 신고는 해당 조사기관으로 이송하고 신고자에게 이송 사실 등을 통지

■ 신고자 안내·연락

- 신고자에게 연락 시 사무실 전화가 아닌 휴대폰으로 가급적 근무시간 외에 연락하고, 조사결과 통지 등은 직장이 아닌 신고자 자택 등 신고자가 원하는 곳으로 발송

■ 신고 조사 단계

- 신고 사건은 업무담당자와 결재권자만 알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모두 별도 관리
 - 신고 내용만으로 신고자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신고 내용을 블라인드 처리하는 등 관리 철저
- 피신고자가 신고자인 것처럼 가장한 전화문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자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전화응대 등 관리 주의
- 자료제출 요구 등 공문 발송시 신고자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 신고 관련 공문 등 문서작성 시 대국민 공개로 작성하여 업무담당자 외에 신고 사건 검색·열람으로 신고자 신분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 대국민 공개가 아닌 문서의 경우에도 정보공개 포털에서 문서목록 조회는 가능하므로 제목이나 수신자에 신고자 이름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 신고자가 복수의 다른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 한 신고 내용을 조사하면서 다른 신고 내용을 언급하지 않도록 유의
- 현장조사 시 신고서 등 서류를 복사·휴대 시 신분노출 우려로 조사관만이 알 수 있도록 내용을 요약해서 참조
- 관련자 조사 시 노트북 및 휴대용 프린터를 사용하되, 부득이 관련 기관 장비 사용 시 컴퓨터 사용내역 삭제, 자료 파쇄 등 보안에 유의

■ 신고사건 종결, 이첩·송부 시 유의사항

- 신고자, 피신고자에게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보 시 신고자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
 - ※ 공공기관이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첨부 자료에 신고자 실명을 기재하였고, 피신고기관 회신 문서에도 신고자 실명이 기재되어 신고자 신분이 노출된 사례가 있었음
- 신고자에게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보시 신고관련 문서가 동봉된 우편물을 신고자의 동의확인 후 거주지 등 신고자가 원하는 수신처로 발송 (사무실 등 신고자로 의심될 수 있는 업무 관련 장소 등으로 발송 금지)
- 신고사건 이첩·송부시 신고자의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
 -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부동의하는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관련 기관에 송부 및 이첩
 -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인적사항이 아니더라도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송부
- 관할이 아닌 신고는 해당 조사기관으로 이송하고 신고자에게 이송사실 등을 통지
-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 인적사항 기재 생략, 신원관리카드 열람제한 등 조치 후 이송 가능
 - ※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제10조(영상물 촬영), 제11조(증인 소환 및 신문の特례 등),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 준용

■ 신고사건 사후관리 단계

- 신고사건 종료 후에도 신고사건 기록물 등에 대한 열람 제한 등 철저한 관리 실시
- 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소속기관 등에서 불이익을 당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호과로 상담 안내
- 감사소송 관련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규정에 따라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은 블라인드 처리하고 제출

5 신고자 보호제도의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신고 사건 처리 중 필요시 신고자 보호제도를 안내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호과에 연락하여 보호 관련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유

신고자 보호제도 주요내용

◆ 신분보장등 조치

- 신고를 한 이유로 각종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불이익조치에 대한 신분보장등 조치 또는 보호조치(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사건 조사 후 신분보장등조치 또는 보호조치 결정을 하 수 있음
 - ※ 불이익조치의 예시 : 파면, 해임, 해고, 징계, 승진제한, 전보, 직무 재배치, 성과평가 등의 차별, 인가·허가 등의 취소, 물품계약 또는 용역 등

◆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노출한 자에 대하여 신분공개 경위를 확인하여 징계요구, 형사처벌 하는 제도
-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신고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신분공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

◆ 신변보호

- 신고등으로 인하여 신고자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거나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 일정기간 특정 시설에서의 보호
- ▶ 일정기간 신변 경호
- ▶ 참고인·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 ▶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 ▶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책임감면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을 징계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 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
- 신고자가 신고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원·수사기관에 안내하고 있음
- 공익신고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더라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파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으며 다만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III 신고자 보상

1 개요

- 부패 공익침해행위 신고 등으로 인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하거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는 제도
 - 각종 위험부담을 안고 공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용기있는 행동에 대해 보상(reward)
 - 부패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대한 국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

2 보상·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요건

- 권익위는 보상금 신청 등이 있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전원위원회에서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
 - (부패신고 보상금)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
 - ※ (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2항

[보상금 지급기준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별표)]

보상대상가액	지 급 기 준(한도: 30억원)	
	2015.10.19.까지 신고건 (한도 : 20억원)	2015.10.20.부터 신고건 (한도 : 30억원)
1억원 이하	20%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1억1천만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 2천 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3억 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3억 4천 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4억 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부패신고 포상금)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기관 추천을 받거나 위원회 직권으로 대상자 선정
 - ※ (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1항

- **(부패신고 구조금)** 부패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비용, 이사비용, 임금손실액 등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신고자는 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

※ (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3항('19.10.17. 이후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

- **(공익신고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및 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

※ (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보상금 지급기준('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

보상대상가액	지 급 기 준(한도: 30억원*)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공익신고 포상금)**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기관 추천을 받거나 위원회 직권으로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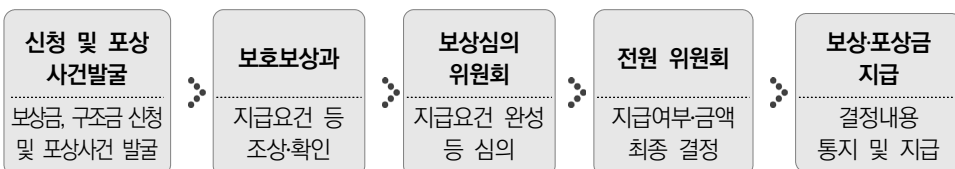
※ (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

- **(공익신고 구조금)** 공익신고 등으로 치료비용, 이사비용, 임금 손실액 등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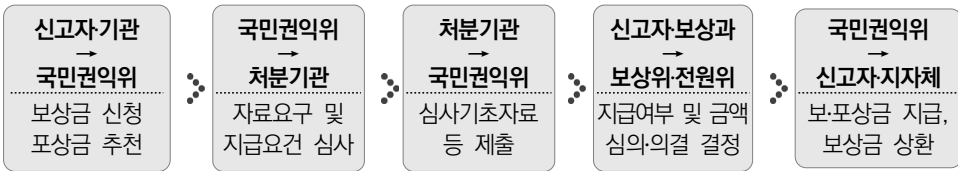
※ (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

3 업무처리 절차

■ 부패신고 보상·포상·구조금 업무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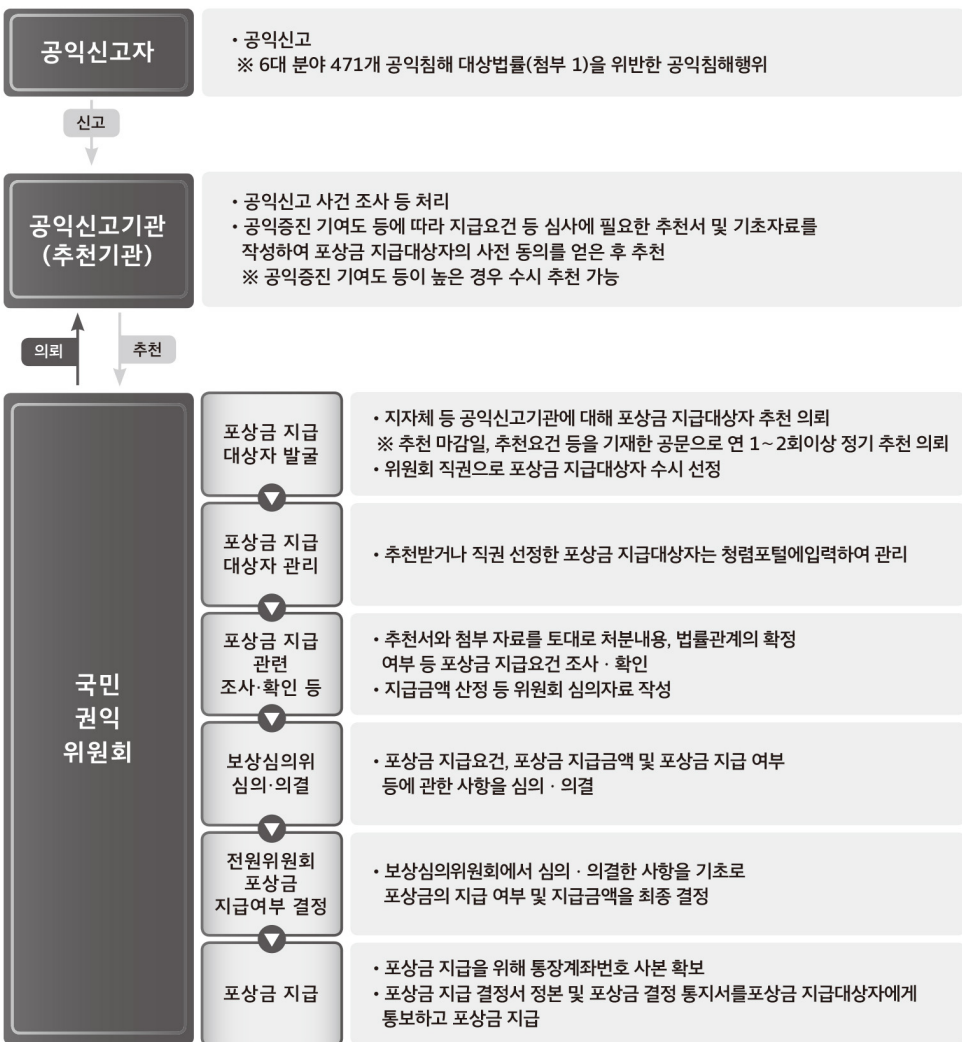


■ 공익신고 보상·포상·구조금 업무처리 절차



* 보상심의위원회 : 포상금·보상금·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서 위원장 포함 7명(당연직 2명, 위촉직 5명)으로 구성

●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 세부절차



4 >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추천

● 추천 근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의3제3항

제25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③ 위원회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 중에서 법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 추천 대상자

-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일(2011. 9. 30.) 이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
 -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라 한다)에서 송부, 이첩한 신고 건에 대한 공익신고자는 추천 제외(필요한 경우 권익위에서 직접 직권으로 선정)
-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
 - ① (사법처분)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 ② (행정처분)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③ (제도개선)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④ (금전적 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 참고사항

- 다음 표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는 필히 추천하여 주시고, 추후 해당 공익신고 사건 발생 시 수시 추천 요망

개별기준	유형
사법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의 선고를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행정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허가·인가·특허·면허·자격·승인·지정·검정·인증·확인·증명·등록·영업 등의 취소·철회·말소 처분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영업·업무·제조·호력·면허·자격 등을 정지하는 처분을 받은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자가 있는 경우
제도개선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리령·부령·조례 이상의 제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금전적 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천만원 초과와 과태료, 과징금, 벌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사회재난 예방 등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신고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침해를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익침해행위 적발에 기여 ○ 공익신고로 인해 고질적·구조적·관행적·반복적인 공익침해행위가 밝혀져 정책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 추천 시 유의사항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하려는 자에게 반드시 **사전 통보 및 동의를 얻은 후 추천**
 - * 당사자가 신분노출 등의 문제로 추천을 원하지 않는 경우 추천하지 말아 주시고, 추천 시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관련 안내사항(참고 2)을 안내
-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은 **추천서** 서식(첨부 2)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작성한 후 **신고서, 조사결과보고서, 처분통지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추천
- 다만, 증빙자료 중 신분증빙서류 및 통장 사본은 제출 불필요
 - * 신분증 등 신분증빙서류 및 통장사본이 필요하면 권익위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확인 및 요청
- 포상금 지급사유에 부합하는 사건인지,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지 등 기본적인 사항 확인
- 지침 제2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 추천 동기가 있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과 관련한 안내사항(참고)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람
- 포상금은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추천하였더라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5 > 부정청탁·금품등 수수신고 및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추천

- 포상금 지급 세부 절차 : 추천 근거, 추천 대상자 등만 다를 뿐,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 세부절차와 거의 동일

■ 부정청탁·금품등 수수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요령

- 추천 근거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제40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①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자 중에서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 추천 대상자

- 대상자 : 청탁금지법 시행일(2016. 9. 28.) 이후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라 한다)에서 접수하여 보낸 신고 및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자진신고는 제외
- 추천 대상 : 신고로 인하여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① 피신고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 다만, 2019. 10. 17. 이후 신고한 경우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는 포상금이 아닌 보상금 지급대상임.

②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③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 추천 시 유의사항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하려는 자에게 반드시 **사전 통보 및 동의를 얻은 후 추천**

* 당사자가 신분노출 등의 문제로 추천을 원하지 않는 경우 추천하지 말 것

-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은 **추천서** 서식(첨부 3)에 따라 작성한 후 **신고서, 조사결과보고서, 처분통지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추천**하되, 증빙자료 중 신분증명서류 및 통장 사본은 제출 불필요

* 신분증 등 신분증명서류 및 통장사본이 필요하면 권익위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확인 및 요청

- 포상금 지급사유에 부합하는 사건인지,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지 등 기본적인 사항 확인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하는 자가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또는 보상금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

*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와「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 제41조

- 추천 의뢰 공문에 명시된

● 추천 마감일 준수

* 다만, 추천 마감일 이후도 수시 추천 가능

- 추천 동의를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추천대상자 안내사항 (참고 3)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포상금은 의무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추천하였더라도 포상금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요령

●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 2019. 10. 17. 이후 각 기관에 신고한 부패신고자 중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적극 추천(첨부 4)

- 그 외 추천 대상 및 추천 시 유의사항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요령 준용

첨부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467개 대상 법률

□ 가나다 순

연번	법률명	분야	부처명
1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건강	소방청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경쟁	공정거래위원회
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안전	여성가족부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안전	여성가족부
5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	농림축산식품부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7	가축전염병 예방법	건강	농림축산식품부
8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안전	국토교통부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	보건복지부
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환경	국토교통부
11	개인정보 보호법	소비자의 이익	행정안전부
12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환경	해양수산부
13	건강검진기본법	건강	보건복지부
1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1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고용노동부
16	건설기계관리법	안전	국토교통부
17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	국토교통부
18	건설산업기본법	안전	국토교통부
19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20	건축물관리법	안전	국토교통부
2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국토교통부
22	건축법	안전	국토교통부
23	건축사법	안전	국토교통부
24	검역법	건강	보건복지부
2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문화체육관광부
26	결핵예방법	건강	보건복지부
27	경륜·경정법	공정경쟁	문화체육관광부
28	경비업법	안전	경찰청
2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에준하는공익	경찰청
30	계량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산업통상자원부
31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소비자의 이익	보건복지부
3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33	고용보험법	소비자의 이익	고용노동부

연번	법률명	분야	부처명
3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에준하는공익	고용노동부
35	골재채취법	환경	국토교통부
3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3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에준하는공익	기획재정부
3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건강	보건복지부
39	공공주택특별법	이에준하는공익	국토교통부
40	공동주택관리법	이에준하는공익	국토교통부
4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전	국토교통부
42	공연법	안전	문화체육관광부
4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	해양수산부
4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에준하는공익	행정안전부
45	공인중개사법	소비자의 이익	국토교통부
4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에준하는공익	금융위원회
47	공중위생관리법	건강	보건복지부
4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에준하는공익	행정안전부
49	공항시설법	안전	국토교통부
50	관광진흥법	소비자의 이익	문화체육관광부
51	광산안전법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5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53	교통안전법	안전	국토교통부
5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안전	국토교통부
55	국가기술자격법	소비자의 이익	고용노동부
56	국가보안법	이에준하는공익	법무부
5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안전	국토교통부
5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이에준하는공익	국방부
59	국민건강보험법	건강	보건복지부
60	국민건강증진법	건강	보건복지부
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에준하는공익	보건복지부
62	국민연금법	이에준하는공익	보건복지부
63	국민영양관리법	건강	보건복지부
64	국민체육진흥법	공정경쟁	문화체육관광부

연번	법률명	분야	부처명
6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산림청
66	국유재산법	이에준하는공익	기획재정부
67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공정경쟁	법무부
68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안전	해양수산부
69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안전	해양수산부
70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에준하는공익	법무부
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	국토교통부
7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건강	국방부
73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이에준하는공익	국방부
74	군사기밀보호법	이에준하는공익	국방부
7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이에준하는공익	국방부
76	군형법	이에준하는공익	국방부
77	궤도운송법	안전	국토교통부
78	귀속재산처리법	이에준하는공익	기획재정부
79	근로복지기본법	소비자의이익	고용노동부
8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이에준하는공익	고용노동부
8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에준하는공익	고용노동부
8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8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에준하는공익	금융위원회
8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에준하는공익	금융위원회
85	금융지주회사법	소비자의이익	금융위원회
8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에준하는공익	금융위원회
8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안전	행정안전부
88	기계설비법	안전	국토교통부
89	기초연금법	이에준하는공익	보건복지부
9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9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안전	해양수산부
9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에준하는공익	고용노동부
93	내수면어업법	환경	해양수산부
9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에준하는공익	보건복지부
95	노인복지법	건강	보건복지부

연번	법률명	분야	부처명
9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건강	보건복지부
97	노후준비 지원법	이에준하는공익	보건복지부
9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공정경쟁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9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건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10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101	농약관리법	건강	농림축산식품부
102	농어촌도로 정비법	안전	행정안전부
103	농어촌정비법	안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104	농업기계화 촉진법	안전	농림축산식품부
105	농업생명자원의보존·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소비자 이익	농림축산식품부
106	농지법	환경	농림축산식품부
10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	소방청
108	담배사업법	건강	기획재정부
10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정경쟁	산업통상자원부
1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경쟁	공정거래위원회
11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	환경부
112	대기환경보전법	환경	환경부
11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에준하는공익	공정거래위원회
1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이익	금융위원회
115	대외무역법	소비자의이익	산업통상자원부
11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소비자 이익	국토교통부
117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환경	국토교통부
118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안전	국토교통부
119	도로교통법	안전	경찰청
120	도로법	안전	국토교통부
121	도선법	안전	해양수산부
1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에준하는공익	국토교통부

연번	법률명	분야	부처명
123	도시가스사업법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12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환경	국토교통부
12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소비자 이익	국토교통부
12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안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127	도시철도법	안전	국토교통부
128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환경	환경부
1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이에준하는공익	국가보훈처
1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경쟁	공정거래위원회
131	동물보호법	안전	농림축산식품부
13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안전	경찰청/대검찰청/ 법무부
13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134	말산업 육성법	소비자의이익	농림축산식품부
135	먹는물관리법	건강	환경부
136	모자보건법	건강	보건복지부
13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이익	산림청
13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해양수산부
13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소비자의이익	문화체육관광부
140	문화재보호법	환경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14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이익	기획재정부
14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에준하는공익	국토교통부
143	물류정책기본법	소비자의이익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14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145	물환경보전법	환경	환경부
14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환경	환경부
147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이에준하는공익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14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비자의이익	국토교통부
149	민방위기본법	이에준하는공익	행정안전부
15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에준하는공익	보건복지부
15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이익	공정거래위원회
15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환경	산업통상자원부
15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이익	방송통신위원회
154	방송법	소비자의이익	과기부, 방통위
155	방위사업법	이에준하는공익	국방부
15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이에준하는공익	국방부
15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산림청
15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에준하는공익	법무부
159	병역법	이에준하는공익	국방부/병무청
160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강	보건복지부

연번	법률명	분야	부처명
16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강	법무부
16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건강	보건복지부
163	보안관찰법	안전	법무부
16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에준하는공익	기획재정부
16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안전	행정안전부
16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소비자의이익	금융위원회
167	보험업법	소비자의이익	금융위원회
168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안전	법무부
169	보호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에준하는공익	국가보훈처
17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소비자의이익	기획재정부
17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에준하는공익	국토교통부
17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경쟁	특허청
173	부정수표 단속법	이에준하는공익	법무부
17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이에준하는공익	통일부
175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이익	산업통상자원부
176	비료관리법	건강	농림축산식품부
17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이에준하는공익	행정안전부
178	비상상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관한 법률	이에준하는공익	해양수산부
179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0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	경찰청
181	사료관리법	건강	농림축산식품부
182	사방사업법	환경	산림청
18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소비자 이익	경찰청
18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에준하는공익	보건복지부
18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소비자의이익	보건복지부
186	사회복지사업법	안전	보건복지부
187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이익	보건복지부
18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환경	산림청
189	산림보호법	환경	산림청
19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산림청
19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경쟁	산업통상자원부

연번	법률명	분야	부처명
19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소비자의이익	산업통상자원부
193	산업디자인진흥법	소비자의이익	산업통상자원부
194	산업안전보건법	안전	고용노동부
19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비자의이익	고용노동부
196	산업표준화법	소비자의이익	산업통상자원부
197	산지관리법	환경	산림청
198	상표법	소비자의이익	특허청
199	상호저축은행법	소비자의이익	금융위원회
200	새마을금고법	소비자의이익	행정안전부
20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건강	보건복지부
202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20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안전	원자력안전위원회
20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	환경부
20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이에준하는공익	금융위원회
206	석면안전관리법	안전	환경부
20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소비자의이익	산업통상자원부
208	석탄산업법	소비자의 이익	산업통상자원부
209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안전	법무부
210	선박안전법	안전	해양수산부
21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안전	해양수산부
212	선박직원법	안전	해양수산부
213	선박평형수 관리법	환경	해양수산부
214	선원법	안전	해양수산부
21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안전	여성가족부
216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안전	법무부
21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안전	여성가족부
2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안전	법무부
219	소금산업 진흥법	건강	해양수산부
22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환경	산림청
221	소방기본법	안전	소방청
222	소방시설공사업법	안전	소방청
223	소방장비관리법	안전	소방청
224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의이익	공정거래위원회

연번	법률명	분야	부처명
225	소음·진동관리법	환경	환경부
226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소비자의이익	산업통상자원부
227	소하천정비법	환경	행정안전부
228	송유관 안전관리법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229	수도법	환경	환경부
230	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환경	산림청
23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이익	해양수산부
23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건강	해양수산부
233	수산업법	환경	해양수산부
234	수산자원관리법	환경	해양수산부
235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소비자의이익	해양수산부
236	수상레저안전법	안전	해양경찰청
237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안전	해양경찰청
23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239	수자원의조사·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	안전	환경부
240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안전	해양수산부
241	습지보전법	환경	환경부/해양수산부
242	승강기 안전관리법	안전	행정안전부
24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	국토교통부
244	식물방역법	건강	농림축산식품부
245	식물신품종 보호법	건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246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247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248	식품산업진흥법	건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249	식품안전기본법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250	식품위생법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25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소비자의이익	산업통상자원부
25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이익	금융위원회
253	신용협동조합법	소비자의이익	금융위원회
254	실내공기질관리법	환경	환경부
255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이익	여성가족부
256	아동복지법	안전	보건복지부
257	아동수당법	이에준하는공익	보건복지부
25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안전	법무부
259	아이돌봄 지원법	소비자의이익	여성가족부
260	악취방지법	환경	환경부

연번	법률명	분야	부처명
26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26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263	약사법	건강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264	양곡관리법	건강	농림축산식품부
26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26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안전	행정안전부
26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268	어선법	안전	해양수산부
269	어장관리법	환경	해양수산부
270	어촌·어항법	환경	해양수산부
271	에너지법	소비자의이익	산업통상자원부
27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27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소비자의이익	국토교통부
274	여신전문금융업법	소비자의이익	금융위원회
27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안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76	연안관리법	환경	해양수산부
27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안전	해양경찰청
27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279	영유아보육법	소비자의이익	보건복지부
280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이에준하는공익	외교부
28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이익	문화체육관광부
282	예금자보호법	소비자의이익	금융위원회
283	예비군법	이에준하는공익	국방부
284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환경	산업통상자원부
28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환경	행정안전부
28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환경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환경부
287	외국환거래법	소비자의이익	기획재정부
288	외식산업 진흥법	소비자의이익	농림축산식품부
289	우편법	소비자의이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9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안전	원자력안전위원회
291	원자력안전법	안전	원자력안전위원회
292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연번	법률명	분야	부처명
293	위생용품 관리법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29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이익	방송통신위원회
295	위험물안전관리법	안전	소방청
296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이익	금융위원회
29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안전	행정안전부
298	유아교육법	소비자의이익	교육부
299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건강	산업통상자원부
300	유통산업발전법	공정한경쟁	산업통상자원부
301	은행법	소비자의이익	금융위원회
302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이익	문화체육관광부
30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건강	보건복지부
304	의료급여법	건강	보건복지부
305	의료기기법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30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건강	보건복지부
307	의료법	건강	보건복지부
30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이익	보건복지부
30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에준하는공익	보건복지부
31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정경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31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환경	환경부
312	인삼산업법	건강	농림축산식품부
313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건강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31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소비자의이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315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소비자의 이익	금융위원회
316	임금채권보장법	이에준하는공익	고용노동부
31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건강	산림청
318	입양특례법	소비자의이익	보건복지부
319	자격기본법	소비자의이익	교육부/고용노동부
320	자동차관리법	안전	국토교통부
3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정경쟁	금융위원회
322	자연공원법	환경	환경부
323	자연재해대책법	안전	행정안전부

연번	법률명	분야	부처명
324	자연환경보전법	환경	환경부
325	자원순환기본법	환경	환경부
32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3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에준하는공익	산업통상자원부
328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환경	환경부
32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건강	보건복지부
330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이에준하는공익	보건복지부
33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이에준하는공익	보건복지부
33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에준하는공익	교육부
333	장애인·고령자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에준하는공익	국토교통부
33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이익	보건복지부
335	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에준하는공익	보건복지부
33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에준하는공익	고용노동부
33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이에준하는공익	중소벤처기업부
338	장애인복지법	소비자의이익	보건복지부
339	장애인연금법	이에준하는공익	보건복지부
34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에준하는공익	보건복지부
34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에준하는공익	보건복지부
3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안전	행정안전부
343	재난적외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이에준하는공익	보건복지부
344	재일교포 복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이에준하는공익	경찰청
345	재해구호법	안전	행정안전부
346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안전	행정안전부
347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안전	행정안전부
348	저작권법	공정한경쟁	문화체육관광부
34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환경	국무조정실
35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351	전기공사업법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352	전기사업법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35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35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소비자의이익	금융위원회
355	전기통신기본법	소비자의이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번	법률명	분야	부처명
356	전기통신사업법	소비자의이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357	전력기술관리법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358	전자금융거래법	소비자의이익	금융위원회
35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소비자의이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36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이익	공정거래위원회
361	전자서명법	소비자의이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62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공정경쟁	농림축산식품부
36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건강	농림축산식품부
364	전파법	이에준하는공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365	정보통신공사업법	안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6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소비자의이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이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36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건강	보건복지부
369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건강	보건복지부
37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환경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371	제품안전기본법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372	종자산업법	건강	농림축산식품부
373	주거급여법	이에준하는공익	국토교통부
374	주민투표법	공정경쟁	행정안전부
37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이익	금융위원회
376	주차장법	안전	국토교통부
377	주택법	안전	국토교통부
378	중소기업은행법	소비자의이익	금융위원회
37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공정경쟁	중소벤처기업부
38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이에준하는공익	중소벤처기업부
381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공정경쟁	보건복지부
382	지뢰 등 특정 재래식 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안전	국방부
38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에준하는공익	국방부
384	지방세기본법	이에준하는공익	행정안전부
385	지방재정법	이에준하는공익	행정안전부

연번	법률명	분야	부처명
386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이익	농림축산식품부
387	지역보건법	건강	보건복지부
388	지진·지진해일·화산의관측및경보에관한법률	안전	기상청
389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안전	행정안전부
390	지하수법	환경	국토교통부
39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	국토교통부
392	직업안정법	소비자의이익	고용노동부
39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건강	고용노동부
394	집단에너지사업법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39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안전	경찰청
39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에준하는공익	고용노동부
397	철도사업법	소비자의이익	국토교통부
398	철도안전법	안전	국토교통부
39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	국토교통부
400	청소년 기본법	이에준하는공익	여성가족부
401	청소년 보호법	건강	여성가족부
40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이에준하는공익	여성가족부
403	청소년활동 진흥법	안전	여성가족부
404	청원경찰법	안전	경찰청
405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
40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안전	문화체육관광부
40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	소방청
408	초지법	환경	농림축산식품부
40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	경찰청
410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411	축산법	소비자의이익	농림축산식품부
412	출입국관리법	이에준하는공익	법무부
413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소비자의이익	문화체육관광부
41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안전	법무부
41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건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공정경쟁	국토교통부
417	토양환경보전법	환경	환경부
418	통신비밀보호법	소비자의이익	법무부
41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이에준하는공익	국방부

연번	법률명	분야	부처명
42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안전	법무부
421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안전	법무부
422	폐기물관리법	환경	환경부
423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42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이익	공정거래위원회
425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건강	경찰청
4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경쟁	공정거래위원회
427	하수도법	환경	환경부
428	하천법	환경	국토교통부
429	학교급식법	건강	교육부
430	학교보건법	건강	교육부
4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안전	교육부
432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이익	교육부
43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434	한국마사회법	공정경쟁	농림축산식품부
435	한부모가족지원법	이에준하는공익	여성가족부
43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이익	공정거래위원회
437	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	안전	국토교통부
438	항공보안법	안전	국토교통부
439	항공사업법	공정경쟁	국토교통부
440	항공안전법	안전	국토교통부
441	항로표지법	안전	해양수산부
442	항만법	안전	해양수산부
443	항만운송사업법	소비자의이익	해양수산부
444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	해양수산부
445	해사안전법	안전	해양수산부
446	해양경비법	안전	해양경찰청
447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안전	해양수산부
44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해양수산부
449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환경	해양수산부
45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해양수산부
451	해양환경관리법	환경	해양수산부
452	해운법	소비자의이익	해양수산부
453	혈액관리법	건강	보건복지부
45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건강	보건복지부

연번	법률명	분야	부처명
45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소비자의이익	국토교통부
456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안전	경찰청
457	화장품법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45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	소방청
459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이에준하는공익	산업통상자원부
460	화학물질관리법	안전	환경부
46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462	환경보건법	환경	환경부
46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464	환경영향평가법	환경	환경부
46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466	환자안전법	건강	보건복지부
46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건강	보건복지부
468	초·중등교육법	소비자의이익	교육부
469	고등교육법	소비자의이익	교육부
470	사립학교법	소비자의이익	교육부
471	근로기준법	안전	고용노동부

첨부2

공익신고자 포상금 추천서 양식

■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25.>

(앞쪽)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추천일자	접수번호	처리기간	90일
① 추천기관	추천기관명 소관부서	(전화번호)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속		
	직업(직위)		
	<input type="checkbox"/> 내부 공익신고자		<input type="checkbox"/> 외부 공익신고자
	<input type="checkbox"/>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③ 추천사유			
④ 공익신고 조사결과	신고기관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고내용		
	조사·수사기관	결과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없음	
	수령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금액 :) <input type="checkbox"/> 없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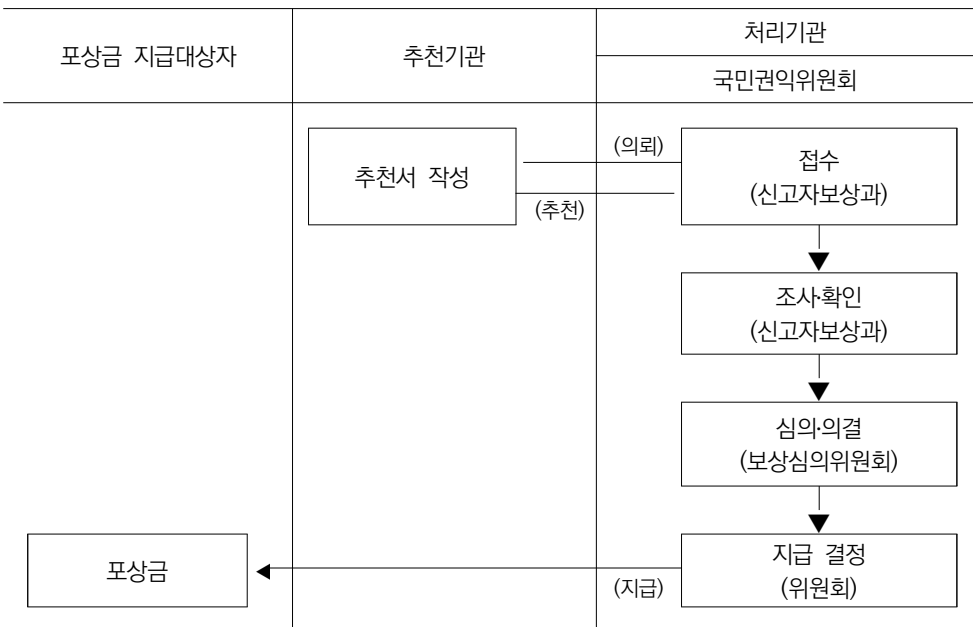
(뒤쪽)

1. 주민등록증 등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자료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작성요령

1. ①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기관의 기관명, 소관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2. ② 란에는 추천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및 소속과 직업을 기재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인지 외부공익신고자인지 해당되는 항목의 []에 ✓를 표시합니다. 또한, 제22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구하였음을 []에 ✓를 표시합니다.
3. ③ 란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하는 사유를 6하 원칙에 따라 간략히 기재합니다.
4. ④ 란에는 신청인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기관명, 공익신고일자과 신고내용의 요지, 공익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과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처리결과와 요지를 기재합니다.
5. ⑤ 란에는 신청인이 동일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 상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항목의 []에 ✓를 표시합니다.
6. ⑥ 란에는 추천기관의 소관 부서장의 직위와 이름을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합니다. 다만, 동 추천서를 추천기관의 관인이 날인된 공문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이 추천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참고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관련 안내사항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관련 안내사항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6. 1. 25.부터 신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포상금은 보상금 지급 제도와 달리 신고자등의 신청이 아니라 포상금 지급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신고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직권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개인사정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천 동의 여부 확인 시 명확하게 의사를 표명하시어 본인 의사에 반하는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상금은 추천을 받는다고 하여 모두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며,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확인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다르게 나타나거나 불복구제절차의 진행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지침 제23조)
 - 포상금 지급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지침 제25조)
 - 포상금 지급 예산이 부족한 경우(지침 제48조제2항)
 - 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비해 우선 순위*가 낮은 경우(지침 별표)
- * 공익증진 기여도, 포상금 산정 액수, 내부 공익신고자 여부 등
- 보상심의위원회가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정도나 그 공적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지침 별표)
- 포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으로 지급 여부가 최종 확정되며,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서正本과 함께 포상금 지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첨부3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추천서 양식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① 추천기관	추천기관명			
	소관부서	(전화번호)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소 속			
	직업(직위)			
	[] 내부 신고자		[] 외부 신고자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③ 추천사유				
④ 조사결과	신고기관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고내용			
	조사수사기관		결과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 있음 (기관명 :) [] 없음		
	수령여부	[] 있음 (금액 :) [] 없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Part
4

신고·조사
및 보호보상

참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추천대상자 안내사항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추천대상자 안내사항

-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포상금은 2015. 3. 27.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제도로써 2016. 9. 28. 이후 신고자에게 적용됩니다.
- 포상금은 보상금 지급 제도와 달리 신고자등의 신청이 아니라 포상금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 조사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직권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개인사정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천 동의 여부 확인 시 명확하게 의사를 표명하시어 본인 의사에 반하는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상금은 추천을 받는다고 하여 모두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며,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확인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다르게 나타난 경우
 - 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비해 그 공적이 경미한 경우
- 포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으로 지급 여부가 최종 확정되며,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과 함께 포상금 지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첨부4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금 추천서 양식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① 추천기관	추천기관명			
	소관부서	(전화번호)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속			
	직업(직위)			
	<input type="checkbox"/> 내부 신고자		<input type="checkbox"/> 외부 신고자	
	<input type="checkbox"/>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③ 추천사유				
④ 조사결과	신고기관		신고일자	20 년 월 일
	신고내용			
	조사수사기관		결과통지일자	20 년 월 일
	통지내용			
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	청구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기관명 :) <input type="checkbox"/> 없음		
	수령여부	<input type="checkbox"/> 있음 (금액 :) <input type="checkbox"/> 없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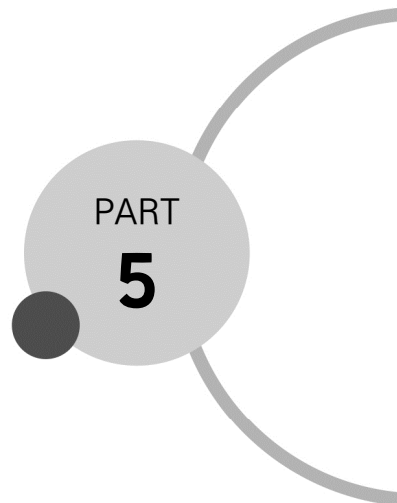
20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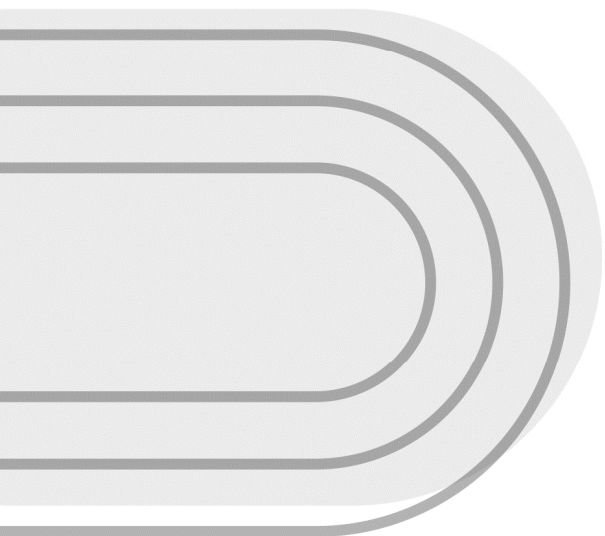
성명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I 부패영향평가 개요

1 개요

■ 의의

-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는 조례·규칙의 규정상 과도한 재량, 규정의 충돌·흠결 등으로 인하여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사전에 개선·정비하여 부패를 예방하는 제도

■ 평가 대상

- 제·개정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 자체 평가 :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
 -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 관계기관(부서)간 이견이 있거나 민감한 사안 등일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
- 현행 자치법규
 - 지방자치단체 자체 평가 : 시행 중인 조례 및 규칙
 -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대상 조례 및 규칙을 선정하여 평가

■ 평가 제외대상

-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체를 평가 대상으로 하되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이 없는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사항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 ※ 필요시 훈령, 예규 등 행정규칙도 평가 범위에 포함

평가 제외 규정 예시

- ◇ 기관의 설치, 행정관리, 행정지원,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기술적인 사항의 조례 및 규칙
- 예) 소속기관·산하기관 직제, 당직·비상근무, 권한대행, 직무대리, 회의규칙, 청사관리, 증명발급, 보안, 기념일 관련 규정 등
- ※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평가담당부서가 직권으로 평가 가능

2 평가방법

- 평가부서 : 평가담당부서(市 감사관)
- 평가시기 : 입안주무부서에서 수립한 자치법규 시안에 대한 관계기관·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단계에서 평가

※ 처리기한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로부터 입법예고(20일 이상) 종료일까지 평가결과 통보 완료

- 평가범위 : 제정(안)(전체), 개정(안)(부분) 중심으로 분석·검토
- 평가방법 : 11개의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와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평가
- 평가절차

1) 부패영향평가 요청

- 입안주무부서는 제·개정 자치법규(안) 및 기초자료 작성
- 입안주무부서는 관계 기관·부서 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공문으로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에 기초자료 및 제·개정 관련 설명자료 등을 붙여 평가담당부서에 평가 의뢰

2) 자치법규(안) 및 기초자료 접수

- 평가담당자는 접수된 자치법규(안)과 기초자료를 검토하여 자료 누락 여부, 자료작성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자료가 미비한 경우 입안주무부서에 보완 및 추가제출 요구

3) 자치법규(안)·기초자료 검토 및 평가 실시

4) 평가결과 조치

- 검토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담당부서는 평가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자치법규 입안주무부서에 개선의견을 통보하고 개선의견이 없을 경우 원안동의 통보
- 다만, 개선의견에 대해 부서간 이견이 있는 등 위원회의 자문 및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 협조 및 지원 실시(영 제30조 제7항 및 제8항)

3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 평가목록

평가영역	평가항목
준수	준수부담의 합리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특혜발생 가능성
집행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위탁·대행 투명성·책임성
	재정누수 가능성
행정절차	접근성 용이성
	공개성
	예측가능성
부패통제	이해충돌가능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준수

1) 준수부담의 합리성

검토항목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각종 부담·희생 등을 수반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적용 대상 및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에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부담 부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input type="checkbox"/> 준수부담의 범위와 정도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수준인가?	
<input type="checkbox"/> 일부에 국한된 문제해결을 위해 다수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상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input type="checkbox"/> 동일한 의무위반에 대해 과태료, 벌금 등 이중부과로 인한 중복부담은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준수부담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완화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결할 수는 없는가?	

2) 제재규정의 적정성

검토항목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유사 법령 및 제재대상 행위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제재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input type="checkbox"/>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 또는 피해규모가 다른 방법(예 : 민사 또는 사적자치)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input type="checkbox"/> 다른 법령의 유사한 사례,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해수준과 비교해 볼 때 제재수준이 강하거나 약한 경우 그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법령 위반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가?	
<input type="checkbox"/> 제재수준이 미약한 경우 부패행위 억제 효과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가?	
<input type="checkbox"/> 제재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제재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input type="checkbox"/> 부패 등 위반행위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당해 제재내용 이외에 다른 효과적인 제재방법은 없는가?	

3) 특혜발생 가능성

검토항목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법령 등이나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누군가에게 어떤 혜택이나 이익(법률상·사실상의 이익 포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수익을 부여하는 요건·대상·절차·목적 등이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혜택이나 이익 수혜대상이 여타 다른 법령과 비교·검토시 특정 계층이나 기업·단체 등에 한정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혜택이나 이익 등의 부여내용·정도가 타 법령 등의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한 것은 아닌가?	
<input type="checkbox"/> 부패유발 가능성이 있는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은가?	

■ 집행

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검토항목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재량권을 누가 행사하는지가 당해 법령 또는 하위규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재량권을 행사하는 요건 또는 재량판단의 기준, 행사절차 등이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법령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할 주요 재량기준 또는 행사절차들이 훈령·예규·고시·지침 등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input type="checkbox"/> 법령 등의 적용대상집단·이해관계자는 행정실무자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재량기준(업무처리기준)을 이해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구체적 재량기준 또는 세부 고려사항으로 제시된 사항들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세부기준 없이도 직접 적용 가능한가?	
<input type="checkbox"/> 법률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나 고려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에 위임하는 경우 그 위임은 포괄적이지 않고 구체적·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타 법령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는 않은가?	
<input type="checkbox"/> 법적 근거 없이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새로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않은가?	
<input type="checkbox"/> 법령에 의하여 하위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여야 할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위임하고 있지는 않은가?	
<input type="checkbox"/>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재량권의 남용 또는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은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재량규정의 불명확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치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2)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검토항목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법적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대상사무의 범위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주 내 (재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의 규정여부 등)에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대행의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하는 등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의 대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공정한가?	
<input type="checkbox"/> 수탁·대행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 있는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타당하고 내용이 적절한가?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법정 위탁·대행의 경우가 아닌 지정 등을 통해 수탁·대행자가 선정되거나 취소된 경우 이를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 기간 및 연장 가능 횟수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대행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수탁·대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 자료제출·보고 의무 및 감독기관의 정기점검 등	
<input type="checkbox"/> 수탁·대행 기관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시 위탁·대행 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수탁·대행 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대행의 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재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대행 취소 등에 대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취소와 정지사유 구분, 임의취소와 당연취소 구분 여부 등)	
<input type="checkbox"/> 업무성격상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수탁·대행기관의 위법 행위시 위탁·대행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한 보조금 등에 대한 회수규정이 있는가?(제재부가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검토)	

3) 재정누수 가능성

검토항목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및 요건은 구체적인가?	
<input type="checkbox"/> 지원방법(계약방식 등)은 지원의 성격에 부합하는가?	
<input type="checkbox"/> 타 법령에 유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재정지원이 필요한가?	
<input type="checkbox"/> 지원수준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	
<input type="checkbox"/> 지원자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 설정 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세부기준은 공개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별할 수 있는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지원된 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출관련 증거자료의 보관, 사업결과 제출의무 등은 규정 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을 막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지원처분 취소절차 등)?	
<input type="checkbox"/> 위법한 목적의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환수나 일정기간 지원제한 조치)?	
<input type="checkbox"/> 징벌적인 추가 환수조치는 마련되어 있는가(지원금의 ○배 추가 환수 등)?	

■ 행정절차

1) 접근의 용이성

검토항목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국민 참여를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별도의 참여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가?	
<input type="checkbox"/>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행정의 참여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별도의 참여장치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참여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2) 공개성

검토항목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평가대상 업무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 또는 민원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정보공개 대상이 이해관계자들 중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은가? - 특정한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정보공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별도의 정보공개 제도가 없거나 당해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향후 정보공개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가?	

3) 예측가능성

검토항목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이 무엇인지, 민원처리에 소요되는 기간과 처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에 대해 당해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평가대상 법령 및 행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의 표현이 전반적으로 일반 국민의 수준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어려운 표현이나 전문용어의 사용은 일반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민원신청시 필요한 요건·절차·기한 등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지가 분명한가?	
<input type="checkbox"/> 조건부 인·허가, 사전 인·허가 등 내인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내인가 가능여부, 신청요건, 신청절차,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관계기관의 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이 누구인지, 협의·승인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민원인이 업무처리절차 또는 업무처리기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설명이나 도움 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행정절차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가?	

■ 부패통제

1) 이해충돌가능성

검토항목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업무수행에 있어 부당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적 이해관계의 가능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위원 등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임기, 연임제한 등을 규정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오는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해당 사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척 제도의 규정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해당사자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위촉된 위원 등이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이해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업무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겸직금지나 영리 행위금지 규정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개별사건의 처리에 있어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하여 심의 등에 공정성을 해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해촉 규정을 두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시 뇌물죄 등 형벌조항을 적용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검토항목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평가대상 법령상 업무 및 유사업무와 관련하여 부패사례가 없었는가?	
<input type="checkbox"/>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두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부패방지장치가 있다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관련 규정 및 실제 운영사례 검토)	
<input type="checkbox"/> 부패방지장치가 있음에도 부패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input type="checkbox"/> 별도의 부패방지장치가 없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부패방지를 위한 별도의 내부통제장치 도입이 필요한가?	

3)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검토항목	검토결과
<input type="checkbox"/>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공무원의 부작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령상 근거 부재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공무원의 직무태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합리한 법령상 근거 규정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느장 대응하는 행태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과 소속 기관의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태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공무원의 행위 등에 있어서 소극적인 해석을 유도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을 저해하는 규정이 있는가?	

4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1) 인·허가, 승인·지정 등 업무¹⁾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기준 · 절차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처리절차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등에 대한 처리권자의 재량범위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등에 대한 공무원의 재량권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처리기간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등의 처리기간은 합리적인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 장기의 처리기간으로 인한 급행료지급, 음성적 청탁 등 부패발생 가능성 검토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등의 처리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예측가능성)	
신청서류 등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신청서류, 준비사항, 대기시간 등 민원인의 준수부담은 사회통념이나 유사업무와 비교할 때 합리적 수준인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input type="checkbox"/>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청서류, 준비사항, 처리기준 및 처리절차 등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수준인가? (예측가능성)	
이의제기	<input type="checkbox"/> 위법·부당한 인·허가 및 그 거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의 용이성)	
정보공개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 (공개성) - 인·허가 처리기준, 처리과정, 처리결과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관리 · 감독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시험·검사 이후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후 관리·감독 규정을 두고 있는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이후 각종 지시, 시정명령, 보고 등 사후 관리·감독의 요건·기준 및 종류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제재	<input type="checkbox"/>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행정제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 취소, 정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input type="checkbox"/> 민원인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준은 유사업무에 규정된 제재수준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위반행위별 또는 행정제재 유형별로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인·허가 의제	<input type="checkbox"/> 인·허가 등의 의제 조항을 규정함에 있어 관계기관 협의·이해관계인 의견청취·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충분히 규정하지 않는 등 인·허가 의제 효과의 인정과정에서 특혜 우려가 있는가? (특혜발생 가능성)	

1)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업무로 인·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의 업무를 포함

2) 부과·징수 업무2)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input type="checkbox"/> 부과·징수의 법적근거, 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input type="checkbox"/> 부과·징수 금액의 산출기준, 산출방식 및 산출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input type="checkbox"/> 법령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행정처분 부과(예,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등)의 경우 제재 수준이 유사사례와 비교하여 적정한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부과·징수 절차상에 인정되는 공무원의 재량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input type="checkbox"/>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의 사유, 기간 및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있는가? (예측가능성)	
가중 · 감면	<input type="checkbox"/> 행정처분 등의 가중·감면 시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구체적이고 처분 기준일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input type="checkbox"/> 공무원이 가중·감면 기준, 비율, 기간 등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특혜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가? (특혜발생가능성) - 가중·감면의 적용방식(비율산정, 적용순서 등), 시행시기, 소급적용 여부가 적정한지 검토	
이의 제기	<input type="checkbox"/> 부과·징수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의 용이성)	
	<input type="checkbox"/>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하고자 할 때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준수사항 등 이의제기 절차와 방법은 까다롭지 않고 용이한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환급	<input type="checkbox"/> 과오납 및 환급금 지급·신청과 그에 대한 지급대상(과오납금의 양도)·처리기간·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측가능성)	
	<input type="checkbox"/> 과다징수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 및 산정 기산일 등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측가능성)	
체납 처분	<input type="checkbox"/> 압류, 공매, 환가처분 등 체납처분 과정에서 공무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대상선정, 조사방식, 절차 등의 규정이 구체적인지 검토	

2) 인·허가 등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등 각종 행정처분 관련 업무

* 과태료의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부과·징수 절차 및 불복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개별법에서는 부과요건과 부과권자 등에 관한 규정만 두면 됨

3) 보조·지원 업무³⁾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 기준	<input type="checkbox"/> 보조·지원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정누수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보조·지원의 목적, 대상, 사용한계(목적외 사용금지)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 되어 있는가? (재정누수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보조·지원 명목으로 보조·지원 대상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부관을 부과할 여지는 없는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대상 · 선정	<input type="checkbox"/>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 결정절차, 선정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는가? (재정누수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보조·지원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수단은 마련되어 있고, 위 평가의 공정성 확보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재정누수 가능성)	
지원 ·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보조·지원은 다른 지원과 비교하여 적절한가? (재정누수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타 법령에 유사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지원이 필요한가? (재정누수 가능성)	
이의 · 제기	<input type="checkbox"/> 위법·부당한 보조·지원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의 용이성)	
정보 · 공개	<input type="checkbox"/> 보조·지원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보조·지원의 대상, 규모, 절차, 결과 및 성과평가 등을 공개하는 규정이 있는가? (공개성)	
관리 · · 감독	<input type="checkbox"/> 보조·지원 경비가 행정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도록 적절한 관리·감독·정산·성과평가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가? (재정누수 가능성)	
제재	<input type="checkbox"/> 보조·지원 경비의 불법·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재정누수 가능성) - 처벌규정(벌칙규정),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지원금 환수, 손해자격 배제	

※ 재정지원은 그 형태가 다양하고 근거법을 또한 상이하므로 재정지원 양태에 따라 일반법 등 관계법령⁴⁾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중복규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

4) 보조·출자·출연·양자, 국·공유재산의 사용·대부, 국유재산법상의 특례 등 각종 재정지원 업무

4) 위탁·대행 업무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 기준·요건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재량권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 대상사무의 범위와 그 한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input type="checkbox"/> 상위 법령의 위임에 의해 위탁·대행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위탁·대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위탁	<input type="checkbox"/> 재위탁의 경우 원위탁자의 승인절차가 규정되어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재정 지원	<input type="checkbox"/> 수탁·대행업자에 제공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사회적 통념이나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가? (재정누수 가능성)	
이의 제기	<input type="checkbox"/> 위법·부당한 위탁·대행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공개하고 있는가? (공개성) - 위탁·대행 대상업무, 대상기관, 시행절차 및 운영성과 등 주요정보의 공개 여부 확인	
관리 · 감독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의 행정목적이 달성되도록 대상기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한 절차적 수단을 규정하고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자료제출·보고 의무, 조사·감독 권한, 시정명령권	
	<input type="checkbox"/> 수탁·대행 업무와 관련한 각종 수수료 등에 대한 가격 결정 시 감독기관의 협의 또는 승인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제재	<input type="checkbox"/> 수탁·대행 기관 또는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대비해 충분한 제재수단이 구비되어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 공무원 의제 등 처벌규정(벌칙규정), 지정취소·업무정지·지원금 회수 등 행정처분, 계약해지	
기타	<input type="checkbox"/> 위탁·대행으로 대상사무의 공익·공정성이 현저히 저하될 우려는 없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input type="checkbox"/> 수탁·대행업자에게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이상으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input type="checkbox"/> 계속적·형식적·독점적인 위탁·대행의 반복으로 부패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가?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5) 행정조사 업무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input type="checkbox"/> 조사권 행사의 법적 근거, 조사요건, 조사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input type="checkbox"/>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 방지를 위한 구체적 선정기준 존재여부	
	<input type="checkbox"/> 조사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측가능성) - 조사대상범위, 조사기간, 기간연장시 사유설명의무 등의 규정 확인	
	<input type="checkbox"/> 조사대상자에게 부과되는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합리적 수준인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이의 제기	<input type="checkbox"/> 위법·부당한 조사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input type="checkbox"/> 조사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의 공개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공개성) - 조사대상·내용·기간 및 결과, 처분내용 등 주요 정보의 공개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무단·임의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실시 전 사전통보 규정을 두고 있는가? (공개성) - 사전통보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예외사유가 타당한가	
제재	<input type="checkbox"/>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을 차단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의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적절한 수준인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기타	<input type="checkbox"/> 조사결과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축소 등의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 대한 처리요구,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input type="checkbox"/>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조사정보 사전유출, 대상자 선정 제외, 조사결과 은폐·묵인, 임의감면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외부참여 합동조사,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감찰기능 등	

6) 단속·점검 업무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근거 · 기준 · 절차	<input type="checkbox"/> 단속·점검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 시행요건, 시행주체 및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input type="checkbox"/> 단속·점검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재량이 유사 법령·제도와 비교해 볼 때 과도하지 않고 적절한 수준인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input type="checkbox"/> 단속·점검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자의적인 대상선정 및 제외·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 존재여부 검토	
	<input type="checkbox"/> 단속·점검의 기간·방법·절차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예측가능성) - 무단·임의방문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실시전 사전통보 - 대상범위, 기간, 연장사유 등에 대한 명시 및 설명의무 확인	
	<input type="checkbox"/> 단속·점검의 실시대상 업체에게 부과된 준수부담은 지키기 적당한 합리적 수준인가? (준수부담의 합리성)	
이의 제기	<input type="checkbox"/> 위법·부당한 단속·점검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성의 용이성)	
정보 공개	<input type="checkbox"/> 단속·점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 공개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가? (공개성) - 대상자, 시행기간, 시행결과(위반내용), 처분내용 등 주요정보 공개여부 확인	
제재	<input type="checkbox"/> 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경고 등 행정제재 판단기준이 유형별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임의감면 등 부당한 재량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상한·하한, 가중·경감 사유 및 비율, 처분유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단속·점검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부과하는 취소,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 수준이 유사업무에서 정한 다른 제재와 비교해 볼 때 적절한 수준인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기타	<input type="checkbox"/> 단속·점검 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은폐·누락 등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보고의무, 처리기한, 관계기관에게 통보 및 처리요구, 해당업체에 대한 통보 등	
	<input type="checkbox"/>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단속정보 사전유출, 위법행위 묵인, 임의감경 등 공무원과 업체 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통제장치가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외부참여 합동단속, 공익신고자 보호절차, 신고포상제도, 내부 감사·감찰기능 등	

7) 각종 위원회 관련 업무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구성	<input type="checkbox"/> 위원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input type="checkbox"/> 위원 추천자 및 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input type="checkbox"/> 위원위촉 및 활동 과정에 관련협회, 특정 이해관계자 등의 개입으로 특혜를 유발하거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없는가? (특혜발생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위원 구성시 내부·외부 위원의 구성비율은 적정한가? (이해충돌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외부위원으로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있는가? (이해충돌가능성)	
	<input type="checkbox"/> 기관장의 위원장 겸임 또는 위원 단독위촉 권한은 필요하고 적절한 수준인가? (이해충돌가능성)	
임기 및 신분	<input type="checkbox"/> 위원의 임기 및 연임차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가? (이해충돌가능성) - 장기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및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임기, 기간의 적정성, 연임규정 유무 확인	
	<input type="checkbox"/> 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가? (이해충돌가능성) - 윤리규범, 청렴서약서제출, 겸직금지, 비밀엄수, 정보이용금지 등	
제척·기피 ·회피	<input type="checkbox"/>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이해충돌가능성)	
제재	<input type="checkbox"/>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피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자를 제재하기 위한 하측규정을 두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이해충돌가능성)	
	<input type="checkbox"/> 민간인을 위원으로 위촉시 뇌물죄 등 형벌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이해충돌가능성)	
이의 제기	<input type="checkbox"/> 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input type="checkbox"/> 회의록 작성·보존 및 회의결과 요약 공개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공개성)	
	<input type="checkbox"/> 위원 위촉과정 및 위원회 활동정보를 구체적·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가? (공개성)	

8) 인사 업무

검 토 항 목 (적용기준)		평가결과
인사 기준	<input type="checkbox"/>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input type="checkbox"/>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과정에서 기관장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별도의 통제장치를 규정하고 있는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인사 위원회	<input type="checkbox"/>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 구성시 (이해충돌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위원 구성비율, 임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위원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인사(승진심사,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녹취, 기록, 보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가? 	
특별 임용	<input type="checkbox"/> 특별임용 조항이 있는 경우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임용의 실시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 특별임용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조항 확인 - 특별임용 대상자 선정 및 평가 방법 등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 특별임용계획 및 일정, 임용방법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는가? (공개성) - 특별임용결과를 사후공개하고 성과를 분석·관리하고 있는가? (공개성) 	
기관장 재량	<input type="checkbox"/> 임용·승진·평가 등에 있어 기관장에게 별도의 가점부여(인정)재량을 허용하는 등 부당한 규정은 없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input type="checkbox"/> 기관장에 의한 임의적 감경·보복, 징계위원회 회부결정 재량은 없는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 또는 불회부”, “사안이 경미한 경우 불회부” 등 	
이의 제기	<input type="checkbox"/> 인사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 (접근의 용이성)	
정보 공개	<input type="checkbox"/> 인사정보 공개와 관련 (공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 공개규정이 있는가? - 사전 공개하는 시점은 관련자의 접근성과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 인사방침 결정 및 변경시 적정한 기간동안 적용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가? - 모집대상직위, 예상결원, 대상인원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제재	<input type="checkbox"/> 임용·승진·전보 등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당사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제재규정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줄서기, 청탁, 밀어주기, 금품·향응제공 등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제재규정 확인 	
기타	<input type="checkbox"/> 연고·온정주의에 의한 정실인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외부의 통제장치는 있는가?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5 관련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법률	시행령
<p>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의 내부규정 <p>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 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이하 이 조에서 “법령 등”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이하 “부패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패유발의 가능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나. 법령 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법령 등 준수의 용이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민·기업·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법령 등의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손해의 적정성·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 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나.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p>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해당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법령 등 소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법령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p>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령 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법령 등 소관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 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법령 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법령 등의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 등 소관기관의 장은 성실하게 이에 응해야 하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법령 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6 관련서식

[서식 1]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작성 서식

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자치법규 명				
형 식	조 례	규 칙	교육규칙	
구 분	제 정	개 정	현 행	
관련 법규 명		(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지방자치단체	입안주무부서	부서명(과 혹은 팀명)		
		담당자 직·성명/ 전화번호		
입법일정(예정)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대상기관 (부서)		
		협의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일간)	
	입법예고	20 . . .부터 20 . . .까지(일간)		
의견수렴절차	1. 법제업무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 경유 여부 2. 공청회, 세미나 등 경유 여부			
별도 불임자료	1. 자치법규(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2. 제·개정 관련 내부 설명자료 ※ 위원회에 평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 사유			

작성자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 「관리번호」란은 평가담당부서에서 기재

[붙임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명			
입안주무부서		통보(조치)일	20 . . .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재 	(예1) 평가담당부서에서 검토결과 직접 해당 조문을 개정 (예2) 평가담당부서에서 입안주무 부서로 결과를 통보하여 개선 요구	



P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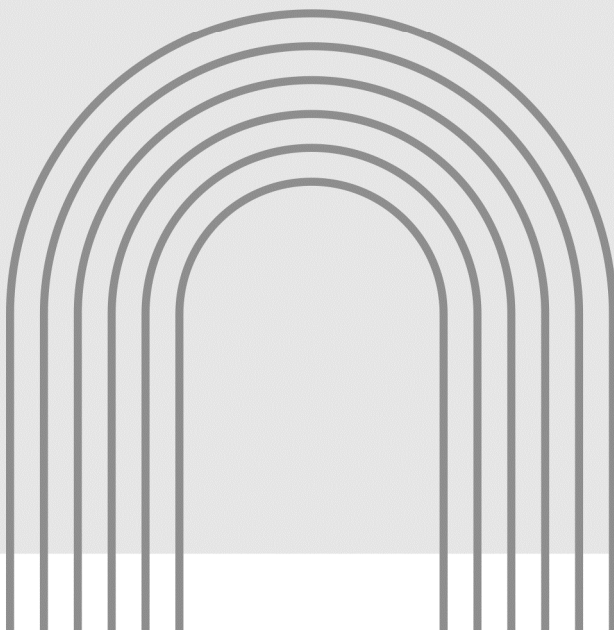
6

청렴 취약분야 모니터링



제1장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I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1 > 추진개요

■ 도입배경

- 자치사무 및 사회복지 등 지방행정 업무량 증가에 따라 회계, 복지, 인·허가 분야 등에서 공직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
- 지속적인 외부감사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가 여전히 발생하고, 2~3년 주기로 실시되는 외부 기관의 중복감사 문제, 사후 적발위주 감사 한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요구됨

■ 운영목적

- 업무처리 과정의 오류, 부정과 비리 등의 사전예방을 위해 시스템과 제도를 활용하여 공직자 스스로 상시적인 확인·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적법성·투명성·효율성 확보
-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비리를 예방하고 행정오류를 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

■ 주요내용

- (청백-e시스템) 주요지방행정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비리·행정오류 발생 시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에게 경보 발령
* 지방재정(e-호조), 지방세, 세외수입, 인·허가(새울), 지방인사 등
- (자기진단제도) 비리 또는 행정오류의 소지가 있는 사무*를 자기진단표(Self Check List)에 따라 스스로 점검
* 사회복지, 건축 인·허가, 환경 및 보건분야 등 대국민 접점 업무
-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부서·부서원의 청렴 윤리활동을 가·감점 항목을 통해 계량화하여 관리
* 청렴 마일리지 제도

2 2020년 추진실적

■ 市

●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

- 청백-e 시스템

발생건수	처리건수	처리율	적기처리율	승인건수	승인율	적기승인율
2,419건	2,325건	96.1%	90.9%	2,210건	95.1%	92.0%

- 자기진단제도

총 현원	진단표 등록	진단표 작성	작성인원	작성율	최종승인 건수	승인율
6,817명	1,164건	1,283건	799명	11.7%	1,170건	91.2%

● 잘된 점

- 청백-e 운영실적을 매월 점검하여 부서 참여를 독려한 결과 적기처리율·적기승인율·자기진단 참여율·승인율 등 전반적인 실적 향상

* 행정안전부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등급 향상 : (2019) B등급 → (2020) A등급

●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 자기진단 참여 저조로 목표(직원 30% 이상 참여, 2000개 이상 작성) 미달

➔ 「청렴의 날」 청렴실천 자가진단 실시 및 '1인 1카드 갖기' 적극 홍보

■ 군·구

● 자율적 내부통제 기반조성

내부통제, 청렴, 적극행정 등 교육	자체회의	언론홍보	자체평가계획 수립	부서평가 실시	감사사례 공유
37회	22회	7개	10개	9개	8개

●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운영

- 청백-e 시스템

발생건수	처리건수	처리율	적기처리율	승인건수	승인율	적기승인율
55,607건	51,710건	91.17%	64.45%	41,329건	91.01%	77.14%

-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총 인원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작성인원	작성율	최종승인건수	승인율	등록인원	실적관리율
8,844명	2,046명	23.13%	6,225건	97.9%	5,365명	60.66%

● **잘된 점**

- 청백-e 시스템 처리율, 자기진단제도 작성율,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실적관리율이 크게 상승함

* 청백-e시스템 처리율 : (2019) 80.3% → (2020) 91.2%

* 자기진단제도 작성율 : (2019) 18.7% → (2020) 23.1%

*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관리율 : (2019) 49.6% → (2020) 60.7%

●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 자기진단제도 참여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실적이 전무한 군구가 있어 지자체 간 제도운영의 격차가 크게 발생함
 - ➔ 평가지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기관 여건에 맞는 실적 향상 방안 마련
 - ➔ 군구간 유기적 체계 구축으로 운영방법 공유(담당자 간담회 등 추진)

■ **평가결과**

구 분	1위	2위	3위
市	마이스산업과	-	남촌농축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
군구	연수구	계양구	부평구

3 2021년 추진계획

■ 청백-e 모니터링

● 주요내용

- 부정과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하여 지방행정정보시스템(지방세, 지방재정, 세외수입, 서울행정, 지방인사)의 연계를 통해 행정오류 발생 시 관리자, 담당자, 감사부서에 경보를 발령하여 시정 조치

● 처리절차

단 계	추진절차
업무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행정 알람정보 ⇒ 시스템접속 ⇒ 조치 : 시스템 업무처리 제외 : 제외사유 입력 ⇒ 처리완료
결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접속 ⇒ 예방프로그램 처리내역 조회 ⇒ 조치결과 확인 ⇒ 내역확인 후 승인/반려
감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접속 ⇒ 예방프로그램 처리내역 조회 ⇒ 조치결과 확인 ⇒ 내역확인 후 감사자확인

● 세부 추진계획

- 청백-e 모니터링의 날 운영
 - 매주 금요일 청백-e 모니터링 처리 및 승인 완료(부서)
 - 조치결과 적정성 검토 및 부진부서 적기처리승인 독려(감사관실)
- 운영현황 점검
 - 월 1회 부서별 모니터링 처리실적을 점검하여 운영현황 통보
- 사용자교육 및 만족도 조사

구 분	시 기	주요내용
방문교육	5월,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백-e 운영지원단 현장실습 강의 요청 - 시, 군구 업무담당자 청백-e 운영 만족도 조사 실시
온라인교육	연중	- KLID사이버업무배움터(http://klidmanual.multicampus.com)
자체교육	수시	- 부진부서 및 담당자 변경부서 맞춤형 방문교육 실시

- 신규 시나리오 발굴

- 내용 :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업무처리상의 오류착오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시나리오 발굴

* 목적취지가 부합하나 환경적 요인(정보화, 제도 등)으로 구현 불가한 경우 일부점수 인정

■ 자기진단 제도 운영

● 주요내용

- 행정착오, 비리의 발생소지가 있으나 모니터링 되지 않는 사무에 대한 자기진단표를 작성하여 업무처리 과정 중 주기적으로 자체 점검 실시

● 대상업무 : 행정안전부 지정 표준업무(30종) + 자체 발굴업무(α)

- 표준업무 : 옥외광고물 허가관리등 30개 업무
- 자체 발굴업무
 - 비리 또는 행정오류의 소지*가 있는 사무
 - * 사회복지, 건축, 인허가, 환경 및 보건분야 등 대국민 접점 업무
 - 행정착오 예방 또는 처리절차 준수가 요구되는 업무
 -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업무 또는 개인별 주요 추진업무

● 진단절차

단 계	추진절차
자기진단 수행자	■ 진단과제 등록 ⇒ 자기진단표 작성 ⇒ 결재라인 지정 및 결재요청
결재자	■ 결재대상 자기진단표 선택 ⇒ 자기진단표 내용 검토 ⇒ 결재
수행자·결재자·감사자	■ 자기진단표 결재결과 조회

● 세부 추진계획

- 청렴실천 자가진단 실시
 - 매월 10일 「청렴의 날^{10.0}」 청렴실천 자가진단 실시
 - 내부·외부 청렴실천 체크리스트 구분 작성
 - ▶ 내부 청렴실천 체크리스트 : 청렴리더 및 전직원
 - ▶ 외부 청렴실천 체크리스트 : 공사·용역, 보조금, 민원7종 업무담당자
- 1인 1개 자기진단카드 갖기
 - 추진목표 : 전직원 참여 / 3,000개 이상 작성(부서장, 팀장 제외)
 - 작성대상 : 행정오류 소지가 있거나 처리절차 준수가 요구되는 사무
 - 추진방법 : 진단주기 최소 '분기별'로 지정하여 자체점검 실시
- 운영현황 점검
 - 월 1회 자기진단 실시현황을 점검하여 부서 통보

■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청렴 마일리지) 운영 * 별도계획 수립

● 개요

- 대상기간 : 2021. 1. 1. ~ 11. 30. * 평가자료 확정 : '21. 12. 7.
 - 운영대상 : 市 327개 부서 6,888명
 - 운영방법 :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활용
 - 개인부서 청렴 마일리지 수시 등록(부서장 승인건만 접수반영)
 - 대상부서를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그룹별 부서·개인 별도평가
- * I 그룹 : 본청, 의회사무처 / II 그룹 :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 III 그룹 : 소방본부, 소방서

● 주요내용

- 평가지표 선정

평가지표 선정기준

- ▶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과 관련 있는 항목
- ▶ 부서 및 개인의 참여가 용이하고 개선이 필요한 항목
- ▶ 활동실적에 대한 계량화 및 평가가 가능한 항목 등

- 평가지표 확정
 -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 공직윤리 실무위원회 심의 후 확정
- 평가 실시
 - 점수산출
 - ▶ 개인 : 개인평가항목 점수와 감점을 합산산출
 - ▶ 부서 : 부서평가항목 점수와 감점을 합산산출(개인점수 미포함)
 - 순위선정 : 평가그룹별 고득점 순으로 순위 선정
- 평가결과 활용
 - 우수 부서 및 개인 표창(포상금) : 3개부서 6명 표창
 - ▶ '청렴활동 우수부서 인증' 실시(부서입구 표지판 부착)
 - 5급 이상 직무성과평가 시 활용
 - ▶ 대내외 협력성과 분야에 청렴마일리지 평가항목 일부 반영(2점)

청렴교육(1점), 청백-e 적기처리·적기승인율(1점), 외부강의 등 관련 적발(감점)

4 점검 및 평가

■ 중간점검

- 대상기간 : 2021. 1. 1. ~ 6. 30.(6개월)
- 점검대상 : 市 전부서 * 군구는 최종평가만 실시
- 점검내용 : 내부통제 활동(평가항목과 동일)
- 결과조치 : 점검결과 공개 및 부진부서 참여 독려

■ 운영평가

- 대상기간 : 2021. 1. 1. ~ 11. 30.(11개월) * 확정일 '21. 12. 7.
- 평가대상 : 市 전부서, 군구
- 평가분야 : 운영기반 마련, 내부통제 활동
 - * 행정안전부 평가항목 및 순위책정 기준 적용
- 인센티브 :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 표창
 - 훈격 : 인천광역시장 / 시기 : 2022. 2월

■ 추진계획

- 市
 - 평가항목 : 청백-e시스템(50점), 자기진단(40점),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10점)
 - 평가방법 : 전산추출 실적 확인
 - 평가결과 : 우수 3개부서 및 유공공무원 3명 표창 * 부서포상금 포함
- 군구
 - 평가항목

평가분야	배점	세부항목
운영기반 마련	25점	교육 실시(5점), 자체회의·자체평가(20점)
내부통제 활동	75점	청백-e 시스템(60점), 자기진단 제도(10점),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5점)
내부통제 활성화	가점	활성화 참여도(최대4.5점), 시나리오 발굴(최대 3.5점), 우수 감사기법 공유(3점), 재배정사업 모니터링 처리 완료율(1점)*

* 가점항목 추가 : 재배정사업 모니터링 처리 이행(2020년 재배정사업 모니터링 처리율 0%)

- 평가방법 : 제출자료(pdf) 및 전산추출 실적 확인
- 평가결과 : 우수기관의 유공공무원 3명 표창 * 부상 없음

II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지표

1 2021년 시 자체 평가지표

■ 청백-e 시스템(50점)

평가지표	① 담당자 처리율(10점) ② 담당자 적기처리율(15점) ③ 관리자 승인율(10점) ④ 관리자 적기승인율(15점) ⑤ 예방행정 시나리오 발굴 기여(가점)																		
지표개요 (check list)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평가내용	- 모니터링 발생에 대한 조치율 - 모니터링 발생 시 적정기간 내에 처리율 - 모니터링 처리에 대한 관리자 승인율 - 모니터링 처리 시 적정기간 내에 관리자 승인율																		
평가기준	① 담당자 처리율(10점) 처리율 = [(조치 + 제외) 건수 / 발생건수] X 100																		
	<table><tr><td>구분</td><td>매우우수</td><td>우수</td><td>보통</td><td>미흡</td><td>매우미흡</td></tr><tr><td>기준</td><td>90% 이상</td><td>89~80%</td><td>79~70%</td><td>69~60%</td><td>60% 미만</td></tr><tr><td>배점</td><td>10</td><td>8</td><td>6</td><td>4</td><td>2</td></tr></table>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준	90% 이상	89~80%	79~70%	69~60%	60% 미만	배점	10	8	6	4	2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준	90% 이상	89~80%	79~70%	69~60%	60% 미만													
	배점	10	8	6	4	2													
	※ 처리기한이 평가일을 초과하는 미처리건은 평가에서 제외, 처리 시 반영 ※ 업무지원(확인) 시나리오는 평가에서 제외																		
	② 담당자 적기처리율(15점) 적기처리율 = (모니터링발생일로부터 적기처리 기한 내 처리한 모니터링 건수 / 모니터링 발생건수) X 100																		
	<table><tr><td>구분</td><td>매우우수</td><td>우수</td><td>보통</td><td>미흡</td><td>매우미흡</td></tr><tr><td>기준</td><td>95% 이상</td><td>90~94%</td><td>70~89%</td><td>50~69%</td><td>50% 미만</td></tr><tr><td>배점</td><td>15</td><td>12</td><td>9</td><td>6</td><td>3</td></tr></table>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준	95% 이상	90~94%	70~89%	50~69%	50% 미만	배점	15	12	9	6	3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준	95% 이상	90~94%	70~89%	50~69%	50% 미만													
배점	15	12	9	6	3														
※ 적기처리 기한 설정기준 : 모니터링 주기가 일별, 주 → 2주 이내 월, 격월, 분기 → 3주 이내 반기, 연도 → 한 달 이내																			
※ 처리기한이 평가일을 초과하는 미처리건은 평가에서 제외, 처리 시 반영 ※ 업무지원(확인) 시나리오는 평가에서 제외																			

③ 관리자 승인율(10점)

승인율 = (승인건수 / (조치 + 제외) 건수) X 100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준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50% 미만
배점	10	8	6	4	2

※ 처리기한이 평가일을 초과하는 미처리건은 평가에서 제외, 처리 시 반영

※ 업무지원(확인) 시나리오는 평가에서 제외

④ 관리자 적기승인율(15점)

적기승인율 = (업무담당자 조치·제외 일로부터 적기승인기한 내 승인 건수 / (조치 + 제외) 건수) X 100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준	95% 이상	90~94%	70~89%	50~69%	50% 미만
배점	15	12	9	6	3

※ 적기승인 기한 설정기준 : 업무담당자 조치·제외 일로부터 2주 이내

※ 처리기한이 평가일을 초과하는 미처리건은 평가에서 제외, 처리 시 반영

※ 업무지원(확인) 시나리오는 평가에서 제외

⑤ 예방행정 시나리오 발굴 기여(가점 항목)

기준	발굴(연중)	채택(3~5월)*
배점	3	5

※ 발굴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및 행정안전부에서 공통성, 중복성, 근거여부 등을 검토하여 실무협의회 안건으로 선정된 시나리오 발굴기관에 점수 부여(단수 시나리오제외)

* 시나리오 발굴은 연중 추진

※ 채택 : 발굴안건으로 선정 후 실무협의회에서 자치단체 의사결정에 의해 '채택'으로 결정된 시나리오 발굴기관에 점수 부여

* 시나리오 채택은 5월까지 제출한 내용에 한하여 인정(행안부 제출 기한 반영)

- 행정안전부 평가 시 시나리오 유효성의 적절한 검토를 위해 5월까지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하며, 시뮬레이션 자료 제공 및 결과검증 협조 필수

※ 제출방법 : 청백-e 시스템 > 시나리오 관리 > 시나리오 발굴 메뉴에서 등록

※ 전년도 재검토 건 채택 시 현년도에 점수 부여

※ 실무협의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개발원 및 행정안전부 내부검토 결과로 점수 부여

평가자료

○ 청백-e 시스템에서 자동추출

기타사항

■ 자기진단 제도(40점)

평가지표	① 자기진단표 작성률(20점) ② 자기진단업무 승인율(20점)																		
지표개요 (check list)	자기진단 제도가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었는가?																		
평가내용	- 기관 공무원 수 대비 자기진단표 작성 공무원 수 - 자기진단표 승인율(최종결재자 승인율)																		
평가기준	① 자기진단표 작성률(20점) 작성률 = (자기진단표 작성 공무원 수 / 기관 공무원 수) X 100																		
	<table><tr><td>구분</td><td>매우우수</td><td>우수</td><td>보통</td><td>미흡</td><td>매우미흡</td></tr><tr><td>기준</td><td>50% 이상</td><td>49~40%</td><td>39~30%</td><td>29~20%</td><td>20% 미만</td></tr><tr><td>배점</td><td>20</td><td>16</td><td>12</td><td>8</td><td>4</td></tr></table>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준	50% 이상	49~40%	39~30%	29~20%	20% 미만	배점	20	16	12	8	4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준	50% 이상	49~40%	39~30%	29~20%	20% 미만													
	배점	20	16	12	8	4													
※ 진단카드(표준과제카드 및 자체발굴카드)를 활용하여 자기진단표를 작성한 공무원 수 (작성한 계정 기준으로 산정, 1명이 2건 작성하여도 1건으로 인정)																			
② 자기진단업무 승인율(20점) 진단업무 승인율 = (최종승인건수 / 자기진단표 작성 건수) X 100																			
<table><tr><td>구분</td><td>매우우수</td><td>우수</td><td>보통</td><td>미흡</td><td>매우미흡</td></tr><tr><td>기준</td><td>90% 이상</td><td>89~80%</td><td>79~70%</td><td>69~60%</td><td>60% 미만</td></tr><tr><td>배점</td><td>20</td><td>16</td><td>12</td><td>8</td><td>4</td></tr></table>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준	90% 이상	89~80%	79~70%	69~60%	60% 미만	배점	20	16	12	8	4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준	90% 이상	89~80%	79~70%	69~60%	60% 미만														
배점	20	16	12	8	4														
	※ 승인율이 20% 미만인 경우 0점 처리																		
평가자료	○ 청백-e 시스템에서 자동추출																		
기타사항	○ 기관 공무원 수는 전년도('20) 지방공무원 인사 통계(현원)를 기준으로 자동 반영되나, 감사자가 수기로 변경 가능(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10점)

평가지표	① 개인별 윤리활동 실적 관리율(10점)																		
지표개요 (check list)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운영·평가·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가?																		
평가내용	윤리활동 실적 기록관리																		
평가기준	<p>① 개인별 윤리활동 실적 관리율(10점)</p> <p>관리율 = (실적등록 공무원 수 / 기관 공무원 수) X 100</p> <table><tr><td>구분</td><td>매우우수</td><td>우수</td><td>보통</td><td>미흡</td><td>매우미흡</td></tr><tr><td>기준</td><td>95% 이상</td><td>94~90%</td><td>89~85%</td><td>84~80%</td><td>80% 미만</td></tr><tr><td>배점</td><td>10</td><td>8</td><td>6</td><td>4</td><td>2</td></tr></table> <p>※ 실·과·소 등 실무부서 평가 시 활용(행안부 확인·점검 시 자치단체 합산)</p> <p>※ 시도·서울행정 시스템 내 공직자 자기관리 등록한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 (작성한 계정 기준으로 산정, 1명이 2건 작성하여도 1건으로 인정)</p> <p>※ 관리율이 20% 미만인 경우 0점 처리</p>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준	95% 이상	94~90%	89~85%	84~80%	80% 미만	배점	10	8	6	4	2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준	95% 이상	94~90%	89~85%	84~80%	80% 미만														
배점	10	8	6	4	2														
평가자료	○ 청백-e 시스템에서 시도·서울행정시스템 자료연계하여 자동추출 (등록된 실적 및 등록 공무원 수 등 자료에 대한 문의는 시도·서울행정시스템으로 문의)																		
기타사항	○ 기관 공무원 수는 전년도(20) 지방공무원 인사 통계(현원)를 기준으로 반영되며, 감사자가 수기로 변경 가능(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2021년 군·구 평가지표

■ PART 1. 내부통제 운영기반 마련(25점)

평가지표	① 내부통제, 청백-e 시스템, 적극행정, 사전 컨설팅, 청렴 관련 교육 실시(5점)																		
지표개요 (check list)	- 내부통제, 교육 등 제도기반이 마련되었는가?																		
평가내용	내부통제 관련 교육 실적 및 자체회의 실시, 언론홍보 실적, 자체평가 실시, 감사사례 공유																		
평가기준	<p>① 내부통제, 청백-e 시스템, 적극행정, 사전 컨설팅, 청렴 감사분야 관련 교육 실시 횟수(5점)</p> <table><tr><td>구분</td><td>매우우수</td><td>우수</td><td>보통</td><td>미흡</td><td>매우미흡</td></tr><tr><td>기준</td><td>5회 이상</td><td>4회</td><td>3회</td><td>2회</td><td>2회 미만</td></tr><tr><td>배점</td><td>5</td><td>4</td><td>3</td><td>2</td><td>1</td></tr></table> <p>※ 내부통제, 청백-e 시스템(온/오프라인),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청렴 교육 계획/결과 공문 제출 시 인정</p> <p>※ 내부통제,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청렴분야 교육은 온/오프라인 상관없이 1회 인정</p> <p>* 예시 : 적극행정 온라인 1회, 오프라인 1회 → 적극행정 교육 1점 인정</p> <p>※ 동일분야 교육 내 실시 횟수나 이수 과정 수 중복인정 불가</p> <p>* 예시 : 청백-e 방문교육 2회, 권역교육 1회 → 오프라인 교육 1점 인정</p> <p>* 예시 : 적극행정 교육 2회 → 적극행정 교육 1점 인정</p> <p>※ 청백-e 교육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일괄 확인 후 반영하고, 온라인 교육은 기관별 2020년 공무원 현원기준 1% 이상 참여 시 인정</p> <p>※ 서울시 및 산하구의 경우 서울시 인재개발원 이러닝(hrd.seoul.go.kr)을 통한 교육수료도 '청백-e 시스템 온라인 교육' 실적으로 인정</p>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준	5회 이상	4회	3회	2회	2회 미만	배점	5	4	3	2	1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준	5회 이상	4회	3회	2회	2회 미만														
배점	5	4	3	2	1														
평가자료	○ 교육 실시 계획서, 결과서 등 교육 실시여부 증빙자료(참석자 명단 포함) ※ 증빙자료는 부서장 결재된 공문 형태로 제출																		
기타사항	○ 기관 공무원 수는 전년도('20) 지방공무원 인사통계(현원)를 기준으로 반영되며, 감사자가 수기로 변경 가능(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평가지표	② 내부통제 분야 자체회의(4점) ③ 언론홍보 실적(2점) ④ 자체평가(5점) ⑤ 감사사례 공유(4점) ⑥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평가(5점)	
지표개요 (check list)	- 내부통제 자체회의, 언론홍보, 자체평가, 감사사례 공유 등이 운영되고 있는가?	
평가내용	내부통제 관련 교육 실적 및 자체회의 실시, 언론홍보 실적, 자체평가 실시, 감사사례 공유	
평가기준	② 내부통제 분야 자체회의(4점)	
	기준	2회
	배점	4
	※ 내부통제 관련 회의 : 간부회의, 실무위원회 등 회의 시 자율적 내부통제, 청백-e 시스템, 개별 행정시스템 단독 시나리오 등 감사분야 내용을 회의안건으로 선정하여 실시한 회의	
	※ 개별 행정시스템 단독 시나리오 : 청백-e 시스템과 별개로 지방재정/지방세/세외수입 시스템에서 단독으로 운영되는 개별시나리오	
	③ 언론홍보 실적(2점)	
	기준	언론홍보 실적 있음
	배점	2
	※ 언론홍보 : 내부통제, 청렴, 청백-e, 우수사례 등 관련 보도자료	
	④ 자체평가(5점)	
기준	자체 내부계획 수립 및 평가 실시	
배점	5	
※ 청백-e 시스템 / 자기진단 / 공직자 자기관리 등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을 위해 수립한 평가계획서, 평가결과서를 기준으로 평가		
※ 평가계획서/결과서 모두 제출하여야만 점수 부여		
⑤ 감사사례 공유(4점)		
기준	10건 이상	
배점	4	
※ 등록방법		
① 운영지원시스템▶커뮤니티▶감사사례등록요청 메뉴에 접속하여		
①요약표(양식파일), ②감사사례 결과자료 업로드(한글문서 *.hwp 형식)		
②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청백-e 운영지원단에서 확인 및 검증 후 자료 게시		
③ 자치단체 감사부서에서 게시된 자료 정상여부 확인 및 등록 완료		

	⑥ 기초자치단체를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평가한 결과(5점)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기준	상위 20% 이내	상위 20~40%	상위 40~60%	상위 60~80%
	배점	5	4	3	2
	※ 기초자치단체에 한하여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속한 시·도 내 순위 기준 ※ 광역자치단체에서 평가 미실시한 경우 '21년도 행안부 자율적내부통제 제도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점수 부여(평가기간 종료 후 확인가능)				
평가자료	○ 자체회의 개최 계획서, 결과서 ○ 언론보도 자료 ○ 자체 내부평가 계획서, 결과서 ○ 감사사례 제출 건수 ○ 광역자치단체에서 소속 기초자치단체 평가한 계획서, 결과서 ※ 증빙자료는 부서장 결재된 공문 형태로 제출				
기타사항	○ 감사사례 등록결과는 청백-e 시스템 운영지원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PART 2. 내부통제 활동(75점)

2-1. 청백-e 시스템(60점)

평가지표	① 모니터링 적기 부서매핑(10점) ② 담당자 처리율(10점) ③ 담당자 적기처리율(10점) ④ 관리자 승인율(10점) ⑤ 관리자 적기승인율(10점) ⑥ 감사자 적기확인율(10점)																																																					
지표개요 (check list)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본래의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평가내용	- 모니터링 부서미매핑 건수에 따른 배점 - 모니터링 발생에 대한 조치율 - 모니터링 발생 시 적정기간 내에 처리율 - 모니터링 처리에 대한 관리자 승인율 - 모니터링 처리 시 적정기간 내에 관리자 승인율 - 관리자 승인건수에 대한 적정기간 내 감사자 확인율																																																					
평가기준	① 모니터링 적기 부서매핑(10점) 반영점수 = 부서매핑 완료 개월 수에 따라 차등 부여('21.1월 ~ '21.11월 발생분) <table border="1"><tr><th rowspan="2">기준</th><th colspan="11">완료 개월 수</th></tr><tr><th>1</th><th>2</th><th>3</th><th>4</th><th>5</th><th>6</th><th>7</th><th>8</th><th>9</th><th>10</th><th>11</th></tr><tr><th>배점</th><td>0</td><td>1</td><td>2</td><td>3</td><td>4</td><td>5</td><td>6</td><td>7</td><td>8</td><td>9</td><td>10</td></tr></table> ※ 월별발생(1일~말일)건을 다음 월(근무일 기준 5일)까지 모두 매핑처리 완료 시 반영 ※ 카드, 계좌, 제로페이 모두 포함 ② 담당자 처리율(10점) 처리율 = [(조치 + 제외) 건수 / 발생건수] X 100 <table border="1"><tr><th>구분</th><th>매우우수</th><th>우수</th><th>보통</th><th>미흡</th><th>매우미흡</th></tr><tr><th>기준</th><td>90% 이상</td><td>89~80%</td><td>79~70%</td><td>69~60%</td><td>60% 미만</td></tr><tr><th>배점</th><td>10</td><td>8</td><td>6</td><td>4</td><td>2</td></tr></table> ※ 평가 마감월(11월) 발생 건 중 적기 처리기한이 평가 마감일 이후로 책정된 건은 평가 제외 ※ 업무지원(확인) 시나리오는 평가에서 제외 ③ 담당자 적기처리율(10점) 적기처리율 = (모니터링발생일로부터 적기처리 기한 내 처리한 모니터링 건수 / 모니터링 발생건수) X 100	기준	완료 개월 수											1	2	3	4	5	6	7	8	9	10	11	배점	0	1	2	3	4	5	6	7	8	9	10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준	90% 이상	89~80%	79~70%	69~60%	60% 미만	배점	10	8	6	4	2
기준	완료 개월 수																																																					
	1	2	3	4	5	6	7	8	9	10	11																																											
배점	0	1	2	3	4	5	6	7	8	9	10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준	90% 이상	89~80%	79~70%	69~60%	60% 미만																																																	
배점	10	8	6	4	2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준	95% 이상	90~94%	70~89%	50~69%	50% 미만
배점	10	8	6	4	2

※ 적기처리 기한 설정기준 : 모니터링 주기가 일별, 주 → 2주 이내

월, 격월, 분기 → 3주 이내

반기, 연도 → 한 달 이내

※ 평가 마감월(11월) 발생 건 중 적기 처리기한이 평가 마감일 이후로 책정된 건은 평가 제외

※ 업무지원(확인) 시나리오는 평가에서 제외

④ 관리자 승인율(10점)

승인율 = (승인건수 / (조치 + 제외) 건수) × 100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준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50% 미만
배점	10	8	6	4	2

※ 평가 마감월(11월) 발생 건 중 적기 처리기한이 평가 마감일 이후로 책정된 건은 평가 제외

※ 업무지원(확인) 시나리오는 평가에서 제외

⑤ 관리자 적기승인율(10점)

적기승인율 = (업무담당자 조치·제외 일로부터 적기승인기한 내 승인 건수 / (조치 + 제외) 건수) × 100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준	95% 이상	90~94%	70~89%	50~69%	50% 미만
배점	10	8	6	4	2

※ 적기승인 기한 설정기준 : 업무담당자 조치·제외 일로부터 2주 이내

※ 평가 마감월(11월) 발생 건 중 적기 처리기한이 평가 마감일 이후로 책정된 건은 평가 제외

※ 업무지원(확인) 시나리오는 평가에서 제외

⑥ 감사자 적기확인율(10점)

감사자 적기확인율 = (기준일 이내 감사자 확인건수 / 관리자 승인건수) × 100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준	95% 이상	90~94%	70~89%	50~69%	50% 미만
배점	10	8	6	4	2

※ 적기확인 기한 설정기준 : 관리자 승인 후 2주 이내

※ 평가 마감월(11월) 발생 건 중 적기 처리기한이 평가 마감일 이후로 책정된 건은 평가 제외

※ 업무지원(확인) 시나리오는 평가에서 제외

평가자료 ○ 청백-e 시스템에서 자동추출

기타사항

2-(2) 자기진단 제도(10점)

평가지표	① 자기진단표 작성률(5점) ② 자기진단업무 승인율(5점)																																				
지표개요 (check list)	자기진단 제도가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었는가?																																				
평가내용	- 기관 공무원 수 대비 자기진단표 작성 공무원 수 - 자기진단표 승인율(최종결재자 승인율)																																				
평가기준	<div>① 자기진단표 작성률(5점)</div> <div>작성률 = (자기진단표 작성 공무원 수 / 기관 공무원 수) X 100</div> <table><tr><td>구분</td><td>매우우수</td><td>우수</td><td>보통</td><td>미흡</td><td>매우미흡</td></tr><tr><td>기준</td><td>50% 이상</td><td>49~40%</td><td>39~30%</td><td>29~20%</td><td>20% 미만</td></tr><tr><td>배점</td><td>5</td><td>4</td><td>3</td><td>2</td><td>0</td></tr></table> <div>※ 진단카드(표준과제카드 및 자체발굴카드)를 활용하여 자기진단표를 작성한 공무원 수 (작성한 계정 기준으로 산정, 1명이 2건 작성하여도 1건으로 인정)</div> <div>② 자기진단업무 승인율(5점)</div> <div>진단업무 승인율 = (최종승인건수 / 자기진단표 작성 건수) X 100</div> <table><tr><td>구분</td><td>매우우수</td><td>우수</td><td>보통</td><td>미흡</td><td>매우미흡</td></tr><tr><td>기준</td><td>90% 이상</td><td>89~80%</td><td>79~70%</td><td>69~60%</td><td>60% 미만</td></tr><tr><td>배점</td><td>5</td><td>4</td><td>3</td><td>2</td><td>1</td></tr></table> <div>※ 승인율이 20% 미만인 경우 0점 처리</div>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준	50% 이상	49~40%	39~30%	29~20%	20% 미만	배점	5	4	3	2	0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준	90% 이상	89~80%	79~70%	69~60%	60% 미만	배점	5	4	3	2	1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준	50% 이상	49~40%	39~30%	29~20%	20% 미만																																
배점	5	4	3	2	0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준	90% 이상	89~80%	79~70%	69~60%	60% 미만																																
배점	5	4	3	2	1																																
평가자료	○ 청백-e 시스템에서 자동추출																																				
기타사항	○ 기관 공무원 수는 전년도('20) 지방공무원 인사 통계(현원)를 기준으로 자동 반영되나, 감사자가 수기로 변경 가능(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3)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5점)

평가지표	① 개인별 윤리활동 실적 관리율(5점)																		
지표개요 (check list)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운영·평가·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가?																		
평가내용	윤리활동 실적 기록관리																		
평가기준	① 개인별 윤리활동 실적 관리율(5점) 관리율 = (실적등록 공무원 수 / 기관 공무원 수) X 100																		
	<table><tr><td>구분</td><td>매우우수</td><td>우수</td><td>보통</td><td>미흡</td><td>매우미흡</td></tr><tr><td>기준</td><td>95% 이상</td><td>94~90%</td><td>89~85%</td><td>84~80%</td><td>80% 미만</td></tr><tr><td>배점</td><td>5</td><td>4</td><td>3</td><td>2</td><td>1</td></tr></table>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준	95% 이상	94~90%	89~85%	84~80%	80% 미만	배점	5	4	3	2	1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준	95% 이상	94~90%	89~85%	84~80%	80% 미만													
	배점	5	4	3	2	1													
※ 실·과·소 등 실무부서 평가 시 활용(행안부 확인·점검 시 자치단체 합산)																			
※ 시도·서울행정 시스템 내 공직자 자기관리 등록한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 (작성한 계정 기준으로 산정, 1명이 2건 작성하여도 1건으로 인정)																			
※ 관리율이 20% 미만인 경우 0점 처리																			
평가자료	○ 청백-e 시스템에서 시도·서울행정시스템 자료연계하여 자동추출 (등록된 실적 및 등록 공무원 수 등 자료에 대한 문의는 시도·서울행정시스템으로 문의)																		
기타사항	○ 기관 공무원 수는 전년도('20) 지방공무원 인사 통계(현원)를 기준으로 반영되며, 감사자가 수기로 변경 가능(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PART 3. 내부통제 활성화 분야(가점항목)

평가지표	① 시스템 활성화 관련 참여도 ② 예방행정 시나리오 발굴 기여 ③ 우수 감사기법 발굴·공유 ④ 재배정사업 모니터링 처리 완료율(市 추가지표)										
지표개요 (check list)	자율적 내부통제 활성화를 위해 두드러진 노력을 하였는가?										
평가내용	- 각종 보고/협의회 및 현장방문, 설문조사 참여 건 - 신규 시나리오 발굴 - 시스템을 활용한 감사기법 발굴·공유										
평가기준	① 시스템 활성화 관련 참여도(건당 점수 부여, 최대 4.5점) <table><tr><th>구분</th><th>보고회</th><th>실무협의회</th><th>현장방문</th><th>설문조사</th></tr><tr><th>배점</th><td>0.5</td><td>1.0</td><td>0.5</td><td>0.5</td></tr></table> ※ 보고회(착수·완료보고), 실무(운영)협의회, 설문조사 및 현장방문 참여 횟수 ※ 현장방문은 최대 1회(0.5점) 인정(예시 : 상·하반기 총 2회 실시 → 1회만 인정)	구분	보고회	실무협의회	현장방문	설문조사	배점	0.5	1.0	0.5	0.5
	구분	보고회	실무협의회	현장방문	설문조사						
	배점	0.5	1.0	0.5	0.5						
	② 예방행정 시나리오 발굴 기여(최대 3.5점) <table><tr><th>구분</th><th>1건</th><th>2건 이상</th></tr><tr><th>발굴</th><td>1</td><td>1.5</td></tr><tr><th>채택</th><td>3</td><td>3.5</td></tr></table> ※ 발굴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및 행정안전부에서 공통성, 중복성, 근거여부 등을 검토하여 실무협의회 안건으로 선정된 시나리오 발굴기관에 점수 부여(단수 시나리오제외) ※ 채택 : 발굴안건으로 선정 후 실무협의회에서 자치단체 의사결정에 의해 '채택'으로 결정된 시나리오 발굴기관에 점수 부여 ※ 시나리오 유효성의 적절한 검토를 위해 5월까지 제출 건에 한하여 인정하며, 시물레이션 자료 제공 및 결과검증 협조 필수 (제출방법 : 청백-e 시스템 > 시나리오 관리 > 시나리오 발굴 메뉴에서 등록) ※ 전년도 재검토 건 채택 시 현년도에 점수 부여 ※ 실무협의회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개발원 및 행정안전부 내부검토 결과로 점수 부여	구분	1건	2건 이상	발굴	1	1.5	채택	3	3.5	
	구분	1건	2건 이상								
	발굴	1	1.5								
	채택	3	3.5								
	③ 우수 감사기법 발굴·공유(3점) - 실무협의회 감사기법 공유 발표 <table><tr><th>기준</th><td>우수 감사기법 발굴·공유</td></tr><tr><th>배점</th><td>최대 3점</td></tr></table> ※ 제출기한 및 상세 평가방법 별도 안내 예정	기준	우수 감사기법 발굴·공유	배점	최대 3점						
	기준	우수 감사기법 발굴·공유									
	배점	최대 3점									
④ 재배정사업 모니터링 처리 완료율(1점) - 평가기간 내 발생한 재배정사업 모니터링 처리(조차제외+승인) 완료율 <table><tr><th>기준</th><td>100%</td></tr><tr><th>배점</th><td>1</td></tr></table>	기준	100%	배점	1							
기준	100%										
배점	1										
평가자료	○ 예방행정 시나리오 발굴 요청서 및 유효성 검토결과, 실무협의회 결과 ○ 우수 감사기법 발굴 공유 결과										

Ⅲ 참고

1 > 청백-e시스템 예방행정 시나리오 목록(102종)

구분	No	예방행정 프로그램명
지방세 (30)	1	국·도·시유지 매각이후 취득세 부과 누락 방지
	2	인·허가된 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 중과 누락 방지
	3	국·도·시유지 매각에 따른 재산세 소유자정보 변경 누락 방지
	4	인·허가된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 누락 방지
	5	대형사업장(식당, 병원 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과세 누락 방지
	6	건축행정 준공허가자료에 대한 재산세 신규 등록 누락 방지
	7	건축행정 준공허가자료에 대한 취득세 신고 누락 방지
	8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대금(공사, 용역 등) 지급 전 체납금액 압류 누락 방지
	9	국·공유 자산 매입에 따른 지방세 지출예산 자료 누락 방지
	10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취득세 부과 누락 방지
	11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재산세 정보(면적 등) 변경 누락 방지
	12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 누락 방지
	13	자동차 연식 임의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당 감면 방지
	14	등록면허세 납부취소에 따른 환급 후 등기 등록자에 대한 등록면허세 추징 누락 방지
	15	지방세체납자에 대한 세외수입 과오납 환급금 압류 누락 방지
	16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 누락 방지
	17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 누락 방지
	18	가설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부과 누락 방지
	19	임대사업자 폐업 후 재산세 부당감면 추징
	20	임대사업자 폐업 후 취득세 부당감면 추징
	21	사망의심자 자료 활용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회령방지
	22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계좌 잔액 불일치 방지
	23	사망의심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 관리
	24	사망의심자에 대한 취득세 과세 방지

구분	No	예방행정 프로그램명
	25	사망의심자에 대한 재산세 과세 방지
	26	자치단체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누락 방지
	27	일반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부당 감면 방지
	28	임대사업자 미등록 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당 감면 방지
	29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중과 누락 방지
	30	식품위생업 인허가 관련 면허세 미납부 확인
지방 재정 (30)	1	공금 휴면계좌에 대한 신속한 해지를 통한 세원사장 방지
	2	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에 대한 대금 지연 지출 방지
	3	공유재산/물품 취득에 따른 자산 등록 누락 방지
	4	결산 시 자금 없는 이월처리 방지
	5	기금담당자의 수기 지출 처리 방지
	6	일반지출 지급일계와 금고은행의 출금일계 불일치 방지
	7	일상경비 지급일계와 금고은행의 출금일계 불일치 방지
	8	세입세출외현금 일계와 금고은행의 입·출금일계 불일치 방지
	9	이월 확정 후 재 품의 모니터링
	10	예산현액과 예산배정계획액 불일치 방지
	11	예산편성액, 이월액 등 예산현액 불일치 방지
	12	이월예산액과 예산배정액 불일치 방지
	13	일반지출 지급명령 소급 승인 방지
	14	타 회계 여유자금을 정당한 절차 없이 유용하는 행위 방지
	15	자치단체구매카드에 대한 부적정 사용 방지
	16	여러 개의 ID를 사용하여 대리결제 행위 방지
	17	e-호조 회계업무 결재 승인처리 이중 권한 방지
	18	동일일자 동일거래처 일정 금액이상 반복 사용 방지
	19	공무원 급여 중 근로소득세 횡령 방지
	20	급여 지급 불가 대상자(퇴직자 등)에 대한 급여 지급 방지
	21	신용카드 결제계좌 타용도 사용 방지
	22	자치단체구매카드에 대한 횡·유용 방지
	23	기준 초과차량 구입에 대한 주거·생계 급여 미반환 방지

구분	No	예방행정 프로그램명
	24	사망의심자에 대한 주거·생계 급여 부당지급 방지
	25	사망의심자에 대한 기초연금 부당지급 방지
	26	일정시간 동일거래처 일정 금액이상 반복 사용 방지
	27	자치단체구매키드 승인 취소 후 일정기간 재승인처리 방지
	28	유류카드를 타목적(유류제외)으로 사용 방지
	29	계좌별 이자발생액 세입조치 이행
	30	직불전자지급수단(제로페이) 사후정산기한 누락 방지
세외 수입 (20)	1	채납자 압류재산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 채납분 교부 청구 누락 방지
	2	국가유공자 등이 과태료 채납 시 과태료 부당 감면 방지
	3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누락 방지
	4	계약 이행지연 사업자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 누락 방지
	5	세외수입 결손자료 중 재산 여부 확인 누락 방지
	6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부과 누락 방지
	7	공유재산 무단점용 실태조사에 따른 변상금 부과 누락 방지
	8	세외수입 채납자의 대금(공사,용역 등) 지급 전 채납금액 압류 누락 방지
	9	세외수입 채납자에 대한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압류 누락 방지
	10	세외수입 채납자에 대한 결손 처리 누락 방지
	11	세외수입 채납자에 대한 압류 처리 누락 방지
	12	부동산 등기 지연 신청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누락 방지
	13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누락 방지
	14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과 누락 방지
	15	사망의심자 자료 활용 세외수입 과오납금 회령방지
	16	등기사항 변경에 따른 도로점용의 권리·의무 승계 누락 방지
	17	지방세 결손자에 대한 세외수입 채납자 결손 처리 누락 방지
	18	사망의심자에 대한 도로점용료 및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지
	19	경·공매 완료 물건에 대한 세외수입 압류해제 누락 방지
	20	장기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누락 방지
서울 행정 (12)	1	재산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농지 자료 정비
	2	국가유공자 등이 세외수입 채납 시 주정차위반과태료 부당 감면 방지

구분	No	예방행정 프로그램명
	3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과오납 환급금 압류 누락 방지
	4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부과 누락 방지
	5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리 누락 방지
	6	주정차위반 사전통지기간 이후 부과 누락 방지
	7	주정차위반 납부기간 이후 체납처리 누락 방지
	8	공유재산 토지 처분 후 소유권 이전 누락 방지
	9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의 처분처리 누락 방지
	10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과오납 환급금 압류 누락 방지
	11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따른 토지 등록 누락 방지
	12	경·공매 완료 물건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압류해제 누락 방지
지방 인사 (10)	1	근무연수 산정 오류에 따른 정근수당 부당 지급 방지
	2	신분변동자의 수당 부당 지급 방지
	3	승진임용 제한자의 부당 승진 임용 방지
	4	징계처분 등 승급 제한자의 호봉 승급 방지
	5	정액급식비 집행 부적정
	6	육아휴직수당 부당 지급 방지
	7	급여미지급 대상자 급여 부당 지급 방지
	8	대우공무원 부당 임용 방지
	9	시간제 공무원의 부당 수당 지급 방지
	10	신규임용자의 직급보조비 미지급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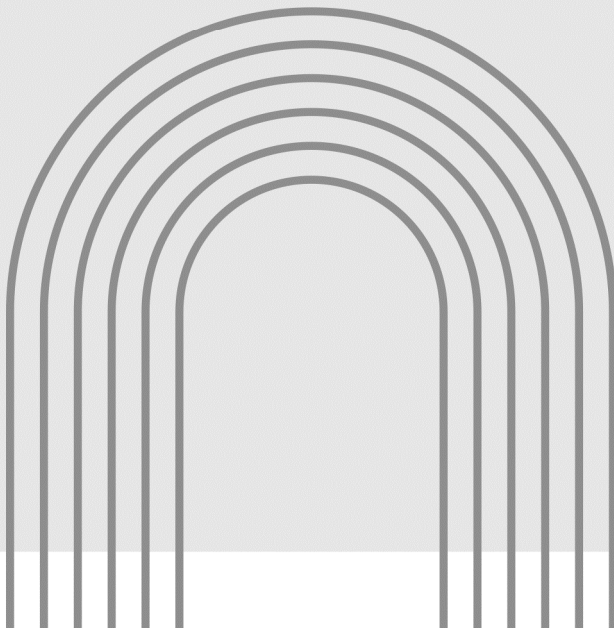
2 자기진단 표준업무 목록(30종)

순번	자기진단 업무명
1	옥외광고물 허가관리
2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체계적 관리
3	주민전산자료 효율적 관리
4	공무 국외여행 허가관리
5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지급관리
6	강사수당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여부
7	어린이집 운영 적정관리
8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소득재산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9	무단 투기 과태료의 적정관리
10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11	석유판매업 적정관리
12	법인세무조사의적정관리
13	수목자재의 효율적 관리
14	수익계약 적정관리
15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16	불법주정차 과태료 관리
17	계약관리
18	위법건축물단속관리
19	사회단체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20	주민전산자료 유출 및 주민등록 열람·발급 적정성
21	재개발 사업의 적정관리
22	지방세 과·오납 환부처리
23	예산 편성 이행 관리
24	지방세 비과세 감면 관리
25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관리
26	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27	사회적 기업 지원관리
28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부과 적정관리
29	합리적인 지역 축제 운영
30	도로 굴착·복구 적정관리



제2장

청렴 마일리지 제도



I 청렴 마일리지 제도 운영

1 추진개요

■ 추진목적

- 우리 시 소속 공직자의 자발적·능동적인 청렴 실천으로 청렴의식 제고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도모코자 함

■ 추진방향

- 청렴도 및 부패방지에 대한 전직원의 관심과 참여도 향상
- 부패방지 시책평가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평가 연계 운영
- 반부패·청렴 우수시책 적극 발굴 및 부서 전파

2 2020년 추진실적

■ 운영현황

구 분	부 서 별				개 인 별			
	대상 부서	입력 부서	참여율	평균 마일리지	대상 인원	입력 인원	참여율	평균 마일리지
계	327	175	53.5	46.4	6,888	3,458	50.2	18.1
본청·의회사무처	105	42	40.0	45.6	2,184	774	35.4	12.0
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	98	63	64.3	47.8	1,723	896	52.0	22.0
소방본부·소방서	124	70	56.5	45.7	2,981	1,788	60.0	18.7

■ 평가결과

구 분	평가그룹	우수부서	우수공무원	
			부 서 명	성명
최우수	소방본부·소방서	서부소방서 소방행정과	송도소방서 소방행정과	임○○
			서부소방서 소방행정과(현, 검암119안전센터)	이○○
우 수	직속기관· 출장소·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공촌정수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공촌정수사업소(현, 비상대책과)	최○○
			보건환경연구원 약품분석과(현, 남촌농수산물검사소)	최○○
장 려	본청·의회사무처	육아지원과	농축산유통과	오○○
			농축산유통과	박○○

* 우수부서 : 그룹별 1위부서, 우수자 : 그룹별 1~2위 순위자

3 2021년 개선사항

● 청백-e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평가분야 세분화

구 분	2020	2021
평가분야	· 청렴문화 정착 및 실천·활동	· 청렴시책 및 활동 참여 · 예방행정·청렴시스템 정착【분리】
	· 반부패 요인 제거 및 신뢰행정	· 반부패요인 제거 및 청렴도 향상

● 대외평가 실적향상을 위한 연계지표 신설 및 배점 상향

평 가 지 표		2020	2021	관련평가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평가【상향】	부서평가	건당 10점	건당 20점	부패방지 시책평가
청렴의 날 청렴실천 체크리스트 작성【신설】	부서평가	-	건당 3점	청렴도 측정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실적관리【상향】	부서평가	최대 10점	최대 20점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자기진단 제도 참여【상향】	부서평가	최대 10점	최대 30점	
	개인평가	최대 20점	최대 36점	
자기진단 제도 운영·관리【신설】	부서평가	-	최대 20점	

* 부패방지시책평가/청렴도 측정 : 국민권익위원회, 자율적 내부통제평가 : 행정안전부

●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지표 신설 및 청렴시책 참여점수 상향

- 청렴 관련 언론보도·캠페인 실시, 홍보물 제작 등 실적 반영
- 청렴시책 참여(감사관실 지정시책) 난이도에 따른 점수 차등 부여

평 가 지 표		2020	2021
청렴반부패 홍보활동【신설】	부서평가	-	건당 2점
청렴시책 참여(감사관실 지정시책)【상향】	부서평가	건당 5점	건당 5~20점
	개인평가	건당 5점	건당 5~20점
청렴 자기학습 이수【상향】	부서평가	5점	10점
	개인평가	5점	10점

● 감사 부담 완화와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 지표 신설

-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시(부서·개인 1건당 10점)

● 청렴마일리지 운영 내실화를 위한 허위실적 감점지표 신설

- 허위실적(증빙자료 미첨부 포함) 등록 시 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감점 실시

4 2021년 추진계획

● 운영기간 : 연중

- 평가대상 기간 : 2021. 1. 1. ~ 11. 30.(11개월)
- 평가자료 확정 : 2021. 12. 7.

● 대 상 : 327개 부서 6,88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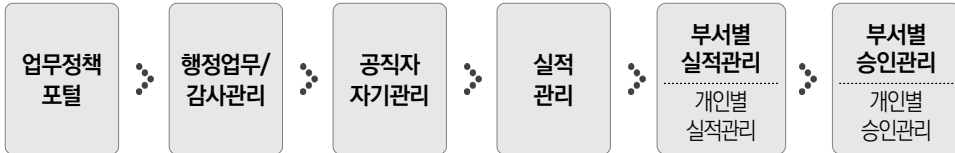
- 본청·의회사무처 : 105개 부서 / 2,184명
- 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 : 98개 부서 / 1,723명
- 소방본부·소방서 : 124개 부서 / 2,981명

- ▶ 3급 이상은 주무부서 인원에 포함
- ▶ 파견직원 중 파견부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원소속 실적에 포함
- ▶ 퇴직자, 퇴직예정자, 공무원, 청원경찰 제외
- ▶ '21.11.30일 기준 부서현원 반영 평가

● 운영방법 :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활용*

- 대상부서를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 실시
- 개인별·부서별 청렴마일리지 수시 입력(부서장 승인전만 실적인정)
- 감점항목은 감사관실에서 일괄 입력

* 시스템 실적관리 절차



● 평가항목

구 분	주 요 내 용	부서별	개인별
청렴시책 및 활동 참여	청렴교육 이수, 청렴소통의 날 운영, 청렴시책 참여	11개	6개
예방행정·청렴시스템 정착	청백-e 시나리오 발굴, 모니터링 처리, 자기진단 제도 운영	5개	2개
반부패요인 제거 및 청렴도 향상	제도개선 이행, 청렴해피콜 운영, 청렴신고	2개	1개
감점	예산부당집행, 허위실적, 징계 등	2개	4개

* 평가지표 및 세부기준 : 붙임 1, 2 참고

5 2021년 운영평가

■ 평가지표 선정

● 지표 선정기준

-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과 관련 있는 항목
- 부서 및 개인 참여가 용이하고 개선이 필요한 항목
- 활동실적에 대한 계량화 및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항목

● 지표 확정

-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 공직윤리 실무위원회 심의 후 확정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 공직윤리 실무위원회 심의】

▶ 구 성

구 분	위 원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8명)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감사관, 재정기획관, 복지국장, 환경국장, 행정국장, 주택복지국장,
공직윤리 실무위원회(7명)	감사관, 평가담당관, 인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소방감사담당관, 경제청 기획정책과장,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안전부장

▶ 기 능

- 마일리지 항목 및 감점 항목 심의
- 마일리지 부여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 평가결과 성과반영 및 우수부서, 개인우수자 결정 심의

■ 평가방법

● 점수산출

- 개인 : 개인평가항목 점수와 감점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 부서 : 부서평가항목 점수와 감점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 개인점수 미포함
- ※ 고의로 허위실적 입력 시 감점 처리, 증빙자료가 불충분한 실적 제외

● 순위선정 : 평가 대상 그룹별 고득점 순으로 순위 선정

【동점 발생 시 우선순위】

개인

- ① 감점이 없는 자
- ② 청백-e 모니터링 시나리오 채택건수가 많은 자
- ③ 청백-e 모니터링 시나리오 발굴건수가 많은 자
- ④ 부서 '청렴소통의 날' 참여 실적이 높은 자
- ⑤ 감사관실 지정 청렴시책 참여 실적이 높은 자
- ⑥ 2020.11~2021.3월 실적이 높은 자
- ⑦ 자기진단 제도 참여율이 높은 자

부서

- ① 감점이 없는 부서
- ② 청백-e 모니터링 시나리오 채택건수가 많은 부서
- ③ 청백-e 모니터링 시나리오 발굴건수가 많은 부서
- ④ 청백-e 모니터링 적기처리율이 높은 부서
- ⑤ 자기진단 제도 직원참여율이 높은 부서
- ⑥ 청렴실천 부서과제 우수부서
- ⑦ 2020.11~2021.3월 실적이 높은 자

■ 평가일정

● 중간평가

- 추진시기 : '21. 7.
- 주요내용 :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우수부서 인센티브 부여(5점)

● 최종평가

- 추진시기 : '21. 12.
- 주요내용 : 개인별·부서별 누적실적 평가

■ 평가결과 환류

● 청렴마일리지 인센티브 부여

- 우수 부서 및 개인 표창
 - 시 기 : '22. 2.
 - 대 상 : 우수 3개 부서 및 유공공무원 6명
 - 훈 격 : 인천광역시장
 - 포상금 : (부서) 120만원 (개인) 60만원 * 22년도 예산편성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청렴 우수부서 인증 표지판 부서입구 게시
 - * 청렴 우수부서에서 부패행위자 발생 시 인증 표지판 회수

● 청렴마일리지 평가항목 활용

- 5급 이상 직무성과평가 반영(대내·외 협력성과 분야 일부 반영)
 - 청렴교육(1점), 청백-e 적기처리율(0.5점), 청백-e 적기승인율(0.5점), 외부강의등 적발사례(감점)

■ 행정사항

- '21년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공직윤리실무위원회 심의(서면) : '21. 3.
- 평가항목별 개인·부서 실적 관리(전부서) : '21. 3. ~ 11.
- 공무원 징계현황 제출(인사과) : '21. 12.

II 청렴 마일리지 평가지표 및 세부기준

1 2021년 평가지표

■ 부서 평가지표

분 야	평 가 항 목	평가기준	부여점수	최대점수	실적입력
청렴시책 및 활동 참여	① 전직원 청렴 집합교육 이수	이수율	15~20	20	부서/수시
	② 전직원 청렴 사이버교육 이수	이수율	15~20	20	부서/수시
	③ 청백-e 시스템 사용자 교육 이수	1회당	10	20	부서/수시
	④ 청렴 자기학습 이수	이수시	10	10	부서/수시
	⑤ '청렴소통의 날' 운영	1회당	5~8	80	부서/수시
	⑥ 청렴실천 부서과제 발굴 추진	1건당	3	-	부서/수시
	⑦ 청렴시책 참여(감사관실 지정시책)	1회당	5~20	-	부서/수시
	⑧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실적관리	관리율	12~20	20	부서/수시
	⑨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1회당	10	-	부서/수시
	⑩ 청렴반부패 홍보 추진	1회당	2	-	부서/수시
	⑪ 청렴마일리지 중간평가 운영결과	우수부서	5	5	감사관실/ 일괄 입력
예방행장· 청렴시스템 정착	① 청백-e 예방행정 시나리오 발굴 기여	1건당	10~20	-	부서/수시
	② 청백-e 모니터링 적기 처리	적기처리율	12~20	20	부서/ 11.30일 기준
	③ 청백-e 모니터링 적기 승인	적기승인율	12~20	20	부서/ 11.30일 기준
	④ 자기진단 제도 참여	참여율	10~30	30	부서/ 11.30일 기준
	⑤ 자기진단 제도 운영·관리	승인율	8~20	20	부서/ 11.30일 기준
반부패요인 제거 및 청렴도 향상	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평가	계획수립 이행완료	10 10	-	부서/수시
	② 청렴해피콜 운영 우수부서	1회당	3	-	부서/수시
감 점	① 예산 부당 집행(여비, 업무추진비, 보조금 등)	1회당	△ 5	-	감사관실/ 일괄 입력
	② 허위실적 입력	1건당	△ 10	-	감사관실/ 일괄 입력

※ 감점 항목과 '21.11.30일 기준 평가항목 제외 부서 수시등록 원칙

■ 개인 평가지표

분 야	평 가 항 목		평가기준	부여점수	최대점수	기준특성
청렴시책 및 활동 참여	① 청렴 교육 이수	4급이상 고위공직자 교육	수료시	20	20	의무
		5급이하 청렴(연극) 교육	수료시	20	20	
		청렴특별 집합교육(감사관실 주관 청렴교육)	1회당	5	-	자율
		청렴 자기학습	이수시	10	10	
		교육기관 집합교육(인재개발원, 청렴연수원)	1회당	10	-	
		사이버교육(외부기관 포함)	1회당	5	40	
		청백-e 시스템 사용자 교육	1회당	10	20	
	②	청렴서약 이행(청렴서약서 등록)	등록시	4	4	의무
	③	'청렴 소통의 날' 주관 및 참여	주관 1회당	4	40	의무
			참여 1회당	3	30	의무
	④	청렴시책 참여(감사관실 지정시책)	1회당	5~20	-	자율
예방행정· 청렴시스템 정착	①	청백-e 예방행정 시나리오 발굴 기여	1건당	10~20	-	자율
	②	자기진단 제도 참여	1건당	3	36	의무
반부패요인 제거 및 청렴도 향상	① 청렴 신고	행동강령 위반 신고	1회당	20	-	의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1회당	15	-	
		기타 위반행위 신고	1회당	10	-	
감 점	① 공무원 비위 행위	중징계(정직, 강등)	1회당	△30	-	
		경징계(견책, 감봉)	1회당	△20	-	
		경고처분(불문경고)	1회당	△10	-	
		주의처분(훈계)	1회당	△ 5	-	
	②	인사청탁자	1회당	△20	-	
	③	외부강의등 관련 적발	확인시	△ 5	-	
	④	허위실적 입력	1건당	△ 10	-	

※ 감점 항목 제외 개인 수시등록 원칙

2 2021년 평가지표별 세부기준

■ 부서평가 세부기준

1. 청렴시책 및 활동 참여

① 전직원 청렴 집합교육 이수

○ 이수율 = (집합교육 이수 직원수/부서 직원수)×100

이수율	90% 이상	89~80%
점수	20	15

▶ 교육이수 증빙자료 첨부 시 인정, 동일과정은 중복인정하지 않음

② 전직원 청렴 사이버교육 이수

○ 이수율 = (사이버교육 이수 직원수/부서 직원수)×100

이수율	90% 이상	89~80%
점수	20	15

▶ 교육이수 증빙자료 첨부 시 인정, 동일과정은 중복인정하지 않음

③ 청백-e 시스템 사용자 교육 이수

○ 평가기준

- 현장교육/중앙교육 : 부서담당자 참여 시
- 온라인교육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온라인교육 부서원 10% 이상 이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온라인교육 : <http://klidmanual.multicampus.com>

구분	현장교육/중앙교육	온라인교육
점수	10	10

▶ 교육이수 증빙자료 첨부 시 인정, 현장교육(중앙교육)과 온라인교육 각 1회 인정

④ 청렴 자기학습 이수【확대】

○ 평가기준 : 부서원의 90% 이상 청렴 자기학습 상시학습 인정 시

구분	청렴소통의 날 운영 1회	내부 청렴실천 체크리스트 작성 1건
점수	5	3

⑤ ‘청렴의 날’ 운영【확대】

- 평가기준 : 청렴의 날에 청렴자체교육회의토론캠페인 등과 청렴실천 체크리스트 점검 실시

구분	청렴의 날 운영 1회	내부 청렴실천 체크리스트 작성 1건
점수	5	3

- ▶ 각각 월 1회 인정(청렴의 날 운영 : 부서장 결재를 득한 결과보고 첨부 시 인정 청렴실천 체크리스트 작성 :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 부서장 결재완료 시 인정)

⑥ 청렴실천 부서과제 발굴 추진【확대】

- 평가기준 : 부서 자체적으로 청렴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추진
 - ▶ 청렴의 날과 중복되는 단순 반복 사례(교육회의토론 등) 제외되며 반복 실시되는 시책은 1회 한해 인정
 - ▶ 계획서와 결과보고 모두 제출 시 실적 인정

⑦ 청렴시책 참여(감사관실 지정시책)【확대】

- 평가기준
 - 감사관실에서 청렴마일리지 부여를 안내한 시책 참여 시
 - 지정시책별 점수 차등부여

구분	1회당
점수	5~20

⑧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실적관리【확대】

- 관리율 = (실적등록 직원수/부서 직원수)×100

관리율	95% 이상	90~94%	80~89%
점수	20	16	12

- ▶ (부서) 실적관리율만 입력, 증빙자료 불요 / (감사관실) 실적등록 인원 확인

⑨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신설】

- 평가기준 : 사전 컨설팅 감사 신청 시
- 대상사무 : 인천광역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사전 컨설팅감사의 대상】

1. 업무 추진 시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
2. 업무 추진 후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
3. 관련 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사전 컨설팅감사가 필요한 경우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 제외】

1. 단순 법령 해석 또는 제도 개선이나 법령 개선 건의와 관련된 사항
2. 이미 처분이 이루어져 사후 시정이 불가능한 사항
3. 감사·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를 요구받은 사항
4. 행정심판 또는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재결 또는 판결을 받은 사항
5. 유권해석 사례 파악 등을 통해서 신청기관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
6. 신청기관의 인사·급여 등 행정청의 내부 문제로 주민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7.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 ▶ 사전컨설팅 신청 공문 등록 시 인정

Ⅲ 청렴반부패 홍보 추진【신설】

- 평가기준
 - 청렴 관련 언론보도, 홍보물 제작, 청렴캠페인 실시
 - ▶ (언론보도) 동일내용은 1건으로 처리 (캠페인) 계획서와 결과보고 제출 시 인정

Ⅳ 청렴마일리지 중간평가 운영결과

- 평가기준 : 그룹별 중간평가 결과 상위 10% 해당부서
 - ▶ 중간평가 완료 후 감사관실 일괄 입력

2. 예방행정·청렴시스템 정착**① 청백-e 예방행정 시나리오 발굴 기여**

- 평가기준
 - 발굴 : 청백-e 모니터링 신규 시나리오 시스템 등록(기본 10점)
 - 채택 : 발굴 시나리오가 실무협의회 안건으로 선정되어 채택(추가 10점)

구분	발굴	채택
점수	10	10

- 등록방법 : 청백-e 시스템 > 시나리오 관리 > 시나리오 발굴

* 시나리오 발굴은 연중 추진하나 채택은 행안부 시나리오 유효성 검증기한(‘21. 5월한) 내 제출 건에 한하여 반영 가능하며, 안건 선정 시 결과 검증 협조 필수

② 청백-e 모니터링 적기 처리(‘21.11.30일 기준 실적)

- 적기처리율 = (적기처리기한 내 담당자 처리건수/전체 건수)×100

적기처리율	95% 이상	94~90%	89~80%
점수	20	16	12

* 업무지원(확인) 시나리오는 평가제외

- ▶ (부서) 처리율만 등록, 증빙자료 불요 / (감사관실) 시스템 실적 확인

③ 청백-e 모니터링 적기 승인(‘21.11.30일 기준 실적)

- 적기승인율 = (적기승인가한 내 관리자 승인건수/전체 건수)×100

적기승인율	95% 이상	94~90%	89~80%
점수	20	16	12

* 업무지원(확인) 시나리오는 평가제외

- ▶ (부서) 승인율만 등록, 증빙자료 불요 / (감사관실) 시스템 실적 확인

④ 자기진단 제도 참여【확대】(‘21.11.30일 기준 실적)

- 참여율 = (자기진단표 작성 직원수/부서 직원수)×100

참여율	60% 이상	50~59%	40~49%	30~39%	20~29%
점수	30	25	20	15	10

* 작성한 계정 기준으로 산정, 1명이 2건 작성하여도 1건 인정

- ▶ 청백-e 시스템 내 결재완료건만 인정(수기 작성, 청백-e 미결재 불인정)

⑤ 자기진단 제도 운영·관리【신설】

- 승인율 = (최종승인건수/자기진단표 작성건수)×100

승인율	100%	99~90%	89~80%	79~70%
점수	20	16	12	8

3. 반부패요인 제거 및 청렴도 향상

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평가【확대】

- 평가기준
 - 계획수립 : 권익위 제도개선 과제 이행계획 수립(기본 10점)
 - 이행완료 : 권익위 제도개선 과제 이행완료(추가 10점)
 - ▶ 1개의 자치법규에 제도개선 과제가 다수일 경우 1건으로 인정
 - ▶ 관련 공문 첨부 시 실적 인정

② 청렴해피콜 운영 우수부서

- 평가기준 : 매월 실시되는 청렴해피콜 운영결과 우수부서로 선정
 - 우수부서 : 전체 설문항목에서 “매우만족” 평가를 받은 부서
 - ▶ 청렴해피콜 자료 제출은 실적에 해당하지 않음

4. 감점

① 예산 부당 집행

- 감점기준 : 여비, 업무추진비, 보조금 등 예산의 부당사용 적발
(각종 감사 및 조사, 신고등으로 부당사용 확인시)

② 허위실적 입력【신설】

- 감점기준 : 증빙자료 고의누락 및 허위실적 등록확인 시 해당 실적
무효처리 및 감점(건당 10점)

■ 개인평가 세부기준

1. 청렴시책 및 활동 참여

① 청렴교육 이수

- 평가기준 : 교육이수 증빙자료 첨부 시

【감사관실 주관 교육】 4급이상 고위공직자 교육 / 5급이하 청렴(연극) 교육
 청렴특별 집합교육(감사관실 주관) / 청렴 자기학습
 【교육기관 집합교육】 인재개발원, 청렴연수원 등
 【사이버교육】 인재개발원, 기타 외부기관의 청렴사이버교육
 【청백-e시스템 사용자교육】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교육 및 감사관실 주관 현장교육
 * 온/오프라인 각 1회 인정

- ▶ 동일과정은 중복인정하지 않음

② 청렴서약 이행 : 청렴서약서 스캔하여 공직자자기관리시스템 등록

③ ‘청렴의 날’ 주관 및 참여

- 평가기준
 - ‘청렴의 날’ 청렴 관련 교육·회의·토론·캠페인 등 실시
 - 청렴 실천 체크리스트 활용 자가진단 실시

구분	주관 (청렴리더)		참여 (청렴리더 제외)	
	1회당	최대점수	1회당	최대점수
점수	4	40	3	30

- ▶ 월 최대 1회 인정(부서장 결재를 득한 결과보고 첨부 시 인정)/주관 또는 참여 중 택일

④ 청렴시책 참여(감사관실 지정시책)【확대】

- 평가기준 : 감사관실에서 청렴마일리지 부여를 안내한 시책에 참여한 자
 - 지정시책별 점수 차등부여

구분	1회당
점수	5~20

⑤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신설】

- 평가기준 : 사전 컨설팅 감사 신청자
 - ▶ 사전컨설팅 신청 공문 첨부시 인정

⑥ 자원봉사헌혈 참여

- 평가기준 : 자원봉사 활동(1회 2시간 이상)헌혈 참여자
 - ▶ 자원봉사센터 확인서 또는 헌혈증서 첨부

2. 예방행정청렴시스템 정착

① 청백-e 예방행정 시나리오 발굴 기여

- 평가기준
 - 발굴 : 청백-e 모니터링 신규 시나리오 시스템 등록 시(기본 10점)
 - 채택 : 발굴 시나리오가 실무협의회 안건으로 선정되어 채택 시(추가 10점)

구분	발굴	채택
점수	10	10

- 등록방법 : 청백-e 시스템 > 시나리오 관리 > 시나리오 발굴

* 시나리오 발굴은 연중 추진하나 채택은 행안부 시나리오 유효성 검증기한('21. 5월한) 내 제출 건에 한하여 반영 가능하며, 안건 선정 시 결과 검증 협조 필수

② 자기진단 제도 참여【확대】

- 평가기준 : 청백-e 시스템 내 자기진단표 작성 시

구분	1회당	최대점수
점수	3	36

- ▶ 청백-e 시스템 내 결재완료건만 인정(수기 작성, 청백-e 미결재 불인정)

3. 반부패요인 제거 및 청렴도 향상

① 청렴신고

- 평가기준 : 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기타 위반행위 신고 시
- 신고방법
 - 업무정책포털/행정업무/감사관리/부정청탁·금품등 수수 신고
 - 금품수수 및 기타 위반행위 전화신고(청렴센터 440-3185)

4. 감점

① 공무원 비위행위

- 감점기준 : 공무원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 등 처분이 확정된 자
 - 중·경징계, 경고처분, 주의처분 등을 구분하여 감점처리

② 인사청탁자 : 인사부서에서 공개한 인사청탁자

③ 외부강의등 관련 적발 : 미신고, 초과사례금 신고·반환 위반 등 확인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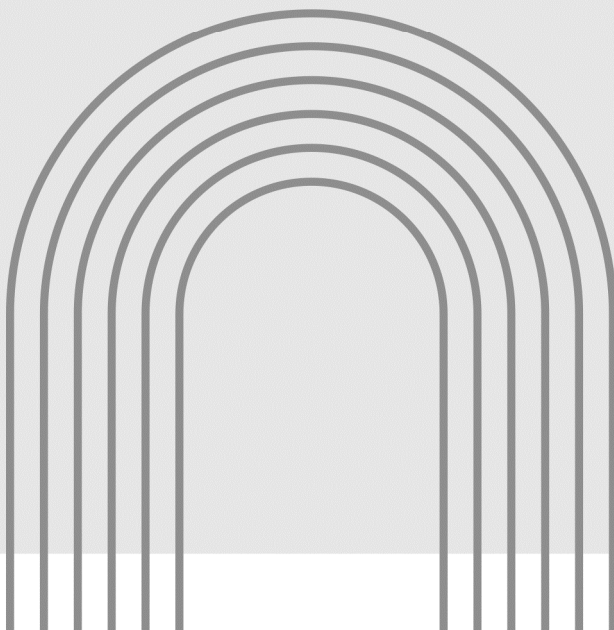
④ 허위실적 입력【신설】

- 감점기준 : 증빙자료 고의누락 및 허위실적 등록 확인 시
해당 실적 무효처리 및 감점(건당 10점)



제3장

청렴 해피콜 제도



I 청렴 해피콜 제도 운영

1 추진개요

■ 추진목적

- 청렴도 취약분야 업무처리 과정 상시 모니터링으로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립하고 시민만족도 향상을 도모
 - ↳ 우리시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견인 역할

■ 추진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조

2 2020년 추진실적

- (운영현황) 10회, 407건 완료

구분	설문대상	실시현황					수신율(%)
		계	공사	용역	보조금	민원	
건수	458	407	227	132	16	32	88.86

* 설문실패 : 51건(미수신, 설문거부, 전화번호 오류 등)

- (설문결과) 평점 9.78점으로 '만족' 이상 평가

(10점 만점)

평점	항목별		업무별			
	적극성	투명성	공사	용역	보조금	민원
9.78	9.79	9.77	9.75	9.81	9.94	9.84

- (결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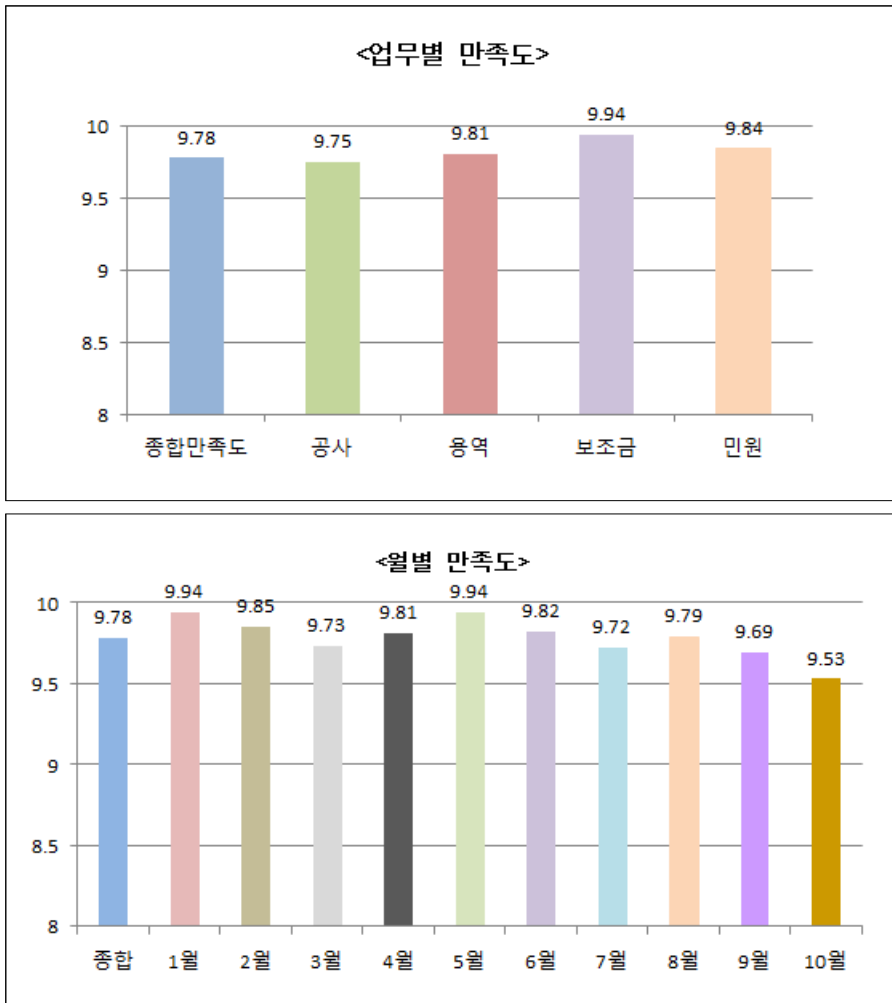
- '20년도 청렴해피콜은 국민권익위 자체청렴도 측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부패경험 항목을 제한하고 민원 불편사항 개선과 의사소통 창구로서 청렴도 저해요인 제거 등 예방적 역할에 집중함.

※ 반부패신고제도 안내 등 청렴문자 발송(10회, 4,228건)

- 종합 만족도는 평점 9.78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설문조사에 대한 후한 평가 경향으로 매년 '만족'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업무별로는 보조금 분야가 9.94점으로 가장 높고 민원>용역>공사순으로 조사되었고, 항목별로는 적극성이 투명성보다 조금 높게 나타남.
- 월별로는 10월이 9.53점으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으며, 이는 사업 종료로 응답자가 사업부서의 눈치를 보지않고 가감없이 평가한 결과로 보이며,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기간 : 매년 8월~11월

〈 2020년 청렴해피콜 운영현황 〉



3 2021년 운영계획

■ 운영방향

- 청렴해피콜 주관부서 다원화로 설문 의 효과성 및 정확성 강화
 - 市 감사관실에서 일괄 실시하되, 소방·상수도 민원업무는 자체 실시
- 건의 및 불편사항 실질적 개선으로 실효성 확보
 - 시정조치 필요시 익명성 처리 후 관련부서 즉시 통보·개선
 - 맞춤형 순회교육 및 컨설팅 실시를 통하여 업무담당자 청렴도 향상
- 설문항목 구체화 및 공정성 항목 추가로 청렴도 평가 상승 견인

■ 운영개요

- (운영시기) '21. 1월 ~ '21. 12월
- (운영대상) 공사·용역, 보조금 지원, 취약 민원분야
 - (공사·용역)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 (보조금 지원) 연간 1천만원 이상
 - ※ 민간경상(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307-03), 민간행사(307-04), 사회복지(307-11), 민간자본(402-01 / 402-02)
 - (취약 민원분야) 7종
 - ※ 비영리단체 등록 및 관리, 건설공사 품질시험, 배출시설허가, 공유재산관리, 여객자동차(시내버스) 운송사업, 소방 업무, 상수도 업무

■ 세부운영 계획

- (청렴해피콜 운영체계)



▶ 공직자 반부패·부조리 신고안내 등 청렴문자 발송 : 월1회(청렴해피콜과 병행 추진)

● (명부작성·제출) 매월 15일까지 (초 부서 → 市 감사관실)

- (공사·용역) 담당공무원 지정시(계약시), 준공시
- (보조금) 최초 지급시
- (민원업무)
 - 비영리단체 등록 및 관리 : 등록·허가(변경포함) 신청 시
 - 건설공사 품질시험 : 품질시험 및 검사 의뢰 시
 - 배출시설허가 : 배출시설 설치 허가(변경 포함) 시
 - 공유재산관리 : 매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체결 시
 - 여객자동차(시내버스) 운송사업 : 인가(면허, 등록, 운임요금 신고 등 포함) 또는 변경 시
 - 소방 업무 : 위험물 시설 설치 허가(변경포함) 시 * 자체 실시
 - 상수도 업무 : 상수도 요금 관련 민원제기 시 * 자체 실시

● (설문방법) 月 1회 전화설문, 감사부서에서 실시

- (소방·상수도 민원업무) 소방본부·상수도사업본부 감사부서 자체 실시
- (그외 업무) 市 감사관실 일괄 실시

● (설문내용) 4개 항목

- (적극성) 담당자의 업무처리 적극성 평가
- (투명성) 업무처리 기준·절차 공개여부 확인
- (공정성) 담당자의 권한 남용, 부당요구 등 확인
- (기 타) 기타 불편사항, 건의사항 등

● (점수산정) 설문 측정지표를 10점 만점으로 산출

- ① 매우만족(10점) ② 만족(8.75점) ③ 보통(7.5점) ④ 불만족(6.25점)
- ⑤ 매우불만족(5점)

● (결과활용) 우수부서* 청렴마일리지 부여, 개선사항 시정조치

* 초 설문항목에서 '10점 만점' 받은 부서. 단, 설문전화 2회 이상 미수신, 명부 불성실 제출부서 제외

II : 청렴 해피콜 대상업무

업무분야	세부업무	제출대상	제출부서
계약	공사 관리 및 감독	- 계약액 2천만원 이상 공사 관리 및 감독대상자(하도급사 포함)	해당부서
	용역 관리 및 감독	- 계약액 2천만원 이상 용역 관리 및 감독 대상자 (하도급사 포함)	해당부서
보조금	보조금 지원	- 1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급받은 민원 * 민간경상(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307-03), 민간행사(307-04), 사회복지(307-11), 민간자본(402-01/402-02)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 담당자 및 민원인	해당부서
민원	공유재산 관리	- 공유재산 매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체결 민원인	해당부서
	비영리단체 등록 및 관리	-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허가(변경)를 신청한 단체의 담당자	해당부서
	배출시설 허가	-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 허가를 받은 민원인	대기보전과 환경녹지과
	건설공사 품질시험	- 건설공사용 자재의 품질시험 및 검사 의뢰 민원인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 시내외 버스 운송사업 인가(면허, 등록, 운임요금 신고 등) 또는 변경하였거나 운송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노선조정 업체 등 민원인	버스정책과
	소방민원	- 위험물시설 설치 허가(변경) 민원인 - 완비증명을 받은 민원인 * 소방본부 자체 실시	소방본부 각 소방서
	상수도민원	- 상수도 요금 관련 민원인 *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실시	상수도사업본부 각 수도사업소

Part 6

청렴
취약분야
모니터링

Ⅲ 청렴 해피콜 설문지

〔 청렴 해피콜 설문지 〕

첫인사	안녕하세요? 인천시청 감사관실 000입니다.
목적전달	○○○ 선생님 되십니까?(자리에 계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0월 0일자로 처리된 000업무와 관련해서 담당부서 공무원에 대한 업무처리 만족도 조사 차 연락드렸습니다.
통화가능 확인	위 업무와 관련하여 몇가지 여쭙어 보려고 하는데 시간 괜찮으신지요? YES : 네~ 감사합니다. NO :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친밀감 형성	그러면 질문 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①매우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불만족 으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	1. 업무처리의 적극성 담당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며, 업무 완수를 위해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질문2	2. 업무처리의 투명성 업무를 처리하는 기준이나 절차가 투명하게 잘 공개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질문3	3. 업무처리의 공정성 담당자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요구나 처분없이 공정하게 처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질문4	4. 기타 불편 및 건의사항 기타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인사	〈정상종료〉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안사항을 접수한 경우〉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전달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IV 청렴 해피콜 관련서식

청렴해피콜 안내문

인천시는 청렴도 취약업무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립하고자 업무 처리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청렴해피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청렴해피콜이란?

● 업무흐름도



● 설문내용

- 담당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며, 업무 완수를 위해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 업무를 처리하는 기준이나 절차가 투명하게 잘 공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 담당자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요구나 처분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2 업무처리기준 및 절차 (부서별로 대상업무에 맞게 작성)

- ①사업(발주)계획 → ②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③입찰 → ④낙찰자결정 → ⑤계약체결 → ⑥계약이행(착공 등) → ⑦설계변경, 기성검사 등 → ⑧ 준공(대가지급 등)

3 「공직자부조리신고 시스템」운영

- 인천시 공무원은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 인천시는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전화이용 : 032-425-1298 • FAX이용 : 032-429-1298
- 인 터 넷 :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 청렴인천/공직자부조리신고
- 우편이용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사업현황]

- 업무처리기관(부서) : • 업무구분 : 공사□ 용역□ 보조금□ 민원□
- 사업명 : • 업 체 명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핸드폰번호, 이메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고하신 정보는 인천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에 사용합니다. ① 기관의 청렴도 평가를 위한 설문(청렴해피콜) ② 청렴시책 홍보 및 공직자부조리신고 안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완료시까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대상인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가 제공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국민권익위원회
제공시기	매년 7월
제공의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6호, 제29조제1항
제공항목	성명, 핸드폰번호, 이메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보유기간	청렴도 조사 완료시까지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성명 : (인)

휴대전화번호 :

이 때 일 :

인천광역시청 귀하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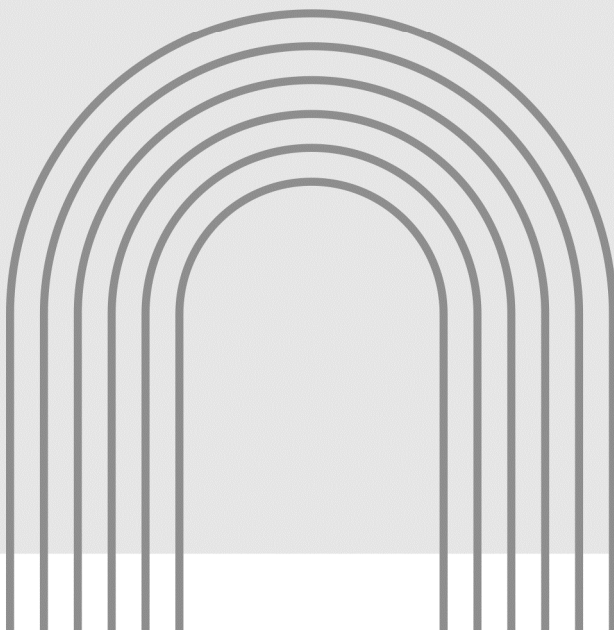
1

반부패 · 청렴정책



제1장

청렴도 측정



I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개요

■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기관의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진단
- 측정 결과 나타난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각급 기관들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

■ 실시현황

연 도	측정 모형	측정기관
'0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인·대기관 청렴도(외부청렴도) : 체감청렴도 + 잠재청렴도 • 체감청렴도 : 부패경험(제공빈도와 규모) 및 인식 • 잠재청렴도 : 업무환경, 행정제도, 부패통제 	71개
'03년		77개
'04년		313개
'05년		325개
'06년		304개
'07년		333개

모형 개편

'0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청렴도 : 외부청렴도 + 내부청렴도 • 외부청렴도 : 부패지수, 투명성지수, 책임성지수 • 내부청렴도 : 청렴문화, 업무청렴(인사·예산·업무지시) 	381개
'09년		478개
'10년		711개
'11년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일부 도입, 정책고객평가 시범 도입	684개

모형 개편

'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청렴도 : 외부청렴도 + 내부청렴도 + 정책고객 + 감점 • 외부청렴도* : 부패인식, 부패경험 * '17년까지는 부패지수, 부패위험지수로 측정 • 내부청렴도 : 청렴문화, 업무청렴(인사·예산·업무지시) • 정책고객평가 : 부패인식, 부패통제, 부패경험 ※ '20년부터 정책고객평가를 참고지표로 전환(종합청렴도 미반영) • 감점 : 부패사건 발생현황 ※ 신뢰도 저해행위 적발 시 감점 등 제재조치 ■ 지방의회('13년), 국공립대학('12년), 공공의료기관('13년)은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모형으로 별도 측정 	662개
'13년		699개
'14년		721개
'15년		760개
'16년		733개
'17년		702개
'18년		705개
'19년		732개
'20년		723개

〈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모형 〉



※ 공직유관단체는 외부청렴도(0.763), 내부청렴도(0.237) 가중합산

II 2020년도 청렴도 측정 성과

■ 촘촘하고 강화된 청렴도 측정 실시

-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에 적극행정 항목을 신설하여 기관의 적극행정 유인 제공
 - 그동안 청렴도를 측정하지 않았던 부패취약분야를 새롭게 발굴·측정하여 사각지대 없이 촘촘한 측정체계 구축
 - 지방체육회를 포함한 체육계 전반, 인구 20만명 이하 소규모 기초의회 등 신규 측정
 -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의 평가를 확대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더 반영하고 측정의 타당도·신뢰도를 제고
 - 종합청렴도에 반영하던 정책고객평가 비중을 외부청렴도로 대체하고, 정책고객평가 조사결과는 종합청렴도에 반영하지 않는 대신 기관에 세부 자료 제공
- ※ 정책고객평가 조사대상이 기관의 정책결정과정 등 전반을 경험·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종합 검토·개선

■ 국가위기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반부패 개혁 정책의 기반 제공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업무가 축소되거나 추진되지 못한 분야 등에 대해 조사범위를 조정하고, 점검·의견수렴 방식도 유연하게 적용
 - ※ 코로나19로 인해 학사 일정이 운영되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여 교육청의 학사운영 관련 측정업무는 올해 한시적으로 측정 제외 등
- 코로나19로 인한 공직사회의 영향을 현장에서 체감하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반부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Ⅲ 2021년도 주요 추진방향

■ 기본방향 : 청렴도 측정제도 개편 검토의 틀 속에서 측정 추진

- '02년에 도입되어 20년간 운영해 온 청렴도 측정제도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국민의 공감대와 공직자의 변화를 이끄는 제도로 지속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
- 지난 20년간의 성과와 제기된 개선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두루 검토하여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그 체계 안에서 '21년부터 적용 가능한 사항을 단계적으로 적용

■ 제도 개편 추진 방식

- 그동안 지적된 사항과 의견을 망라하여 측정 대상기관, 측정 모형·방식, 결과 발표·활용 등 청렴도 측정의 전 과정을 검토
 - 올해 반영 가능한 단기 개편사항과 내년 이후 반영할 중장기 방향을 종합 검토하여 개편안을 마련
 - ※ 청렴도 측정제도뿐 아니라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청렴수준 평가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발전적인 방안 마련
- 주요 검토 단계별로 관계기관*, 외부 전문가, 국민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검토하여 반영
 - ※ 기존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뿐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 추진 일정

- 관계기관(3월~4월), 전문가·국민(4월)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편 초안을 마련(5월)하고, 추가 의견수렴·검토를 거쳐 개편안 마련(6월)
- 즉시 반영 가능한 사항은 올해 실시계획(6월)에 반영하고, 내년 이후 적용 사항은 하반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내년 기본계획 등에 반영

IV 2021년도 청렴도 측정 세부계획

1 측정 대상기관(안)

■ 기본 방향

- 청렴도 측정제도 개편의 틀 속에서 개편 추진방향을 반영하여 권익위의 측정 대상 범위를 정비
 - 기존 기관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기관·업무의 규모와 성격, 대국민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주요 기관 위주로 측정
- 올해 권익위의 반부패 정책방향의 한 축인 지방 현장의 부패 근절을 위해 지방 공사·공단과 지방의회 측정을 강화
 - 주요 기관의 지방청 측정 및 결과 발표 강화 방안도 병행 검토

〈 2021년 기관유형별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안) 〉

구 분	계(개)	중앙행정 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 단체	지방의회		국공립 대 학	공공의료 기관
			광역시	기초	시도	지원		광역시	기초		
'20년	723	45	17	226	17	73	202	17	48	34	44
변동	△15	+2	-	-	-	-	+15	-	+17	△18	△31
최종대상 (잡정)	708	47	17	226	17	73	217	17	65	16	13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성 제고

- (행정기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전년과 마찬가지로 전수 측정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은 전수 측정하고, 교육지원청은 3개년간 전수 측정이 가능하도록 3년 주기 측정
 - ※ '20년 「정부조직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2개 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질병관리청) 신규 측정
- (공직유관단체) 각급 기관의 규모·예산 및 기관 성격, 측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관유형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을 전수 측정
 - 공공기관운영법(기재부)의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 중 공기업은 전수, 준정부기관은 정원 300명 이상, 기타공공기관은 500명 이상 기관의 전수 측정을 원칙으로 함

※ R&D 분야 청렴도 제고를 위해 기타공공기관 중 예산 1,000억원 이상 과학분야 연구원의 경우 정원 500명 미만이라도 측정대상에 포함(19개 기관)

※ 정원규모 기준에 따라 측정 제외기관에 해당하더라도 '20년 청렴도 측정결과 미흡기관(4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속 측정**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 '21년 측정(안) 〉

구 분	측정대상 수	측정 기준 (전년대비 변화)
공기업 (시장형·준시장형)	36개	전수 측정 (전년대비 3개 증)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70개	정원 300명 이상 전수 측정 (10개 감소) ※ 기존 기관 중 300명 미만 기관 측정 제외
기타공공기관	46개*	정원 500명 이상 전수 측정 (26개 증) ※ 기존 기관 중 500명 미만 기관 측정 제외
계	152개	

※ '21년 측정대상 기타공공기관 수는 별도모형으로 측정하는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한 수치임

- 그 외 공직유관단체는 기존 측정기관 중 **500명 이상 기관**을 측정하되, 지방부패 근절을 위해 측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기관 등은 규모가 다소 작은 기관도 측정
- 문재인 정부 5년차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금년에는 **청렴도 우수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적용하던 **면제 기준은 미적용**

● **(별도모형 기관) 국공립대학·공공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측정유예 의견이 제기된 바 있어 금년에 **시책평가 대상**이 되는 규모가 큰 기관과 국회 등에서 **취약기관**으로 지적된 **과학기술원**만 측정

- **(국공립대학)** 신입생 인원 2,500명 이상 12개 국립대학과 4개 과학기술원 등 16개 기관 측정
- **(공공의료기관)** 10개 국립대학병원, 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 등 의료기관 13개 측정

※ 감염병 전담병원인 지방의료원과 대학병원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치과대학병원은 측정 제외

■ 지방 현장의 부패 근절을 위한 측정 강화

● **(지방공사·공단)**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개발·도시·시설관리** 관련 지방 공사·공단 58개 측정

- 광역지자체 산하 교통·시설관리 등 관련 기관 30개 전수 측정

- 기초지자체 산하 교통·시설관리 등 공사·공단의 경우 정원 150명 이상 28개 기관 전수 측정

※ 지방공사·공단은 다른 공직유관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미치는 영향력이 전국 단위가 아닌 해당 지자체로 한정적이어서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하기 보다 매년 주요 분야별로 측정대상 검토

- (지방의회) 광역의회는 전년과 같이 전수 측정하고, 기초의회는 인구 10만명 이상 의회 중 '19년, '20년에 청렴도 측정을 받지 않았던 의회 65개* 전수 측정

※ 인구 10만명 이상 기초의회 64개, 권역 내 해당기준의 기초의회가 없는 경우 인구가 가장 많은 기초의회 1개(충북 진천군 의회)

- (지방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일선을 담당하는 주요기관의 지방청 측정·발표 강화 방안 검토

- 주요 중앙행정기관의 효과적인 반부패 노력 유인을 위해 지방청에 대한 측정 및 발표 강화 방안 검토

- 최근 법령개정 등에 따라 업무·조직 등이 대폭 변경된 기관(소방·경찰 등)의 측정 및 결과 발표 방식 검토

※ 상반기 중 관계기관 의견수렴, 청렴도 제도 개편안 검토결과 등을 종합한 구체적인 방안을 '21년 실시계획('21. 6월)에 반영

2 측정 업무

■ 측정 업무의 발굴 및 조정

- 부패개연성이 높고, 국민안전 관련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부패취약분야 업무 추가 발굴
 - 측정 대상기관 전수에 대해 일정 예산규모 이상의 업무 또는 기관의 주요 업무를 조사하여 신규 업무 발굴 및 범위 조정
 - 기관의 중점 추진업무,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거나 재량성이 큰 업무, 부패사건 발생 업무 등 중점 발굴검토
- 현 측정 업무 중 지속적으로 청렴도 점수가 높거나 부패경험이 없는 업무, 조사표본수 부족으로 조사가 곤란한 업무 등은 재검토

■ 기관별 지방청 등 측정

- 중앙행정기관 중 측정대상 업무 2개 이상을 지방청에서 수행하는 기관 중 지방청별 조사가 가능한 경우 지방청을 측정하고 세부 측정결과 제공
- 중앙행정기관 외에도 지방청, 지사, 지역본부 또는 실국별로 일정 규모 이상 표본 확보가 가능한 기관의 경우 세부측정 결과 제공 검토
 - ※ 지방청 등 측정 신규요청 등 관련 사항은 국민권익위의 각 기관 담당자와 협의
 - ※ 지방청별 일정 규모 이상 조사가 된 지방청의 경우에만 지방청별 세부 측정결과 제공 가능
- 산하 행정구가 있는 기초 시는 행정구별 측정 결과 제공

3 측정모형

■ 기존 측정모형 보완

- 청렴도 개편안 검토 시 설문조사와 부패사건 감점의 합리적 적용을 위해 부패경험 항목 반영방식, 검증 강화 방안, 객관 지표 조정, 새로운 부패유형 반영 방안 등 검토
 - ※ 개편안에 반영된 내용 중 올해 적용이 가능한 사항은 올해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적용하고, 중장기적 적용 사항은 내년 이후 반영 추진

〈측정 모형·방식 관련 주요 검토사항(예시)〉

■ 설문조사 방식 적용 관련

- ① 부패경험을 설문조사 방식으로 측정한다는 장점을 살리면서 보다 합리적이고 수용성이 높은 적용 방안 검토
- ② 외부·내부 청렴도 격차 발생 등 국회·관계기관 주요 의견 검토
- ③ 현상에 대한 진단뿐 아니라 부패 원인과 개선방안을 심층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안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관련

- ① 객관적 지표인 부패사건 감점에 대해 반영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유지·축소해야 한다는 상존하는 의견에 대한 검토
- ② 부패금액이 산정되지 않는 새로운 부패유형의 적절한 반영 방안

■ 청렴도 모형에 기관의 노력도를 반영하거나,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통합하여 기관 종합평가로 실시하는 등 측정 모형·체계 전반의 개편에 관한 사항

■ 기관의 지속적 청렴노력을 유인하면서 국민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방안 검토

※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5>의 의견제출 서식 상의 내용 확인

- 개편을 위해 검토한 사항 중 '21년 적용이 가능한 사항은 실시계획 및 청렴도 측정 과정에 반영하여 추진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상황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신규 측정항목 등 검토
 - ※ 정책고객평가 결과는 전년과 같이 종합청렴도에는 미반영하고, 세부 측정결과를 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

■ 기관유형별 특화된 별도 측정모형 적용

- 지방의회,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은 각 기관유형 업무특성을 반영한 특화모형에 근거하여 측정
 - ※ 지방의회, 공공의료기관 및 국공립대학은 7월 중 각 유형별 실시계획 별도 시행 예정

■ 신뢰도 저해행위 관리·제재 강화

- 청렴도에 대한 과열이 우려되는 기관 등에 대한 현지점검 실시
 - 표본관리, 측정 명부 점검 등 신뢰도 저해행위 집중 점검
 - ※ 현지점검 일정 및 방식은 코로나19 확산 등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 설문조사 기간 중 상시제보 창구를 운영하고, 제보된 사항에 대한 현지점검을 통해 신뢰도 저해행위 확인 및 감점 등 제재 조치
 - ※ 신뢰도 저해행위 예시 : 조사대상자 및 부패사건 현황 자료 조작, 호의적 응답 유도 등 표본 관리행위 등
- 기관이 자율적으로 자체청렴도를 측정하는 경우 청렴도 측정에 영향이 없도록 자체청렴도 가이드라인의 제한사항*을 준수
 - ※ 조사 실시 전·후에 국민권익위로 계획과 결과 개요 제출, 조사 기간(청렴도 조사 기간인 7월~11월은 조사 제한), 조사 횟수(상·하반기 1회만 가능), 조사 규모(청렴도 조사와의 중복성 최소화를 위해 조사 대상의 50% 이내), 응답자의 익명성 보호 조치 마련(표본 관리행위 금지) 등

4 > 결과발표

■ 기관유형

- 기관 정원 기준 등을 적용한 측정 대상기관 조정에 따라 결과 발표를 위한 기관유형 분류 방식 조정 검토
- 정원 300명~500명 미만의 소규모 기관 다수 측정 제외 및 중·대규모 기관 신규 측정, 지방 공사·공단 측정 대상기관 확대 등 조정 사항을 반영

■ 결과발표

- 전년과 동일하게 기관유형별 등급만 발표하고, 기관별 점수와 세부 분석 자료는 기관에 별도 제공

V : 향후 추진일정

■ 측정 대상기관 및 전문가 등 의견 수렴('21. 3~6월)

- 측정 대상 업무 및 측정 모형 등 '21년 측정을 위한 의견과 함께 청렴도 측정제도의 개편 관련 관계기관 의견 종합 수렴(3~4월)
- 청렴도 측정제도 개편방향 및 '21년 측정 관련 전문가·국민 등 의견 수렴(4~6월)

■ 용역 수행업체 선정('21. 3~5월)

- 조사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정경쟁입찰을 통해 민간 사회조사 전문기관 선정

■ 실시계획 통보 및 제도 개편안 마련('21. 6월 중)

- 측정 대상기관, 측정모형, 측정 대상 업무 등 확정
 - '21년 측정 관련 세부사항, 자료 제출 기준 등 설명·안내
 - ※ 설명회 계획 및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공문 시행 예정(5~6월 중)
- 청렴도 측정제도 개편안 마련(6월)

■ 측정대상자 명부 등 자료 수령 및 측정('21. 7~11월)

- 측정영역별 조사대상 명부, 부패공직자 자료 등을 수령하고, 제출명부 오기, 누락, 오염여부 등 점검(7~8월)
- 설문조사 및 부패사건 감점 산정 등 청렴도 측정(8~11월)
 - ※ 측정기간 중 자체청렴도 측정여부, 표본관리행위 등 현지점검

■ '21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21. 12월)

- 측정 결과 종합 분석·제공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개

붙임 1

측정대상 공공기관(잠정)

구 분	기관명		
중앙행정기관 (47개)	검찰청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무조정실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조달청 조세심판원 중소벤처기업부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환경부
자치단체(243개) 교육청 (90개)	자치단체 (243) - 광역 (17) - 기초 (226) · 시 (75) · 군 (82) · 자치구(69)	교육청(90) - 시도 (17) - 지원청 (73)	
공직유관단체 (217)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남구도시관리공단(서울) 강북구도시관리공단(서울) 강원도개발공사 강원랜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남개발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공무원연금공단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시설공단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 구미시설공단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신용보증기금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안산도시공사 안양도시공사	국토안전관리원 그랜드코리아레저 근로복지공단 금융감독원 기술보증기금 기초과학연구원 김포도시관리공사 김해시도시개발공사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인천) 남양주시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충청남도개발공사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구 분	기관명		
공직유관단체 (217)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코레일유통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에스알	코레일테크
	대전도시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파주도시관광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여주시관리공단	한국가스공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용인도시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적십자사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거래소
	대한체육회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교통공단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고용정보원
	도봉구시설관리공단(서울)	울산광역시도시공사	한국항공공사
	부산교통공사	울산시설공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산도시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부산시설공단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과학창의재단
	부산항만공사	인천교통공사	한국관광공사
	부천도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산림조합중앙회	인천도시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서구시설관리공단(인천)	인천시설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서울교통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시설공단	전남개발공사	한국국제협력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전북개발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기계연구원
	성남도시개발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성동구도시관리공단(서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성북구도시관리공단(서울)	주택관리공단	한국남동발전(주)
	세종도시교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주)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은행	한국농어촌공사
	송파구시설관리공단(서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창원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수원도시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동서발전(주)
	수협중앙회	춘천도시공사	한국마사회
	시흥도시공사	충북개발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해양환경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은행	화성도시공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환경보전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부동산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전기연구원	

구 분	기관명	
공직유관단체 (217)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조폐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소비자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폴리텍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예탁결제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전KDN(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전KPS(주)

붙임 2

측정대상 지방의회(82개, 잠정)

구 분		지방의회	
기초의회 (65개)	서울특별시(13개)	17개 광역 지방의회 전수	
		강북구의회	서대문구의회
		광진구의회	성동구의회
		금천구의회	영등포구의회
		도봉구의회	용산구의회
		동대문구의회	중구의회
		동작구의회	종로구의회
		마포구의회	
	부산광역시(10개)	강서구의회	부산진구의회
		금정구의회	사하구의회
		기장군의회	서구의회
		남구의회	연제구의회
		동래구의회	영도구의회
	대구광역시(2개)	남구의회	달성군의회
	인천광역시(2개)	계양구의회	연수구의회
	광주광역시(2개)	남구의회	서구의회
	대전광역시(2개)	동구의회	중구의회
	울산광역시(2개)	북구의회	울주군의회
	경기도(11개)	광주시의회	오산시의회
		군포시의회	의왕시의회
		안성시의회	이천시의회
		양주시의회	포천시의회
		양평군의회	하남시의회
		여주시의회	
	강원도(1개)	강릉시의회	
	충청북도(1개)	진천군의회	
	충청남도(5개)	공주시의회	보령시의회
		논산시의회	홍성군의회
		당진시의회	
	전라북도(1개)	군산시의회	
	전라남도(2개)	나주시의회	순천시의회
	경상북도(6개)	경산시의회	영주시의회
		경주시의회	영천시의회
		김천시의회	칠곡군의회
	경상남도(5개)	거제시의회	양산시의회
		밀양시의회	진주시의회
		사천시의회	

붙임 3

추정대상 국공립대학교 및 공공의료기관(잠정)

● 국공립대학교(16개 기관, 잠정)

구 분	학 교 명	
법인(6개)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인천대학교
국립대학교(10개)	강원대학교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전북대학교
	공주대학교	충남대학교
	부경대학교	충북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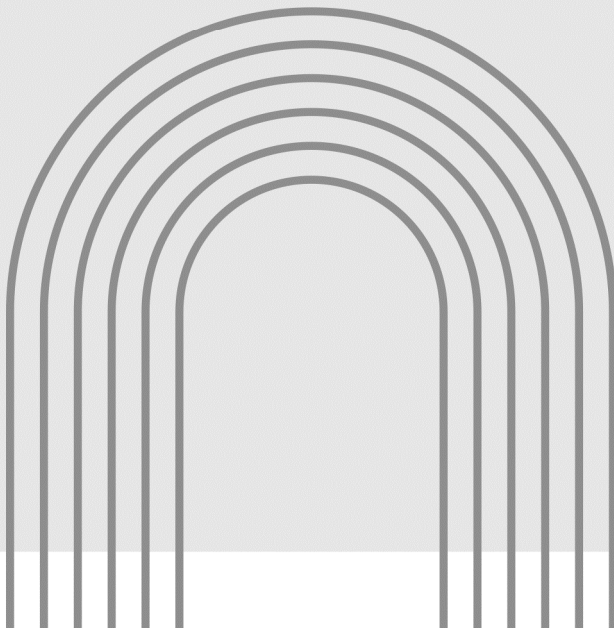
● 공공의료기관(13개 기관, 잠정)

구 분	병 원 명	
대학병원 (10개)	강원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중앙 산하 의료원 및 기타병원 (3개)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소속)	



제2장

부패방지 시책평가



I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개요

1 개요

■ 개념

- 각급 공공기관의 반부패 시책과 관련하여, 평가지표별로 1년간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평가 실시

※ 각급 기관의 부패방지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평가를 위해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개발하여 '02년 최초 실시

■ 추진 목적

-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함으로써 반부패 역량 제고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

※ 청렴도 측정은 각급 기관의 부패수준 진단이 목적, 시책평가는 기관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 견인이 목적

■ 실시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및 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 대상 기관

- 중앙, 광역자치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02년) 기초자치체('09년), 국공립대학('14년), 공공의료기관('15년) 등 평가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 : 전수평가
 - 기초자치단체 : 인구 40만명 이상
 - 공직유관단체 : 기관 정원(150명) 및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 국공립대학 : 신입생 인원 2,500명 이상
 - 공공의료기관 : 공공의료기관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2 기본방향

- (대상기관) 대국민 영향력이 큰 주요 공공기관을 포함하고 시책평가 제외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공분야 부패방지 노력 강화를 유도
- (평가지표) 청렴수준 향상을 위해 효율성이 높은 평가지표는 강화하는 등 반부패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 창출 도모
- (우수시책) 전년도 우수사례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시책을 총 망라하여 우수 청렴정책 발굴·홍보

〈 '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 방향 〉

구 분	내 용
평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반부패 정책 및 시책평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현 틀을 유지하되 청렴도 상위기관은 제외하고, 하위기관은 포함 - (제외) 청렴도 2년 연속 2등급 이상, 당해 시책 2등급 이상 - (추가) '20년 청렴도 5등급 기관 중 일정규모 이상 기관
평가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수준 향상을 위해 효율성이 높은 평가 지표인 기관장·고위직의 노력도 지표는 평가비중·기준을 강화 ■ 국민적 관심이 큰 부패·불공정 현안 발생 시, 각급 기관과 국민권익위가 협업하여 대응책 마련 등 범정부 상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지표를 포함 ■ 공직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소속 교육훈련기관에서 청렴교육을 단독과정으로 개설·운영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지표를 개선
결과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사례를 공공·민간부문 및 해외 정책전수로 확산 ■ 우수기관, 담당자에 대한 표창 등 실시

3 202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주요내용

■ 대상기관 선정기준

- 시책평가의 연속성,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대상기준 적용

※ 전 중앙행정기관, 전 광역지자체, 전 교육청, 기초지자체(인구 40만명 이상), 국립대(신입생 2,500명), 공공의료(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150명 이상)

- 시책평가와 청렴도 측정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청렴도 상위기관을 제외하고, 청렴도 하위기관을 추가

평가 대상기관 선정 고려요인

▶ 대상기관 제외 기준

- 2년 연속('19 ~ '20년) 종합청렴도 2등급 이상으로 2년간 부패사건 감점이 없고, '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2등급 이상인 기관
- ※ '20년 면제기관은 금년도 측정대상에 포함

▶ 대상기관 추가 기준

- '20년 종합청렴도 5등급 기관으로 기초지자체는 인구 30만명, 공직유관단체는 임직원수 150명 이상인 기관

〈 시책평가 제외 및 추가 기관 〉

구분	제외(35개)	추가(46개)
중앙부처	조달청(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농촌진흥청, 법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8)
광역	-	경기도, 경상남도(2)
기초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안양시, 경상남도 양산시, 부산시 부산진구, 서울시 광진구, 서울시 도봉구,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 동작구, 서울시 서대문구, 서울시 성동구, 서울시 영등포구, 인천시 연수구, 충청남도 아산시(14)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화성시, 경상남도 창원시, 대구시 달서구, 대구시 수성구, 대전시 서구, 부산시 해운대구, 서울시 구로구, 서울시 성북구, 서울시 양천구, 인천시 부평구, 전라북도 전주시(16)
교육청	울산시 교육청(1)	강원도 교육청, 세종시 교육청, 제주도 교육청(3)
공직유관 단체	경기신용보증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인공제회,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신용보증기금, 인천시설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건설관리공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19)	국방과학연구소, 에스알,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중부발전(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전KDN(주)(13)
대학 · 공공 의료 기관	-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4)

■ 대상 기관 (274개) * [붙임1] 참조

● (중앙행정기관) 부·처·위원회(중앙 I), 청(중앙 II) 2개 그룹으로 평가

※ 추가기관(8)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농촌진흥청, 법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제외기관(1) : 조달청

●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17개)

※ 추가기관(2) : 경기도, 경상남도

●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42개)

※ 추가기관(16) :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용인시 등

※ 제외기관(14) :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안양시 등

● (교육자치단체) 시도교육청(16개)

※ 추가기관(3) : 강원도 교육청, 세종시 교육청, 제주도 교육청

※ 제외기관(1) : 울산시 교육청

● (공직유관단체) 파급력이 큰 공공기관운영법(기재부)상 공기업 등은 추가하고, 청렴도 측정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기관 등은 제외(125개)

※ 추가기관(13) : 에스알, 한국감정원, 한국중부발전(주), 한전KDN(주) 등

※ 제외기관(19) : 경기신용보증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 (국공립대학) 국공립대학(16개)

※ 추가기관(4) :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 (공공의료*) 국공립대학병원 · 국립암센터 · 한국원자력의학원 등(13개)

* 규모가 작은 치과병원 제외

〈 '21년 기관유형별 시책평가 대상기관 〉

(단위 : 개)

구분	계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 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국공립 대학	공공 의료기관
			광역	기초				
'20년	263	38	15	40	14	131	12	13
변동	+11	+7	+2	+2	+2	△6	+4	-
최종대상	274	45	17	42	16	125	16	13

■ 평가 지표

- 평가의 연속성, 각급 기관들의 지속적 노력 유도를 위해 계획, 실행, 성과·확산 등의 기본적인 틀은 '20년 체계를 유지
- 범정부 반부패체계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지표 개선
 - (청렴향상 직결 지표) 청렴수준 향상을 위해 효율성이 높은 평가 지표인 **기관장·고위직의 노력도** 지표는 **평가비중·기준을 강화**
 - (범정부 대응체계 지표) 국민적 관심이 큰 **부패·불공정 현안 발생 시**, 각급 기관과 **국민권익위가 협업하여** 대응책 마련 등 범정부 상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지표를 개선
 - (청렴교육 기반구축 지표) 공직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소속 교육훈련기관에서 청렴교육을 단독과정으로 개설·운영**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지표 개선

■ 평가 방법

- 시책평가 지표별 실적보고서 서면평가, 설문평가 및 통계자료('21년 청렴도 측정 결과) **이용 병행**
 - 권익위 내·외부전문가 평가단이 기관별 시책 이행 현황을 평가
 - ※ 청렴포털(국민권익위)을 통해 실적 보고서, 증빙자료, 이익제기 등 입력
 - 정책효과성 평가 시 정책수요자 평가를 통해 국민체감도 반영
- **이행실태 현장점검을 통한 각 기관 청렴노력 견인**
 - 보고서 제출 이후 추진 실적 검증을 위한 현지점검
 - ※ 필요시, 실적 보고서 제출 이전 현지점검 가능
- **허위 실적 자료 제출 시 등급 하향**
 - ※ 시책평가 결과 공개 시 허위 자료 제출 사실 공표

■ 평가 결과 환류 및 활용

- **우수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 평가 상위기관에 대한 기관 및 담당자 포상 실시
- **수범사례 공유·확산 추진**
 - 청렴포털(국민권익위)을 통한 반부패 우수시책 공유·확산

4 > 추진일정

-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안) 각 기관 의견 수렴(3월중)
-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 통보(3월말)
- 기관 자체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제출(5월중)
- 부패방지 시책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11월초)
-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별 평가(11월 ~ 12월)
 - ※ 위원회 및 외부 전문가 평가단
- 평가결과 발표 및 언론 공표('22. 1월)

붙임 1

202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 45개 기관

● 부·처·위원회(28개)

'21년 추가기관

연번	기 관 명	연번	기 관 명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5	법무부
2	고용노동부	16	법제처
3	공정거래위원회	17	보건복지부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8	산업통상자원부
5	교육부	19	식품의약품안전처
6	국가보훈처	20	여성가족부
7	국무조정실	21	외교부
8	국방부	22	원자력안전위원회
9	국토교통부	23	인사혁신처
10	금융위원회	24	중소벤처기업부
11	기획재정부	25	통일부
12	농림축산식품부	26	해양수산부
13	문화체육관광부	27	행정안전부
14	방송통신위원회	28	환경부

● 청(17개)

연번	기 관 명	연	기 관 명
1	검찰청	10	산림청
2	경찰청	11	새만금개발청
3	관세청	12	소방청
4	국세청	13	질병관리청
5	기상청	14	통계청
6	농촌진흥청	15	특허청
7	문화재청	16	해양경찰청
8	방위사업청	1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9	병무청		

■ 광역자치단체 : 17개 기관

연번	기 관 명	연번	기 관 명
1	강원도	10	세종특별자치시
2	경기도	11	울산광역시
3	경상남도	12	인천광역시
4	경상북도	13	전라남도
5	광주광역시	14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15	제주특별자치도
7	대전광역시	16	충청남도
8	부산광역시	17	충청북도
9	서울특별시		

■ 기초자치단체 : 42개 기관

● 기초자치단체 I 그룹(23개)

연번	기 관 명	연번	기 관 명
1	경기도 고양시	13	경상북도 포항시
2	경기도 남양주시	14	대구광역시 달서구
3	경기도 부천시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4	경기도 성남시	16	서울특별시 강서구
5	경기도 수원시	17	서울특별시 노원구
6	경기도 시흥시	18	서울특별시 송파구
7	경기도 안산시	19	인천광역시 남동구
8	경기도 용인시	20	인천광역시 서구
9	경기도 평택시	21	전라북도 전주시
10	경기도 화성시	22	충청남도 천안시
11	경상남도 김해시	23	충청북도 청주시
12	경상남도 창원시		

● 기초자치단체 II 그룹(19개)

연번	기 관 명	연번	기 관 명
1	경기도 김포시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2	경기도 의정부시	12	서울특별시 관악구
3	경기도 파주시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4	경상북도 구미시	14	서울특별시 서초구
5	광주광역시 광산구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6	광주광역시 북구	16	서울특별시 양천구
7	대구광역시 북구	17	서울특별시 은평구
8	대구광역시 수성구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9	대전광역시 서구	19	인천광역시 부평구
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교육자치단체 : 16개 기관

연번	기 관 명	연번	기 관 명
1	강원도 교육청	9	서울특별시 교육청
2	경기도 교육청	10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3	경상남도 교육청	11	인천광역시 교육청
4	경상북도 교육청	12	전라남도 교육청
5	광주광역시 교육청	13	전라북도 교육청
6	대구광역시 교육청	14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7	대전광역시 교육청	15	충청남도 교육청
8	부산광역시 교육청	16	충청북도 교육청

■ 국 · 공립대학 : 16개 기관

연번	기 관 명	연번	기 관 명
1	강원대학교	9	서울대학교
2	경북대학교	10	울산과학기술원
3	경상국립대학교	11	인천대학교
4	공주대학교	12	전남대학교
5	광주과학기술원	13	전북대학교
6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4	충남대학교
7	부경대학교	15	충북대학교
8	부산대학교	16	한국과학기술원

■ 공공의료기관 : 13개 기관

연번	기 관 명	연번	기 관 명
1	강원대학교병원	8	전남대학교병원
2	경북대학교병원	9	전북대학교병원
3	경상대학교병원	10	제주대학교병원
4	국립암센터	11	충남대학교병원
5	국립중앙의료원	12	충북대학교병원
6	부산대학교병원	13	한국원자력의학원
7	서울대학교병원		

■ 공직유관단체 : 125개 기관

● 공공기관 I 그룹(24개)

연번	기 관 명	연번	기 관 명
1	강원랜드	13	한국도로공사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4	한국마사회
3	국방과학연구소	1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4	근로복지공단	16	한국산업은행
5	대한적십자사	17	한국수력원자력(주)
6	도로교통공단	18	한국수자원공사
7	부산교통공사	19	한국전기안전공사
8	서울교통공사	20	한국전력공사
9	서울시설공단	21	한국철도공사
10	중소기업은행	22	한국토지주택공사
11	한국가스공사	23	한국환경공단
12	한국농어촌공사	24	한전KPS(주)

● 공공기관 II 그룹(36개)

연번	기 관 명	연번	기 관 명
1	국가철도공단	19	한국동서발전(주)
2	국립공원공단	20	한국부동산원
3	국방기술품질원	2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	그랜드코리아레저(주)	22	한국산업인력공단
5	금융감독원	2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4	한국서부발전(주)
7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25	한국석유공사
8	서울주택도시공사	26	한국송강기안전공단
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7	한국원자력연구원
10	우체국물류지원단	28	한국자산관리공사
11	인천교통공사	2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2	인천국제공항공사	30	한국전력기술(주)
1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4	한국가스기술공사	32	한국조폐공사
15	한국가스안전공사	33	한국중부발전(주)
16	한국공항공사	34	한국지역난방공사
17	한국남동발전(주)	35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8	한국남부발전(주)	36	한전KDN(주)

● 공공기관 III 그룹(38개)

연번	기 관 명	연번	기 관 명
1	경기주택도시공사	20	한국국제협력단
2	공무원연금공단	2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2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4	국토안전관리원	23	한국사회보장정보원
5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2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6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25	한국산업단지공단
7	대전도시공사	26	한국소비자원
8	대한석탄공사	27	한국에너지공단
9	부산시설공단	28	한국연구재단
10	산림조합중앙회	29	한국우편사업진흥원
1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2	에스알	31	한국인터넷진흥원
13	예금보험공사	32	한국장학재단
14	인구보건복지협회	33	한국전력거래소
1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4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6	주택도시보증공사	35	한국콘텐츠진흥원
17	한국거래소	36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8	한국관광공사	3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9	한국광물자원공사	38	해양환경공단

● 공공기관 IV 그룹(27개)

연번	기 관 명	연번	기 관 명
1	광주광역시도시공사	15	한국고용정보원
2	남양주도시공사	16	한국교육학술정보원
3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7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4	대구도시공사	1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	대한체육회	19	한국석유관리원
6	부산도시공사	20	한국소방산업기술원
7	부산항만공사	21	한국수산자원공단
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2	한국원자력환경공단
9	여수광양항만공사	23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0	울산시설공단	24	한국과학창의재단
11	울산항만공사	2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2	인천도시공사	26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3	인천항만공사	27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4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Ⅱ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지표

평가부문	평가 영역 (가중치)	단위 과제 (가중치)	소지표 (가점지표)
A. 계획	1. 반부패 계획 수립(0.15)	1-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1.00)	1
B. 실행	1. 청렴생태계 조성(0.25)	1-1. 청렴정책 참여 확대(0.60) 1-2. 부패방지 제도 구축(0.40)	3
	2.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0.30)	2-1. 부패위험 제거 노력(0.40) 2-2. 부패방지 제도 운영(0.60)	6(2)
C. 성과확산	1.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0.30)	1-1. 반부패 정책 성과(0.50) 1-2.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0.50)	7(3)
D. 감점	1. 부패방지제도 운영	1-1. 부패방지제도 운영 충실도	2

평가부문	평가지표	소관부서
A. 계획	①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조사평가과
B. 실행	② 고위직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	청렴조사평가과
	③ 청렴행정·청렴경영을 위한 시민참여 제도 운영	민간협력담당관
	④ 부패방지분야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제도개선총괄과
	⑤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청렴조사평가과
	⑥ 공공기관 사규 부패유발요인 개선(가)	부패영향분석과
	⑦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청렴연수원 청렴정책총괄과
	⑧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행동강령과
	⑨ 공공재정환수제도 안정적 정착	공공재정환수제도과
	⑩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예방 노력 및 신고사건 적절 조치(가)	청탁금지제도과
	⑪ 기관 종합청렴도 개선	청렴조사평가과
C. 성과·확산	⑫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성과	청렴조사평가과
	⑬ 범국가 차원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이행(가)	청렴정책총괄과
	⑭ 청렴문화 확산 활동	민간협력담당관
	⑮ 청렴포털을 통한 반부패 정보 공유·공개 노력	심사기획과
	⑯ 산하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가)	청렴조사평가과
	⑰ 반부패 문제 대응을 위한 청렴컨설팅 추진 노력(가)	청렴정책총괄과
	⑱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미준수 및 법적조치 미이행	신고자보호과
D. 감점	⑲ 부패·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이첩사건 사후관리	심사기획과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A. 계획	평가 영역	반부패 계획 수립	
단위 과제	1-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배점 (환산점수)	100 (15)
평가 지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100)			
평가 내용	○ 기관별 실정에 따라 반부패 추진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조직 전반의 청렴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에 대해 평가 - 기관 실정에 맞게 10개~20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여 이행 ※ '추진전략 → 추진과제 → 세부 추진과제'로 추진계획 제출			
평가 기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① 업무·조직 특성 반영 등 기관별 부패취약분야 분석의 적절성			30
	② 반부패 시책 추진의 도전성, 다양성 - 반부패 국정과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민생·경제분야 등 공정성 제고 대책, 이해충돌 방지제도 정착을 위한 대책,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반영한) 부패취약분야 개선 계획 등 반영 여부			30
	③ 기관별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40
※ 세부 추진과제별로 '세부 평가기준 ②'의 해당 사항(반부패 국정과제 등을 세부 추진과제명에 표기(실적보고서 양식 참고))				
평가 자료	○ '21. 5. 14.(금)까지 본보고서(10페이지 내외)를 작성하여 공문 제출 ※ 페이지수 준수. 다만 필요시 첨부물 활용 가능하며 첨부물은 본보고서 페이지수 산입에서 제외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1.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1. 청렴정책 참여 확대		배점 (환산점수)	100 (15)
평가 지표	고위직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80)			
평가 내용	○ 반부패·청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관장·고위직이 반부패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정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에 대한 기관장·고위직의 의지 및 노력을 평가			
평가 기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기관장 · 고위직	①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 - 소속 구성원이 평가한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도 설문점수 반영	30	
		② 고위직의 솔선수범 - 소속 구성원이 평가한 고위공직자 솔선수범 설문점수 반영	30	
③ 기관장 또는 고위직의 청렴정책 추진 노력 - 기관장 또는 고위직이 반부패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청렴 정책을 추진한 사례에 대한 정성평가 ※ 기관장이 아닌 고위직이 청렴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기재하면 이를 고려하여 평가		20		
평가 자료	○ ①, ② 관련 별도자료 제출 불필요('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활용) ○ ③은 사례 1건(2페이지 이내) 실적보고서 양식에 맞춰 제출			

(민간협력담당관)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1.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1. 청렴정책 참여 확대			배점 (환산점수)	100 (15)
평가 지표	청렴행정·청렴경영을 위한 시민참여 제도 운영(20)				
평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외부의 독립적 시각(일반국민의 시각·기준)으로 공공기관의 부패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공공행정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청렴시민감사관*의 참여 및 기관의 적극적 수용 여부를 평가 * 청렴시민감사관은 공공기관의 청렴성 및 공공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10년에 도입된 공공기관 외부의 부패 통제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과 공공기관 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감사·조사와 평가를 하고, 이 과정에서 제도개선 제안·권고 또는 감사 요구 등의 역할을 수행 				
평가 기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사례당	최대
	① (제도 개선 또는 감사 권고의 수용완료) 청렴시민감사관 회의의 논의를 거쳐 해당 기관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또는 감사 실시를 권고한 사항에 대해 해당 기관이 수용하여 실시를 완료한 경우 * 제도개선이란, 해당 기관 소관 규정, 시스템 및 이에 준하는 사항의 개선이나, 해당 기관 소관이 아닌 법령, 규정 등을 공문으로 개선 건의한 경우 인정 ※ 예외적으로 실시 완료 전이라도 구체적 세부 실행계획이 수립되고 실행 중인 사항 중 연내 완료가 예상될 경우에는 당해 실적으로 인정 ※ 회의가 서면으로 실시된 경우 청렴시민감사관의 의견·권고 등에 대한 요구(권고)서 및 조치결과 통보서(회의 결과보고서) 등을 함께 제출한 경우 회의를 거친 것으로 인정			5	10
	② (교류활동) 3개 기관 이상의 청렴시민감사관이 모여 운영상황 및 우수사례 공유 등 교류·협력한 활동(간담회, 워크숍, 토론회 등) 횟수 ※ 비대면 온라인 교류활동도 실적으로 인정			5	5
	③ 정성평가 ※ 감사나 제도개선 등의 권고사항이 연간 정기적 회의와 청렴시민감사관의 꾸준한 활동 등을 통하여 논의·도출되었는지, 교류활동에서 기관 간 어떤 내용의 운영사례가 공유 되었는지 등 청렴시민감사관의 체계적·유기적 활동 여부로 평가			-	5
평가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② 관련 증빙자료 제출 ※ ①, ② 증빙자료 : 회의결과보고서, 참석자 서명부(서면회의의 경우 의견서권고서 및 조치결과 통보서 등), 제도개선 관련 권고 및 감사 등의 요구서, 조치계획 및 완료 보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 자료(교류활동 결과보고서는 공유한 사례를 포함하여 제출) ③ 관련 별도자료 제출 불필요 				

(제도개선총괄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1. 청렴생태계 조성	
단위 과제	1-2. 부패방지 제도 구축		배점 (환산점수)	100 (10)
평가 지표	부패방지분야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100)			
평가 내용	○ 각급 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유도하여 부패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권익위 부패분야 제도개선 권고의 '① 세부과제 이행률'과 '② 조치기한 준수율', '③ 권고 이행 충실도'를 평가			
평가 기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① 세부과제 이행률	$\frac{\text{이행 완료 세부과제}}{\text{평가 대상 세부과제}} \times 80$		80
	② 조치기한 준수율	$\frac{(\text{조치기한 내}) \text{ 완료 세부과제}}{\text{평가 대상 세부과제}} \times 10$		10
	③ 권고 이행 충실도	제도개선 권고 이행 충실도에 대한 정성평가		10
	※ 평가 대상 세부과제 : '20.11.1. ~ '21.10.31. 중 조치기한이 도래한 과제 및 기존 평가 대상 과제 중 재점검이 필요한 주요 부패방지 권고과제(전년도 미이행 평가 과제 포함)			
	※ 당해 연도 평가 대상 세부과제가 없는 기관은 유형별 평균 점수 부여			
	① 세부과제 이행률(배점 80점)			
	- 평가 대상 과제 수 대비 이행 완료한 과제 수의 비율로 평가			
	※ 권고내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개선 내용(관련 규정 조항, 문서 등)이 실적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실적에 한해 이행완료로 인정			
※ 공직유관단체(Ⅰ ~Ⅳ) 그룹은 실적 제출 시 사규(내규) 관련 규정 제출				
② 조치기한 준수율(배점 10점)				
- 평가 대상 과제의 조치기한 내 이행여부를 비율로 평가				
※ 세부과제별 조치완료 일자를 실적보고서에 명확하게 명시한 경우만 인정				
※ 재점검 과제, 전년도 미이행 평가 과제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자료제출 마감일'을 조치기한으로 간주				

	<p>③ 권고 이행 충실도(배점 10점)</p> <p>- 세부과제별 개선방안 반영 충실도와 제도개선 권고 이행 노력을 평가</p> <p>— 【평가반영 기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대상 세부과제의 이행률에 따라 점수 부여(10점) (이행률 = 이행완료 세부과제 / 평가대상 세부과제 × 10) ■ 이행완료로 평가된 세부과제 중 우수 이행사례(건당 1점) ■ 미이행으로 평가된 세부과제 중 개선방안 부분 이행 등(건당 0.5점) ■ 10점을 초과하는 경우 한도(최대 10점)내 반영
평가 자료	<p>○ ①, ②, ③ 관련 증빙자료 제출</p> <p>※ 증빙자료 : 세부과제별 개정안 관련 조항 및 규정 전문, 국민권익위로 제출한 이행현황 실적 등</p>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2.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단위 과제	2-1. 부패위험 제거 노력		배점 (환산점수)	100 (12)
평가 지표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100)			
평가 내용	○ 기관별 특성에 따라 부패취약분야를 개선하는 등 각급 기관의 청렴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정성평가 * 청렴도 측정에서 진단된 부패취약분야 또는 감사원·상급기관 등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 등			
평가 기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 기관의 부패취약 업무와의 연관성			35
	• 개선 내용의 적정성, 효과성			30
	• 이행 수단의 도전성, 다양성			30
	• 법령, 규정, 사규 제·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여부			5
※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과제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기준을 강화하거나 내용을 확대하여 시행한 경우는 인정(이 경우, 국민권익위 권고 내용을 요약하여 함께 기재)				
평가 자료	○ 사례 1건(4페이지 이내) 실적보고서 양식에 맞춰 제출			

(부패영향분석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2.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단위 과제	2-1. 부패위험 제거 노력		배점 (환산점수)	100 (12)
평가 지표	공공기관 사규 부패유발요인 개선(가점, 10) ※ 공직유관단체에만 적용되는 지표에 유의			
평가 내용	○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공직유관단체 사규를 정비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직유관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발굴·개선한 '① 사규 개선 노력도' 또는 국민권익위의 '공직유관단체 사규 점검 3개년 계획'에 따른 개선권고에 대한 '② 사규개선 이행 노력'을 평가			
평가 기준	① 사규 개선 노력도(공직유관단체 공통) - 각 기관의 사규에 내재되어 있는 부패유발요인을 부패영향평가 기준에 따라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사규 개정을 완료하였는지를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 이해충돌 등 불공정 업무관행, 기관운영 투명성 제고 등과 관련한 과제 3건 개선			10
	• 이해충돌 등 불공정 업무관행, 기관운영 투명성 제고 등과 관련한 과제 2건 개선			7
	• 이해충돌 등 불공정 업무관행, 기관운영 투명성 제고 등과 관련한 과제 1건 개선			4
	• 개선 실적 없음			0
	* (평가기준) '20.11.1.~'21.10.31. 중 기간 내 부패영향평가 실시 및 사규 개정 완료			
	**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가 평가하는 사항으로 단순 행정절차 개정 등 부패유발요인 개선과 관련이 없거나,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른 사규 개정사항은 불인정			
	※ 사규 개정 완료 전이라도, 국민권익위 별도요청에 따라 자체 부패영향평가 결과(세부평가서)를 제출한 사항이 '21년도 '국민권익위 해당 분야(고용복지 등 7개 분야) 사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으로 포함될 경우(단 국민권익위 사규 부패영향평가 기 개선권고한 사항은 제외), 개선 주제가 다른 개별건에 대하여 실적으로 인정			
② 국민권익위 사규개선 이행 노력(사규개선 권고기관) - 부패취약분야 사규 일제점검에 따라 국민권익위에서 각 공직유관단체에 '20년~'21년 개선을 권고한 사항에 대한 각 기관의 이행노력을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 개선권고 이행률	$\frac{\text{이행 완료 사규 조항}}{\text{권고 대상 사규 조항}} \times 10$	10
<p>* (평가기준) 개선권고 조치기한이 평가대상기간('20.11.1~'21.10.31.) 이내인 경우 위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되(소수점 절사) 조치기한이 '20.10.31.까지였던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은 예외적으로 평가대상기간에 사규를 개정한 경우에도 실적으로 포함하고, 조치기한이 평가대상기간을 도과한 '21.11.1. 이후일 경우 '① 사규 개선 노력도'에 따라 평가</p>		
평가 자료	<p>① 증빙자료 : 사규개선 목록(엑셀양식), 과제별 사규개선 요약서(실적보고서 양식), 시행 · 개정일이 확인되는 사규 전문</p> <p>② 증빙자료 : 이행완료 사규 목록(엑셀양식), 과제별 사규개선 요약서(실적보고서 양식), 시행 · 개정일이 확인되는 사규 전문</p>	

(청렴연수원, 청렴정책총괄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2.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단위 과제	2-2.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배점 (환산점수)	100 (18)
평가 지표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60)			
평가 내용	○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의지를 높이고 각급 기관의 내실 있는 청렴교육 시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① 고위공직자의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 ② 전직원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 및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③ 교육훈련기관 청렴교육 과정(과목) 운영 여부를 평가			
	구 분			배점
	①	고위공직자의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		30
	②	전 직원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 및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30
	③	교육훈련기관 청렴교육 과정(과목) 운영 여부		5 (가점)
평가 기준	① 고위공직자의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			
	- 각 기관의 고위직 현원 중 2시간(합산가능) 이상 집합교육 이수자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대면 교육 또는 실시간화상교육*에 한함, 세부 교육방식은 '참고2'에 명시)			
	* 실시간 화상교육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강사와 학습자 상호간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여 교육하는 방식			
	※ 이수율 = $\frac{2시간(합산가능) 이상 청렴교육 이수자 수}{고위공직자 현원*} \times 100$			
	* 현원 기준일자 : '21.6.1.~9.30. 중 기관 인사발령 등을 고려, 특정 일자를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장기교육 파견자 등은 제외			
〈 고위공직자 이수율 평가기준 〉				
* 소수점 절삭				
구 분		배점		
95% 이상		30		
85% 이상~95% 미만		27		
75% 이상~85% 미만		24		
65% 이상~75% 미만		21		
65% 미만		18		

《 참고1 : 청렴교육 지표 관련 고위공직자 기준 》

- 정무직, 선출직,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포함

기관유형	대상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 이상 (장·차관, 고위공무원단 및 고위공무원 상당 특정직, 별정직 등 포함)
광역자치단체	3급 이상 (선출직 공무원, 3급 상당 이상 연구관, 지도관, 특정직, 별정직 등 포함)
기초자치단체	4급 이상 (선출직 공무원, 4급 상당 이상 연구관, 지도관, 특정직, 별정직 등 포함)
교육자치단체	4급 이상 (선출직 공무원, 4급 상당 이상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 포함, 단, 유치원장 및 학교장은 제외)
공직유관단체	상임 임원급 이상
국·공립 대학	학과장 이상 교원
공공의료기관	진료과장 이상 의사

《 참고2 : 고위직 청렴교육 실적 인정 기준 》

- 교육내용 :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공공재정환수제도 등 기타 청렴교육 등을 기관 실정에 맞게 실시
 - ※ 교과목명에 청렴, 부패 등 청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어가 포함되어야 함
- 교육시간 : 평가기간 이내 개인별 2시간 이상(합산 가능)
- 교육방법 : 대면교육 혹은 실시간 화상교육*
 - * 실시간 화상교육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강사와 학습자 상호간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며 교육하는 방식
- 강사기준
 - 1) 기관 내 청렴교육 강사(청렴연수원 청렴교육 기본·전문강사)
 - 2)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렴교육 강사(전문·소양강사)
 - 3) 반부패·청렴분야 전문가(변호사, 교수 등)
 - 4) 본인이 속한 조직에서 강의를 한 기관장
 - 5) 청렴연수원 주관 「청렴엑스퍼트」 교육과정을 2021년에 수료하고 본인이 속한 조직에서 강의를 한 감사·청렴 업무담당자
 - ※ 단, 일반 CS(Customer Service)·스피치·친절·성폭력 등 강사는 인정 불가
 - ※ 청렴연극, 토크쇼, 토론회의 경우, 반부패·청렴 관련 내용이 충분히 반영된 경우 인정

② 전 직원 반부패·청렴교육 이수율 및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 전 직원 현원(본부·소속기관 직원 중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자, 고위공직자 포함) 대비 반부패·청렴교육(2시간) 이수 실적 및 맞춤형 청렴교육 여부

* 현원 기준일자 : '21.6.1.~9.30. 중 기관 인사발령 등을 고려, 특정 일자를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 기관 현원 : 본부(본청) 및 사업소, 지청 등 모든 기관의 현원(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자)의 합계

- 국방부는 군부대를 제외한 본부 및 모든 소속 기관의 정원 합계
- 교육부는 본부 및 모든 소속 기관의 정원 합계에서 별도로 시책평가 대상기관으로 지정된 대학 등의 정원 제외
- 외교부는 본부 및 모든 소속기관의 정원 합계에서 해외 공관의 정원 제외
- 교육청 유형은 사립학교를 포함한 소속 학교의 선생님 등 교직원 포함
- 대학 및 의료 유형은 교원, 의사, 행정직원(일반직) 등의 정원 합계

《 전 직원 교육 이수율 평가기준(20점) 》

* 소수점 절삭

구 분	배점
90% 이상	20
80% 이상~90% 미만	16
70% 이상~80% 미만	12
60% 이상~70% 미만	8
60% 미만	4

《 맞춤형 청렴교육 평가기준(10점) 》

구 분	배점
기관별 부패취약분야 분석 여부 (최근 5년 부패 관련 사례 및 외부 지적사항 포함)	5
기관별 부패취약분야 분석에 기반한 교육 실시	5

《 참고3 : 전 직원 청렴교육 이수 실적 인정 기준 》

- 교육내용 :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공공재정환수제도 등 기관 실정에 맞는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 ※ 교과목명에 청렴, 부패 등 청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어가 포함되어야 함
- 교육시간 : 평가기간 내 직원 개인별 2시간 이상 청렴교육 진행(합산 가능)
- 교육방법 : 대면(집합)교육, 실시간 화상교육* 및 사이버교육(나라배움터 등)
- ※ 실시간 화상교육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강사와 학습자 상호간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며 교육하는 방식
- 강사기준(사이버교육은 강사기준 미적용)
 - 1) 기관 내 청렴교육 강사(청렴연수원 청렴교육 기본·전문강사)
 - 2)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렴교육 강사(전문·소양강사)
 - 3) 반부패·청렴분야 전문가(변호사, 교수 등)
 - 4) 본인이 속한 조직에서 강의를 한 기관장
 - 5) 청렴연수원 주관 「청렴엑스퍼트」 교육과정을 2021년에 수료하고 본인이 속한 조직에서 강의를 한 감사·청렴 업무담당자
- ※ 단, 일반 CS(Customer Service)·스피차친절성폭력 등 강사는 인정 불가

《 참고4 : 맞춤형 청렴교육 평가 기준 》

- 기관별 부패취약분야 분석(최근 5년 부패 관련 사례 및 외부 지적사항 포함) 및 기관별 부패취약분야 분석에 기반한 교육 실시 계획 및 결과에 대한 정성평가 (5페이지 이내, 한글 문서 제출)

③ 교육훈련기관 청렴교육 과정(과목) 운영 여부(가점, 5)

- 공공 교육훈련기관의 자체 청렴교육 과정(과목) 운영 여부에 대한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자체 청렴교육 과정(과목) 운영 여부(협업 운영 포함)	5

※ 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청렴교육 과정(타 교육과정에 포함된 청렴교육 과목 포함)이 있을 경우 가점으로 반영. 청렴교육 과정(과목) 운영 여부는 참고5(교육훈련기관의 청렴교육 실적 인정 기준)으로 판단

《 참고5 : 교육훈련기관의 청렴교육 운영 실적 인정 기준(1회 기준) 》

- 교육내용 :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공공재정환수제도 등 기관 실정에 맞는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 ※ 교과목명에 청렴, 부패 등 청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어가 포함되어야 함
- 교육시간 :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2시간 이상 청렴교육 진행(합산 가능)
- 교육방법 : 교육생이 20명 이상인 경우로 실시간 화상교육 및 대면(집합)교육 (나라배움터 등 사이버교육은 제외)
 - ※ 실시간 화상교육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강사와 학습자 상호 간 영상과 음성 동시에 송수신하여 교육하는 방식
- 강사기준
 - 1) 기관 내 청렴교육 강사(청렴연수원 청렴교육 기본·전문강사)
 - 2)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렴교육 강사(전문소양)
 - 3) 반부패·청렴분야 전문가(변호사, 교수 등)
 - 4) 본인이 속한 조직에서 강의를 한 기관장
 - 5) 청렴연수원 주관 「청렴엑스퍼트」 교육과정을 2021년에 수료하고 본인이 속한 조직에서 강의를 한 감사·청렴 업무담당자
 - ※ 단, 일반 CS(Customer Service)·스피차친철성폭력 등 강사는 인정 불가

※ 시책평가 대상기관 중 소속기관인 교육훈련기관에서 청렴교육 과정(과목)을 운영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기관 중 교육훈련기관이 없는 경우 타 교육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별도의 청렴교육 과정*(과목)을 운영하는 경우 가점 부여(협업 가능한 기관 범위는 참고6 하단 참조)

* 타 교육훈련기관과 협업하여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계획서 등에 협업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가점으로 인정

	<p style="text-align: center;">《 참고6 : 가점 적용 교육훈련기관 기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기관으로 교육훈련기관이 있는 경우 가점 적용 기관 범위(산하기관 제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원, 연수원, 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 중 교육훈련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계획 붙임5의 가점 대상기관을 포함하여, 시책평가 대상기관의 소속기관으로 교육훈련기관이 있는 경우 모두 인정 • 소속기관으로 교육훈련기관이 없는 경우 청렴교육의 협업 실시로 가점 적용이 가능한 기관 범위(산하기관 포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 '소속기관으로 교육훈련기관이 있는 경우 가점 적용 기관 범위'에 해당하는 기관 2) 「평생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부설 평생교육시설 및 사도평생교육진흥원 3)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에 포함된 교육훈련기관
평가 자료	<p>○ ①, ②, ③ 관련 증빙자료 제출</p> <p>※ ① 증빙자료 : ① 교육 이수 실적 파악을 위한 고위직의 정원표와 현원 명단, ② 개인별 청렴교육실적 자료 ③ 교육 운영계획 및 사진, 서명부 등을 포함한 결과 보고서(실시간 화상 교육의 경우 강사와 수강생의 성명·얼굴이 나오는 화면 캡처 결과보고서 등), ④ 참고2의 강사기준에 따른 강사 관련 증빙자료</p> <p>② 증빙자료 : ① 기관 현원표 ② 교육 운영계획 및 사진, 서명부 등을 포함한 결과 보고서(실시간 화상 교육의 경우 강사와 수강생의 얼굴이 나오는 화면 캡처나 결과보고서 등), 사이버 교육의 경우 개인별 교육 이수증 ③ 참고3의 강사기준에 따른 강사 관련 증빙자료 ④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관련 문서(④최근 5년간 해당기관의 부패 사례, 외부 지적 사항을 포함한 부패취약분야 분석 ⑤부패취약분야 분석에 기반한 청렴교육 관련 계획 및 결과)</p> <p>③ 증빙자료 : ① 교육훈련기관의 청렴교육 운영계획 및 사진, 서명부 등을 포함한 결과 보고서 ② 강사기준에 따른 증빙자료 ③ 교육훈련기관의 주요사업, 조직, 기능 등이 포함된 소개 자료</p>

(행동강령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2.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단위 과제	2-2.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배점 (환산점수)	100 (18)
평가 지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20)			
평가 내용	○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행동강령 이해 부족으로 인한 위반자 발생 방지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기관 차원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① 행동강령 이해도 제고'와 '② 행동강령 준수를 제고'를 평가			
평가 기준	① 행동강령 이해도 제고			
	- 각급 기관별로 소속 공직자 대상 행동강령 교육 시 이해충돌방지제도, 갑질 금지 등 신규 도입된 행위기준* 포함 여부 평가			
	* 사적 이해관계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민간부문 부정청탁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갑질 금지, 감독기관 해외출장 부당 지원 금지 (원칙적으로 상기 행위기준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나, 기관별 교육여건상 모두 포함하기 어렵거나, 기관별 특성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기준에 대해서는 제외가 가능하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실적 제출시 제외 사유도 함께 제출)			
	《 세부 평가기준 》			
	행동강령 교육 실시 (신규 행위기준 포함)		행동강령 교육 실시(신규 행위기준 미포함) 또는 행동강령 교육 미실시	
	10		0	
	※ 신규 행동강령 행위기준을 포함하여 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이는 각급 공공기관 본부, 소속기관 등 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실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함			
	(예컨대, 기관 본부에 한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교육이수자비율이 100%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 기관별 특성이나 코로나 상황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교육을 추진하면 되며, 교육방식, 교육시간, 강의자, 교육이수자비율 등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음			
	(예컨대, 본부는 본부 감사실에서, 소속기관 등 하부 단위는 각 단위별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탄력적인 교육방식도 가능함)			

② 행동강령 준수를 제고

- 부패행위발생 취약시기(명절 등) 등 기관별 특성에 따른 자체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실적(횟수)을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4회 이상	3회	2회	1회	미 실시
10	8	6	4	0

〈 국공립대학 및 공공의료 그룹 별도 평가 기준〉

3회 이상	2회	1회	미 실시
10	8	6	0

- ※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시, 타 점검(예: 복무점검 등)과 병행·실시는 가능하나, 실적 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강령 점검내용(관련 조항)이 포함되어야 함(출·퇴근시간 등 복무점검, 보안점검, 민원처리실태 점검 등 행동강령과 관련 없는 점검 자료만으로 실적 불인정)
- ※ 점검계획 및 점검결과 문서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인정(지적사항이 없어 점검결과 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적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필요)
- ※ 공공기관 본부에서 추진한 점검만 실적으로 인정(소속기관(지사·사업소 등)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점검은 실적으로 불인정)

평가
자료

- ① 관련 증빙자료 : 행동강령 교육 실시계획 및 실시결과 문서, 신규 행동강령 행위기준이 포함된 교육자료(※ 일부 신규 행위기준을 교육자료에 미포함한 경우 구체적 제외 사유 포함)
- ② 관련 증빙자료 :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계획 및 점검결과 문서

(공공재정환수제도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2.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단위 과제	2-2.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배점 (환산점수)	100 (18)								
평가 지표	공공재정환수제도 안정적 정착(20, 가점5)											
평가 내용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초기 법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제도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관 차원의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①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책임성 강화'와 '②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력 제고', '③ 공공재정환수제도 적극적 정착 노력'을 평가											
평가 기준	①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책임성 강화(10) -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담당조직 또는 담당자 지정 여부를 평가											
	<< 세부 평가기준 >>											
	<table><tr><th>담당조직 지정</th><th>담당자 지정</th><th>미지정</th></tr><tr><td>10</td><td>6</td><td>0</td></tr></table>				담당조직 지정	담당자 지정	미지정	10	6	0		
	담당조직 지정	담당자 지정	미지정									
	10	6	0									
※ 담당조직의 경우 TF·탐계과부 등 조직 규모에 상관 없이 조직 소관 업무에 공공재정환수법 또는 공공재정환수제도를 담당함을 명확하게 명시하였을 경우 인정 ※ 담당자 지정의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또는 공공재정환수제도 담당을 명확하게 명시하였을 경우 인정 ※ 기존에 구성한 조직 또는 인력 활용 가능(타 업무와 병행 가능)												
②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력 제고(10) - 각급 기관이 공공재정지급금의 집행(허위과다청구, 오지급 여부 확인), 정산(목적외사용 여부 등 확인) 및 부정청구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지급중단, 부정이익등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에 대해 자체 점검한 실적(횟수) 평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자치단체 그룹 세부 평가기준 >>											
	<table><tr><th>3회 이상</th><th>2회</th><th>1회</th><th>미실시</th></tr><tr><td>10</td><td>8</td><td>6</td><td>0</td></tr></table>				3회 이상	2회	1회	미실시	10	8	6	0
3회 이상	2회	1회	미실시									
10	8	6	0									
	<< 국공립대학, 공공의료 및 공직유관단체 그룹 평가 기준 >>											
	<table><tr><th>2회 이상</th><th>1회</th><th>미실시</th></tr><tr><td>10</td><td>6</td><td>0</td></tr></table>				2회 이상	1회	미실시	10	6	0		
2회 이상	1회	미실시										
10	6	0										

- ※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시, 타 점검이나 감사와 병행·실시는 가능하나, 실적 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계획 및 결과가 포함되어야 함(공공재정환수제도와 관련 없는 감사 또는 점검만으로는 실적 불인정)
- ※ 점검계획 및 점검결과 문서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인정(지적사항이 없어 점검결과 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적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필요)

《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실적 인정 기준 》

- 공공재정환수제도 담당부서 또는 감사부서에서 사업부서(공공재정지급금 집행부서)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점검하거나 사업부서가 공공재정지급금 수익자를 대상으로 점검한 실적 인정(소속기관이 점검한 실적은 불인정)
- 감독기관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목적외사용 등 부정청구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이나 감독기관등과 합동으로 점검한 사항도 실적으로 인정
- 소관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이 없고 타 기관으로부터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지 않는 기관과 소관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이 내부직원 대상 포상금이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공공재정지급금으로 부정청구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거나 현저히 적은 기관의 경우에는 기관그룹별 평균 점수를 부여하되, 내부직원 대상 공공재정환수제도 자체 교육(부패방지권익위법상 청렴교육 의무사항인 1회 연 2시간에 포함되는 교육의 경우 불인정) 및 대외홍보(대외소식지, 전광판, 공공고지서 활용 등) 실적 1회당 1점씩 가산하여 부여. 단, 평균점수와 가산점수의 합산점수는 최대 10점까지 인정
- (중앙, 지방, 교육) 국민권익위 주관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등 제재처분 기록·관리 여부 점검(4월 이후 실시 예정)에 따라 '국가 부정청구 통합관리시스템'(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내 탑재)에 제재처분 사실을 입력할 경우 실적 1회 인정

③ 공공재정환수제도 적극적 정착 노력(가점, 최대 5점)

- 국민권익위에 이행실태 점검인력 파견, 공공재정환수제도 전담자 지정, 부정청구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각급 기관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항에 대해 가점 부여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배점
국민권익위원회에 이행실태 점검인력 파견 또는 국민권익위와 이행실태 합동점검 참여	3
공공재정환수제도 전담자 지정	2
부정청구행위 신고센터 운영	1

- ※ 전담자의 경우 공공재정환수법 또는 공공재정환수제도 전담(타업무와 병행 불가)을 명확하게 명시하였을 경우 인정
- ※ 부정청구행위 신고센터의 경우 기존에 구성한 신고센터 활용 가능(타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와 병행 가능)

<p>평가 자료</p>	<p>○ ①, ②, ③ 관련 증빙자료 제출</p> <p>※ ① 증빙자료 : 업무 분장표,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 지정 내부결재문서 등 조직 또는 개인의 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p> <p>② 증빙자료 :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계획 및 점검결과가 포함되어 있는 문서, 평균점수 부과대상 기관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설명서, 예산서 등) 및 교육·홍보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p> <p>③ 증빙자료 : 조직도, 업무 분장표 등 개인의 업무 전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조직도, 내부결재문서 등 부정청구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p>
-------------------------	---

(청탁금지제도과)

평가 부문	B. 실행	평가 영역	2.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단위 과제	2-2.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배점 (환산점수)	100 (18)
평가 지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예방 노력 및 신고사건 적절 조치(가점, 10)			
평가 내용	○ 유사한 위반행위 예방, 반복되는 상담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방지,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의 적절한 처리를 위해, '①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조치사항 및 상담내용 공개'와 '②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 사례에 대한 조치' 여부를 평가			
평가 기준	①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조치사항 및 상담내용 공개(가점, 10점)			
	《 세부 평가기준 》			
	구분			배점
	위반신고가 있는 기관	사건내용, 조치사항 모두 외부공개*		10
		사건내용 또는 조치사항만 외부공개		5
		상담내용만 외부공개		3
	위반신고가 없는 기관	상담내용 외부공개**		10
	* 사건내용 및 조치사항 외부공개 : 청탁방지담당관이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외부강의등 위반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한 사건의 내용(사건내용) 및 소속 기관의 조치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청렴포털(국민권익위) 등 외부에 공개했는지 여부 평가			
	** 상담내용 외부공개 : 청탁방지담당관이 소속 공직자 등 및 이해관계자와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외부강의등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을 한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청렴포털(국민권익위) 등 외부에 공개했는지 여부 평가			
	※ 문제 상황, 답변 내용, 조치사유 등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공개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처리 및 운영현황으로 제출한 건과 다르게 표시·제출하는 경우 또는 상담내용·위반신고 실적이 없음에도 거짓 제출하는 경우 전체 가점 불인정				
②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 사례에 대한 조치(가점 10점 범위 내에서 감점 5점)				
－ 각급기관이 '20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신고 된 사건 중 부적절 처리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 시정조치 하였는지 여부를 평가				
* 양벌규정 미적용, 수사의뢰 등 후속조치 없이 종결, 금품등 제공자 과태료 미부과 등				

《 세 부 평 가 기 준 》

구분		배점
부적절 처리 사례 시정조치 이행1)		0
감독기관	시정조치 미이행 (산하기관2)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3) 여부로 판단)	-5
해당기관	시정조치 미이행	-5

- 1)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처리 및 운영현황에 제출한 '20년 위반신고 중 부적절 처리로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 국민권익위에서 감독기관 및 해당기관에 사전 통보(4월초) 예정
- 2) 산하기관은 인사혁신처에서 지정·고시하는 공직유관단체와 그 외 공공기관을 포함하며, 평가 대상 기관의 구체적 범위는 감독기관에 사전 통보(4월초) 예정

- 3) 감독기관의 산하기관(비평가 산하기관 포함)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 여부는 산하기관의 부적절 처리 사례에 대한 이행 점검* 및 시정 요구** 등 이행노력에 따라 평가

* 이행실태 점검은 산하기관의 조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2회 이상 점검한 경우 인정

** 다만 이행 점검하였더라도, 산하기관의 부적절 처리 사례가 감독기관의 처분 요구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감독기관이 산하기관의 부적절 처리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산하기관에 시정조치 요청 등)를 하지 않는다면 감독기관에 감점 적용

※ 통보 사례가 다수인 경우 부적절 처리 사례가 남아있으면 감점

※ 청탁금지법 운영현황 실태조사 시 미제출한 부적절 처리 사례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해당기관에 대해 감점 적용

평가 자료

① 공개실적, 증빙자료 제출

- ※ 기관 홈페이지 등 외부공개 위치 접속경로(홈페이지 화면 캡처 파일 첨부), 해당 메뉴 상세 URL 주소를 권익위 실적보고서 양식에 맞춰 작성한 파일
- ※ 신고사건 조치사항 또는 상담내용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 게시된 증빙자료

② 시정조치 실적, 증빙자료 제출

- ※ 통보받은 사례에 대한 사례별 시정조치 실적 및 조치 근거자료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C. 성과·확산	평가 영역	1.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단위 과제	1-1. 반부패 정책 성과		배점 (환산점수)	100 (15)
평가 지표	기관 종합청렴도 개선(20)			
평가 내용	○ 기관별 반부패 정책 추진노력의 성과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전년 대비 기관 종합청렴도 개선 실적에 대한 평가			
평가 기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점수 상승 기관	기관 유형*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보다 높은 기관	20	
		기관 유형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 이하인 기관	15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점수 하락(유지) 기관	기관 유형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보다 높은 기관	15	
		기관 유형 종합청렴도 평균 점수 이하인 기관	10	
* 기관 유형은 '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관 유형임 ※ 단, '21년도 종합청렴도 1등급 이상인 기관은 만점 ※ '20년 종합청렴도 점수가 없는 기관은 기관유형별 평균 점수 적용				
평가 자료	○ 관련 별도자료 제출 불필요('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활용)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C. 성과·확산	평가 영역	1.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단위 과제	1-1. 반부패 정책 성과		배점 (환산점수)	100 (15)
평가 지표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성과(80)			
평가 내용	○ 기관에서 수립·제출한 '반부패 추진계획(A-1-1)'의 세부 추진과제를 일정에 맞게 진행했는지 여부(이행률) 및 그 효과성에 대한 평가			
평가 기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① 세부 추진과제의 이행 여부(수립한 세부 추진과제 대비 이행 비율)			20
	② 세부 추진과제의 효과성(의도한 정책효과와 실제 발생 수준)			60
	○ ‘세부 평가기준 ①’의 경우, 기제출한 반부패 추진계획의 세부 추진과제명과 동일하게 목록을 작성하고, 이에 해당하는 관련 사항의 공문번호 전부 기재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에 제출했던 세부 추진과제별로 이행 여부 작성			
	※ (예시) 제출된 추진계획과 이행 여부의 세부 추진과제를 다르게 제출된 사례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제출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성과’ 제출	
	청 렴 문 화 정 착	① 청탁금지법 선제적 대응 1. 행동강령 금품수수금지 금액한도 개정 2. 행동강령외부강의 대가 제한 및 신고 의무 개정 3. 청탁금지법 교육 ② “노블레스 오블리주” 청렴문화 조성 1. 고위직 간담회 개최 2. 고위직 노블리스 오블리주 교육	청 렴 문 화 정 착	① 청탁금지법 선제적 대응 1. 청탁금지법 관련 행동강령 개정 2.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② “노블레스 오블리주” 청렴문화 조성 1. 고위직 간담회 개최 2. 고위직 노블리스 오블리주 교육
	부패행위 예방활동 강화	1. ~ 4. (생략)	부패행위 예방활동 강화	1. ~ 4. (생략)
→ 총 9개의 세부 추진과제 제출		‘청탁금지법 선제적 대응’ 추진과제와 관련하여 추진계획 제출 시 세부 추진과제를 2개 제출했지만, 계획 이행 여부에서는 ‘청탁금지법 관련 행동강령 개정’이라는 1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통합하여 제출함에 따라, 8개의 세부 추진과제 이행으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비교란에 상세히 명시 * 계획수립 시 예측하지 못한 사안 발생으로 사후에 다른 정책을 추진한 경우나 기관 자체적으로 추진과제를 통합한 경우, 국민권익위의 지표 변경 사유 등으로 이행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이행방법을 변경하거나 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평가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보고서 양식에 따라 제출하되, ②는 총 4페이지 이내로 작성 ※ ②의 경우, 세부 추진과제를 병합하여 작성할지 개별로 작성할지는 기관 자율

(청렴정책총괄과)

평가 부문	C. 성과·확산	평가 영역	1.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단위 과제	1-1. 반부패 정책 성과		배점 (환산점수)	100 (15)
평가 지표	범국가 차원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이행(가점, 3점)			
평가 내용	<div>○ 범정부적 참여로 수립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과 반부패 개혁의 완수를 위해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포함된 각급 기관별 단위과제를 계획대로 일정에 맞게 진행했는지 여부를 평가</div> <div>*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은 각급 기관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18.4월)에서 확정됨</div>			
평가 기준	《 세부 평가배점 》			
	구 분		배점	최대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내 계획대로 이행 중인 과제		과제당 1	3
	<div>○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단위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해당 기관이 제출하는 당해연도 3분기까지의 이행 실적을 평가</div> <div>-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단위과제 중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항목으로 별도로 반영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과제는 본 가점 적용에서 제외</div> <div>- 기관별 단위과제 추진일정과 이행실적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점으로 인정되며, 계획대로 진행 중이지 않거나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가점 미부여</div> <div>※ 일부 중앙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등 참여기관에 한정하여 해당되는 지표임에 유의</div>			
평가 자료	<div>○ 반부패 정책과제의 분기별 이행실적 및 점검결과를 ‘반부패 정책과제 시스템’에 입력</div> <div>※ 청렴포털에는 별도자료 제출 불필요</div>			

(민간협력담당관)

평가 부문	C. 성과·확산	평가 영역	1.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단위 과제	1-2.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배점 (환산점수)	100 (15)																										
평가 지표	청렴문화 확산 활동(60)																													
평가 내용	○ 공공기관의 청렴문화 확산 활동으로 민간부문의 청렴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급 기관의 시민·기업 등 '민간부문에 대한 청렴문화 확산 활동*'과 '청렴사회협약** 이행 성과'를 평가 * '민간부문에 대한 청렴문화 확산 활동'이란 공공기관이 민간부문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민간부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협업·홍보 등 활동 ** '청렴사회협약'이란 반부패·청렴 거버넌스의 하나로, 참여주체들이 자율적으로 부패 문제를 해소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해가려는 실천 약속																													
평가 기준	《 세부 평가기준 》																													
	※ 중앙행정기관 유형 해당 지표																													
	<table><tr><th colspan="2" rowspan="2">구 분</th><th colspan="2">배점</th></tr><tr><th>사례당</th><th>최대</th></tr><tr><td rowspan="3">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활동</td><td>①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 활동 실적</td><td>5</td><td>20</td></tr><tr><td>② 청렴한 행정·경영 1기관 1실천 과제 추진실적</td><td>-</td><td>20</td></tr><tr><td>③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 활동에 대한 정성평가</td><td>-</td><td>20</td></tr></table>				구 분		배점		사례당	최대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활동	①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 활동 실적	5	20	② 청렴한 행정·경영 1기관 1실천 과제 추진실적	-	20	③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 활동에 대한 정성평가	-	20										
	구 분		배점																											
			사례당	최대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활동	①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 활동 실적	5	20																										
		② 청렴한 행정·경영 1기관 1실천 과제 추진실적	-	20																										
		③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 활동에 대한 정성평가	-	20																										
	※ 광역자치단체 유형 해당 지표																													
	<table><tr><th colspan="2" rowspan="2">구 분</th><th colspan="2">배점</th></tr><tr><th>사례당</th><th>최대</th></tr><tr><td rowspan="3">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활동</td><td>①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 활동 실적</td><td>5</td><td>10</td></tr><tr><td>② 시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활동 실적</td><td>-</td><td>10</td></tr><tr><td>③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 활동에 대한 정성평가</td><td>-</td><td>10</td></tr><tr><td rowspan="3">청렴사회협약 이행성과</td><td>① 만족도 측정</td><td>-</td><td>15</td></tr><tr><td>② 전문가 평가</td><td>-</td><td>5</td></tr><tr><td>③ 협약이행 결과에 대한 정성평가</td><td>-</td><td>10</td></tr></table>				구 분		배점		사례당	최대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활동	①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 활동 실적	5	10	② 시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활동 실적	-	10	③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 활동에 대한 정성평가	-	10	청렴사회협약 이행성과	① 만족도 측정	-	15	② 전문가 평가	-	5	③ 협약이행 결과에 대한 정성평가	-	10
구 분		배점																												
		사례당	최대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활동	①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 활동 실적	5	10																											
	② 시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활동 실적	-	10																											
	③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 활동에 대한 정성평가	-	10																											
청렴사회협약 이행성과	① 만족도 측정	-	15																											
	② 전문가 평가	-	5																											
	③ 협약이행 결과에 대한 정성평가	-	10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유형 해당 지표

구 분		배점	
		사례당	최대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활동	①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 활동 실적	5	10
	② 청렴한 행정·경영 1기관 1실천 과제 추진실적	-	10
	③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 활동에 대한 정성평가	-	10
청렴사회협약 이행성과	① 만족도 측정	-	15
	② 전문가 평가	-	5
	③ 협약이행 결과에 대한 정성평가	-	10

□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 활동

①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 활동 실적

- 공공기관이 시민·기업 등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업무(정책, 사업 등)를 수행하면서, ① 민간부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제도 시행 실적, ② 민간부문의 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 실적, ③ 언론매체(유투브, SNS 등 포함)를 활용한 청렴정책 광고·홍보 활동 실적을 평가

※ 청렴문화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리플릿, 홍보물품 배부 등), 토론회, 공모전, 문화제, 퍼포먼스 등도 인정

※ (주의사항)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대면접촉이 많은 행사성 활동은 자제

② 청렴한 행정·경영* 1기관 1실천 과제** 추진실적

-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 활동 중 해당 기관이 올 한해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우수사례 (1개 과제) 제출

* (청렴한 행정·경영) '청렴'을 도덕, 준법, 공정, 사회정의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투명·공정·공평한 청렴한 행정(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또는 경영(공사·공단 등)을 의미

** (1기관 1실천 과제) 캠페인 등의 이벤트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제도 반영 등 시민·기업 등이 청렴을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우수사례를 의미

③ 시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활동 실적(광역자치단체 해당 지표)

- ① 민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횟수, ② 민관협의회에서 의결된 정책·시책 발굴 등 운영 성과, ③ 민관협의회 활동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활동을 고려하여 시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활성화 노력을 정성평가

④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 활동에 대한 정성평가

- ① 활동량(횟수·기간), ② 효과성·다양성, ③ 홍보 노력·성과(언론매체·SNS 등), ④ 민간 참여 확대, ⑤ 1기관 1실천 과제 추진 성과, ⑥ 청렴사회민관협의회(중앙, 지역 포함)의 제안 사항을 해당 기관이 반영한 실적 등을 고려

참고 사항

1. 각 항목은 별개로 평가(㉠, ㉡항목은 각각 별개로 실적을 제시해야 함)
2. 본부(청·사)에서 주관한 것을 기준으로 평가(소속 기관이 시행한 활동에 대해서는 활동량 등을 고려하여 일부 반영)
3. 법령 등에 따라 당연히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용역, 평가, 심사, 자문 활동 등은 청렴문화 확산 활동 실적으로 불인정

□ 청렴사회협약 이행 성과

① 청렴사회협약 이행 결과에 대한 만족도 측정

- 추진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정책체감도 등 2개 영역 7개 지표로 설문조사 실시(응답자 300명 이상)

〈 설문조사 세부평가 지표 〉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만족도 설문 조사	1. 정책 체감도	1-1. 정책과제 인지도 ○○과제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1-2. 정책과제 중요성 체감도 우리사회의 청렴성 향상을 위해 ○○과제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3. 정책 추진결과 개선효과에 대한 체감도 ○○과제추진으로 ○○가 얼마나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정책 만족도	2-1. 정책과제 홍보 만족도 ○○과제 추진을 위한 홍보활동은 만족스럽습니까? 2-2. 정책과제 추진시 의견수렴 만족도 ○○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은 만족스럽습니까? 2-3. 정부 추진노력에 대한 만족도 ○○과제 추진을 위한 ○○기관의 노력은 만족스럽습니까? 2-4. 정책과제 추진결과에 대한 만족도 ○○과제의 추진성과는 만족스럽습니까?

② 청렴사회협약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평가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 과제에 대한 평가 실시

※ 노력도, 효과성 등 4개 영역 15개 지표로 자율평가 실시(평가위원 5인 이상)

〈 전문가 평가 세부지표 〉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 평가지표	지표수
1. 자원투입 적정성	1-1. 추진계획 수립 적정성	• 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 실현가능성	2
	1-2. 추진기반 적정성	• 추진인력과 인프라 타당성	1
2. 정책추진 노력도	2-1. 과제이행 적정성	• 세부계획 이행여부	1
	2-2. 이행점검 적정성	• 정기적 이행점검 • 이행점검 투명성	2
	2-3. 이행점검 환류 노력	• 이행점검 결과 반영 노력	1
	2-4. 여론수렴 및 정책소통 노력	• 여론수렴 및 정책소통 노력	1
	2-5. 과제 인지도 제고 노력	• 과제 인지도 제고 노력	1
	2-6. 협업과 소통 노력	• 협업과 소통 노력	1
3. 추진목표달 성도	3-1. 추진계획의 목표달성 완결성	• 추진목표 달성 여부 • 목표달성 질적 수준	2
4. 정책 효과성	4-1. 투입 대비 산출의 효과성 평가	• 정책효과 • 연관목표 기여	2
	4-2. 정책 체감 성과	• 정책체감효과	1

③ 청렴사회협약 이행 결과에 대한 정성평가

– 협약이행을 위해 참여기관별 역할 및 노력도(기관별 업무 분장표 제시), 회와간담회 등 참여도(기관장 및 실무자 실적 구분 제시) 등을 종합평가

※ 협약 사무국(또는 대행 기관)에서 일괄 취합한 실적표(① 기관별 업무 분장표, ② 참석자 현황표) 제출 협조

평가
자료

- ‘민간부문 청렴문화 확산 활동’ 실적 근거 제출(①, ②만 제출)
 - ※ ①, ② 제출자료 : 실적보고서 양식에 따른 실적 요약, 각 증빙자료
- ‘청렴사회협약 이행 성과’ 실적 근거 제출
 - ※ ① 만족도측정 결과보고서, ② 전문가평가 결과보고서, ③ 참여주체별 업무분장표 ④ 대표자실무자 참석 현황표

(심사기획과)

평가 부문	C. 성과·확산	평가 영역	1.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단위 과제	1-2.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배점 (환산점수)	100 (15)	
평가 지표	청렴포털을 통한 반부패 정보 공유·공개 노력(40)				
평가 내용	○ 공공기관에서 생산하는 반부패 정보(반부패 활동, 신고 처리 사례, 부패공직자 현황 등)를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에 공유·공개한 실적을 평가				
평가 기준	《 세부 평가배정 》				
	구 분		배점(40점)		
			게시 건	최대	
	① 부패공직자 징계운영 현황 공개		4점	8점	
	② 청렴활동 공개		2점	18점	
	③ 청렴활동 공유		1점		
	④ 신고(또는 상담, 적발) 사례 공개		6점	12점	
	⑤ 신고(또는 상담, 적발) 사례 공유		4점		
	⑥ 신고자 보호·보상·포상 지침 공개		2점	2점	
	※ 공개 기준 : '청렴포털(청렴마당)'에서 대국민 공개 설정 ※ 공유 기준 : '청렴포털(청렴마당)'에서 공공기관 내 공유 설정 ※ '청렴포털(조사·평가(부패공직자·행동강령 운영실적' 제출과는 별개 사항임				
① 부패공직자 징계운영 현황 공개 -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 유형(징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제외), 징계처분결과 등 징계운영 현황을 공개 ※ 자체적발, 외부적발 여부와 상관없이 평가기간 내 징계자는 공개 대상 ※ 부패공직자 등 공개 게시 건은 청렴포털에 공개된 반기별 게시 건(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반기에 대한 '해당사항 없음'을 공개한 경우 점수 부여)을 기준으로 함 (예시 : 반기별 해당 사항 없음 실적 2번 공개 시 8점 부여)					
②, ③ 청렴활동 공개·공유 - 평가기간 내에 실시한 반부패·청렴업무 추진과정에서의 각급 기관의 청렴활동(우수시책, 캠페인, 클러스터 활동, 집중신고 기간 운영 등) 공개·공유					

	<p>④, ⑤ 신고(또는 상담, 적발) 사례 공개·공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공공재정환수법 위반행위 신고(또는 상담, 적발) 사례 공개·공유 ※ 상담, 적발 사례의 경우 '청렴포털<청렴마당<신고사례>'에 사례명을 상담 또는 적발로 변경하여 작성 <p>⑥ 신고자 보호·보상·포상 지침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공공재정환수법 위반행위 신고 관련 기관 내부의 신고자 보호, 보상 및 포상 지침 공개 ※ 평가기간 내 제·개정 내역이 공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부패 정보의 공유 실적은 기관 내부(소속기관 내 포함)에서만 공유한 실적, 청렴포털이 아닌 오프라인 공유 실적, 개별 기관 홈페이지 공유 실적은 제외 ▶ 반부패 정보 분야별 공개·공유 게시 건당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분야별 최대 점수를 초과할 수 없음
평가 자료	<p>○ 청렴포털<청렴마당>을 통해 공개·공유한 자료</p> <p>※ '청렴포털<청렴마당>' 입력 외에 별도 제출자료 없음</p>

(청렴조사평가과)

평가 부문	C. 성과·확산	평가 영역	1.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단위 과제	1-1. 반부패 정책 성과		배점 (환산점수)	100 (15)
평가 지표	산하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가점, 10) ※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유형 해당 지표			
평가 내용	○ 반부패 정책이 사각지대 없이 전 공공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시책평가 대상이 아닌 산하기관에 대하여 각급 기관이 자체 시책평가를 실시한 노력에 대한 정성평가			
평가 기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
	① 평가 대상기관 선정 기준 - 평가 대상기관 수, 주요 산하기관·부패 발생기관(채용비리 발생기관 등)·국민권익위로부터 지적받은 기관 포함 여부 등			3
	② 평가항목 구성 적절성 - 기관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구성 여부			3
	③ 평가 실시 및 결과 활용 - 수립한 계획대로 평가 실시 여부 및 우수 시책 추진 산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기관 실정에 맞는 평가 결과 활용			4
평가 자료	※ 국민권익위 시책평가의 평가지표를 참조하는 등 평가항목·평가지표수는 기관 자율적으로 정하되, 1~2개의 평가지표로 자체 시책평가를 실시하더라도 산하기관의 실질적인 반부패 노력을 이끌어 내고 청렴수준을 향상시켰는지 여부를 평가 ※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별도로 실시하거나 기존 성과평가에 일부 항목으로 반영하는 등 기관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추진 가능 ※ 시책평가 대상이 아닌 산하기관(공직자 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 중) 대상으로 하되, 소속기관은 평가대상에서 제외(광역지자체는 시책평가 대상이 아닌 기초지자체를 포함) ※ 산하기관이 없는 기관은 소속기관 또는 소속부서를 대상으로 평가 시 인정			
	○ 산하기관 대상 반부패 시책평가 실시에 대한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제출			

(청렴정책총괄과)

평가 부문	C. 성과·확산	평가 영역	1.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단위 과제	1-2.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배점 (환산점수)	100 (15)
평가 지표	반부패 문제 대응을 위한 청렴컨설팅 추진 노력(가점, 5)			
평가 내용	○ 청렴컨설팅을 활용하여 반부패 문제 대응을 강화하는 등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① 멘티기관의 종합청렴도 등급 상승도’ 결과를 반영하고 ‘② 멘토기관의 컨설팅 노력도’와 ‘③ 부패현안 컨설팅 대상기관의 협조 노력도’를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컨설팅 자문위원단에서 평가하여, 가점으로 반영			
평가 기준	《 세부 평가기준 》			
	구 분			배점(5점)
	기관대상 컨설팅 멘토기관	① 멘티기관의 종합청렴도(‘21년) 등급 상승도 - (1단계 상승 기관수×0.5점)+(2단계 상승 기관수×1.0점)+ (3단계 상승 기관수×1.5점)+(4단계 상승 기관수×2.0점) ※ 합산 시, 최대 2.5점	2.5	
		② 멘토기관의 컨설팅 노력도 - 우수시책 공유의 적극성, 회의개최 횟수, 회의개최 신속성, 회의 참석 여부, 보고서 내용의 구체성 등	2.5	
부패현안 컨설팅 대상기관	③ 부패현안 컨설팅 대상기관의 협조 노력도 - 부패현안 컨설팅 대상기관*의 컨설팅 추진 협조도, 개선 적극성 등 * 대상기관은 부패현안 발생 시 국민권익위에서 추후 별도 통지 및 보도자료 배포 등 공표 예정	5		
평가 자료	○ ①, ② 관련 별도자료 제출 불필요			

(신고자보호과)

평가 부문	D. 감점										
평가 지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미준수 및 법적조치 미이행(최대 3점 감점)										
평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의 부패·공익신고 사건이 내부 제보자의 신고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신고자 보호를 위해, '① 신고자 보호 규정 준수 여부', '② 신고자 보호 관련 법적조치 이행 여부', '③ 신고자 보호 관련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른 협조도'를 평가										
평가 기준	<p style="text-align: center;">《 세부 평가기준 》</p> <table><tr><th>구분</th><th>세부사항(건당)</th><th>배점</th></tr><tr><td rowspan="3">보호규정 준수 및 법적조치 이행</td><td>① 신고자 보호 규정 준수 여부 - 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 위협, 신분공개·노출, 신분·인사상 등의 불이익조치 발생</td><td>-1점</td></tr><tr><td>② 신고자 보호 관련 법적조치 이행 여부 - 신고자 보호 조치, 비밀보장의무 위반자 징계, 책임 감면 등 국민 권익위 보호 결정 불이행</td><td>-2점</td></tr><tr><td>③ 신고자 보호 관련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른 협조도 - 신고자 보호 등 업무 관련 자료 제출 미이행</td><td>-0.5점</td></tr></table>	구분	세부사항(건당)	배점	보호규정 준수 및 법적조치 이행	① 신고자 보호 규정 준수 여부 - 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 위협, 신분공개·노출, 신분·인사상 등의 불이익조치 발생	-1점	② 신고자 보호 관련 법적조치 이행 여부 - 신고자 보호 조치, 비밀보장의무 위반자 징계, 책임 감면 등 국민 권익위 보호 결정 불이행	-2점	③ 신고자 보호 관련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른 협조도 - 신고자 보호 등 업무 관련 자료 제출 미이행	-0.5점
	구분	세부사항(건당)	배점								
	보호규정 준수 및 법적조치 이행	① 신고자 보호 규정 준수 여부 - 신고자 등에 대한 신변 위협, 신분공개·노출, 신분·인사상 등의 불이익조치 발생	-1점								
		② 신고자 보호 관련 법적조치 이행 여부 - 신고자 보호 조치, 비밀보장의무 위반자 징계, 책임 감면 등 국민 권익위 보호 결정 불이행	-2점								
		③ 신고자 보호 관련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른 협조도 - 신고자 보호 등 업무 관련 자료 제출 미이행	-0.5점								
① 신고자 보호 규정 준수 여부 평가 - 각 기관이 신고자에 대해 신변위협, 신고자의 신분 공개,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하였다고 국민권익위가 판단한 경우 감점조치(-1점)											
② 신고자 보호 관련 법적조치 이행 여부 - 국민권익위로부터 보호결정 등 이행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감점조치 (-2점)											
③ 신고자 보호 관련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른 협조도 - 조사 수행을 위한 국민권익위의 자료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기관 감점조치(-0.5점)											
평가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 ③ 관련 별도자료 제출 불필요(신고자보호과에서 별도 집계)										

(심사기획과)

평가 부문	D. 감점						
평가 지표	부패·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이첩사건 사후관리(최대 2점 감점)						
평가 내용	<p>○ 사후관리에 따른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신고자 안내 및 보상 등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에서 요청한 장기 미회신 이첩사건의 처리상황을 점검기간 내 회신하였는지 여부*를 평가</p> <p>* 국민권익위에서 이첩기관에 요청한 6개월 이상 장기 미회신 사건 대비 처리상황 미회신 사건의 비율(미회신율)에 따라 감점</p>						
평가 기준	<p style="text-align: center;">《 세부 평가기준 》</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th>배점</th></tr> </thead> <tbody> <tr> <td>• 장기 미회신 사건이 20건 미만인 경우</td><td>건당 -0.1점(최대 -2점)</td></tr> <tr> <td>• 장기 미회신 사건이 20건 이상인 경우</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회신율* 80% 이상 : -2점 • 미회신율 50% 이상 ~ 80% 미만 : -1점 • 미회신율 30% 이상 ~ 50% 미만 : -0.6점 • 미회신율 10% 이상 ~ 30% 미만 : -0.3점 • 미회신율 10% 미만 : -0.1점 </td></tr> </tbody> </table> <p>* 미회신율 = $\frac{\text{처리상황 미회신 사건***}}{\text{6개월 이상 장기 미회신 사건**}}$</p> <p>** 6개월 이상 장기 미회신 이첩사건 중 국민권익위(부패심사과,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서 점검기간(상·하반기 각 1회) 중 이첩기관에 처리상황을 회신하도록 공문으로 요청한 사건</p> <p>*** 형사처벌(기소 의견 송치 등), 행정조치 등 처리결과, 재판진행 등 처리상황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은 사건</p> <p>※ 점검대상은 이첩사건에 한하며 송부사건은 제외</p> <p>※ 점검기간은 국민권익위 부패심사과·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서 상반기 1~3월, 하반기 7~9월 점검 예정</p>	구 분	배점	• 장기 미회신 사건이 20건 미만인 경우	건당 -0.1점(최대 -2점)	• 장기 미회신 사건이 20건 이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회신율* 80% 이상 : -2점 • 미회신율 50% 이상 ~ 80% 미만 : -1점 • 미회신율 30% 이상 ~ 50% 미만 : -0.6점 • 미회신율 10% 이상 ~ 30% 미만 : -0.3점 • 미회신율 10% 미만 : -0.1점
구 분	배점						
• 장기 미회신 사건이 20건 미만인 경우	건당 -0.1점(최대 -2점)						
• 장기 미회신 사건이 20건 이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회신율* 80% 이상 : -2점 • 미회신율 50% 이상 ~ 80% 미만 : -1점 • 미회신율 30% 이상 ~ 50% 미만 : -0.6점 • 미회신율 10% 이상 ~ 30% 미만 : -0.3점 • 미회신율 10% 미만 : -0.1점 						
평가 자료	○ 별도자료 제출 불필요(부패심사과,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서 별도 집계)						

Ⅲ 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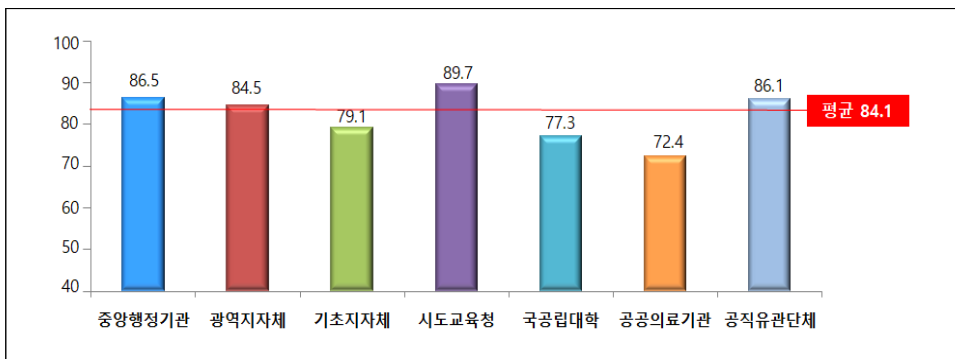
1 총평

■ 평균점수 및 유형별 현황

- 전체 기관의 평균점수는 84.1점으로 시도 교육청(89.7점)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공공의료기관(72.4점)이 가장 낮음

※ 평가지표가 대폭 개편되어 전년과의 비교는 어려움

〈 기관 유형별 점수 〉



- 지표별로는 계획, 실행, 성과·확산 3개 부문의 7개 단위과제 중 ‘부패방지 제도 운영*’(96.8점)이 가장 높고, ‘반부패 정책 성과’ (78.5점)가 가장 낮음

유형	계획	실행				성과·확산		총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전체	80.0	79.4	78.9	81.1	96.8	78.5	90.7	84.1

* (부패방지 제도 운영) 청렴교육, 행동강령 운영, 청탁금지법 예방 등의 노력

-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의 경우 전년도에 단위과제별 최하점이었으나, 금년에 강화된 공공기관 우수시책 확산 지표 등의 영향으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는 등 상당한 개선 효과 도출

※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청렴문화 확산 활동, 반부패 정보 공개·공유 등의 노력)’ :

(‘19) 76.1점 → (‘20년) 90.7점 (+14.6)

■ 평가등급 및 유형별 우수 · 향상기관

- 총 263개 평가 대상기관 중 1등급 기관은 29개, 2등급 기관은 75개로 비율은 39.5%(104개)이고, 2년 연속 1·2등급인 기관은 64개

〈 2년 연속 1·2등급인 기관 〉

기관유형	2년 연속 우수기관(64개)
중앙행정	관세청,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 특허청
광역시자체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지자체	경기도 수원시 , 광주광역시 북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 은평구, 충청남도 아산시
사도 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 부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국립대학	부경대학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충북대학교
공공의료	국립암센터 , 서울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공직유관 단체	강원랜드 ,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 근로복지공단 , 대구도시공사, 부산항만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울산시설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거래소, 한국공항공사,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해양환경공단

※ 진한 밑줄은 2년 연속 1등급 기관

- 전년보다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이 오른 기관¹⁾은 61개(25.0%)이며, 2단계 이상 크게 향상된 기관은 19개(7.8%)

〈 1등급 기관 및 2등급 이상 향상기관 〉

기관유형	1등급 기관(29개)	2등급 이상 향상기관(19개)
중앙행정 기관	관세청,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3등급 상승) 해양경찰청 (2등급 상승)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해양수산부
광역 지자체	전라남도, 충청북도	(2등급 상승) 충청북도
기초 지자체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안양시, 광주광역시 북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2등급 상승) 경기도 안양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양산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도 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2등급 상승) 인천광역시교육청
국공립 대학	-	(3등급 상승) 충남대학교
공공의료 기관	국립암센터, 서울대학교병원	(3등급 상승) 한국원자력의학원
공직유관 단체	강원랜드,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근로복지공단, 서울교통공사, 울산시설공단, 인천항만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2등급 상승)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장학재단

1) 시책평가 대상은 총 263개 기관이나, 2년 연속하여 시책평가 수행 실적이 있는 244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

2 지표별 평가결과

총 평

■ 주요 성과

- (청렴사회 조성) 공공분야 부패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발굴·개선
 -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른 취약분야, 상급기관에서 지적된 감사사항 등을 스스로 분석·개선하여 공공행정의 고질적 부패취약분야 개선
 - ※ 263개 모든 기관(100%)에서 기관별 특성에 맞는 부패취약분야 발굴·개선
 -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제도, 생활 속 불공정, 부패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기반 마련
 - ※ 국민권익위 제도권고 총 8,199개 이행(79%) 완료, 전년 대비 12% 증가 이행
- (부패유발 제거) 부패·불공정 관행을 초래하는 부정부패의 근본적 해결
 - 청렴시민감사관이 공공기관 외부 시각으로 공공기관의 부패취약분야를 능동적으로 감시함에 따라, 공공행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 청렴시민감사관 감사·제도개선 요구 수용률 : 85.2%(256개 기관 중 218개)
 - ※ 청렴시민감사관 감사 참여사례 : 전라북도교육청은 청렴시민감사관의 교육환경 개선 요청을 수용하여 특성화고 여학연수 등 학생 선발기준 정비
 -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사규에 대해 부패유발요인·불공정 관행 등을 제거·예방하여 근본적 원인 해결
 - ※ 131개 공직유관단체 중 91개 기관(69.4%)에서 사규 개선사항 발굴
 - ※ 191개 사규 개선사항 중 110개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불공정 업무 관행 개선
- (청렴역량 강화) 청렴교육으로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 공감대 확산
 - 청렴한 공직문화 만들기를 실천·추진하기 위해, 기관장 등 고위직의 청렴교육을 확대하여 조직 리더에 걸맞는 청렴역량을 내재화
 - ※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율 : ('19년) 89.4% → ('20년) 95.2%
 - ※ 236개(89.7%) 기관에서 911명의 청렴교육 강사 양성(기관당 평균 3.9명)
 - 공직자 행위기준 변경사항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하고 부패취약시기 행동강령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공직자 행위기준 지속 강화

※ 263개 기관 중 262개 기관(99.6%)에서 외부강의등 신고제도 개정사항을 각급 기관 행동강령에 반영

※ 263개 기관(100%)에서 1,469회 이상 행동강령 점검(기관당 평균 5.6회 이상)

● (청렴정책 성과) 내실 있는 반부패 시책으로 공공기관 청렴수준 제고

- 공공기관별로 부패취약분야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반부패·청렴 시책을 추진함에 따라, 기관별 청렴도 향상

※ '20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263개 기관 중 196개 기관(74.5%)이 종합청렴도가 2등급 이상(77개)이거나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119개)

- 주요 반부패 국정과제 등과 연계한 각급 공공기관의 '반부패 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범정부 반부패체계 구축에 기여

※ 263개 기관에서 총 5,789개 반부패 추진계획 중 5,767개(99.6%) 이행

● (청렴문화 확산)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청렴·공정문화 확산

- 공공·민간·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가 반부패·청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렴사회협약에 참여·협력하는 등 민관협력체계 활성화

※ 청렴사회협약 대상 기관(225개) 중 212개 기관(94.2%)이 청렴사회협약 이행

※ 260개(98.9%) 기관에서 6,497개의 청렴문화 확산 활동(기관당 평균 25건)

- 공공기관이 부패방지 업무에 활용하고 국민은 공공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수시책 등 반부패 정보의 기관간 공유·국민 공개 확대

※ 263개 기관 중 238개 기관(90.5%)이 우수시책 등 반부패 정보 공유·공개

■ 보완사항

- 부패취약분야의 원인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기관은 분석역량을 강화하여, 국민 체감의 실효성 높은 반부패 시책 추진 필요
- 고위직이 감사부서의 고유업무나 일상적인 반부패 시책에 단순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참여내용·수준의 확대·제고 필요
- 대부분의 부패·공익신고 사건이 내부 제보자의 신고로 밝혀지고 있으므로, 신고자 보호를 위한 관련 보호규정의 철저한 이행 필요

1 반부패 계획 수립

1-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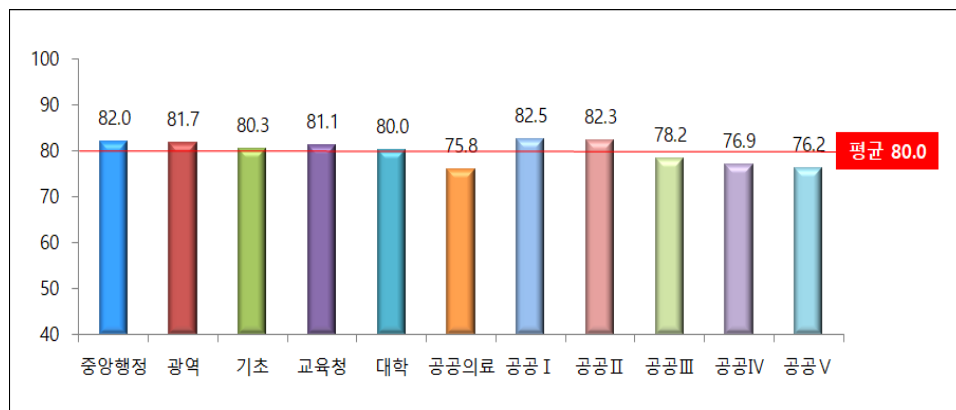
- 공공기관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 예방을 위해, 기관 특성, 조직 환경, 업무수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수립한 연간 청렴 추진계획에 대한 평가

※ (세부기준) 기관 특성 반영의 적절성, 반부패 시책 추진의 다양성·도전성,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의 적정성·실행 가능성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의 평균점수는 전체 평균점수(84.1점) 보다 낮은 80.0점 수준

- 기관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 I 유형(82.5점)이 가장 높고, 그 뒤는 공직유관단체 II (82.3점), 중앙행정기관(82.0점), 광역자치단체(81.7점) 순

〈 기관 유형별 결과 〉



■ 주요 성과

- 공공기관의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부터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생활적폐 근절’ 등 주요 반부패 국정과제와 연계토록 하여, 범정부 반부패체계 구축에 기여
- 공공기관 부패취약분야의 다양한 분석을 통하여, 기관 특성에 맞는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청렴수준 향상에 직결되는 반부패 시책 추진

■ 보완 사항

- 기관별 청렴도 취약분야에 대한 원인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기관은 분석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하고 실효성이 높은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필요

※ 일부기관은 청렴도 취약분야의 원인분석 없이 단순 청렴도 측정 결과를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근본적 원인분석에 따른 해결방안 마련 필요

■ 우수 사례

◇ 반부패 국정과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등과의 연계

- ① **법무부**는 부패취약 과제 외에도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생활적폐, 민생·경제분야 공정성 제고 대책 등 주요 반부패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시책 추진
- ② **대구시 북구**는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핵심사업과 도전사업을 세부추진과제로 선정하고, 반부패 국정과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생활적폐 근절을 위한 시책들도 추진과제에 포함·시행

◇ 부패취약분야 분석에 따른 개선방안을 반부패 추진계획과 연계

- ① **고용노동부**는 청렴도 측정결과 취약분야로 나타난 근로감독분야의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감독 행정 종합 개선방안」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 대응방안 수립
- ② **관세청**은 청렴도 측정결과 취약업무인 수입통관 업무의 개선을 위해, 특정직원에게 특정물품신고서 배정을 차단하는 등 내부업무처리절차 개선, 퇴직공무원 전관특혜 근절 등을 전략과제로 선정 후 적극 대응
- ③ **법무부**는 최근 3년간 청렴도 측정에서 취약한 분야인 '비행소년 진단 및 상담' 업무의 개선을 위해, 소년보호기관 중 대표기관을 선정해서 부패유발요인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등 현장중심의 해결방안 수립
- ④ **대전시교육청**은 청렴도 측정결과 취약업무인 학교급식업무의 개선을 위해, 식재료 구매 관리방안 마련, 공고문 모니터링 강화, 특수조건 사전안내 강화, 관계자 청렴교육 실시 등 업무단계별 대응체계 마련
- ⑤ **경기도 수원시**는 청렴도 측정결과 취약업무인 계약업무의 개선을 위해, 수의계약 기준 개선, 무방문 전자계약제 전면실시, 계약이행 검사업무 전담팀 신설 등 조직의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 투입·대응
- ⑥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안전과 종합·외부청렴도와의 상관관계 분석 후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여, 안전관리 업무에 청렴도를 접목한 안전업무 Master Plan 수립 등 안전사고 예방 방안을 마련
- ⑦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청렴도 측정 결과 분석에서 취약업무로 도출된 어업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면세유류 부정유통, 회계부정 등에 대한 개선과제를 마련하여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실효성 제고

- ⑧ **한국산업은행**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업무처리 기준 · 절차의 공개성' 지표가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되어, 적극적인 정보공개 및 공개채널 다양화를 위한 세부추진과제 수립

◇ 기관특성 · 고유업무와 연계한 반부패 시책 추진

-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기관 고유업무인 문화 · 체육계의 부적절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확대적용, 서면계약 활성화,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추진 등의 과제를 수립 · 추진
- ② **경기도교육청**은 안전교육과정에 청렴영역을 추가하여 학교급(유치원 · 초·중등학교)별로 청렴가치, 생활 속 청렴이슈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함에 따라 미래세대 청렴역량 강화를 도모
- ③ **대구시 북구**는 부패취약분야인 민원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보공개 확대, 주민만족도 조사, 고객소리함 운영, 외국인 납세자 대상 지방세 안내문 외국어 제작 등 적극적이고 다양한 시책 수립
- ④ **부경대학교**는 취약분야인 '연구비의 부적정 사용' 개선을 위해, 연구비 사용 시 의문사항에 대해 사설메신저를 활용한 실시간 상담 가능 시책을 발굴하는 등 처벌강화와 함께 구성원의 이해도 제고 방안 마련
- ⑤ **한국수출입은행**은 공적수출신용기관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OECD 뇌물방지협약 관련 국제공조 강화, 자금세탁방지 관련 대응능력 강화 과제를 수립함으로써, 국제사회와 반부패 협력 강화를 모색
- ⑥ **한국동서발전**은 예산집행모니터링단 신설운영, 감질근절 3단계 접근, 반부패 안전감찰단 운영, 부패신고 신뢰지수 진단, 직무관련자 행동수칙 제정 등 기관 특성 및 부패취약 업무 관련 개선방안 추진

◇ 반부패 시책 추진과제의 이행동력 확보 및 실현가능성 제고

- ① **충청북도**는 반부패 추진과제의 추진일정 및 추진목표를 월별로 설정하고, 전담부서 및 부서별 협력사항을 명시하는 등 추진과제의 실현가능성을 제고
- ② **경상북도교육청**은 부패취약분야(공사, 계약, 학교급식, 운동부, 인사, 예산집행 등)의 부패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업무별로 '20년 청렴도 측정 목표점수를 구체적으로 설정 후 개선과제를 체계적 관리
- ③ **부산대학교**는 구성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교수 · 행정직원 회의 등 계획수립 단계부터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반부패 추진과제의 추진동력 확보
- ④ **국립암센터**는 고위직이 솔선수범해서 청렴강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시책에 반영하여, 고위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반부패 추진과제의 추진동력 확보
- ⑤ **한국남부발전**은 청렴교육을 청렴연극인 부패공판 모의체험 형태로 실시하고 고위직은 청렴연극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내부구성원의 부패경각심을 높이는 등 청렴교육의 다양화 방안 수립
- ⑥ **부산항만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재정위험 등)에 대비하기 위해 위기관리대책 본부를 조기에 구성 · 운영함으로써, 코로나19 업무 외 부패방지 업무는 지속 · 안정적으로 병행 추진

2 청렴생태계 조성

2-1. 청렴정책 참여 확대

■ 개 요

- (고위직의 반부패 의지·노력)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에 대한 기관장·고위직의 의지 및 노력* 등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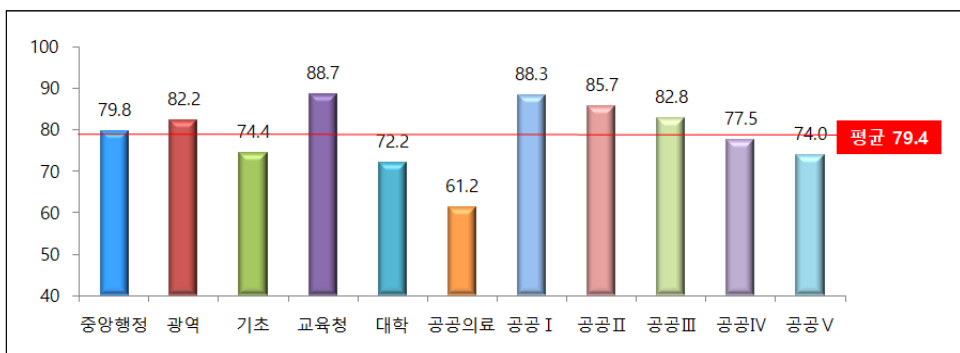
* '기관장 노력도' 및 '고위직의 솔선수범'은 '20년 청렴도 측정 설문점수 활용

-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청렴시민감사관**의 참여 및 이에 대한 기관의 적극적 수용 여부를 평가

** 공공기관의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외부전문가(교수 등 전문직종의 경력자)가 감시·조사하는 부패통제시스템

- '청렴정책 참여 확대'의 평균점수는 전체 평균점수(84.1점) 보다 낮은 79.4점 수준
 - 기관 유형별로는 시도 교육청(88.7점)이 가장 높고, 그 뒤는 공직유관단체 I(88.3점), 공직유관단체 II(85.7점), 공직유관단체 III(82.8점)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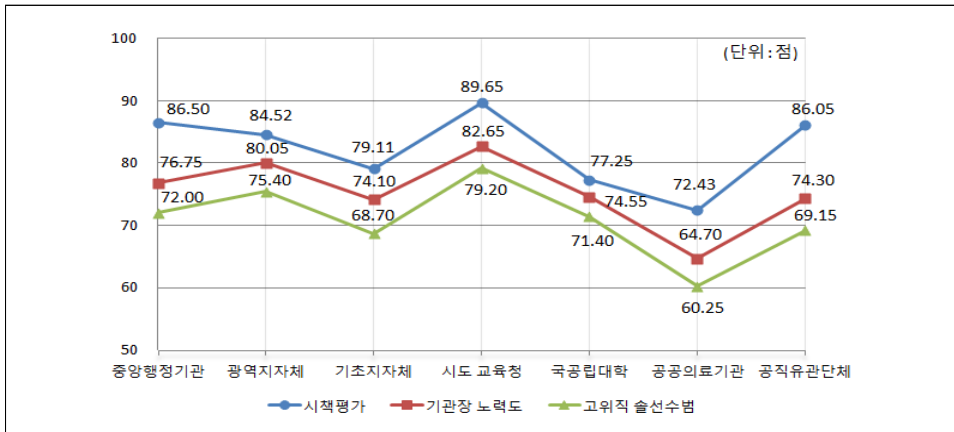
〈 기관 유형별 결과 〉



■ 주요 성과

- 기관장·고위직이 청렴정책 추진에 관심을 갖고 다양하게 참여함에 따라, 청렴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렴업무의 추진력을 확보
 - 기관장의 노력도·고위직의 솔선수범이 높은 기관일수록, 조직환경과 직원인식이 개선되어 반부패·청렴 시책의 노력이 강화됨에 따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

〈 기관유형별 기관장 노력도·고위직 솔선수범과 시책평가 간 관계 〉



※ 기관장 노력도 평균(74.85점), 고위직 솔선수범 평균(70.19점)

- 각급 기관이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러한 활동을 적극 수용·조치함에 따라, 기관 외부의 시각(일반국민의 시각·기준)으로 부패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공공행정의 투명성·공정성 증진

※ 청렴시민감사관 도입기관(256개, 97.3%) 중 감사요구 또는 제도개선 권고 수용·조치 기관 218개 (85.2%)

청렴시민감사관 참여



도입 기관

256개 (97.3%)

권고 수용 기관

218개 (85.2%)

보완 사항

- 일부기관은 감사부서의 고유업무나 일상적인 반부패 시책에 고위직이 단순 참여한 실적을 고위직의 청렴정책 추진 노력사례로 제출하고 있어, 고위직의 참여내용 확대와 참여수준 제고 필요
-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요구·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수용·조치율이 전년 대비 하락('19년 90.9% → '20년 85.2%)함에 따라, 지속적 관심·노력 필요

※ '20년 통계는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19년도부터 본격 시행한 제도도입 초기 기관인 국공립대학·공공의료기관이 처음 포함되었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청렴시민감사관 관련 조직·인력 부족 등이 수용률 하락의 주원인

■ 우수 사례

◇ 기관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청렴정책 추진

- ① **인사혁신처**는 공정채용·적극행정의 활성화를 위해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언론에 기고하고, 고위직과 젊은세대를 연결하는 리버스 멘토링 등을 운영함에 따라 조직의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 ② **법무부**는 장관 주재 청렴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해 강력한 반부패 의지가 담긴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과 갑질 자가진단 테스트 실시 후 청렴리더십을 위한 고위직 청렴워크숍 실시
- ③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지사가 청렴 콘트롤타워인 '청렴대책본부'에 참여하여 청렴시책 추진력을 확보하고, 동영상 청렴메시지 전달 등 청렴의지 피력 등에 솔선수범
- ④ **서울시 은평구**는 기관장 주도의 청렴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전년도 시책을 진단하고 현행 반부패 시책의 계획수립·실행을 점검하는 등 간부청렴도 평가대상자 확대, 수익계약 등 계약시스템 개선 추진
- ⑤ **경기도 수원시**는 간부공직자가 부패위험성 진단 후 지방법원 부패사건 재판을 참관함으로써,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청렴의식을 제고
- ⑥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이 직접 경기교육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할 뿐 아니라, 공익제보 관련 신고자 보호·지원에 대해 적극적이고 강한 의지를 표명
- ⑦ **부산시설공단**은 이사장이 현장사업소를 직접 순회하면서 공단 핵심가치·청렴정책을 직원과 공유하고, 부당한 업무지시, 갑질 등 현장직원의 개선의견을 업무개선에 반영하는 등 조직 내 소통 강화

◇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시·참여 확대를 통한 공공기관 청렴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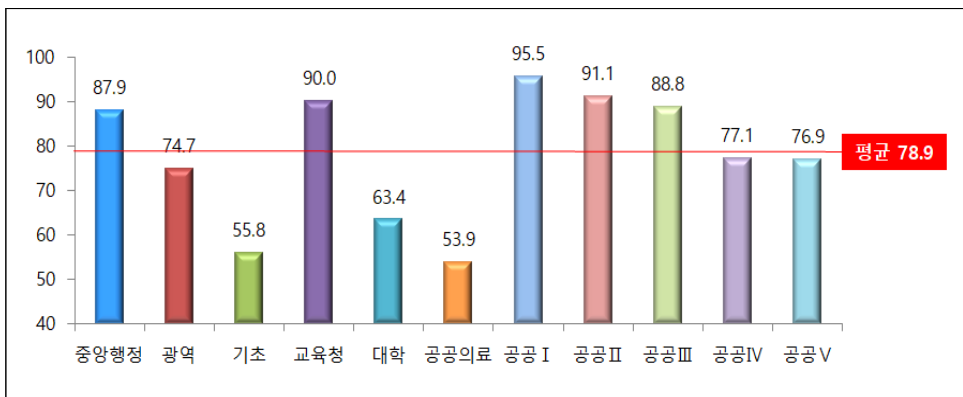
- ① **교육부**는 기관 내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옴부즈만'과 기관 외부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환경을 위한 '시민감사관'을 위촉하여, 기관 특성에 맞게 내·외부로 구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 ② **전라북도교육청**은 특성화고의 해외현장 학습이나 영어교과 해외 심화(어학)연수에 관한 학생 선발기준·요건을 정비토록 요구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권고를 수용하여, 관련 분야 공정성·투명성 제고
- ③ **인천도시공사**는 청렴시민감사관의 부패사건예방 권고를 수용하여, 비위 위험 호루라기 예보제, 자진신고자 처분 감면제 등 감사 이전 자체 치유프로세스를 도입·운영

2-2. 부패방지 제도 구축

■ 개 요

- (제도개선 권고 이행) 국민권익위 부패방지분야 제도개선 권고 과제에 대한 이행 노력을 평가
- '부패방지 제도 구축'의 평균점수는 전체 평균점수(84.1점) 보다 낮은 78.9점 수준
 - 기관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 I**(95.5점)이 가장 높고, 그 뒤는 공직유관단체 II(91.1점), 교육청(90.0점), 공직유관단체Ⅲ(88.8점)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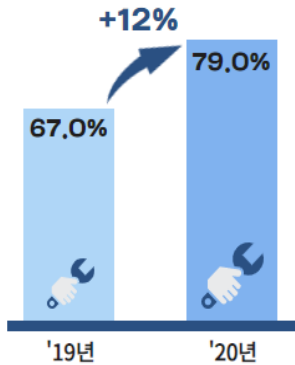
〈 기관 유형별 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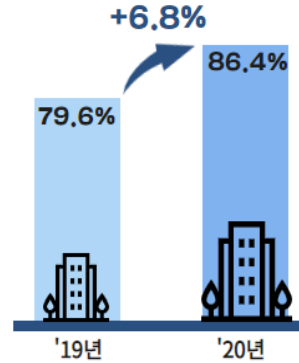
■ 주요 성과

- 부패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법령, 제도, 관행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 권고 개선과제를 이행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불공정·부패관행 개선
 - 국회심의, 예산소요, 이해관계자 조정 등 제약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적극 이행
 - ※ 제도개선 권고과제 총 10,383개 중 8,199개(79.0%) 이행 완료로 전년 대비 이행률은 12%p 증가하였고, 이 중 주요정책 권고과제가 많은 중앙행정 유형은 1,156개 중 999개(86.4%) 이행 완료로 전년 대비 이행률은 6.8%p 증가

|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률



| 중앙행정기관 이행률



■ 보완 사항

- 주요 부패방지 권고과제 외에도 언론보도, 예산낭비, 민관유착 등 부패위험도가 높아 재점검이 필요한 현안 과제는 지속적 점검 필요

■ 우수 사례

◇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으로 공정성·투명성 제고

- ①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산하기관의 임직원이나 소관 법정 소·분과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공무수행 민간인에 대한 뇌물죄 적용을 확대
- ② 대전시교육청은 고문변호사·소송수행변호사 위촉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변호사의 선임기준·위촉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공공기관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 ③ 한국공항공사는 기관에서 운영 중인 13개 위원회에 대하여 민간위원의 구성 비율을 확대하고 이해충돌 발생 시 회피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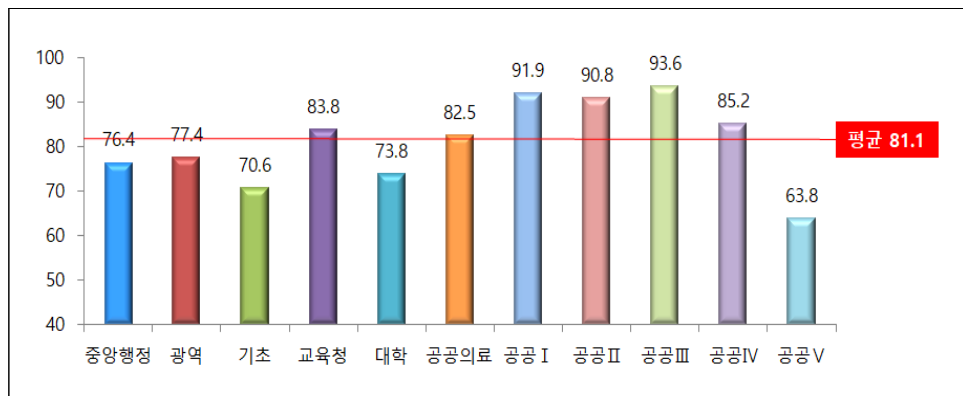
3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3-1. 부패위험 제거 노력

■ 개 요

- (부패취약분야 개선) 청렴도 측정 시 부패취약분야, 상급기관의 감사지적사항 등 기관별 부패취약분야를 개선하려는 노력에 대한 평가
- (사규 부패영향평가) 국민생활에 밀접한 공직유관단체 사규에 대해 소관기관이 부패유발요인을 자율 개선하려는 노력을 평가
- ‘부패위험 제거 노력’의 평균점수는 전체 평균점수(84.1점) 보다 낮은 81.1점 수준
 - 기관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Ⅲ(93.6점)이 가장 높고, 그 뒤는 공직유관단체 I (91.9점), 공직유관단체Ⅱ(90.8점)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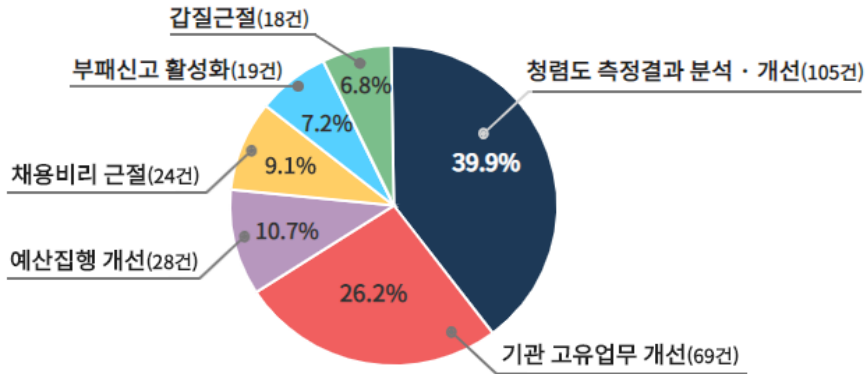
〈 기관 유형별 결과 〉



■ 주요 성과

- 기관별 고질적인 부패취약분야를 분석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개선방안을 자율적으로 발굴함에 따라,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강화
 - ※ 263개 모든 기관(100%)에서 기관별 부패취약분야 발굴·개선

■ 부패취약분야 개선 내용 (263개 기관, 263건)



- 국민생활에 밀접한 공공기관 사규의 불공정 업무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 노력을 유도

※ 131개 공직유관단체 중 91개 기관(69.4%)에서 사규 개선사항 발굴

※ 191개 사규 개선사항 중 110개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불공정 업무 관행 개선

■ 보완 사항

- 일부기관은 부패취약분야 분석 없이 일반적인 반부패 시책을 단순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분석 및 이에 따른 개선 노력 필요
- 기관별로 사규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이해도 및 개선 의지가 크게 차이 나므로,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컨설팅 등 보완 필요
 - ※ 재정누수 방지, 이해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의 규정 개정으로 실제 부패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필요

■ 우수 사례

◇ 청렴도 측정결과 등 기관별 부패취약분야 분석에 따른 개선 노력

- ① **경찰청**은 청탁 · 유착우려 사건의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3중 심사체계', 무작위 배당체계 도입, 사건심사 시민위원회 운영, 부정청탁 전력자 배제 등 6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수사분야 공정성 제고
- ② **특허청**은 퇴직자 이해충돌을 통제하기 위해 행동강령 개정, 심사회피제도, 동호회 퇴직자 참여 불허, 변리사 성명 비공개 처리 등 종합적인 시책 추진
- ③ **세종특별자치시**는 청렴책임관제, 주민참여 감독관제, 명예감독관 등을 도입하여 공사관리 분야의 투명성 · 청렴성 증진을 위해 노력
- ④ **충북대학교병원**은 금품 · 향음 등의 요구 대상인 납품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청렴동행 교육을 시행하고, 나아가 이미 계약이 종료되었지만 향후 재계약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업체까지 교육 대상에 추가
- ⑤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의약품 공급 업체 간 담합의 가능성이 있는 부패취약분야에 대응하여, 예정가격 작성방법 개선, 입찰자격 제한 보완 등 반부패 시책을 통해 의약품 입찰의 투명성 · 공정성 제고
- ⑥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상업무에서 '장해담당직원의 장해판정 관여', '1인 자문의사에 의한 장해판정', '표준업무절차 부재' 등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하고, 장해판정 · 지급주체 분리, 장해전담 심사기관 도입 등 대책 마련
- ⑦ **국립공원공단**은 전국에 분포한 국립공원 주차장에서 주차비 징수업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편취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치밀한 감시활동을 통해 개선조치 실현
- ⑧ **한국수출입은행**은 직원의 과도한 외부강의와 부당한 수당 수령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강의 신고시스템 개선, 모니터링 강화, 외부강의등 가이드라인 제정, 맞춤형 교육 등 포괄적 수단으로 효과적 대응
- 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업무지시 공정성'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내부직원 의견수렴 · 자회사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직문화 개선 세부과제 실행, 신고지원센터 내실화, 매뉴얼 제작 등 전방위적 개선
- ⑩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방용품 유통시장의 부패취약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소방업체 신고센터 운영, 제조업체 품질관리 · 기술교육 지원, 소방용품 공개시험 · 검사 실시 등 해결방안 마련 · 추진

◇ 채용비리 · 갑질 근절, 부패신고 활성화 분야 부패취약분야 개선 노력

- ① **외교부**는 재외공관 등의 격리 · 폐쇄성으로 인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재외공관 대상 갑질위험 진단 시행, 제보채널 활성화, 갑질 비위자 신상발발, 갑질 예방교육 등의 종합적 갑질근절 시책 추진
- ② **대구광역시**는 갑질 등 위법 · 부당한 업무지시를 개선하기 위해, 공직자행동강령을 개정하여 갑질 거부권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갑질근절의 실효성을 높임

- ③ **전라북도**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제보자가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변호사 상담을 지원하며, 민원콜백 조사대상자에게는 부패·공익신고제도를 능동적으로 안내
- ④ **서울시 도봉구**는 공정한 채용을 위해 일상감사 대상 분야에 채용을 추가하고, 채용의 전 과정을 참관하는 고용감찰관제를 도입·운영
- ⑤ **경기도교육청**은 공익제보 활성화 및 갑질문화 근절을 위해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자 보호를 위해 안심호루라기(비실명 대리신고 전담) 변호사를 위촉·운영
- ⑥ **대전시교육청**은 갑질행위자에 대한 징계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공직 내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갑질 관련 처분기준 및 매뉴얼을 마련
- ⑦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비축농산물 교환·반품과정에서 구매업체에게 물류비용을 떠넘기는 갑질 사안에 대해, 물류비 전액을 공사부담으로 변경하되 객관적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불공정 관행 개선

◇ 공공기관 사규 부패유발요인 적극 발굴 및 불공정 업무 관행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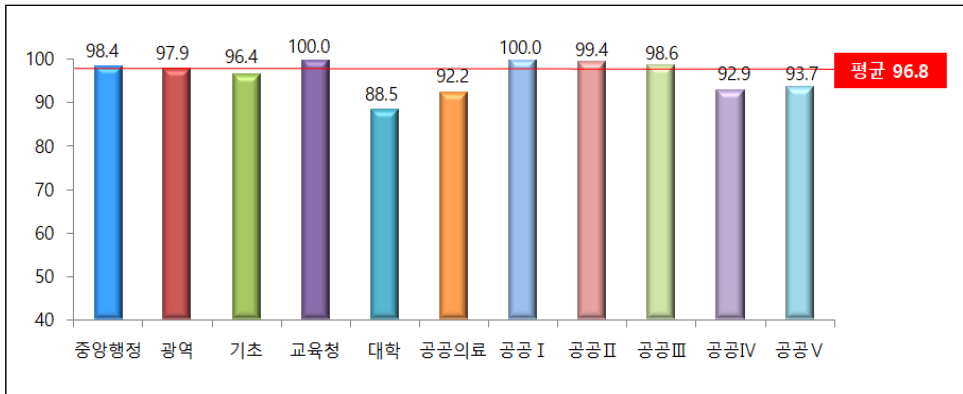
- ①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 재판정 운영지침」에서 재판정 대상의 의지와 상관없는 특별한 사유로 보험급여를 일시 중지하는 과도한 제재에 대해, 조치기간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회공헌활동지침」에서 부정지원 및 지원금 부정 사용 시 사업지원대상자를 제외토록 명시함에 따라, 재정누수가능성을 차단
- ③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사업주 및 장애인에 대한 용자·지원 업무처리규칙」에서 근로지원 수행기관에 대해 사후성과평가 실시, 사업운영능력평가의 구체적 기준 마련으로 위탁·대행의 투명성 제고

3-2. 부패방지 제도 운영

■ 개 요

- (행동강령 운영) 공직자 외부강의등 신고제도 변경사항을 기관별 행동강령에 반영하였는지 여부와 부패취약시기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 실적을 평가
- (청렴교육 이수) 고위공직자의 청렴교육 이수 실적과 청렴교육 강사 양성 실적을 평가
- (청탁금지법 위반 예방)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조치사항 외부공개 여부와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사례에 대한 시정조치 여부를 평가
- ‘부패방지 제도 운영’의 평균점수는 전체 평균점수(84.1점) 보다 높은 96.8점 수준
- 기관 유형별로는 시도 교육청·공직유관단체Ⅰ(100점)이 가장 높고, 그 뒤는 공직유관단체Ⅱ(99.4점), 공직유관단체Ⅲ(98.6점)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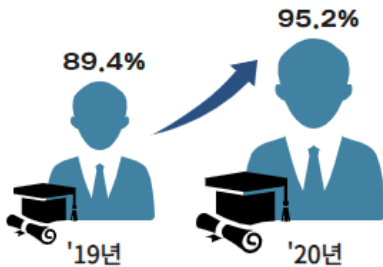
〈 기관 유형별 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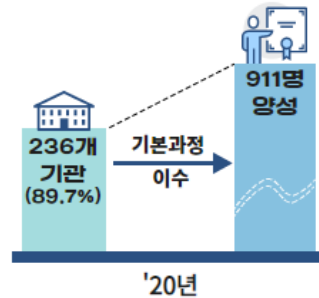
■ 주요 성과

- 공직자 외부강의등 신고제도 변경사항을 각급 기관 행동강령에 반영함에 따라 외부강의등 신고제도가 공직사회 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 기관별 행동강령 이행실태 자체점검으로 부패취약시기(명절 등)에 금품·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발생 소지 차단
 - ※ 263개 기관 중 262개 기관(99.6%)에서 외부강의등 신고제도 개정사항을 각급 기관 행동강령에 반영
 - ※ 263개 기관(100%), 1,469회 이상 행동강령 자체점검(기관당 평균 5.6회 이상)
- 기관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간부의 청렴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조직 리더에 걸맞는 청렴역량을 내재화하고,
 - 각급 기관에 우수한 청렴교육 강사를 양성하도록 하여, 청렴교육 의무화에 따른 청렴교육 수요에 질적·양적으로 적극 대응
 - ※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율 : ('19년) 89.4% → ('20년) 95.2%
 - ※ 236개(89.7%) 기관에서 911명의 청렴교육 강사 양성(기관당 평균 3.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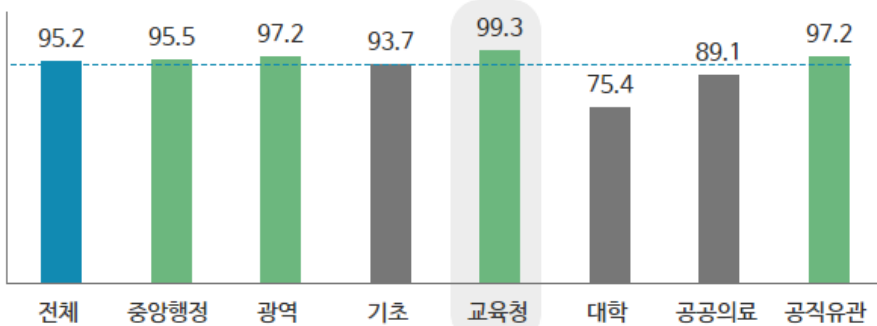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



청렴교육 강사 양성



기관유형별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율



※ 녹색 막대그래프는 평균점수 이상인 기관유형 점수

-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각급 기관의 조치사항을 외부 공개함으로써 소속 공직자, 국민 등이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고,
- 각급 기관이 법령에 따른 신고처리 절차를 준수하도록 유도하여,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제고하고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지원

※ 263개 기관 중 234개 기관(89.0%)에서 청탁금지법 신고사항 외부공개

※ 각급 기관에 부적절 처리로 통보한 59건 사례 중 52건(88.1%) 조치완료

보완 사항

-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율을 추가 상승시키기 위해, 청렴교육 이수율 기준(90%)을 상향하는 등 추진동력 필요
- 청탁금지법 신고사항 외부공개에 경우, 위반신고 유무의 판단을 시책평가 대상기간(1년간)에서 법 시행(16.9월) 이후 전체 기간으로 확대 검토·필요

■ 우수 사례

◇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강화를 통한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 ① **충북대학교**는 소속 교직원의 행동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이행실태를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행동강령 준수의식 고취
- ②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소속 공직자들의 외부강의등 신고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 분석하여 문제점을 개선 · 보완하는 등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점검활동 적극 실시

◇ 고위직의 청렴교육 적극 참여 및 청렴강사의 적극적 양성

- ① **국방부**는 청렴강사 양성 위탁과정을 운영하여, 47명의 청렴교육 기본 강사를 양성
- ② **기상청**은 고위공직자가 청렴교육을 100% 이수하였고, 특히 과장급 간부 전원이 청렴연수원 집합과정에 참석하여 청렴교육을 이수
- ③ **충청남도 아산시**는 고위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청렴교육을 이수(90% 이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4월부터 6월까지 매일 아침 청렴 관련 콘텐츠 자기학습을 실시

◇ 청탁금지법 신고사건의 조치사항 · 상담내용 적극 공개

- ① **외교부**는 기관 특성에 따른 청탁금지법 신고사건에 대해 구체적 답변 내용을 공개하고 질의 · 답변 내용을 홈페이지에 팝업 형식으로 표출하는 등 추가적인 시책을 실시
- ② **인천광역시**는 문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내용을 공개하고 법령에 근거한 조치사유 등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공개 실시
- ③ **한국국제협력단**은 반기별로 구체적인 답변 내용을 공개하고 위반유형별 상담실적을 따로 구분하여 공개성을 제고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부적절 처리사례에 대한 적극적 조치

- ① **고용노동부**는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부적절 처리사례에 대해 시정조치와 이행점검을 완료하는 등 해당기관 및 감독기관으로서 조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
- ② **교육부**는 산하기관 및 대학 등 교육기관의 부적절 처리사례에 대해 2회 이상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제출받는 등 감독기관으로서 조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
- ③ **강원도**는 소속 기초 지자체 및 산하기관의 부적절 처리사례에 대해 조기에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사전검토를 위해 점검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감독기관으로서 조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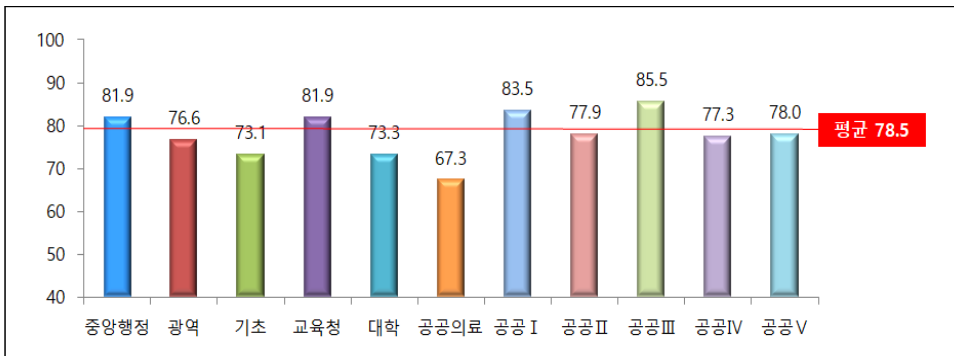
4 청렴행정 · 청렴경영 성과 · 확산

4-1. 반부패 정책 성과

■ 개요

- (청렴도 개선) 전년 대비 기관 종합청렴도 등급·점수의 상승·하락 여부를 점수화하여, 기관별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의 성과를 평가
-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각급 기관에서 수립한 ‘반부패 추진계획’을 당초 계획한 일정·내용대로 진행했는지와 그 효과성에 대한 평가
- ‘반부패 정책 성과’의 평균점수는 전체 평균점수(84.1점) 보다 낮은 78.5점 수준
 - 기관 유형별로는 공직유관단체Ⅲ(85.5점)이 가장 높고, 그 뒤는 공직유관단체Ⅰ(83.5점), 중앙행정기관·시도 교육청(81.9점)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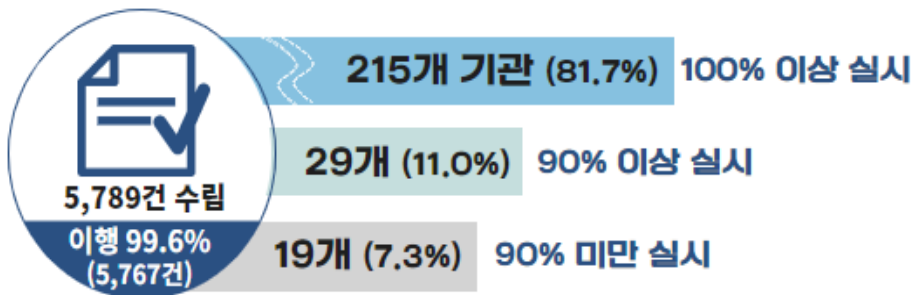
〈 기관 유형별 결과 〉



■ 주요 성과

- '20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263개 기관 중 196개 기관(74.5%)이 종합청렴도가 2등급 이상(77개)이거나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119개)
 - ※ 263개 기관 중 116개 기관(44.1%)은 종합청렴도가 2등급 이상(77개)이거나 전년 대비 등급이 상승(39개)
- 대다수 기관들이 연초에 수립한 반부패 추진계획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
 - 언론보도, 다년간 만족도 조사 결과, 수상실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기관별 반부패 추진계획의 효과성 근거를 적절히 제시
 - ※ 전체 263개 기관에서 총 5,789개 추진계획 중 5,767개(99.6%) 이행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현황 (총 263개 기관)



■ 보완 사항

- 청렴도 등급향상이 되지 않았더라도 전년 대비 기관별 종합청렴도 점수가 상승된 기관의 경우, 그 노력도를 시책평가에 반영 필요
 - ※ 263개 기관 중 116개(44.1%) 기관은 종합청렴도 2등급 이상이거나 전년 대비 등급이 향상된 기관
 - ※ 263개 기관 중 196개(74.5%) 기관은 종합청렴도 2등급 이상이거나 전년 대비 점수가 상승한 기관
-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이행 시 추진과제를 너무 세분화하여 과제수를 부풀리거나 과제를 너무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지양 필요
 - ※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90% 이상이라고 하면서 근거자료는 '보통'이라고 응답한 수치를 포함하는 등 근거자료의 신뢰성 확보도 필요

■ 우수 사례

◇ 실효성 있는 반부패 시책 추진으로 기관별 청렴수준 향상에 기여

- ① **법무부**는 청렴도 측정에서 취약분야인 '신고자 보호 실효성' 개선을 위해, 부패행위 전담조사팀 신설, 신고제도 홍보 강화, 소속기관 부서장 대상 집중교육 등을 실시함에 따라, Help-Line 신고 건수가 1.8배 증가
- ② **해양수산부**는 외부청렴도 개선을 위해, 주요 비위(금품수수, 부정청탁 등) 엄중 조치, 부패취약시기 공직기강 점검 강화, 항만건설공사 등 취약분야 감찰 강화 결과, 외부민원인의 인식 개선 응답 84.2% 도출
- ③ **충청북도**는 청탁금지법 모의훈련의 훈련인원을 '19년 대비 100% 증가·실시한 결과, 신고율이 16.4% 증가하였고, 훈련만족도 조사에서 98%가 위반사항에 대한 대응력 및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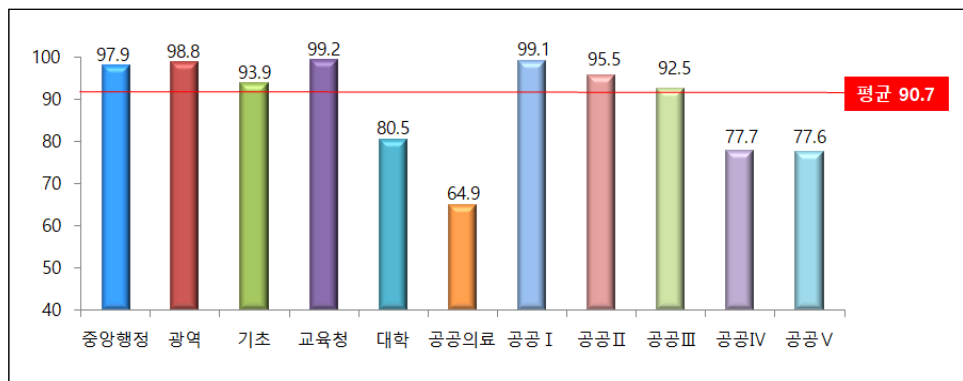
- ④ **서울시교육청**은 청렴활동에 대해 적극 홍보한 결과, 청렴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 수준은 75%, 청렴정책·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96%, 청렴활동 홍보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90%가 긍정적으로 인식
- ⑤ **서울대학교**는 고위직(학과장 이상 보직교수)의 청렴교육 이수율 제고(34%⇒90% 목표)를 위해, 간부회의 보고, 기획부처장 협조메일 발송 등을 실시하여 청렴교육 이수율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92%)
- ⑥ **서울교통공사**는 청렴도 측정에서 부패경험이 발생한 '지하철 상가·광고 관리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대외 소통채널 운영, 청렴창구 알리기, 업무 표준화 등을 실시하여 해당 업무의 부당성 인식이 개선
- ⑦ **한국도로공사**는 기존 청렴 자가진단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위법행위(부당업무지시·예산사용 등)에 대해 감점을 적용함에 따라, 부당업무지시는 전년대비 68% 감소, 부당예산집행은 76% 감소 효과 도출
- ⑧ **한국거래소**는 관리자(임원·부사장·팀장)의 청렴도를 인사평가(직원이 관리자를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관리자의 청렴성을 제고하는 인사제도를 운영하여 대내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 ⑨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모의훈련 대상을 확대(20명→40명)하고 제3자 신고상황도 추가 실시한 결과, 즉시신고율은 17% 향상되고 실제 금품수수에 대한 즉시신고가 이루어지는 효과 도출
- ⑩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R&D 평가의 부패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평가방식을 대면평가에서 온라인에 타평가 방식으로 전환·추진한 결과, 피평가자의 만족도가 상승(+5.6점)하는 효과 창출

4-2.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 평가 개요

- (청렴문화 확산) 민간부문에 대한 청렴문화 확산 활동과 청렴사회협약* 등을 통한 거버넌스 활동 실적을 평가
 - * 정부, 민간, 시민사회 등 참여주체들이 자율적으로 반부패·청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 약속
- (반부패 정보 공유·공개) 공공기관의 반부패 업무에서 생산되는 반부패 정보를 공공기관·국민에 공유·공개한 실적을 평가
-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의 평균점수는 전체 평균점수(84.1점) 보다 높은 90.7점 수준
 - 기관 유형별로는 시도 교육청(99.2점)이 가장 높고, 그 뒤는 공직유관단체 I(99.1점), 광역자치단체(98.8점), 중앙행정기관(97.9점) 순

〈 기관 유형별 결과 〉



■ 주요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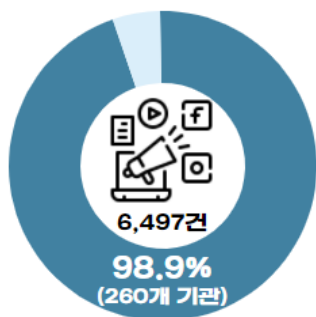
- 코로나19 확산 등 환경변화에 따라 공공기관이 유튜브, 블로그 등 비대면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을 시행

- 공공, 민간,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가 청렴사회협약에 참여·협력하여 부패문제 해결과 청렴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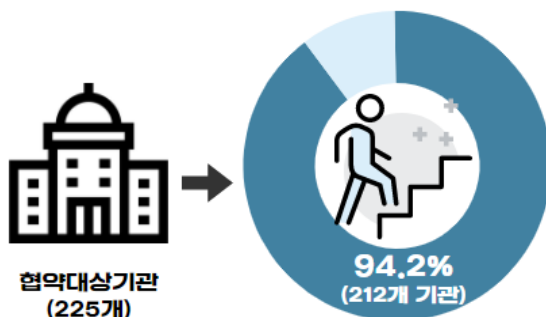
※ 260개(98.9%) 기관에서 6,497개의 청렴문화 확산 활동(기관당 평균 25건)

※ 청렴사회협약 대상 기관(225개) 중 212개(94.2%) 기관이 청렴사회협약 이행

■ 청렴문화 확산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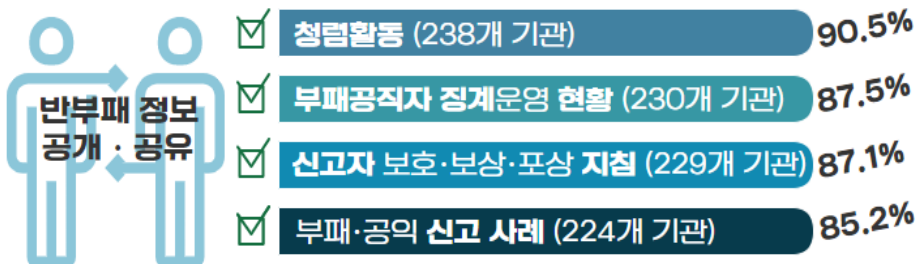
■ 청렴사회협약 이행



- 각급 기관 반부패 업무의 우수시책, 캠페인 등 청렴활동을 적극 공유·공개하여, 반부패 업무의 시너지 창출 환경 조성

- 각 기관의 부패·공익신고의 상담 사례, 신고자 보호·보상 지침 등을 공유·공개하여, 부패·공익 신고 제도의 안정적 기반 마련

반부패 정보 분야별 공유·공개 노력



■ 보완 사항

- 청렴문화 확산 활동은 감사부서(또는 담당자)만의 노력이 아닌 기관장 포함 모든 직원이 각자가 맡은 업무를 공정·투명하게 수행하도록 유도·지원 필요
- 각급 기관의 특성에 맞는 청렴활동을 적극 공개하여, 유사 기관이 해당 청렴활동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유도 필요

■ 우수 사례

◇ 민간부문에 대한 청렴문화 확산 활동

- ① 국토교통부는 생활적폐 해소 차원에서 사설견인차(일명 '레카차')의 무단 견인 및 과도한 요금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사설견인차 운영의 청렴성·공정성 제고
- ②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아산시 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 따라,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을 활용한 청렴문화 확산 활동 추진

◇ 청렴사회협약 등을 통한 반부패·청렴 거버넌스 활동

- ① 경기도교육청은 체육, 건설, 급식, 언론사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경기도교육 투명성 강화를 위한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하여, 미래사회의 교육 발전과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도교육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
- ②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 청렴경영 성공·실패 사례집(성공사례 92건, 실패사례 30건)' 발간과 협약 회원사에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컨설팅을 실시하여, 청렴한 공기업 만들기에 기여
- 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외국인투자기업과 함께 '사회공헌·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외국인투자기업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하여, 투명·공정한 외국투자기업의 생태계 구축과 사회적 책임경영 문화 확산에 기여

- ④ **서울교통공사**는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하고 계약 시 퇴직자와의 부적절한 유착관계 근절을 위해, 재취업 퇴직자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부패방지 및 청렴한 계약문화 조성에 기여

◇ 공공기관 반부패·청렴활동의 적극 공개·공유

- ① **해양수산부**는 소속기관과 협업하여 우수 청렴시책, 캠페인,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 본부·소속기관의 청렴활동을 적극 공개·공유하여 반부패 정책 확산에 기여
- ② **대전광역시**는 청렴활동의 SNS 활용 홍보계획, 공직기강 감찰계획, 적극행정 면책사례, 갑질 근절 캠페인 시행계획 등 시의적절하게 추진한 기관의 청렴활동을 적극 공개·공유

5 감점

5-1. 부패방지제도 운영 충실도

■ 개요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규정 위반을 확인하고, 국민권익위 보호관련 결정 이행여부를 평가
- (부패신고 이첩 건의 처리결과) 부패신고, 복지보조금 부정신고를 해당 공공기관에 이첩한 건에 대한 처리결과 회신여부를 평가
- (채용비리 실태점검) 감독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채용비리 근절 실태를 충실하게 점검하였는지 여부를 평가
- (청탁금지법 제도개선 이행) 지방자치단체의 ‘후원·협찬 금품 수수’와 ‘주차편의 제공’과 관련된 청탁금지법 제도개선 이행 여부를 평가

■ 미이행 사례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규정 미준수 및 국민권익위 보호결정 불이행
 - ※ △△△△은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성과평가에서 불이익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성과평가 상향 요구를 불이행
 - ※ ○○○○은 공익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피신고자에게 전달

● 국민권익위에서 이첩한 사건 중 조사결과와 장기간 미통보

※ ☆☆☆는 부패신고·복지도조금 부정신고 국민권익위 이첩사건 중 56%를 조사결과 미회신

● 청탁금지법 취약분야 개선과제 미이행

※ ◇◇◇◇는 청탁금지법 관련 제도개선인 후원·협찬, 주차편의 제공 근절을 위한 제도보완 사항 전체를 미이행

붙임 1

2020년도 기관 유형별 평가등급

■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 등급 내 가나다순, () : '19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중앙행정기관 I (24개)	중앙행정기관 II (14개)	광역자치단체 (15개)
1 등급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2등급)	관세청(▲1등급) 특허청(▲1등급) 해양경찰청(▲3등급)	전라남도(▲1등급) 충청북도(▲2등급)
2 등급	교육부(▲1등급) 농림축산식품부(▲1등급)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1등급) 인사혁신처('19년 면제)	국세청(▲1등급) 조달청(-)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3 등급	고용노동부(▼2등급) 국가보훈처(-) 국무조정실(▼2등급) 국방부(-) 국토교통부(▼1등급) 기획재정부(▲1등급) 보건복지부(▼1등급) 통일부(▲1등급) 행정안전부(-) 환경부(▲1등급)	경찰청(-) 기상청(▼1등급) 문화재청(▼1등급) 방위사업청(▼1등급) 새만금개발청(▲2등급) 소방청(▲2등급)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1등급) 충청남도(▼2등급)
4 등급	공정거래위원회(▼1등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2등급) 문화체육관광부(▼2등급) 산업통상자원부(▼1등급) 식품의약품안전처(▼2등급) 외교부(▼1등급)	검찰청(-) 병무청('19년 면제) 산림청('19년 면제)	강원도(▼1등급) 경상북도(▼1등급) 대전광역시(▼1등급) 서울특별시(▼1등급) 인천광역시(▼1등급)
5 등급			

■ 기초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 등급 내 가나다순, (): '19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기초자치단체 I (17개)	기초자치단체 II (23개)	교육자치단체 (14개)
1 등급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안양시(▲2등급)	광주광역시 북구(▲1등급) 서울특별시 강동구(▲1등급) 서울특별시 동작구(▲2등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은평구(▲1등급)	대전광역시 교육청(-) 울산광역시 교육청(-) 인천광역시 교육청(▲2등급)
2 등급	경상남도 김해시(▲2등급) 서울특별시 강서구(▲2등급) 충청남도 천안시(▲1등급) 충청북도 청주시(▲1등급)	경상남도 양산시(▲2등급) 서울특별시 동대문구(▼1등급) 충청남도 아산시(-)	경기도 교육청(▲1등급) 경상북도 교육청(▼1등급) 부산광역시 교육청(▼1등급)
3 등급	경기도 안산시(-) 경상북도 포항시(-) 서울특별시 강남구(▼2등급) 서울특별시 관악구(-)	강원도 원주시(▲1등급)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파주시(-) 대구광역시 북구(▼2등급) 서울특별시 광진구(▼2등급) 서울특별시 도봉구(▲1등급) 인천광역시 미추홀구(▲2등급)	광주광역시 교육청(-) 서울특별시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 충청남도 교육청(-)
4 등급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남양주시(▼1등급) 경기도 성남시(-) 서울특별시 노원구(▼1등급) 서울특별시 송파구(▼3등급)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 서구(-)	경기도 광주시(-) 경상북도 구미시(-) 광주광역시 광산구(▲1등급) 부산광역시 부산진구(▼1등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초구('20년 신규) 인천광역시 연수구('20년 신규)	경상남도 교육청(▼1등급) 대구광역시 교육청(▼1등급) 전라남도 교육청(▼1등급) 충청북도 교육청(▼1등급)
5 등급		서울특별시 성동구(▼2등급)	

■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 등급 내 가나다순, (): '19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국·공립대학 (12개)	공공의료기관 (13개)
1 등급		국립암센터(-) 서울대학교병원(▲1등급)
2 등급	부경대학교(▼1등급)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충남대학교(▲3등급) 충북대학교(-)	부산대학교병원(▲1등급) 충북대학교병원(▼1등급) 한국원자력의학원(▲3등급)
3 등급	강원대학교(▲1등급)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부산대학교(▼1등급)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2등급)
4 등급		강원대학교병원(▼1등급) 경북대학교병원(▼1등급) 경상대학교병원(▼1등급) 제주대학교병원(-)
5 등급	전남대학교(▼3등급) 전북대학교(-)	국립중앙의료원(-)

공직유관단체

※ 등급 내 가나다순, () : '19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공직유관단체 I (22개)	공직유관단체 II (33개)
1 등급	강원랜드(-) 국민건강보험공단(▲2등급) 근로복지공단(-) 서울교통공사(▲2등급)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자산관리공사(-)
2 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1등급) 서울시설공단(▲1등급) 한국도로공사(-) 한전KPS㈜(▲1등급)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1등급) 신용보증기금(▲1등급) 한국가스안전공사(▲1등급)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1등급)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3 등급	대한적십자사(-) 한국가스공사(▼1등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1등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1등급) 한국철도공사(▼1등급)	금융감독원(-) 대한석탄공사(-) 도로교통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19년 면제) 한국전력기술㈜(▼1등급) 한국조폐공사('19년 면제)
4 등급	부산교통공사(▼1등급) 중소기업은행(▼1등급) 한국농어촌공사(▼1등급) 한국마사회(▼3등급) 한국토지주택공사(▼1등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9년 면제) 인천교통공사('19년 면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등급)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2등급)
5 등급		

※ 등급 내 가나다순, () : '19년 대비 등급 변화 정도

구분	공직유관단체Ⅲ (31개)	공직유관단체Ⅳ (24개)	공직유관단체Ⅴ (21개)
1 등급		울산시시설공단(▲1등급) 한국정학재단(▲2등급)	인천항만공사(▲2등급)
2 등급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19년 면제) 부산시설공단(▲1등급) 인천시설공단(▲1등급) 한국거래소(-)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연구재단(-) 해양환경공단(-)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1등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도시공사(▲1등급)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1등급) 한국소비자원(▲1등급) 한국원자력환경공단(▲1등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경기신용보증재단(▲1등급) 대구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2등급) 부산항만공사(▼1등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세라믹기술원(▲1등급)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1등급)
3 등급	공무원연금공단(▼1등급) 국방기술품질원(-) 국토안전관리원(-)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1등급) 대전도시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등급) 예금보험공사(▼1등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1등급)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단지공단(▼1등급) 한국우편사업진흥원(▼1등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1등급) 한국정보화진흥원(▼1등급)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1등급)	농업기술실용화재단('19년 면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고용정보원(▲1등급)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1등급)	광주광역시도시공사(▼1등급) 국립해양생물자원관('20년 신규) 대한체육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1등급)
4 등급		경기주택도시공사(▼1등급)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19년 면제) 한국건설관리공사(▲1등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20년 신규) 한국수산업자재단('20년 신규)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년 신규) 군인공제회(-)
5 등급	산림조합중앙회(▼1등급)	대기업노조연맹('20년 신규) 인구보건복지협회(▼1등급)	남양주도시공사('20년 신규) 서울디자인재단('20년 신규)

붙임 2

기관 단위과제별 평가등급

■ 중앙행정기관 I : 24개 기관

※ 기관 유형별 가나다순

기관명	종합 등급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고용노동부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5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공정거래위원회	4등급	2등급	4등급	5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교육부	2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국가보훈처	3등급	4등급	2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국무조정실	3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2등급	4등급
국방부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국토교통부	3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기획재정부	3등급	4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5등급	2등급	3등급
농림축산식품부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문화체육관광부	4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5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방송통신위원회	2등급	4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법무부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보건복지부	3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산업통상자원부	4등급	2등급	5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4등급
식품의약품안전처	4등급	4등급	4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여성가족부	2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외교부	4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5등급	4등급	4등급
인사혁신처	2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중소벤처기업부	1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통일부	3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해양수산부	1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행정안전부	3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환경부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 중앙행정기관Ⅱ : 14개 기관

※ 기관 유형별 가나다순

기관명	종합 등급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검찰청	4등급	4등급	4등급	2등급	5등급	1등급	3등급	4등급
경찰청	3등급	2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관세청	1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국세청	2등급	4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기상청	3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문화재청	3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방위사업청	3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병무청	4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5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산림청	4등급	4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새만금개발청	3등급	4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4등급
소방청	3등급	5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조달청	2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특허청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해양경찰청	1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 광역자치단체 : 15개 기관

※ 기관 유형별 가나다순

기관명	종합 등급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강원도	4등급	4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5등급	1등급
경상북도	4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광주광역시	2등급	4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대구광역시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대전광역시	4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5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부산광역시	2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서울특별시	4등급	3등급	1등급	5등급	3등급	5등급	3등급	4등급
세종특별자치시	3등급	2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울산광역시	3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인천광역시	4등급	2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전라남도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전라북도	3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제주특별자치도	2등급	2등급	1등급	4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충청남도	3등급	4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충청북도	1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 기초자치단체 I : 17개 기관

※ 기관 유형별 가나다순

기관명	종합 등급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경기도 고양시	4등급	1등급	4등급	5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경기도 남양주시	4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경기도 성남시	4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4등급
경기도 수원시	1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4등급
경기도 안산시	3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경기도 안양시	1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경상남도 김해시	2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경상북도 포항시	3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서울특별시 강남구	3등급	1등급	1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서울특별시 강서구	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서울특별시 관악구	3등급	4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서울특별시 노원구	4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서울특별시 송파구	4등급	4등급	2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인천광역시 남동구	4등급	3등급	5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인천광역시 서구	4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5등급	3등급
충청남도 천안시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충청북도 청주시	2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 기초자치단체Ⅱ : 23개 기관

※ 기관 유형별 가나다순

기관명	종합 등급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강원도 원주시	3등급	1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2등급
경기도 광주시	4등급	3등급	3등급	5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5등급
경기도 김포시	3등급	4등급	4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경기도 파주시	3등급	5등급	2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경상남도 양산시	2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4등급
경상북도 구미시	4등급	3등급	5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광주광역시 광산구	4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등급
광주광역시 북구	1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대구광역시 북구	3등급	1등급	2등급	5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4등급	3등급	3등급	5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서울특별시 강동구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서울특별시 광진구	3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서울특별시 도봉구	3등급	5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서울특별시 동작구	1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4등급	1등급	2등급	4등급	3등급	5등급	2등급	3등급
서울특별시 서초구	4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4등급
서울특별시 성동구	5등급	3등급	5등급	4등급	4등급	5등급	2등급	4등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서울특별시 은평구	1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3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인천광역시 연수구	4등급	3등급	5등급	2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충청남도 아산시	2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 교육자치단체 : 14개 기관

※ 기관 유형별 가나다순

기관명	종합 등급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경기도 교육청	2등급	2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경상남도 교육청	4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경상북도 교육청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광주광역시 교육청	3등급	3등급	4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대구광역시 교육청	4등급	3등급	4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4등급
대전광역시 교육청	1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부산광역시 교육청	2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서울특별시 교육청	3등급	5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울산광역시 교육청	1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인천광역시 교육청	1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전라남도 교육청	4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4등급
전라북도 교육청	3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충청남도 교육청	3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4등급
충청북도 교육청	4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 국 · 공립대학 : 12개 기관

※ 기관 유형별 가나다순

기관명	종합 등급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강원대학교	3등급	3등급	4등급	2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경북대학교	3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경상대학교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공주대학교	3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부경대학교	2등급	1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부산대학교	3등급	1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서울대학교	2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인천대학교	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전남대학교	5등급	3등급	5등급	4등급	5등급	5등급	5등급	5등급
전북대학교	5등급	4등급	5등급	5등급	4등급	5등급	5등급	5등급
충남대학교	2등급	4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충북대학교	2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 공공의료기관 : 13개 기관

※ 기관 유형별 가나다순

기관명	종합 등급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강원대학교병원	4등급	1등급	4등급	5등급	3등급	4등급	2등급	3등급
경북대학교병원	4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경상대학교병원	4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국립암센터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국립중앙의료원	5등급	5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5등급	4등급	5등급
부산대학교병원	2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서울대학교병원	1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전남대학교병원	3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전북대학교병원	3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제주대학교병원	4등급	5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5등급	5등급
충남대학교병원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충북대학교병원	2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한국원자력의학원	2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공직유관단체 I : 22개 기관

※ 기관 유형별 가나다순

기관명	종합 등급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강원랜드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국민건강보험공단	1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근로복지공단	1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대한적십자사	3등급	2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부산교통공사	4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서울교통공사	1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서울시설공단	2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4등급
중소기업은행	4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4등급
한국가스공사	3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한국농어촌공사	4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한국도로공사	2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한국마사회	4등급	2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한국산업은행	3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4등급
한국수력원자력(주)	3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한국수자원공사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한국전기안전공사	3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한국전력공사	3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한국철도공사	3등급	4등급	2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한국토지주택공사	4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한전KPS(주)	2등급	5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 공직유관단체Ⅱ : 33개 기관

※ 기관 유형별 가나다순

기관명	종합 등급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국가철도공단	2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국립공원공단	2등급	2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그랜드코리아레저(주)	1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금융감독원	3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대한석탄공사	3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도로교통공단	3등급	2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서울주택도시공사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신용보증기금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우체국물류지원단	3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인천교통공사	4등급	2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5등급
인천국제공항공사	3등급	2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한국가스기술공사	4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5등급
한국가스안전공사	2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한국공항공사	2등급	4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한국남동발전(주)	3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한국남부발전(주)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한국동서발전(주)	2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등급	4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한국산업인력공단	2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한국서부발전(주)	3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한국석유공사	3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한국수출입은행	2등급	1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한국송강기안전공단	4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5등급	3등급
한국자산관리공사	1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한국전력기술(주)	3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한국조폐공사	3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한국지역난방공사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한국환경공단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공직유관단체Ⅲ : 31개 기관

※ 기관 유형별 가나다순

기관명	종합 등급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공무원연금공단	3등급	3등급	4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2등급	4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국방기술품질원	3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국토안전관리원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3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4등급
대전도시공사	3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부산시설공단	2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산림조합중앙회	5등급	4등급	5등급	5등급	4등급	5등급	5등급	5등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등급	5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예금보험공사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인천시설공단	2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등급	5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주택도시보증공사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한국거래소	2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한국관광공사	2등급	1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한국국제협력단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3등급	5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한국사회보장정보원	3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등급	4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한국산업단지공단	3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한국에너지공단	2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한국연구재단	2등급	3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한국우편사업진흥원	3등급	3등급	2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한국인터넷진흥원	3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한국전력거래소	3등급	3등급	2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4등급
한국정보화진흥원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한국콘텐츠진흥원	3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해양환경공단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 공직유관단체Ⅳ : 24개 기관

※ 기관 유형별 가나다순

기관명	종합 등급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경기주택도시공사	4등급	5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농업기술실용화재단	3등급	2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대구경북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5등급	5등급	5등급	5등급	4등급	5등급	5등급	3등급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4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울산시설공단	1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인구보건복지협회	5등급	3등급	5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5등급
인천도시공사	2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2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중소기업중앙회	3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한국건설관리공사	4등급	5등급	3등급	5등급	4등급	5등급	3등급	5등급
한국고용정보원	3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등급	3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4등급	5등급	5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5등급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한국석유관리원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한국소비자원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한국수산자원공단	4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한국장학재단	1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3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2등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 공직유관단체 V : 21개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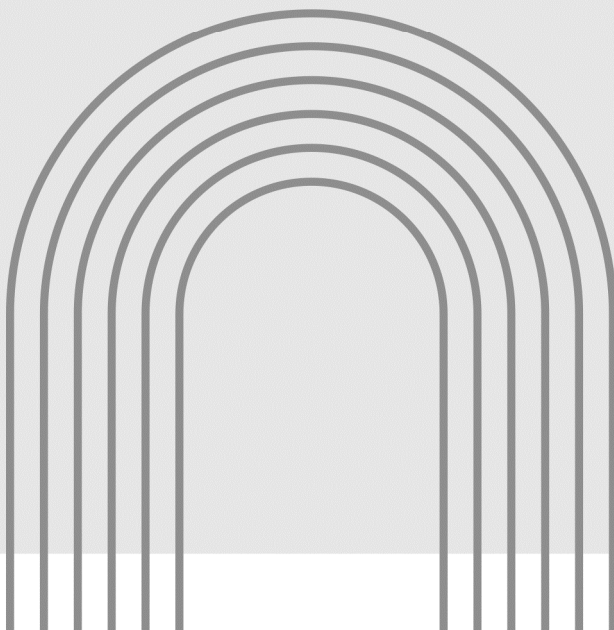
※ 기관 유형별 가나다순

기관명	종합 등급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 성과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경기신용보증재단	2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광주광역시도시공사	3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3등급	3등급
국가평생교육진흥원	4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5등급
국립해양생물자원관	3등급	4등급	4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4등급
군인공제회	4등급	3등급	3등급	5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남양주도시공사	5등급	4등급	5등급	5등급	4등급	5등급	5등급	5등급
대구도시공사	2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대한체육회	3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	3등급
부산도시공사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부산항만공사	2등급	2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서울디자인재단	5등급	3등급	5등급	4등급	4등급	5등급	4등급	5등급
인천항만공사	1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한국과학창의재단	2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4등급	2등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등급	3등급	5등급	4등급	4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한국세라믹기술원	2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등급	3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3등급	4등급	3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2등급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한국해양수산연수원	3등급	3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1등급	4등급	3등급



제3장

반부패 · 청렴 종합계획



I 반부패·청렴 종합계획

요 지

2021년 반부패청렴 종합계획 추진으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과 함께 만드는 청렴도시 인천을 실현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시민사회·공공기관·인천시가 함께 만드는 청렴도시 인천
 - * 유관부서·기관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공직자가 앞장서 참여하여 실천하는 청렴도시 인천
- 생활속 청렴실천으로 한단계 도약하는 청렴도시 인천

■ 추진체계(4대 전략, 15개 단위과제, 42개 세부과제)

전 략 (4)	단 위 과 제 (15)
①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인천(외부청렴)	1.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활동 및 제도개선 강화(2) 2. 다방향 소통행정으로 시민의견 수렴 본격화(5) 3.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홍보 캠페인 전개(2)
② 스스로 실천하는 청렴인천(내부청렴)	4. 공직자 스스로 실천하는 청렴활동 다양화(5) 5. 고위직 청렴활동 참여로 청렴리더십 강화(4) 6. 청렴해피콜·청렴문자로 부패유발요인 사전 차단(2)
③ 공정·투명한 청렴인천(조직체계화·제도화)	7.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 시행(4) 8. 다양한 신고채널과 예방감찰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4) 9. 취업심사·취업제한 제도 운영(3) 10. 자치구·공직유관기관 자체 청렴도 제고방안 강구(2)
④ 도약하는 청렴인천(교육·홍보활동)	11. 청렴공감대 형성을 위한 「청렴이음 한마당」 ^(가칭) 개최(1) 12. 인천형 청렴가치관 확립을 위한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3) 1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통한 반부패 시스템 정착(3) 14. 청렴매뉴얼 「청렴이음」 최초 제작(1) 15. 「생활속 100가지 청렴」 일상화(1)

■ 중점 추진사항

- (신규·확대과제) 42개 세부과제 중 신규 10개, 확대 7개 과제선정
- (소통행정 활성화) 시민정책자문단, 온라인 시민청원제도, 제안제도, 인천형 적극행정 등
- (청렴리더십 강화) 시장님, 청렴리더 등 고위직 청렴활동 다양화
- (청렴피드백 실천) 청렴문화진단 설문조사,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등
- (전략적 홍보) 청렴이음책자, 청렴감사키트, 청렴카드뉴스 등

1 2021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체계

- 청렴도 1등급 도약 투명하고 신뢰받는 인천 구현 -
2021년도 반부패·청렴 종합계획

비 전

시민과 함께 만드는 청렴도시 인천 실현

목 표

청렴도 1등급 도약, 투명하고 신뢰받는 인천 구현

전 략 (4)

세 부 과 제 (42)

①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 인천
(외부청렴)

1.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활동 및 제도개선 강화(2)
2. 다방향 소통행정으로 시민의견 수렴 본격화(5)
3.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홍보 캠페인 전개(2)

② 스스로 실천하는
청렴 인천
(내부청렴)

4. 공직자 스스로 실천하는 청렴활동 다양화(5)
5. 고위직 청렴활동 참여로 청렴리더십 강화(4)
6. 청렴문자·청렴해피콜로 부패유발요인 사전차단(2)

③ 공정·투명한
청렴 인천
(조직체계화·제도화)

7.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 시행(4)
8. 다양한 신고채널과 예방감찰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4)
9. 취업심사·취업제한 제도 운영(3)
10. 자치구·공직유관기관 자체 청렴도 제고방안 강구(2)

④ 도약하는 청렴 인천
(교육·홍보활동)

11. 청렴 공감대 형성을 위한『청렴이음 한마당』^(가칭) 개최(1)
12. 인천형 청렴가치관 확립을 위한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3)
1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통한 반부패 시스템 정착(3)
14. 청렴매뉴얼 『청렴이음』최초 제작(1)
15. 『생활속 100가지 청렴』일상화(1)

부록
1

반부패·청렴정책

1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 인천

1-1.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활동 및 제도개선 강화

① 『청렴사회민관협의회』중심 시민의견 적극 수렴

- 운영근거 : 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구성체계 : 23명 구성, 임기 2년, 의장 2명 (공공부문 1, 민간부문 1)
※ 실무협의회 33명, 청렴활동 참여기관 38개 기관으로 구성
- 주요활동
 -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및 주민의견 수렴
 - 청렴사회협약 체결과 협약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 추진계획
 - 참여기관 확대 등 조례개정 검토 : 상반기
 - 기관별 「청렴실천 운동과제」발굴 : 상반기
 - 「청렴사회협약」이행과제 자율평가 : 하반기

② 『청렴시민감사관』활동 강화 및 제도개선 활성화

- 운영근거 :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구성체계 : 72명 구성, 임기 2년 (1회 연임가능)
※ 제9기 청렴시민감사관 임기 : '19. 9. 25. ~ '21. 9. 24.(2년)
- 주요활동
 - (시정건의)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 부패유발 제도·관행
 - (행위제보) 공무원 비위·부조리, 불친절 행위
 - (기 타) 감사과정 직접참여, 시정발전을 위한 필요사항 건의
- 추진계획
 - 제10기 시민감사관 신규 위촉 : '21. 6. ~ 9월
 - 16개 기관* 종합감사 참여, 제도개선 등 의견제출 : 연중
* 군구 4, 사업소 5, 공사공단 2, 출자출연 4, 출장소 1
 - 「市 홈페이지 청렴인천」을 활용한 제보·건의 신고 : 연중
 - 시민감사관 소통·역량강화 위한 밴드(네이버 밴드) 상시 운영

1-2. 다방향 소통행정으로 시민의견 수렴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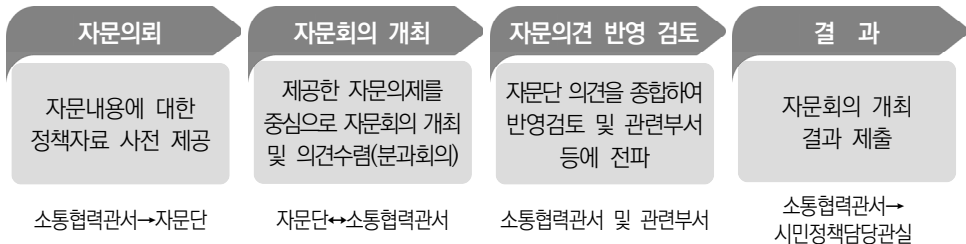
① 「시민정책자문단」운영 활성화 **신규**

(시민정책담당관)

- 운영근거 : 제2기 시민정책자문단 구성·운영계획('20. 12. 2.)
- 구성체계 : 42명 구성, 2개 분과 운영 (시민정책분과, 온라인소통분과)
- 회의개최
 - 정기회의(2회, 반기별 1회) / 분과회의(8회, 분과별 분기 1회)
 - 정책 자문활동 성과 공유 및 운영 개선방향 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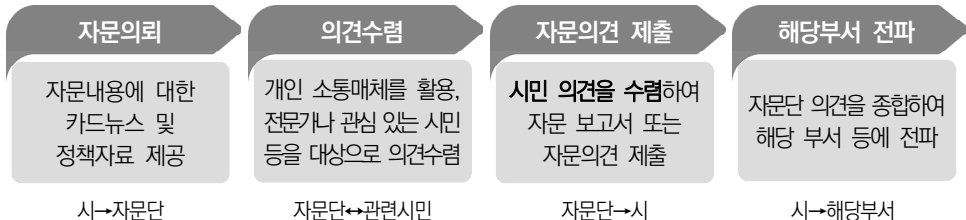
시민정책분과(20명)

- 자문시기 : 분기 1회 (3월, 6월, 9월, 11월)
- 자문방법 : 분과회의를 통한 대면 자문 원칙
- 자문내용 : 소통협력분야 추진업무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온라인소통분과(22명)

- 자문시기 : 분기 1회 (4월, 6월, 8월, 11월)
- 자문방법 :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자문
- 자문안전(안) : 실국별 역점시책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 추진계획

- 자문위원 위촉 : '21. 2월
- 정기회의 개최 : (6월) 자문단 성과공유 / (11월) 총괄평가
- 분과회의 개최 : 분야별 자문안전에 대한 전문가 · 시민의견 수렴 ·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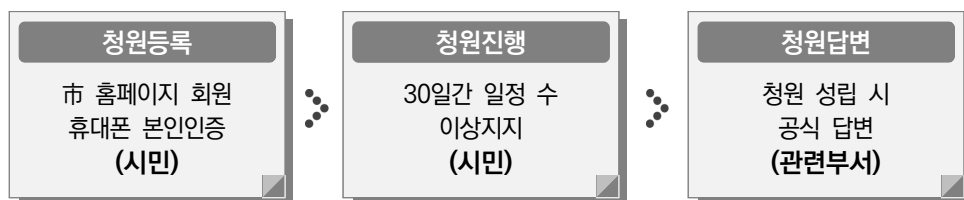
2 『인천은 소통-e 가득(온라인 시민청원창구)』운영

(시민정책담당관)

- 개설위치 : 인천은 소통e가득
(<http://cool.incheon.go.kr/>)
- 청원신청 : 만14세 이상 시민 누구나
- 청원대상 : 시정 관련 이슈, 정책 건의사항 등
- 운영방법 : 30일간 3천명 이상 공감한
청원에 대해 영상답변



● 청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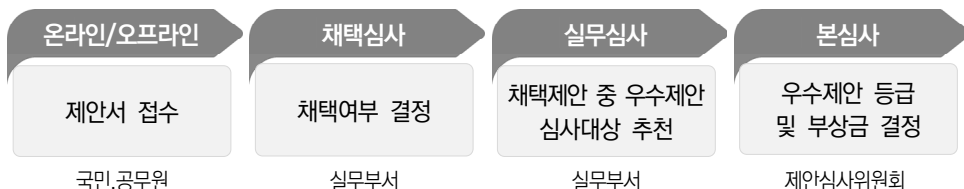
● 답변처리

- (3천 이상 공감 청원) 관계부서등 사전검토회의 후 영상답변
- (3천 미만 공감 청원) 답변이 필요한 경우 부서 서면답변

3 『공무원·시민 제안제도』운영 **신규**

(혁신과)

- 운영근거 :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 제안내용 : 공무원·시민의 시정전반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 구성체계 : 국민신문고 접수·처리



● 우수제안자 : 부상금 (10~500만원) 지급 및 시장 상장 수여

- 시민 제안자 : 부상금 지급 및 시장 상장 수여

- 공무원제안자 : 부상금 지급 및 시장 상장 수여

실시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인사특전 등 지급

● 제안 채택·실행 유공자 포상

- 채택·실시 건별 인센티브 (5~10만원 지급)

- 제안 실행 공무원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4 『인천형 적극행정』제도 강화 **확대**

(혁신과)

● 운영근거 : 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 구성체계 : 13명 (내부위원 6, 외부위원 7) * '21년 외부위원 확대 계획

● 추진계획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 정수 확대 : ('20년) 13명 → ('21년) 30명 내

• 격월 개최 원칙 : ('20년) 총3회 → ('21년) 6회 이상

- 적극행정 직무수행 안전성 보장 근거 마련

•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에 관한 지원 지침」제정

- 보상체계 강화

• 인센티브 확대 : ('20년) 9종 → ('21년) 10종(포상금 신설)

• 사전 선발규모 기준 마련 : ('20년) 미수립 → ('21년) 상·하반기 25명 내

- 시민체감형 과제 적극 발굴 및 대시민 홍보 강화

- 적극행정 실무편람(매뉴얼) 제작 및 맞춤형 적극행정 교육 추진

5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확대

(예산담당관)

● 운영근거 :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 구성체계 : 임기 1년 (2회 연임가능), 50인 이내 (무보수 명예직)

● 주요활동 : 예산낭비 신고, 관련 현장 조사, 재정관련 제도개선 건의 등

● 추진계획

- 참여예산위원회와 연계 구성하여 운영 효율화
 - * (기존) 50명 → (변경) 참여예산분과위원회 12개 분과에서 4명 이내 추천 구성
- 다양한 교육으로 전문성 강화
 - (온예산 스터디) 6~7월중 분과별 3회 재정운영관련 교육 실시
 - (뉴스레터) 네이버 밴드 활용 예산낭비신고사례 공유(매월)
 - (간담회) 예산낭비신고 모니터링 및 활동사례 공유 간담회(연2회)
-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활동 강화
 - 지역참여형 23개, 동협치형 138개 사업 모니터링 실시

1-3.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홍보 캠페인 전개

① 청렴 거버넌스와 함께 오프라인(Off Line) 청렴홍보 캠페인 강화

- (목적) 청렴 캠페인 전개로 사회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
- (일시) 부패 취약시기(휴가철, 추석 명절) 및 반부패 주간 등
 -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일정 조정 및 방역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준수
- (장소) 인천터미널, 인천시청역, 부평역 등
- (내용) 인천시,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청탁금지법, 부패 및 공익신고 홍보
- (방법) 청렴피켓, 어깨띠 착용, 배너·플래카드·포스터 등 게시

② 소셜미디어(SNS)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한 온라인(On Line) 홍보 활동 전개

- 인천시 공식 SNS 계정*을 통한 청렴정책 소개
 - *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
-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등 청렴 홍보 영상 및 카드뉴스 시리즈 제작·게시
- 인천시 캐릭터 ‘버미·애이니·꼬미’를 활용한 ‘청렴인천 이모티콘’ 제작·배포 등 친근한 ‘청렴인천’ 이미지 홍보
- SNS, 서한문, 문자 등을 市 공무원, 군·구 공무원, 공직유관기관·단체 임직원 등 확대 운영

- 인천시 블로그 기자단을 활용한 청렴시책 및 청렴인천 정보 제공
- 청렴해시태그 달기(#청렴인천)·청렴인천 제스처 SNS챌린지 등



청렴실천협의회 협업 오프라인 홍보 예시

시 홈페이지 배너 온라인 홍보 예시

2 스스로 실천하는 청렴 인천

2-4. 공직자 스스로 실천하는 청렴활동 다양화

① 공직자 「청렴실천 반부패·청렴서약」 확대

- 추진목적 : 우리시 청렴도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전 공직자가 동참하는 청렴 전환점 필요
- 참여대상
 - 4급 이상·신규 공직자 의무참여 / 5급 이하 공직자 자율참여
 - 청렴도 외부측정 대상 235개부서 공직자 의무참여
- 추진계획
 - 내용 개정 : 시민들에게 쉽고 친화적인 내용으로 서약서 개정
 - 의무참여자 확대 : (‘20년) 신규공직자 → (‘21년) 4급이상·청렴도 외부측정대상 포함
 - 활용범위 확대 : 업무중 보이는 곳 비치, 민원처리시 배부, SNS 등 온라인 서약 활용

② 「청렴문화 진단 설문조사」 신규

- 추진목적 : 갑질과 불공정 근절, 반칙과 특권해소,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문화 진단을 통한 제도개선 기초자료 도출

설문기간 : '21. 2. 16. ~ 2. 26. (11일간) / 참여대상 : 전직원

- 설문분야 : 부패방지제도, 공익신고, 부당한 업무지시, 갑질행위 등
- 추진계획 : 결과분석 자료 전부서 전파, 취약분야 개선대책을 청렴정책 및 교육자료에 반영

③ 청렴 자가진단 실현을 위한『청렴실천 체크리스트』 신규

- 추진목적 : 주기적인 청렴 자가진단을 통해 청렴실천 의지 및 자정능력 향상과 청렴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
- 구성내용
 - (외부청렴실천 체크리스트) 3단계(사업추진전, 추진중, 추진후), 30문항
 - (내부청렴실천 체크리스트) 3개분야(청렴문화, 인사예산, 공정청렴의지) 15문항
- 추진계획
 - 매월 10일(청렴의 날10.0) 주기적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진단 실시
 - 외부 청렴도 측정부서와 일반부서 체크리스트 구분 실시

④ 『청렴의 날^{10.0}』운영 확대 확대

- 운영시기 : 매월 10일
- 운영확대 : ('20년) 자체청렴교육 지원 → ('21년) 청렴활동 추진(6개)
- 추진계획
 - “모든 청렴정책을 전부서가 함께 점검하는 날”로 확대 운영
 - 전부서 청렴소통자료 배부(감사관실) 및 부서별 청렴교육·캠페인 실시
 - (인센티브) 청렴마일리지 부여 : 부서별 최대 8점(1회) / 개인 최대 4점(1회)
 - 공직기강 경보시스템* 발령사항 전파
 - 복무규정,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부정청탁,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공직기강 관련 비위행위 중 ‘징계 요구’ 및 ‘훈계 처분’ 비위 발생시 경보시스템 발령
 - ①업무포털(내부망) 공지, ②청렴리더 등 문자발송(자체교육), ③취약분야 감찰활동
 - 공사·용역, 보조금, 민원업무 관련 민원인 대상 청렴해피콜 실시 및 청렴문자 발송
 - 청렴 팝업창 활성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실시 등 청렴활동 수행

5 청렴게시판 『청렴이음 나눔방』 운영 활성화 확대

- 추진목적 :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규정을 공유하고 우리시가 시행하는 다양한 청렴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소통창구 마련
- 2채널 운영 : ①공직자 / ②시민 대상
 - 공직자 대상 : 업무포털(내부망) 내 청렴나눔방 [청렴자료실 신설]
 - 청렴자료실 :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청렴규정 및 위반사례 안내
금품수수·부정청탁 대처 방안 및 수범 사례 안내
 - 청렴참여방 : 전직원 누구나 청렴명언, 건의사항 등 의견 게시
 - 청렴상담방 : 청탁금지법 등 위반여부에 대한 직원상담 창구 운영
 - 시민 대상 : 시 홈페이지 → 청렴인천 → 청렴나눔방
 -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등 규정 해설집, 주요사례 안내
 - 인천시 청렴시책 등 홍보

2-5. 고위직 청렴활동 참여로 청렴리더십 강화

1 『청렴대책추진단』활동 강화 확대

- 구성체계 : 시장(단장)*. 3급 이상 실·국·본부장 등 24명
* 단장을 시장님으로 격상 : ('20년) 행정부시장 → ('21년) 시장
- 주요활동 :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설정
 - '20년도 청렴도 측정에서 나타난 취약분야 개선대책 수립·추진
 - 공직사회 소통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및 문제해결 방안 논의
- 추진사항 : 상·하반기(4월, 9월) 보고회 개최

2 『청렴이음 리더』 운영

- 구성체계 : 부서(기관)별 5급이상(주무팀장) 1명 *'21. 1월: 178명
- 주요활동
 - 「청렴의 날^{10.0}」 청렴 자체교육 주관 및 청렴 캠페인 실시
 - 공직기강 경보시스템 발령사항(복무책임, 반부패책임) 부서 전파
 - 업무별 부패위험요소를 점검하여 청렴 자율준수 독려

- 부서원 고충상담을 통한 청렴 멘토 활동
- 매월「내부청렴실천 체크리스트」실시 확행
- 청렴액자 및 감사관 서한문 배부

③ 시장님 청렴·반부패 동영상 교육자료 제작·활용

- 제작시기 : 2021. 9월 (예정)
- 추진계획 : 시장님 청렴 동영상 제작하여 고위공직자 교육 등에 활용

④ 고위직 반부패·청렴활동 강화 확대

- 청렴서약 이행을 위한 「청렴액자」 제작 배부
- 청렴실천 영상 송출 : 고위직이 참여하는 청렴실천 영상을 제작하여 시청홀(Video wall), 옥외전광판 등 부패취약기간(명절전후, 휴가철 등) 집중 송출
- 시장님 청렴실천 의지 표명 : 실국장회의 등 간부회의 및 주요행사 참석시
- 부정청탁, 갑질 등 「사례중심의 청렴교육」 의무 이수

2-6. 청렴해피콜·청렴문자로 부패유발요인 사전 차단

① 「청렴해피콜」운영 확대 확대

- 운영시기 : '21. 1월 ~ '21. 12월
- 운영대상 :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용역, 연간 1천만원 이상 보조금 지원, 민원 7종*

* 비영리단체 등록 및 관리, 건설공사 품질시험, 배출시설허가, 공유재산관리, 여객자동차(시내버스) 운송사업, 소방 업무, 상수도 업무

● 운영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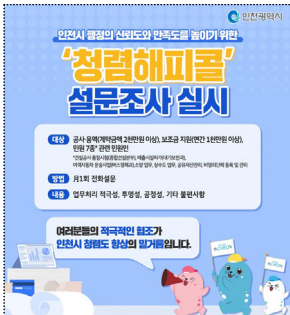
- 홍보활동 강화 : ('20년) 홍보부재 → ('21년) 카드뉴스, 언론보도, SNS 홍보 등
- 설문문항 신설 : ('20년) 3개 문항 → ('21년) 4개 문항
- 관리체계 확대 : ('20년) 市 감사관실 → ('21년) 상수도·소방본부 감사부서 포함
- 해당부서 전수조사 및 명부 관리 체계화 : 명부 제출 의무화

● 추진계획

- 설문방법 : 월 1회 전화설문, 감사부서에서 실시
- 설문내용 : 4개 항목(적극성, 투명성, 공정성, 기타 불편사항)
- 점수산정 : 설문 측정지표를 10점 만점으로 산출
- 결과활용 : 우수부서 청렴마일리지 부여, 개선사항 시정조치

2 『청렴문자 운영』 활성화

- 시기 : 공사·용역·인허가업무 단계별 발송(계약시, 완료시)
- 대상 : 청렴해피콜 대상업무 공직자 및 민원인
- 내용 : 청렴다짐 및 부패신고안내

 <p>인천시 청렴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청렴해피콜’ 설문조사 실시</p> <p>대상 공사 용역 계약금에 2천만원 이상, 보조금 지원(전년 1천만원 이상), 인건비 7천만 원 이상 기업체</p> <p>목적 인천광역시 공무원(전체)에게, 세종시(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설문조사 실시</p> <p>주요 전화 설문조사</p> <p>비고 담당부서: 계약실, 투명성, 공정성, 기타 불편사항</p> <p>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인천시 청렴도 향상의 밑거름입니다.</p>	<p>청렴한 세상 인천. 부정과 반칙이 사라집니다!</p> <p>인천광역시의 모든 공무원은 금품수수, 식사대접, 편의제공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p> <p>이러한 요구를 받은 경우 인천광역시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032-425-1298) 또는 인천시청 홈페이지 종합민원→신고센터→부패행위신고(Help Line)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감사합니다</p>
청렴해피콜 카드뉴스 홍보	청렴문자 발송내용

3 공정·투명한 청렴 인천

3-7.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 시행

1 『시민과 함께하는 보조금 컨설팅』 실시 **신규**

(전국 최초)

- 추진배경 : 보조금 감사를 통해 투명한 예산 집행 및 재정의 효율성 제고
- 감사분야
 - 민간경상, 행사사업보조 집행실태 특정감사(‘21. 3월 ~ 5월)
 - 사회복지관 특정감사(‘21. 8월 ~ 11월)
 - 공공재정 부정수급 등 신고 접수·처리(연중)

2 현장 중심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

● 일상감사

- 대상업무 : 주요 정책집행 업무 및 계약 업무
- 대상기관 :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소방 및 상수도 제외)

● 계약심사

- 대상업무 : 공사 (종합 5억, 전문·기타 3억 이상), 기술용역 2억원, 일반·학술용역 1억원 이상 (예규상 2억 원 이상, 확대 시행 중), 물품 2천만 원 이상
- 대상기관 : 市, 지방공기업, 출연기관(50% 이상 출연), 군·구

3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정감사 추진

- 추진배경 : 인천형 뉴딜 및 민선 7기
시책분야 중점 관리 강화
- 감사대상 : 인천형 뉴딜 10대 대표과제
및 세부과제, 민선7기 현안과제(86개)
- 향후계획 : 취약업무 · 관리 · 점검 강화
및 기업 애로사한 발굴 · 해결 지원



4 예방 중심의 사전 컨설팅 감사 활성화

- 추진배경 : 적발위주 감사를 도와주는 감사로 전환 적극행정 문화조성
- 향후계획
 - 직속기관, 공사·공단, 출자·출연 등 최근 3년간 실적 저조 기관 중점 관리 ('21. 상반기)
 - 매월 사전 컨설팅감사 안내 공문 발송
 - 찾아가는 현장 사전 컨설팅구 운영 (중형)



3-8. 다양한 신고채널과 예방감찰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1 『부패·공익신고』운영 활성화

● 3채널 운영

- 市 : Help-Line (시 홈페이지) / Hot-Line (tel. 425-1298, fax. 429-1298)
- 중앙정부 : 권익위 ☎ 1398 부패·공익신고 상담전화

● 주요내용

- 각 법령 위반 행위 해당여부, 신고방법·처리절차 등 상담활동
- 신고시 비밀보장 가능여부, 보호·보상·책임감면 대상여부 안내
- 금품수수·향응 등 부조리 행위, 비위행위 등 신고접수

● 홍보강화

- ☎ 1398 : 각종 부패방지 관련 법령에 관한 모든 질의 상담 가능 홍보
- 익명신고시스템(Help-Line) : 익명신고 보장으로 적극적 신고환경 조성
-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청렴교육, 청렴캠페인 추진시 적극 홍보

2 『청탁금지법 상담·신고센터』운영 활성화

- 상담·신고센터(☎ 440-3185) : 상담 및 신고절차 안내, 위반사항 신고 접수
- 무기명 상담방, 유권해석 및 주요 질의 답변 사례 등 자료실 운영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관련 상담내용 조치사항 공개(市 홈페이지, 청렴포털)

3 시 - 공무원노조 협업을 통한 내부고발자 제도 활성화 **신규**

- 시 -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 시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운영 및 직장내 괴롭힘 예방 조항 신설
-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운영에 의무사항 강조

4 예방감찰 강화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방역지침 준수 점검 : 코로나19 관련 정부 방역지침 위반행위

- 공직기강 점검 : 음주운전, 성비위, 갑질 등 행위 집중 점검
- 품위훼손 점검 :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자 품위훼손 행위
 - * 사례 분석, 첩보 수집 등 발생빈도 높은 분야기관 집중 점검
- 민원접수·조사 : 공무원 비위관련 민원·이첩사항 확인 등

3-9. 취업심사·취업제한제도 운영

①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승인기준 「객관적 점수표」 활용 신뢰도 제고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8조의2
- 내용 : 퇴직 전 직급, 퇴직 후 경과 기관, 취업예정기관, 취업직위 등 자료를 바탕으로 승인기준을 수치화하여 정량적 심사자료 제공
- 방법 :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객관적 점수표」 활용한 심사자료 제공

② 퇴직공직자 및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홍보 및 교육 강화

- 홍보 :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 등 퇴직자 등의 의무 안내
 - 퇴직시 취업제한제도 사전 안내 의무화(공문, 매뉴얼, 홍보물)
 - 강화된 취업·행위제한 제도 ‘카드뉴스’ 등 활용 적극 홍보
 - 인사혁신처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 운영 홍보
- 교육 : 퇴직 후의 취업청탁 금지 및 부정한 청탁 신고의무 교육
 - 시장님 청렴의지 강조(실국장회의 등),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 맞춤형 청렴교육, 청렴 서약서, 청렴다짐식 등

③ 퇴직공직자 및 비위면직자 임의취업 일제조사 등 상시감시 체계 구축

- 일제조사 : 반기별 실시, 임의취업자 제재 강화
 - 공직윤리시스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 일괄 조회하여 취업여부 조사 및 임의취업자 관리
 - ❶과태료 부과, ❷사후심사에서 불승인시 취업해제 조치, 취업해제 미이행시 형사고발 등 제재 강화

● 상시감시 : 언론보도 상시 모니터링, 제보를 통해 사각지대 감시

- 비위면직자 통보 누락되지 않도록 인사부서 등 협조요청

3-10. 자치구·공직유관기관 자체 청렴도 제고방안 강구

① 군·구 부패방지 시책평가

● 목적 : 군·구 청렴정책 제도 개선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성과공유

● 기간 : '21. 1. 1. ~ 10. 31. / 평가시기 : '22. 1월 중

● 대상 : 10개 군·구

● 내용 : 5개 평가지표 11개 평가항목에 대한 반부패·청렴 시책 추진 및 이행

평가영역	평가지표
1. 반부패 추진계획수립	1-1.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2. 청렴생태계 조성	2-1. 구성원의 반부패 의지 및 노력 2-2. 민간분야와 협력체 구성 및 활동 2-3. 부패방지분야 제도개선 권고관계 이행
3.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3-1.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내실화 3-2. 반부패·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4.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4-1. 기관 종합청렴도 개선 4-2.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 성과 4-3. 국가청렴정보시스템을 통한 반부패 정보공유·공개 노력
5. (가·감점) 부패방지제도운영	5-1. 청탁금지법 신고사건 조치사항 및 상담내용 공개 5-2. 청탁금지법 취약분야 개선과제 이행

● 방법 : 서면평가(평가지표별 점수와 권익위 청렴도 평가 결과의 평균값)

※ 평가지표는 '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지표에 맞춰 변동될 여지 있음.

② 출연기관 경영평가시 『청렴도 평가결과』 반영

(재정관리담당관)

● 목적 :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청렴도 수준 측정 고객만족 향상

● 기간 : '21. 1. 1. ~ 12. 31.

● 대상 : 11개 출자·출연기관(출자 2, 출연 9)

● 내용

- 기관별 고객 설문을 통한 청렴도 및 고객만족도 측정
- 내·외부 청렴도, 부패발생 현황, 신뢰도 저해 요인 등 조사
- 고객 만족도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도출 등

4 도약하는 청렴인천

4-11. 청렴 공감대 형성을 위한『청렴이음 한마당』^(가칭) 개최

① 『청렴이음 한마당』^(가칭) 개최 신규

- 목적 : 청렴이음 한마당을 개최하여 청렴공감대 형성하고 문화 공연 형태의 교육을 통해 청렴문화 확산
- 대상 : 인천시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시민감사관, 시민단체 등
- 시기 : '21년 9월중
- 내용 : 청렴연극공연, 청렴영화제, 청렴 N 행시 공모전 개최
- 세부추진내용

구 분	세부 추진 내용
① 청렴교육 연극공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딱딱한 강의식 교육을 탈피하여 즐거운 청렴교육 실시 • (대상) 시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시민감사관, 시민단체 등 • (내용) 공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청렴위반 사례,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청렴퀴즈 등 • (방법) 현장관람(문화예술회관) + 실시간 영상 시청(유튜브)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방법 변경 가능
② 청렴영화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청렴에 대한 문화적 접근을 통해 청렴의식 내면화 및 일상화 • (대상) 인천시 공무원 중 신청자 200여명(선착순) • (기간) '21. 9월 중 (4회) • (장소) CGV 인천점 (협의 예정) * 교육장소 변경 가능 • (내용) 영화 「1급기밀」, 「내부자들」 등 상영을 통해 내부비리 및 부패신고,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도 등 교육
③ 청렴 N 행시 공모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청렴에 대한 전 직원의 관심과 참여 제고 및 청렴 실천 의지 함양 • (기간) '21. 9월 중 • (대상) 인천시 전 직원 • (내용) “청렴”이란 주제로 제시어 N행시 짓기 * 제시어는 청렴 사자성어, 역사 속 청렴한 인물 등을 소재 • (방법) 업무정책포털 → 업무편의 → 설문조사 → 설문참여

4-12. 『인천형 청렴 가치관 확립』을 위한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① 『부패취약분야 청렴 순회교육』

- 목적 : 인천형 청렴 가치관 확립 및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 대상 : 청렴도 측정 결과 부패취약분야(공사, 용역, 보조금, 민원) 공무원 등
- 기간 : '21. 3월 ~ 10월
- 내용
 - '20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및 취약요인 설명
 - 취약분야별 부패사례 맞춤형 교육 실시
 -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공익 및 부패신고활성화 등
- 수행 : 집합교육 실시(인천시 청렴기본강사 등)

② 『청렴자기학습 팝업교육』운영

- 목적 : 전 직원 청렴인식의 일상화 및 자율적 청렴문화 확산
- 대상 : 인천시 전 직원
- 기간 : '21. 6월 ~ 8월(주2회, 3개월간)
- 내용 :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공익신고 등 문구·카툰·퀴즈형태의 교육
- 방법 : 업무정책포털 연계한 온라인 학습

③ 인재개발원 반부패·청렴과정 협업 운영

- 신규임용(예정)자 청렴교육 실시
 - 기간 / 대상 : '21. 2월 ~ 12월 / 인천시 신규 임용자
 - 방법 : 대면교육(온라인 실시간 교육 포함)
 - 수행 : 청렴 전문 강사 강의
- 청렴교육 별도과정 편성
 - 기간 / 대상 : '21. 3월 ~ 12월 / 인천시 전 직원
 - 내용 : 공직자를 위한 신목민심서 등 총 8개 과목(8기, 총80회)

4-1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통한 반부패 시스템 정착

1 『청백-e 모니터링』 운영

- 대상시스템 : 5개* 행정시스템 *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인사, 새을
- 주요내용 : 지방행정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비라행정오류* 발생 시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에 경보 발령

* 자치단체구매카드 부적정 사용 방지 등 예방행정 시나리오(102종)

● 운영방법

- 매주 금요일 ‘청백-e 모니터링의 날’로 지정 운영(부진부서 처리 독려)
- 월 1회 청백-e 모니터링 운영현황 점검(부서별 운영실적 공개)
- 청백-e 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만족도 조사 실시

2 『청렴이음 자기진단제도』 운영

● 운영대상 : 전직원

- 의무작성 : 행정안전부 표준 자기진단업무 30종
- 자체발굴작성 : 비리 또는 행정오류 발생의 소지가 있는 사무*, 처리절차 준수가 요구되는 업무,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업무 등

* 사회복지, 안허가, 환경 및 보건분야 등 대국민 접점 업무

- 주요내용 : 행정착오, 비리 발생 소지가 있으나 모니터링 되지 않는 사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 실시

- 운영방법 : 매월 10일 담당자별 자기진단 이행 후 부서장 결재

3 『청렴 마일리지』 운영

- 운영대상 : 市 327개 부서 6,888명

- 주요내용 : 개인 및 부서의 청렴활동 추진실적을 마일리지로 관리하여 공직자의 청렴의식 제고 및 청렴문화 확산

● 평가항목

- 청렴시책 및 활동 참여 : 청렴교육, 청렴시책, 청렴소통의 날 운영 등

- 예방행정·청렴시스템 정착 : 신규 모니터링 발굴, 자기진단 실시 등
- 반부패요인 제거 및 청렴도 향상 : 제도개선, 청렴해피콜, 청렴신고 등

● 인센티브 : 우수부서 및 유공공무원 표창, 포상금 지급

4-14. 청렴매뉴얼 『청렴이음』 최초 제작 **신규**

● 목적

- 청렴업무의 전반적 이해를 통한 청렴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 분야별 청렴 우수사례 공유로 청렴 행정업무 효율성 증대

● 구성(안)

- (반부패·청렴) 6개 분야

1	청렴인전 다짐 ①청렴서약서 ②재직공직자 준수사항 <이것만 지킵시다> ③퇴직공직자 준수사항
2	반부패·청렴정책 이해 ①법령제정 및 정책추진 배경 ②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③부패방지 시책평가
3	청탁금지법 ①법적용대상 ②부정청탁 ③수수 금지 금품등 ④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징계 및 벌칙 ⑤외부강의 등
4	공무원 행동강령 ①행동강령이란 ②행동강령 해설 ③F&A
5	권익위 소관법령* 신고·조사 및 보호보상 매뉴얼 ①신고접수·처리 ②신고자 보호 ③신고자 보상 ④ 주요사례 및 F&A ⑤참고-부패신고와 공익신고의 비교 등 *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6	청렴 취약분야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①청렴e시스템 ②자기진단 체크 ③청렴해피콜

- (공직윤리) 4개 분야

1	재산등록 및 공개 ①재산등록 ②재산공개
2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①퇴직공직자 취업제한 ②퇴직공직자 행위제한
3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4	선물 신고

● 향후계획

- 청렴매뉴얼 책자 제작(400부) : '21. 6월
- 시 산하 전부서 및 유관기관 배부 : '21. 10월
- 청렴 교육시 교재활용 및 지속적인 자료 업데이트 : 연중

4-15. 『생활속 100가지 청렴』 일상화 **신규**

① 생활 속 100가지 청렴캠페인

- 목적 : 생활 속 100가지 청렴캠페인을 실시하여 청렴실천 의지와 청렴한 근무환경 분위기 조성으로 청렴문화 확산
- 대상 : 인천시 전 직원
- 시기 : '21년 연중
- 추진내용

구 분	세부 추진 내용
① 청렴송 및 청렴 영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송 방송) 시본청 및 산하기관 내부방송시스템 활용(매주 월수) • (청렴영상) 소통기획담당관 비디오 월 활용, 권익위 참여 청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등 청렴 홍보영상 송출
② 청렴메시지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달 10일「청렴의 날¹⁰⁰」(월1회) 인천시 전 직원에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청렴명언 등 메시지 발송
③ 「청렴 감사키트 (Audit Kit)」 제작 운영【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감사 시 소요 물품* 자체 준비로 수감기관 부담 경감과 (편의제공 지양) 청렴 감사 문화 확립 * 가방, 필기구, 손소독제 등 8조, 60세트 제작
④ 「청렴실천의지」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배너 및 현수막 설치) 청렴 취약부서(공사·용역·민원부서 등) 입구에 청렴 실천 배너, 포스터 설치하여 민원인들에게 청렴인천 부각 • (청렴문구 부착) 각종 인쇄물에 부착할 청렴스티커를 제작하여 인천시 전부서 물품(행정봉투, 현황판 등) 구매 시 부착 • (청렴마스크 패치 제작) 청렴문구를 인쇄한 마스크 패치 제작하여 청렴홍보 캠페인 시 직원 등 배부 • (청렴인천 이모티콘 제작) '청렴인천 이모티콘' 또는 캐릭터 이미지 제작하여 모바일 홍보 시 활용 • (청렴스티커 및 청렴명언) '청렴스티커', '청렴명언' 회의실·구내식당 아크릴 칸막이, 전 직원 모니터, 전화기 등 게시 및 부착 • (청렴팝업창) 업무정책포털 로그인 시 청렴문구 등 청렴팝업창 게시 • (청렴의 날¹⁰⁰ 운영) 매달 10일 '청렴의 날¹⁰⁰' 자체 교육 자료 제작 배부 및 청렴리더, 취약분야 담당자 청렴실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작성

※ 추가적 청렴캠페인 지속 추진

2 > 향후계획(평가별 연간 추진일정)

■ 2021년 청렴도 측정

- '21년 반부패·청렴 종합계획(시장 방침) 제출 '21. 3월
- '21년 상반기 청렴대책 추진단 보고회 '21. 5월
- '21년 청렴도 평가자료(명부)제출 (市 → 권익위) '21. 7월
- '21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개최 '21. 10월
- (권익위) '20년도 청렴도 평가(설문조사) 실시 '21. 8~11월
- (권익위) '20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발표 '21. 12월

■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추진일정

- 부패방지 시책평가 실시계획 통보 (권익위 → 市) '21. 3월
 - 평가대상기관, 평가 지표 최종안, 보고서 제출 양식 등 송부
- 기관 자체 반부패 추진계획 제출 (市 → 권익위) '21. 4월
- 부패방지 시책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 '21. 11월
- (권익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별 평가 '21. 11 ~ 12월
- (권익위) 평가결과 발표 및 언론 공표 '22. 1월

붙임 1

과제별 추진일정

전략	단위과제	세 부 과 제	추진일정
시민과 함께 하는 청렴 인천	1.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활동 및 제도개선 강화	1)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중심 시민의견 적극 수렴 2)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강화 및 제도개선 활성화	상/하반기 연중
	2. 다방향 소통행정으로 시민의견 수렴 본격화	3) 『시민정책자문단』 운영 활성화 신규	연중
		4) 『인천은 소통-e 가득(온라인 시민청원창구)』 운영	연중
		5) 『공무원·시민 제안제도』 운영 신규	연중
		6) 『인천형 적극행정』 제도 강화 확대	연중
		7)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사단』 확대	연중
	3.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홍보 캠페인 전개	8) 청렴 거버넌스와 함께 오프라인(Off Line) 청렴홍보 캠페인 강화 9) 소셜미디어(SNS)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한 온라인(On Line) 홍보 활동 전개	연중 연중
스스로 실천 하는 청렴 인천	4. 스스로 실천하는 청렴활동 다양화	10) 공직자 『청렴실천 반부패·청렴서약』 확대 11) 『청렴문화 진단 설문조사』 신규	상반기 2월
		12) 청렴 자기진단 실험을 위한 『청렴실천 체크리스트』 신규	매월10일
		13) 『청렴의 날10.0』 운영 확대 확대	매월10일
		14) 청렴게시판 『청렴나눔방』 운영 활성화 확대	연중
	5. 고위직 청렴활동 참여로 청렴리더십 강화	15) 『청렴대책 추진단』 활동 강화 확대	4월, 9월
		16) 『청렴리더』 운영	연중
		17) 시장님 청렴·반부패 동영상 교육자료 제작·활용	9월
	6. 청렴문자·해피콜로 부패 유발요인 사전 차단	18) 고위직의 반부패·청렴활동 강화 확대	연중
		19) 『청렴해피콜』 운영 확대 확대	매월10일
		20) 『청렴문자 운영』 활성화	매월10일
공정 투명한 청렴 인천	7.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시행	21) 『시민과 함께하는 보조금 컨설팅』 실시 신규	연중
		22) 현장 중심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	연중
		23)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정감사 추진	연중
		24) 예방 중심의 사전 컨설팅 감사 활성화	연중
	8. 다양한 신고 채널과 예방 감찰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25) 『부패·공익신고』 운영 활성화	연중
		26) 『청탁금지법 상담·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연중
		27) 사·공무원노조 협업을 통한 내부고발자 제도 활성화 신규	연중
		28) 예방감찰 강화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연중
	9. 취업심사·취업제한 제도 운영	29)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승인기준 『객관적 점수표』 활용 운영	연중
		30) 퇴직공직자 및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연중
		31) 비위면직자 및 퇴직공직자 임의취업여부 확인 조사	연중
	10. 자치구·공직 유관기관 자체 청렴도 제고방안 강구	32) 군·구 부패방지 시책평가	연중
		33) 출연기관 경영평가시 『청렴도 평가결과』 반영 신규	연중
도약 하는 청렴 인천	11. 『청렴이음 한마당』(가칭)	34) 청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청렴이음 한마당』(가칭) 개최 신규	9월
	12. 『인천형 청렴 가치관 확립』을 위한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35) 『부패 취약분야 청렴 순화교육』	3~10월
		36) 『청렴자기학습 팝업교육』 운영	6~8월
		37) 인재개발원 반부패·청렴과정 협업 운영	연중
	1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을 통한 반부패 시스템 정착	38) 『청백 - e 모니터링』 운영	연중
		39) 『자기진단 제도』 운영	매월10일
		40) 『청렴 마일리지』 운영	연중
	14. 청렴 매뉴얼 『청렴이음』 책자제작	41) 청렴 매뉴얼 『청렴이음』 최초 제작 신규	6월
	15. 『생활속 100가지 청렴』 일상화	42) 생활 속 100가지 청렴캠페인 신규	연중



부록

2

청림인천 다짐

I 2021년 청렴서약서(업무담당자)

청렴서약서(업무담당자)

나는 인천광역시 공직자로서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자세로 임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인천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청탁·알선을 하지 않으며, 타인을 위한 부정청탁·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2.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작은 편의제공도 요구하지 않아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3. 나는 직무와 관련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청탁을 철저하게 거절합니다.
4. 나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합니다.
5. 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며, 불필요한 규제나 관행적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2021. .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Ⅱ 2021년 청렴서약서(고위공직자)

청렴서약서(고위공직자)

나는 인천광역시 공직자로서 항상 공정하고 투명한 자세를 견지하여
공직사회의 모범이 되며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인천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모든 업무에 법과 원칙을 준수하여 공명정대하게 추진
하겠습니다.
2.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를 제공받지 않으며,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청탁·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3. 나는 직위를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으며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4. 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으며,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경청과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2021. .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Ⅲ 공직자 '이것만은 지킵시다'

청렴한 공직생활 이것만은 지킵시다

1. 친절은 공직자의 기본, 안 되는 일 일수록 친절하게 설명하기
2.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처리 하기
3. 근거없는 서류요구, 불필요한 규제보다는 적극행정으로 답하기
4. 금품·향응·편의뿐만 아니라 사소한 답례도 친절하게 거절하기
5. 지연, 학연을 통한 특정인(업체)에게 특혜제공은 과감하게 버리기
6. 법령위반 및 취지에 맞지 않는 부당한 지시는 안하고 안듣기
7. 업무추진비, 여비 등 관행적 집행이 아닌 기준에 맞게 집행하기
8. 공적재원·공용물의 사적사용이 아닌 공적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9.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부정한 청탁·알선은 퇴직 후에도 금지
10. 공직자의 청렴의지를 드러내기-청렴서약서 제공

IV 청렴액자 다짐서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을 위한 다짐

법과 원칙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에 임하겠습니다.

공익을 먼저 생각하고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솔선수범 하겠습니다.





부록

3

관련 법령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82호, 2021. 1. 5., 일부개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10호, 2021. 1. 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p>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5.></p> <p>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p> <p>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p> <p>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p> <p>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p> <p>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p> <p>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p> <p>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p> <p>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p> <p>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p> <p>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p> <p>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p>	

<p>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p> <p>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p> <p>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p> <p>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p>	
<p>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2조(윤리강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소속 공직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p> <p>1.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p> <p>2.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p> <p>② 윤리강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 개입, 알선, 청탁 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p> <p>2. 금품등 수수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p> <p>3. 강의·강연·기고 등의 신고 및 제한에 관한 사항</p> <p>4. 그 밖에 공직자등의 청렴과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윤리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p> <p>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윤리강령을 효과적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p>

제4조(공직자등의 의무) ①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5. 29.>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p>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p> <p>2. 공개적으로 공직자들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p> <p>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p> <p>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p> <p>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p> <p>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p> <p>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p>	
<p>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들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p>	
<p>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들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p> <p>② 공직자들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p> <p>④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p>	<p>제3조(부정청탁의 신고 방법 등) 공직자들은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신고자의 인적사항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p> <p>2. 부정청탁을 한 자의 인적사항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부정청탁을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p> <p>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p>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전보
4.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⑤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직자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공직자들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⑥ 공직자들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 ⑦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의 신고·확인·처리 및 기록·관리·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부정청탁의 일시, 장소 및 내용
5. 부정청탁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

-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제3조 각 호의 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데 필요한 사항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가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2.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3.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제6조(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의 통보 방법 등) ① 소속

- 기관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의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소속기관장이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조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4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조치를 통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7조제4항제3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2. 사무분장의 변경

제8조(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 ①

공직자등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하는 부정청탁의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9조(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 신고의 조치 등) 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조치
 -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나.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2. 수사기관의 조치
 -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
 -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제10조(감독기관 등의 조사등 결과의 통보 방법 등)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의 신고자에 대한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

① 공직자등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부정청탁의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12조(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2.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접수 받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이첩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p>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송부하고,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5조(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고려하여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2. 법 제6조를 위반하여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처분이 확정된 경우 3. 그 밖에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 예방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에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정청탁의 일시·목적·유형 및 세부내용 2. 법 제7조제4항 각 호, 제16조 및 제21조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조치 및 징계처분 3.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내용 <p>제16조(위반행위의 기록·관리)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등과 관련하여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 제7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 확인 사항 및 처리내역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p> <p>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p>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p>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p>	<p>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p>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들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들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들의 배우자는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들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p>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p>	
<p>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p>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p>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p>	<p>제18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방법 등) 공직자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자의 인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부서 및 연락처 2.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인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5. 금품등의 반환 여부 6.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p>제19조(소속기관장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원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p> <p>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p> <p>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의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p>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제7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직자등은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인도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⑦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으로부터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내용과 확인 사항 및 처리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 및 보존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0조(감독기관 등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① 공직자등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 받은 경우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③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④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의 신고자에 대한 통보 기간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2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① 공직자등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 받은 경우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의 이첩 또는 송부 방법 및 이첩 또는 송부의 처리 결과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24조(인도받은 금품등의 처리) ① 소속기관장, 감독

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p>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하는 경우에는 인도받은 금품등과 제1항에 따라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을 첨부하여 이첩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첩 또는 송부한 사실을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 이첩 또는 송부받은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조사등을 한 결과, 인도·이첩 또는 송부받은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한다.</p> <p>④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인도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한다.</p> <p>제28조(반환·인도 비용의 청구) 공직자등은 자신이나 자신의 배우자가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반환하는 데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p> <p>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p>	<p>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p> <p>제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 2020. 5. 26.></p>

<p>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p> <p>③ 삭제 <2019. 11. 26.></p> <p>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p> <p>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2.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3. 외부강의등의 주제 4.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5.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p> <p>제27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공직자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2. 초과사례금의 액수 및 초과사례금의 반환 여부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직자등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p> <p>제28조(반환·인도 비용의 청구) 공직자등은 자신이나 자신의 배우자가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반환하는 데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p>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p>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p>	
<p>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3.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상담·접수·처리 등 4.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등 	<p>제41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12조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법 위반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법 위반행위자의 인적사항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5. 법 위반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30조(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제29조 각 호의 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데 필요한 사항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신고처리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② 조사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하여 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조사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32조(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에 관한 확인 사항, 신고자에 대한 설명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제33조(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의 처리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0조제3항에 따라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2.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
-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접수 받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p>1. 제1항에 따른 이첩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p> <p>2.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p> <p>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송부하고,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4조(신고의 처리) ①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p> <p>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p> <p>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p>	<p>제36조(법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p> <p>① 신고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경위와 이유를 적은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p> <p>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와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의 통지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p>

<p>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p> <p>⑦ 제6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p>	
<p>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2.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인도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p>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p> <p>③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p>	<p>제40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①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자 중에서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조사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조사기관, 이해관계자 및 참고인 등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p> <p>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등”으로 본다.</p> <p>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포상금·보상금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 제70조의2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로, “신고”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개정 2019. 4. 16.></p>	
<p>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17조(부당이익의 환수)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 제6조, 제8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공직자등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p>	
<p>제18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등은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제7조에 따른 부정청탁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p>	

<p>2. 제9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p>	
<p>제19조(교육과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p> <p>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p> <p>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p>	<p>제42조(교육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 17.></p> <p>④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강사 양성, 표준교재 및 강의안 개발·보급,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운영 등 지원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p>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p> <p>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p> <p>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p> <p>2.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p> <p>3.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p>	
<p>제5장 징계 및 벌칙</p>	
<p>제21조(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p>	<p>제43조(징계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p>	

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4.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5. 제18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공직자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p>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p> <p>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은 몰수한다. 다만,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정한다.</p>	
<p>제23조(과태료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p> <p>2.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p> <p>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p> <p>③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p>	<p>제45조(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 사실 통지) 소속 기관장이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다른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장에게 함께 통지해야 한다.</p> <p>[본조신설 2020. 5. 26.]</p>

④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 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있는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또는 제23조제5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인천광역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청탁방지담당관”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지정되어 부정청탁 금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신고의 접수 등

제3조(신고상담)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하여 상담하는 경우에는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청탁방지담당관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접수)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8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부에 따라 기록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하려는 자가 현지 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제5조(외부강의등의 신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신고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부강의등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초과사례금의 신고)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신고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초과사례금 신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반환해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초과사례금의 반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기록) ①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접수한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기록표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를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의 신고기록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

제8조(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 여부 등 확인서에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하여 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의 보완)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신고자로 하여금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4조제1항, 제23조 및 제35조에 따라 그 신고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의 취하) 청탁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서면으로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 그 신고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의 처리)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5조제1호, 제9조제1호가목,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 제31조, 제34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②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5조제2호, 제13조제2항, 제19조제2항, 제22조, 제31조 및 제3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9조제1호나목, 제13조제2항, 제20조제3항, 제22조, 제31조, 제34조제1항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3호나목에 따라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청탁방지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송부서류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등 결과의 통보)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6조제1항, 제10조, 제13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4항, 제22조, 제31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조사등의 결과를 통보하

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영 제31조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조사등의 결과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조사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 등) ① 청탁방지담당관은 법 제9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금품등 인도확인서(이하 “인도확인서”라 한다)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1부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청탁방지담당관이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청탁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금품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받은 금품등을 인도확인서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금품등 반환확인서에 금품등을 반환받는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인도받은 금품등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9호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대장을 작성하여 폐기처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⑤ 청탁방지담당관은 과태료 부과 또는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재판이나 징계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인도받은 금품등을 보관하고, 과태료 부과가 재판으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입조치를 한다. 다만,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보관이 어려운 경우 금품등의 처리는 제4항을 준용한다.

제15조(반환·인도 비용의 청구)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28조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자가 별지 제20호서식의 반환비용청구 신청서에 따라 반환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반행위의 기록·관리) 청탁방지담당관은 영 제16조 및 제19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들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21호서식의 위반행위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2022. 5. 19.] [법률 제18191호, 2021. 5. 18.,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 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학교
2.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나. 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다. 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3.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 다.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 마.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 바.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 사. 교육공무원 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 아.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
- 자.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 차. 지방 국제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 카. 다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및 차목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라목·마목·아목 및 차목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된다.
- 타.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 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4.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5.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준(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말한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6.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의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확인·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가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의 의무) ①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2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관리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와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 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2.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법령·기준에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공직자가 그 절차에 따른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기피의 절차와 방법, 신고·회피·기피의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①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 본인, 배우자
2.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기관 외의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적이익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 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 또는 제6조에 따른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보유 또는 매수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부동산 보유·매수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감사원·감독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확인·점검·통보, 신고·고발의 기록·관리 및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2.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3.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활동 내역 제출, 보관·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개모집에 의해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구매·경매·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구매·경매·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있었음을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가 신고한 행위가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제7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 신고의 기록·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소속 공공기관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안에서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가족 채용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제2조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인사 관련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2.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 나.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은 직급·직위에서의 근무경력이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 다.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 라.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거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항 각 호의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수익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익계약(이하 “수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제1항 각 호의 자와 수익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① 공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이하 이 조,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 같다)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 및 신고 방법, 기록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14조, 제21조(제5조 및 제14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 제7조, 제14조, 제21조,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는 “공무수행사인”으로,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제3장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17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이 법에 따른 신고 등의 안내·상담·접수·처리 등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등

제18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 ②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신고의 처리) ①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⑦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⑧ 제7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자 등의 보호·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
 2. 제1호에 따른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돕는 행위
-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 및 “공익신고자”는 각각 “신고자등” 및 “신고자”로, “공익신고등” 및 “공익신고”는 각각 “신고등” 및 “신고”로, “공익침해행위”는 “이 법의 위반행위”로 본다.
-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⑦ 신고자등과 그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든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에 따른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정송절차에 든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⑧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보상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2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 중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 및 “부패행위 신고”는 각각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제70조의2 중 “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본다.

⑨ 제7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본다.

제21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부당이익의 환수 등) ①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5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제6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13조의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익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제23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의 업무로서 제8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 처리에 관한 업무
2. 제8조에 따른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

3. 제9조에 따른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4. 제15조에 따른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제24조(교육과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 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5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①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또는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
 3.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
 4.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및 관리
 6.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7.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 ② 이 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신청·제출하여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 자신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신청·제출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하여야 한다.

제4장 징계 및 벌칙

제26조(징계)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7조(벌칙)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공직자(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행사인을 포함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자(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행사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2.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사인을 포함한다)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를 위반하여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⑤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제1항의 경우 그 정을 아는 제3자를 포함한다)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
3.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을 거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 보유·매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3.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4. 제10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한 공직자
 5. 제13조를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공직자
 6.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고위공직자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
- ④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1호 및 제2호는 이 법 시행 이후 제공하는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과 지식·정보 제공 행위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3호 및 제4호는 이 법 시행 이후에 대리하는 경우와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③ 제10조제5호는 이 법 시행 이후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채용부터 적용한다.

제6조(수익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수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8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9호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죄”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죄”로 한다.

③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죄”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제1항의 죄”로 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은 종전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다.

4.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607호, 2020. 4. 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8. 12. 31.>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 12., 2016. 9. 27., 2018. 1. 16.>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대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종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아.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삭제 <2016. 9. 27.>
[전문개정 2008. 12. 31.]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국가공무원(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국가공무원 은 제외한다)과 지방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6. 9. 27.>
[전문개정 2008. 12. 31.]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8. 1. 16.]

제5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고위공직자”라 한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소속 기관의 장(소속 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교육감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사항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 16.]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 16.]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

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 1. 16.]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고위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 1. 16.]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 신고 내용 및 신고 방법 등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 16.]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1. 5.]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 12. 31.]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 16.>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 16.>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1. 16.>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 [전문개정 2008. 12. 31.]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 1. 16.]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본조신설 2018. 12. 24.]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6. 9. 27.]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독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독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을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독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독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4. 7.>

③ 삭제 <2020. 4. 7.>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공무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⑧ 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6. 9. 27.]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 16.]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18. 1. 16.>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전문개정 2016. 9. 27.]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개정 2008. 12. 31.>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영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7.>

[전문개정 2008. 12. 31.]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6. 9. 27.]

제6장 보칙 <개정 2008. 12. 31.>

제22조(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그 기관과 그 소속 기관 중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인 기관에 대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6. 9. 27.>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부 칙 <제30607호, 2020. 4.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5.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본청·시의회·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3-09> <개정 2013-10-14> <개정 2014-11-24> <개정 2016-10-31> <개정 2018-06-2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0-14>

1. “직무관련자”란 본청·시의회·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06-25>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6-10-31> <개정 2018-06-25>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06-25>
 - 다.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06-25>
 - 라. 재결, 결정, 검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중재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06-25>
 -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06-25>
 - 바. 인천광역시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06-25>
 - 사. 정책,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06-25>
 - 아. 삭제 <2016-10-31>
 - 자. 삭제 <2016-10-31>
 - 차. 삭제 <2016-10-31>
 - 카. 삭제 <2016-10-31>

타. 삭제 <2016-10-31>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상급자와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해당 공무원의 하급자

나. 감사·인사·심사평가·상훈 등 단위 업무담당자와 해당 공무원

다. 인사·감사·예산·조직·세정업무 등 각종 평가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과 다른 행정기관의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

라.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위임·위탁사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0-31>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삭제 <2016-10-31>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본청·시의회·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소속 공무원과 이에 파견된 공무원(공중보건 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를 포함한다), 인천광역시 소속 청원경찰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12-21><개정 2017-08-28><개정 2018-06-25>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개정 2009-03-09>)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지시(이하 “부당지시”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상급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명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소명하고 부당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부당지시의 판단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03-09><개정 2017-08-28>

② 제1항에 따라 부당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부당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09, 2013-10-14><개정 2017-08-28>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부당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부당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당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부당지시를 취소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03-09, 2013-10-14><개정 2017-08-28>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부당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당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부당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03-09, 2013-10-14><개정 2017-08-28>

⑤ <삭제 2009-03-09>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의회사무기구·본청·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시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 한다고 판단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가.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나.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다.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자신과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8.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9. 학연, 지연, 종교, 직연(職緣)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10.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⑦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8-06-25]

제5조의2(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고위공직자(「공무원 행동강령」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고위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소속 기관의 장(소속 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조문 신설 2018-06-25]

제5조의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조문 신설 2018-06-25]

제5조의4(가족 채용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조문 신설 2018-06-25]

제5조의5(수익계약 체결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익계약(이하 “수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고위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익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익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익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조문 신설 2018-06-25]

제5조의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조문 신설 2018-06-25]

제6조 (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종교·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03-09, 2013-10-14>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03-09, 2013-10-14>

[제목개정 2013-10-14]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협박 또는 강요 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09, 2013-10-14> <개정 2018-06-25>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 또는 상담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09, 2013-10-14, 2014-11-24>

제9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0-14>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03-09>

③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부정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1-24>

[제목개정 2013-10-14]

제3장 부당이익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03-09, 2013-10-14>

② <삭제 2009-03-09>

[제목개정 2013-10-14]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이하 “시”라 한다)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03-09]

[제목개정 2013-10-14]

제11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03-09> <개정 2018-06-25>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03-09, 2013-10-14> <개정 2018-06-25>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06-25>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제12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03-09, 2013-10-14>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도시개발·건설 담당부서 업무담당자는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투자)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03-09, 2013-10-14>

[제목개정 2013-10-14]

제13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공용 차량·선박·항공기·청사·관사·건설중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03-09, 2014-11-24>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2에서 이동, 2019-04-17]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 신설 2019-04-17]

제14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0-14> <개정 2016-10-31>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0-14> <개정 2016-10-31>

③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14> <개정 2016-10-31>

1. 시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개정 2017-08-28> <개정 2018-06-25>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질병·재난 등을 이유로 금품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4> <개정 2014-11-24> <개정 2016-10-31> <개정 2017-08-28>
<개정 2018-06-25>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31>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0-31>
[제목개정 2013-10-14] [제목개정 2016-10-31]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독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독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피감독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독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19-04-17]

제14조의3(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골프 종료 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개정 2018-06-25>

② 직무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개정 2018-06-25>

-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제4항에서 “사행성 오락”이란 우연의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따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본조신설 2013-10-14]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신설 2009-03-09>

- 제1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03-09> <개정 2013-10-14> <개정 2016-10-31> <개정 2017-08-28> <개정 2018-06-25>
-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1-24> <개정 2016-10-31> <개정 2018-06-25> <개정 2020.06.02.>
- ③ 삭제 <2020.06.02.>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5-12-21> <개정 2016-10-31> <개정 2020.06.02.>
- 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31> <개정 2018-06-25>
- ⑥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31>
- ⑦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6-10-31>
- ⑧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6-10-31> <개정 2018-06-25>

⑨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월 3회까지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0-31>

⑩ 공무원은 제9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10-31>

[제목개정 2009-03-09] [제목개정 2016-10-31]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⑥ 공무원은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06-25]

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09-03-09, 2013-10-14> <개정 2017-08-28>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6-10-31> <개정 2018-06-25>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6-10-31>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개정 2016-10-31>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개정 2016-10-31>
- ② 삭제 <2017-08-28>
[제목개정 2016-10-31]

제5장 위반시의 조치 <개정 2009-03-09>

제18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한 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09> <개정 2013-10-14> <개정 2016-10-31> <개정 2018-06-25> <개정 2019-04-17>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0-14, 2014-11-24>

[제목개정 2013-10-14]

제18조의2(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한 비밀유지) ① 모든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8-06-25>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사건이 접수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0-31]

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시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9-03-09, 2013-10-14>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으로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09-03-09> <개정 2013-10-14> <개정 2014-11-24> <개정 2016-10-31> <개정 2018-06-25>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시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4>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09, 2013-10-14>

[제목개정 2013-10-14]

제20조 (징계 등)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0-14>

제20조의2(부패공직자 현황 공개) 시장은 필요한 경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한다. <신설 2015-12-21>

제21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09> <개정 2013-10-14> <개정 2014-11-24> <개정 2016-10-31> <개정 2018-06-25>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01-09> <개정 2013-10-14> <개정 2016-10-31>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0-14> <개정 2015-12-21> <개정 2016-10-31> <개정 2018-06-25>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09> <개정 2013-10-14> <개정 2014-11-24> <개정 2016-10-31>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1조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1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6-10-31> <개정 2018-06-25>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개정 2018-06-25>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 ⑥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3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31> <개정 2018-06-25>
 - ⑦ 시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6-10-31>
- [제목개정 2013-10-14] [제목개정 2016-10-31]

제21조의2(기록 보관·관리)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6, 제21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06-25]

제6장 보칙 <개정 2009-03-09>

제22조 (교육) ① 시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4>

② 시장은 공무원 신규임용자, 5급 승진자, 4급 과장급 이상 보직자에 대하여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4>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하여 소속 교육훈련기관에 이 규칙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0-14>

④ 시장은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청렴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04-17>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이 규칙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무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인천광역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행동강령책임관은 시 감사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행동강령책임관이 된다. <개정 2015-12-21>

1. 소방본부(소방학교·소방서를 포함한다) 및 상수도사업본부: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
2. 경제자유구역청: 감사업무 지원부서의 장
3.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의정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서의 장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과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6-01-09> <개정 2013-10-14> <개정 2016-10-31>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0-14>
- ④ 삭제 <2016-10-31>

제24조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반부패·청렴정책 수립 시 실·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08-28>

② 시장은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08-28>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3. 5. 19부터 시행한다.

②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은 이 규칙시행 이후 최초로 외부 강의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4-02-09 규칙 제24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1-09 규칙제25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 제11조, 제15조, 제21조의 개정사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03-09 규칙 제2680호〉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회의등의 경우에도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하는 것부터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13-10-14 규칙 제28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11-24 규칙 제29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21 규칙 제29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0-31 규칙 제30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8-28 규칙 제30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06-25 규칙 제3077호〉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고위공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제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공무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제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04-17 규칙 제31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154호, 2020.06.02.〉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6.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2. 26.] [국무총리훈령 제753호, 2020. 2. 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 청렴성을 회복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며, 공공·기업·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협약하는 민관협력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청렴사회민관협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2. 26.>

제2조(청렴사회민관협회의 설치) 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사회민관협회의(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2. 26.>

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공공·기업·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사회협약 체결 등 민관협력의 체계 구축, 사업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공공·기업·시민사회 등 사회각계의 제안 및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모니터링·평가에 관한 사항
4.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등에 대한 사회각계의 제안 및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5.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업 윤리경영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대국민 청렴 교육·홍보·인식개선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개정 2020. 2. 26.]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민관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2. 26.>

② 민관협의회 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된 위원이 공동으로 된다.

③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한민куси도지사협의회장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2. 사회각계를 대표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사람
 - 나. 경제계를 대표하는 사람
 - 다. 언론계·학계를 대표하는 사람
 - 라.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④ 민관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민관협력을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각자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관협의회가 미리 정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민관협의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한 국민 참여 제안 중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로 하여금 민관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청렴사회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 ① 민관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관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청렴사회민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2. 26.>

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의장 2명을 포함하여 1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2. 26.>

③ 실무협의회 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부위원장과 제4항에 따라 민관협의회 위촉위원의 추천으로 위촉된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된 실무위원이 공동으로 된다.

④ 실무위원은 민관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협의회 및 기관의 임직원이나 외부전문가 중에서 민관협의회 위원의 추천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0. 2. 26.>

⑤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에 분야별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0. 2. 26.>

[제목개정 2020. 2. 26.]

제9조(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치) 지역주민의 부패방지 정책 참여 및 지역사회의 청렴실천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다. <개정 2020. 2. 26.>

[제목개정 2020. 2. 26.]

제10조(조사·연구 의뢰) ① 민관협의회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민간부패의 실태 조사, 기업의 윤리경영 및 민관협회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관협회의 협의를 거쳐 관계 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민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회의 협의를 거쳐 민관협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1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2월 2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 2020. 2. 26.]

부 칙 <제753호, 2020. 2. 26.>

이 훈령은 202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7. 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청렴성을 회복하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 사회각계가 참여·협약하는 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체결과 협약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 사회각계의 제안과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등에 대한 사회각계의 제안 및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주민과 시민사회·기업·공공기관 등에 대한 청렴 교육·홍보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민관협회의 구성) ① 민관협의회는 의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인천광역시교육감
3.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군수구청장협의회 의장
4. 시장이 정하는 정부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
5. 사회각계를 대표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가. 시민사회·경제계·언론계·학계를 대표하는 사람
 - 나.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③ 민관협의회 의장은 공공과 민간을 대표하여 각 1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의장을 맡되, 공공부문 의장은 시장이 되고, 민간부문 의장은 제2항제5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④ 민관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천광역시 소속의 청렴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4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각자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은 그 지위를 잃을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인·단체에서의 지위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지위를 잃을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이어받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위촉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위촉위원의 해촉)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의) ① 민관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공공부문 의장이나 민간부문 의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②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민간부문 의장이 주재하되, 민간부문 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 ③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한 주민 참여 제안 중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로 하여금 민관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① 민관협의회 의장은 민관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민관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인천광역시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의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천광역시 소속의 청렴업무 담당부서장(이하 “시 감사부서장”이라 한다)
2. 민관협의회에 참여하는 교육청, 군·구, 정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등의 청렴업무 담당부서장
3. 민관협의회 위촉위원이 소속된 법인·단체의 사무총장,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중에서 민관협의회 위원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실무협의회에는 공공부문 실무의장과 민간부문 실무의장을 두되, 공공부문 실무의장은 시 감사부서장이 되고, 민간부문 실무의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민관협의회 위촉위원의 추천으로 위촉된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⑤ 공공부문 실무의장을 제외한 실무협의회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제5조를 준용한다.
- ⑥ 실무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공공부문 실무의장과 민간부문 실무의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⑦ 실무협의회 회의는 민간부문 실무의장이 주재하되, 민간부문 실무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실무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제9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렴 교육·홍보 등 청렴실천운동
2.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연구·워크숍·토론회 등에 관한 사업
3.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민관협의회,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를 제외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협의회,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회의의 심의를 거쳐 민관협회의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부 칙 〈2018-10-08 조례 제5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 인천광역시 청렴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군·구 및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인천광역시 청렴대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괄개정 2015-12-28〉

제2조(선정기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반부패·청렴도 향상 기여도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심의하여 인천광역시 청렴대상(이하 “청렴대상”이라 한다) 수상자 등을 선정한다.

1. 청렴·결백성
2. 헌신·봉사성
3. 공·사생활의 건실성
4. 건전사회 기풍조성 기여도
5. 그 밖에 반부패·청렴도 향상 기여도로 인정되는 사항

제3조(수상의 종류 및 인원) 청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상 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

1. 단체상 : 1개 기관
2. 개인상 : 대상 및 본상 각 1명

제4조(선정절차 등) ① 청렴대상의 단체상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발표하는 청렴도 평가결과 1위인 군·구로 한다. 〈일괄개정 2015-12-28〉

② 청렴대상의 개인상 후보자는 시 본청의 실·국·본부,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 군수·구청장으로 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일괄개정 2015-12-28〉

③ 시 감사관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개인상 후보자에 대하여 현지 확인 등의 검증을 한 후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의뢰 하고,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기준으로 심의하여 청렴대상 개인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일괄개정 2015-12-28〉

제5조(상패 및 시상금 등) ① 시장은 수상자에게 상패, 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하고, 해외연수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금은 단체상 500만원, 개인상 대상 300만원, 개인상 본상 200만원으로 한다.

제6조(수상의 취소) 청렴대상 수상 후 다른 사람의 공적이나 허위공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패 및 시상금은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7〉

제7조(대리 수상) 수상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이를 수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 인천광역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7-07>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인천광역시에서 추구하는 행정의 목적과 규정이 각 부서의 공무원들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인천광역시 스스로 다양한 수단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공직비리 및 행정 능력의 향상을 제고하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모니터링(청백-e)시스템, 자체점검 제도, 공직윤리활동에 의거 인천광역시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 홍보, 교육 등 소속 구성원에 대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모니터링(청백-e)시스템”이란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통합모니터링(청백-e)시스템이라 하고,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개별모니터링(청백-e)시스템이라 한다.
4. “자체점검제도”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착오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가 사전에 점검하여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고, 「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업무를 처리하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업무의 인계·인수를 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직윤리활동”이란 인천광역시가 소속 직원들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하여 부패방지 및 비리예방을 하기위해 개인 및 부서에 대한 청렴마일리지제도, 청렴인사제도, 부조리 신고제도,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상시모니터링”이란 인천광역시가 소속 직원들의 행정업무 처리과정의 위법·부당을 시정하기 위한 시스템에 의한 자기 확인·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사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
8.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실·국·본부·직속기관·사업소 등을 말한다.
9. “지원부서”란 시스템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정보화 부서를 말한다.

10. “실무담당자”란 부서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11. “실무책임자”란 부서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직근상급자를 말한다.
12.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자”란 부서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최상위자인 실·국·본부·직속기관·사업소 등의 장을 말한다.

제3조(운영방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모니터링(청백-e)시스템, 자체점검 제도, 공직윤리활동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 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전담인력을 배치 하여야 한다.
- 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관련 자치규칙 제정·개정
 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 및 환류·제도개선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 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부서의 장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부서 실·국장 등으로 하여 총 10명 내외로 한다.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결정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 ④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② 실무위원회는 모니터링 실무위원회, 자체점검 실무위원회, 공직윤리 실무위원회를 각각 두고,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니터링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 등 10명 이내로 한다.
 2. 자체점검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체점검 수행 주요부서의 장 등 10명 이내로 한다.
 3. 공직윤리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인사, 민원, 청렴 업무부서의 장 등 10명 이내로 한다.

-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방안 강구,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
- ④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장 모니터링(청백-e)시스템

제6조(시스템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통합모니터링(청백-e)시스템과 개별 행정정보시스템에 구축된 개별모니터링(청백-e)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함에 있어 모니터링(청백-e)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관리
3. 그 밖에 모니터링(청백-e) 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제7조(업무지정) ①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갱신 내역 총괄 관리
-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관리
- 다. 모니터링(청백-e)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 라. 모니터링(청백-e)시스템 기반 구축·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약
- 마. 모니터링(청백-e)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 바. 모니터링(청백-e)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 운영
-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실무부서

- 가. 모니터링(청백-e)시스템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 나. 모니터링(청백-e)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 다. 모니터링(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라. 모니터링(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3. 지원부서

가. 모니터링(청백-e)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관리

다.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4. 실무책임자

가. 모니터링(청백-e)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을 변경 요청

나. 모니터링(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조치사항을 검토 및 확인

다.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변경될 경우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조치 및 미조치 사항을 인계인수

5.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자

가. 모니터링(청백-e)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을 변경 요청

나. 모니터링(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담당자, 조치일자, 지시사항을 입력

다.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변경될 경우 모니터링(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조치 및 미조치 사항을 인계인수

제8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해 모니터링(청백-e)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모니터링(청백-e)시스템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지원부서의 장은 장애 발생 즉시 모니터링(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시장은 모니터링(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변경·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규칙 제308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제10조(자료의 관리) ① 전산자료의 신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모니터링(청백-e)시스템상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에서는 자료에 대한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자체점검 제도

제11조(자체점검) ① 시장은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자체점검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에 따라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는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 과정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③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대상사업 실무부서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받고 감사결과를 계약체결 등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일상감사 등의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미 이행시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1조를 따른다. <신설 2014-07-07>

⑤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자체점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대상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기진단 대상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4-07-07>

제12조(업무지정) ① 시장은 자체점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정보화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관리 및 위원회 지원

나. 실무부서의 자체점검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

다. 연 1회 자체점검제도 운영결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

나. 실무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업무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

3. 정보화부서

가. 자체점검 제도 업무처리과정의 전자적인 이용을 지원

제13조(제도개선) ①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 대상 변경 및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실무부서의 자체점검제도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공직윤리활동

제14조(운영계획) 시장은 소속 직원 및 부서단위 윤리활동 강화를 통한 비리 사전예방 및 깨끗한 공직윤리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윤리활동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공직윤리의식 제고 시책 수립 및 집행
2. 개인별·부서별 청렴마일리지 부여 절차 및 방법
3.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계획 수립
4.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청렴인사제도 등 그 밖의 자율적 윤리활동 관련 사항

제15조(시스템 운용) ① 시장은 소속 직원들의 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직윤리활동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공직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각종 시책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③ 시스템 운영이 불가능한 부조리신고센터, 청렴인사시스템 등은 수기관리 할 수 있다.

제16조(업무지정) ① 시장은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 가. 공직윤리활동시스템 관리 및 운영 총괄
 - 나. 공직윤리활동시스템 실무위원회 운영,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안건 상정
 - 다. 윤리활동 표준항목 실무위원회 보고
 - 라. 실무부서 윤리활동 자체평가 실시 및 위원회 결과 보고
2. 실무부서
 - 가. 실무부서의 장은 개인별·부서별 윤리활동 결과를 공직윤리활동시스템에 입력. 다만,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는 감사부서에서 입력한다.
 - 나. 실무부서의 장은 윤리활동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
3. 지원부서
 - 가. 공직윤리활동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 나.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개선 요청

제5장 보안 및 사후관리

제17조(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① 시장은 모니터링(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활동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모니터링(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활동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모니터링(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활동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링(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활동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 및 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이며, 총괄관리 및 총괄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이 된다.

④ 시장은 공직윤리활동시스템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상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관리 및 시스템 안전대책) ① 시장은 모니터링(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활동시스템의 업무담당자의 변경,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니터링(청백-e)시스템 및 공직윤리활동시스템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 정보,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청백-e)시스템; 사용자 시스템 사용율, 모니터링 조치율, 세수확보, 비리적발 등
2. 자체점검 제도; 관리카드 작성여부, 대상업무 자체발굴 수량 등
3. 공직윤리활동; 자체 청렴시책 발굴 실적, 개인별·부서별 윤리활동 관리 여부 등

② 감사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향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③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결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확인·점검을 위한 자료제출요구에 적극 응해야 한다. [규칙 제308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제20조(포상)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성과금·포상금 지급, 인사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21조(제도지원)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지원 등이 필요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규칙 제308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06호, 2020. 12. 29., 일부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49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p>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 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2. 3., 2016. 3. 29., 2017. 4. 18., 2019. 4. 16., 2020. 12. 29.></p> <p>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다만, 마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본다.</p> <p>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p> <p>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p> <p>마.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p> <p>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p>	<p>제2조(정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p> <p>1.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p> <p>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p> <p>3.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p> <p>4.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p> <p>제4조(공직자 행동강령) 위원회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가 법 제8조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이하 이 조에서 “법령등”이</p>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제5장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직자로 본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나.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다. 제1호마목에 따른 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신청인”이란 이 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이하 “부패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1. 부패유발의 가능성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나. 법령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 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법령등 준수의 용이성

가. 국민·기업·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법령등의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나.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해당 법령등의 소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p>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p> <p>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p> <p>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p> <p>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p> <p>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p> <p>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p> <p>아. 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p> <p>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p> <p>8.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p> <p>9.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까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p> <p>⑥ 위원회는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법령등의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은 성실하게 이에 응해야 하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p> <p>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p> <p>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⑨ 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운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p> <p>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p> <p>③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p>	

<p>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정당의 책무) ① 「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정당과 소속 당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정당 및 소속 당원은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게 하고 정당운영 및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p>	
<p>제5조(기업의 의무) 기업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조에 따른 기업의 기업윤리 확립의무가 효과적으로 달성 될 수 있도록 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p>
<p>제6조(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p>	
<p>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본조신설 2009. 1. 7.]</p>	
<p>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p>제4조(공직자 행동강령) 위원회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가 법 제8조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p>

<p>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p> <p>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9조(공직자의 생활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 보수와 처우의 향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10조(권익구제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거나 사회정의와 공익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행정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5조(협의회의 개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 및 법 제80조에 따라 고충민원의 신속한 해결, 행정제도의 개선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참여포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권익구제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등과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p>
<p>제2장 국민권익위원회</p>	
<p>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6. 9.></p> <p>②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신설 2020. 6. 9.></p>	
<p>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1. 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p>제7조(실태조사·평가) 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실태조사·평가를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자료의 분석 등을 의뢰하거나 위원회 및 관계기관의 공직자 등으로 평가 작업반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p> <p>제7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p>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8.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등
11.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1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14.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1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 실태 확인·지도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
1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지원 및 교육
18.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조정 및 기업으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처리
19.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21.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82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공기관(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82조의2에 따라 제출 요구를 받은 자료 등을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15.]

제9조(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등)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4호에 따른 행동강령의 시행·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수립·시행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 기관별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이행실태를 조사·점검할 수 있다.

제11조(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5호에 따른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및 상담 업무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8. 1. 30.>

② 위원회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등이 전화로 처리하는 민원안내 및 상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기술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그 활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경유한 소관 민원사항에 대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사항의 접수 및 안내 등 일부 사무를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참여포털”이라 한다)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참여포털 홈페이지 및 시스템의 운영·관리 2.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의 분류 및 재분류 3.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의 분석·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4. 참여포털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홍보 5.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한 기준 마련 6. 그 밖에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 <p>③ 참여포털에 접수되는 민원 및 국민제안 등의 신청·접수·분류·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정책참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의하여 정한다.</p> <p>④ 관계 행정기관등은 참여포털에 접수되는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에 대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p>⑤ 위원회는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공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정보통신망의 연계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3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각각 고충민원, 부패방지 업무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업무로 분장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 25.></p> <p>②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고충민원과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p>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p> <p>5.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직에 4년 이상 있었던 자</p> <p>6.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p> <p>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상임이 아닌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 2. 17.></p> <p>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 5. 28.></p> <p>⑤ 위원이 결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p>	
<p>제1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15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p>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p>	
<p>제16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p>	

<p>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p> <p>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3. 제17조에 따른 겸직금지위반에 위반한 경우 <p>④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면직 또는 해촉한다.</p>	
<p>제17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p>제14조(위원의 겸직금지) 법 제1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교육·연구기관 및 학술단체를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3.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나 승인을 요하는 법인 또는 단체
<p>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 4.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p>제15조(위원의 기피·회피)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기피여부를 결정한다.</p> <p>② 기피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p> <p>③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기피신청에 대한 위원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신설 2015. 10. 20.></p> <p>⑤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정지한다. 다만, 위원</p>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제20조에 따른 소위원회 및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제25조에 따른 파견 공무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 및 제22조에 따른 전문 위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 4. 16.>

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10. 20.>

⑥ 위원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0. 20.>

제17조(소위원회)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에 관한 고충민원(법 제20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 5. 28., 2014. 11. 19., 2017. 7. 26.>

1. 행정·교육·문화·복지·노동·교통 및 도로 등 일반 행정 및 사회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2. 세무·농림·수산·환경 및 재정 등 경제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3. 주택·건축 및 도시계획 등 건설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4. 국방·병무·보훈관련분야의 고충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 등이 제기하는 고충민원을 포함한다)

5. 경찰기관(해양경찰기관을 포함한다)의 처분·수사 등 경찰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② 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구성위원에게 특정사안에 대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다른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거나, 해당 사안에 한하여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을 그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 1. 30.>

제76조(보상위원회의 회의)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p>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보상위원회는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보상금·구조금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과 관련된 기관의 공직자, 조사기관의 담당자를 보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p> <p>④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9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4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② 제18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p> <p>③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6조에 따른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 중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사항 3. 제51조에 따른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5.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p>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7조(소위원회)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에 관한 고충민원(법 제20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 5. 28., 2014. 11. 19., 2017. 7.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정·교육·문화·복지·노동·교통 및 도로 등 일반 행정 및 사회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2. 세무·농림·수산·환경 및 재정 등 경제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3. 주택·건축 및 도시계획 등 건설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4. 국방·병무·보훈관련분야의 고충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 등이 제기하는 고충민원을 포함한다) 5. 경찰기관(해양경찰기관을 포함한다)의 처분·수사 등 경찰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p>② 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성위원을</p>

	<p>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p> <p>③ 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구성위원에게 특정사안에 대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다른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거나, 해당 사안에 한하여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을 그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④ 소위원회의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 1. 30.></p> <p>제18조(다수인 관련 민원)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수인이 관련된 사안 중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공익 또는 국가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안 2. 다수의 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련된 사안으로서 이해관계나 처리절차가 복잡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사안 3.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신청인의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큰 사안
<p>제21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제19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p> <p>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조정, 조사·연구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p> <p>④ 분과위원회의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 1. 30.></p>
<p>제22조(전문위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학계, 사회단체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p>	

<p>위촉한다.</p>	
<p>제23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p> <p>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4조(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3조(자문기구) ① 법 제24조에 따른 자문기구의 자문위원은 복지, 산업, 건축, 도시, 도로, 군사, 경찰, 노동, 환경, 민·형사 등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법 제24조에 따라 자문기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회의 정책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고충민원의 처리와 제도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부패방지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25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제26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파견직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21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파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공무원경력 5년 이상인 자 2.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은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소관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

	<p>4. 업무처리에 있어서 책임감과 능력이 있고 친절·성실한 자 등 위원회에서 정하는 자</p> <p>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기관의 장은 파견후 복귀한 자에 대하여 보직부여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파견직원이 위원회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경력가점을 부여하는 등 평정시 우대할 수 있다.</p>
<p>제26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p>	<p>제28조(운영상황) 법 제26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상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사항 3.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이 수용하지 아니한 사항 중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고충민원 관련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p>	<p>제29조(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도개선에 관한 위원회의 의견 및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 조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④ 위원회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제도개선에 관한 재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심의를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라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결과가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내용인</p>

	<p>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27조의2(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공공기관의 부패에 관하여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6. 3. 29.]</p>	<p>제29조의2(조사·평가의 공개)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평가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6. 9. 27.]</p>
<p>제27조의3(조사·평가결과의 공개) ①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조사·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6. 3. 29.]</p>	<p>제29조의2(조사·평가의 공개)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평가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6. 9. 27.]</p>
<p>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2.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내부규정 <p>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이하 이 조에서 “법령등”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이하 “부패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패유발의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나. 법령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법령등 준수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민·기업·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법령등의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나.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
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해당 법령등의 소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이
라 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평가
에 필요한 자료 등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령등 소관기
관의 장에게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⑤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법령등 소관기관
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까지 그 사유를 서면으
로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⑥ 위원회는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법령등의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은 성실하게
이에 응해야 하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
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에 제1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⑨ 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사규

	정관 등 내부규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p>제2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p>③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제12조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그쳐야 하며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p> <p>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실태조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p>	<p>제7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82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공공기관(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29조 제1항제1호 및 제82조의2에 따라 제출 요구를 받은 자료 등을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9. 10. 15.]</p> <p>제10조(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 ① 위원회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된 공직자가 징계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의 임면권자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임면권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령 등(이하 이 조에서 “법령등”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이하 “부패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패유발의 가능성 <p>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나. 법령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p>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도의 개선 등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 존재하는지 여부
2. 법령등 준수의 용이성
가. 국민·기업·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법령등의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나.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해당 법령등의 소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⑤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까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⑥ 위원회는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법령등의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은 성실하게 이에 응해야 하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

	<p>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법령등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p> <p>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p> <p>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⑨ 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제33조(공공기관의 설명요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9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목적·일시·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에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제34조(이해관계인의 출석요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제30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p>	

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삭제 <2019. 4. 16.>	
제3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p>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p>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p>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p> <p>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p> <p>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p> <p>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p> <p>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p> <p>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p>	
<p>제34조(활동비 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32조 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p>	
<p>제35조(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5조,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5조 및 제83조의2제1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9. 4. 16.〉</p>	
<p>제36조(사무기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p>	
<p>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p>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권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④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제35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술로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 11. 20., 2016. 11. 29., 2020. 6. 30.>

1. 관계 행정기관등의 명칭
2. 소송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3. 다른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그 권익위원회의 명칭 및 신청 내용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 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5. 대표자의 인적 사항(대표자가 선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6. 군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인의 소속·계급 및 군번

제37조(대리인의 허가) ① 신청인이 법 제39조제3항제

5호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권익위원회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 사항
2.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이유
3. 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② 권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

<p>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40조(동일한 고충민원의 상호 통보) 신청인이 제39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동일한 고충민원을 둘 이상의 권익위원회에 각각 신청한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제43조에 따라 이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4. 16.]</p>	
<p>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권익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p> <p>③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41조(행정심판 등의 통보) ①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심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에 따라 접수된 민원사안이 법 제41조에 따라 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과 동일한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권익위원회는 접수한 고충민원이 다른 권익위원회에서 이미 처리된 사안인 경우에는 그 사안을 처리한 권익위원회에 해당 고충민원의 접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의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권익위원회는 해당 고충민원이 접수된 권익위원회에 해당 고충민원의 처리결과 및 처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제42조(조사의 방법) ① 권익위원회는 제4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p>제44조(조사의 방법) ① 권익위원회는 법 제42조제1항 제1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제출일자 및 요구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단순한 사항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전신·모사전송·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p> <p>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명 또는 자료제출</p>

<p>등에 대한 실지조사</p> <p>4. 감정의 의뢰</p> <p>② 권익위원회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③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익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이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p> <p>③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정의 의뢰는 감정인 또는 감정기관, 감정기간, 감정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제45조(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①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성명, 요구의 취지, 출석일시와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를 받은 당사자가 속한 소속 기관의 장은 당해 당사자에 대하여 출장 또는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p> <p>제46조(소속 직원의 실지조사 등) ① 권익위원회는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신청인 등의 진술을 듣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 또는 신청인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방문의 취지·내용·일시·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이나 마약과 관련된 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수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p> <p>② 권익위원회의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 또는 신청인 등의 진술 청취 2. 관계 행정기관등 또는 신청인 등이 소지하는 문서·장부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3.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그 밖의 상황의 확인
<p>제43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는 것이</p>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 ④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이송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권익위원회에 그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6.>

<p>⑤ 권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송한 고충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민원이 이송된 때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4. 16.〉 [제목개정 2019. 4. 16.]</p>	
<p>제44조(합의의 권고) 권익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p>	<p>제47조(합의 권고 및 조정 절차) ① 법 제44조에 따른 합의 권고로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나 당사자간 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한다.</p> <p>② 권익위원회는 법 제45조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p> <p>③ 조정회의는 권익위원회 위원장 또는 권익위원회 위원이 주재한다.</p> <p>④ 권익위원회는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책임 있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거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조정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p>
<p>제45조(조정) ① 권익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p> <p>②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8. 4. 17.〉</p> <p>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은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p>	<p>제47조(합의 권고 및 조정 절차) ① 법 제44조에 따른 합의 권고로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나 당사자간 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한다.</p> <p>② 권익위원회는 법 제45조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p> <p>③ 조정회의는 권익위원회 위원장 또는 권익위원회 위원이 주재한다.</p> <p>④ 권익위원회는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책임 있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거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조정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p>

<p>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와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p> <p>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와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p>	<p>제48조(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①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충민원의 내용 2.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3. 관계 행정기관등의 회신기한 등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법 제47조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 법령·제도·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3. 관계 행정기관등의 회신기한 등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p>	<p>제48조(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①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충민원의 내용 2.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3. 관계 행정기관등의 회신기한 등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법 제47조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련 법령·제도·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3. 관계 행정기관등의 회신기한 등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4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그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 4. 16.></p> <p>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권익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p>	<p>제49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권익위원회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하거나 권익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p> <p>② 권익위원회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의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관계 행정기관등·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2.></p>

<p>제49조(결정의 통지)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50조(처리결과와 통보 등) ①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권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p>	
<p>제51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원회는 감사원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p>	
<p>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p>	<p>제52조(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① 권익위원회는 법 제52조에 따른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대상이 되는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확인·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p>②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53조(공표) 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2. 제50조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3. 제50조제2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불이행사유 	
<p>제54조(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① 위원회 또는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p>	<p>제5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 지원) 위원회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립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 2.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의 구성 등 권익위원회간의 연계·교류를 위한 활동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와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및 교육 지원
<p>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p>	
<p>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p>	<p>제54조(신고자의 대표자 선정) 위원회는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p> <p>제59조(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사항이 법 제59조제3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사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신고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p>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고, 조사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처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처리결과요지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p>

	<p>③ 조사기관이 제2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로서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60조제2항 전단”은 “제59조제2항 전단”으로,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는 “그 처리결과”로, “직접 이첩 받은”은 “송부 받은”으로 본다. <개정 2019. 10. 15.> [제목개정 2019. 10. 15.]</p>
<p>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p>	
<p>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이하 이 장에서 “신고”라 한다)를 한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자”라 한다)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19. 4. 16.></p>	
<p>제57조의2(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6.]</p>	
<p>제58조(신고의 방법)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 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p>	
<p>제59조(신고의 처리) 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이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p>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p>	<p>제55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7., 2019. 10.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를 한 자(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신고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근무처·연락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위원회가 정하는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 수사처,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19. 4. 16., 2020. 12. 29.>

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4. 법관 및 검사

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3.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신고자와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5.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6. 위원회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7. 신고자가 위원회의 처리 및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의 여부

② 위원회는 제1항제7호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56조(신고의 보완) 위원회는 신고자가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신고사항의 이첩 등)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에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첩하여야 한다.

1.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사원
 2.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
 3. 그 밖에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 ② 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관 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신고자가

5. 장성급(將星級) 장교

6. 국회의원

⑤ 제4항에 따라 고발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은 수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29.>

⑥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⑦ 위원회는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9. 4. 16.>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이첩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59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0. 15.>

1.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2.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법 제5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제58조의2(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59조제7항에 따라 신고사항에 국가기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 신고사항을 접수·처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5.]

제59조(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사항이 법 제59조제3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사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신고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고, 조사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처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p>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처리결과와 요지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p> <p>③ 조사기관이 제2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로서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60조제2항 전단”은 “제59조제2항 전단”으로,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는 “그 처리결과”로, “직접 이첩 받은”은 “송부 받은”으로 본다. <개정 2019. 10. 15.></p> <p>[제목개정 2019. 10. 15.]</p> <p>제61조(조사결과 등의 통보) ① 조사기관(조사기관이 이첩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받은 조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62조에서 같다)은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감사·수사 또는 조사종료 후 처리방향 3.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그 사실 6.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p>② 법 제59조제5항에 따른 검찰의 수사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p>
<p>제60조(조사결과 등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p>	<p>제59조(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사항이 법 제59조제3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이첩 또는 종결 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서</p>

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59조에 따라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조사기관이 이첩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받은 조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신고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고, 조사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처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처리결과의 요지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③ 조사기관이 제2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에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로서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60조제2항 전단”은 “제59조제2항 전단”으로,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는 “그 처리결과”로, “지침 이첩 받은”은 “송부 받은”으로 본다. <개정 2019. 10. 15.>

[제목개정 2019. 10. 15.]

제61조(조사결과 등의 통보) ① 조사기관(조사기관이 이첩받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받은 조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제62조에서 같다)은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감사·수사 또는 조사종료 후 처리방향
3.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p>경우 그 사실</p> <p>6.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p> <p>② 법 제59조제5항에 따른 검찰의 수사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p> <p>제63조(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법 제60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신고자는 법 제6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받은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9. 10. 15.></p> <p>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와 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19. 10. 15.></p>
<p>제61조(재정신청) ① 제59조제4항에 따른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2020. 12. 29.></p> <p>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 제264조 및 제264조의2를 적용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검사가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그 때, 제5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p>	<p>제64조(재정신청의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른 재정신청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검사 또는 수사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재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으로부터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증거 등을 제출받거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p>

<p>가 수사의뢰한 때에는 수사의뢰한 날부터 3개월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때 각각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p>	
<p>제61조의2(이의신청) 제5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위원회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20. 12. 29.]</p>	
<p>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p> <p>[전문개정 2019. 4. 16.]</p>	
<p>제62조의2(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등) ① 신고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p> <p>② 신분보장등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은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분보장신청인”이라 한다)과 그가 소</p>	<p>제65조(신분보장 등의 조치 신청)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이하 “신분보장등조치”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p> <p>[전문개정 2019. 10. 15.]</p> <p>제66조(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는 법 제6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거나 진술서·자료의 제출, 사실·정보의 조화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일시 및 출석장소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다만,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p> <p>② 위원회 소속직원은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제목개정 2019. 10. 15.]</p>

<p>속된 기관·단체·기업 등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기업 등의 장(이하 “소속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1. 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p> <p>2. 신고자 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p> <p>3. 각하결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의 권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p> <p>4.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를 받은 경우</p> <p>5. 제5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로서 신분보장등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각하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자료의 제출, 사실·정보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자는 성실히 따라야 한다.</p> <p>1. 신분보장신청인</p> <p>2. 불이익조치를 한 자</p> <p>3. 참고인</p> <p>4. 관계 기관·단체·기업 등</p> <p>⑤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소속기관장등에게 충분한 소명(疏明)기회를 주어야 한다.</p> <p>[본조신설 2019. 4. 16.]</p> <p>[종전 제62조의2는 제62조의5로 이동 <2019. 4. 16.>]</p>	<p>제67조(신분보장등조치 결정 등) ① 위원회는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권고(이하 “신분보장등조치권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p> <p>②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속기관장등(이하 “소속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p> <p>③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에 따라 법 제6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분보장신청인(이하 “신분보장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신분보장등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p> <p>④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 등 신분보장등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소속기관장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p> <p>⑤ 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한 때에는 이를 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p> <p>[제목개정 2019. 10. 15.]</p>
<p>제62조의3(신분보장 등의 조치 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p>	<p>제67조(신분보장등조치 결정 등) ① 위원회는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권고(이하 “신분보장등조치권</p>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신분보장 등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이 경우 보수 등의 지급기준 및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4. 전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7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등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가·허가 또는 계약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신분보장등 조치를 할 것을 권고(이하 “신분보장등조치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분보장신청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공직자인 신분보장신청인이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및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인사혁신처장 등 인사조치 요청과 관계된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받은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신분보장등조치권고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분보장신청인과 소속기관장등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6.]

고”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②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속기관장등(이하 “소속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③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에 따라 법 제6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분보장신청인(이하 “신분보장신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신분보장등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④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 등 신분보장등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소속기관장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

⑤ 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한 때에는 이를 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

[제목개정 2019. 10. 15.]

제67조의2(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6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하고, 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 등 및 이자의 산정기간은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날부터 법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5.]

	<p>제68조(조치결과와 통보 등) ① 소속기관장등은 위원회로부터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를 받거나 제6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권고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p> <p>② 위원회로부터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를 받은 소속기관장등이 그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위원회에 소명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p> <p>③ 법 제62조의3제5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전직·전출·전입 또는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받은 인사혁신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구내용에 따른 조치를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9. 10. 15.></p>
<p>제62조의4(행정소송의 제기 등) ①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p> <p>② 소속기관장등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 4. 16.]</p>	
<p>제62조의5(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p> <p>1.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p> <p>2.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p>	<p>제68조의2(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① 법 제62조의5제1항에 따라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신청하려는 신분보장신청인은 그 인적사항·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p> <p>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5.></p> <p>③ 위원장은 법 제62조의5제1항에 따라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속기관장등에게</p>

<p>치가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4. 16.></p> <p>[본조신설 2016. 3. 29.]</p> <p>[제목개정 2019. 4. 16.]</p> <p>[제62조의2에서 이동 <2019. 4. 16.>]</p>	<p>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한 경우에는 요구 사실을 신분보장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p> <p>④ 위원장이 법 제62조의5제1항에 따라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한 경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장등은 해당 조치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로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소명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p> <p>[본조신설 2016. 9. 27.]</p> <p>[제목개정 2019. 10. 15.]</p>
<p>제62조의6(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조치 결정”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으로, “보호조치”는 “신분보장등조치”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소속기관장등”으로 본다.</p> <p>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9. 4. 16.]</p>	<p>제69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62조의6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본조신설 2019. 10. 15.]</p>
<p>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신고한 뒤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9. 4. 16.></p>	
<p>제63조의2(화해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 신분보장등조치권고 또는 기각결정을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신분보장등조</p>	

<p>치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 권고나 화해안에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거나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화해안의 작성, 화해조서의 작성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본조신설 2019. 4. 16.]</p>	
<p>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7. 10. 31.]</p>	
<p>제64조의2(신변보호조치) ①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p> <p>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p>	<p>제70조(신변보호) ① 법 제6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변보호조치의 요구는 신고자와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요구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30.></p> <p>② 법 제6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p>

<p>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p> <p>③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 10. 31.]</p>	<p>경찰서장은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30., 2020. 12. 31.></p> <p>③ 신고자 및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p> <p>④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가 요구한 신변보호조치의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p> <p>⑤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해제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p>
<p>제65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0. 31., 2019. 4. 16.></p>	
<p>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p> <p>②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4. 16.></p> <p>③ 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4. 16.></p>	
<p>제66조의2(협조의 요청) 위원회는 신고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신분보장등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p>	<p>제70조의2(협조 요청) 위원회는 법 제66조의2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1. 자료·서류 등의 제출 또는 설명</p>

<p>받은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밖의 단체 등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출석 및 의견 진술 3. 소속 직원의 파견, 공동조사 및 자문 4. 신고자(법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및 법 제6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자·증언자·고소인·고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질병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5. 법률 상담·자문 및 소송의 대리 등 피해 회복 및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구조 6. 신고자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제공 및 취업 알선 7. 그 밖에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본조신설 2019. 10. 15.]</p>
<p>제67조(준용규정) 제57조, 제58조,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6까지,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6. 3. 29., 2017. 10. 31., 2019. 4.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4.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 	
<p>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포상 추천 또는 포상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9. 4. 16.></p> <p>②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p>	<p>제71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0. 15., 2020. 12.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③ 신고자 및 제65조에 따른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정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⑤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 4. 16.>

⑥ 제3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과 관련된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 및 협조자”로 본다. <신설 2019. 4. 16.>

[제목개정 2019. 4. 16.]

4. 삭제 <2019. 10. 15.>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액은 2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09. 5. 28., 2015. 10. 20., 2019. 10. 15.>

③ 삭제 <2019. 10. 15.>

④ 포상금 지급액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77조제2항 및 제8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7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은 “포상금”으로, “보상금 지급액”은 “포상금 지급액”으로, 제80조 중 “별표 2의 보상대상가액”은 “포상금”으로, “보상금”은 “포상금”으로 본다. <개정 2019. 10. 15.>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15.>

1.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72조(보상금의 지급사유) ①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10. 15.>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 처분
 6.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③ 삭제 <2019. 10. 15.>

제74조(구조금의 산정 기준) ① 위원회 및 보상위원회는 법 제6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구조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입원·투약·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노무사 등의 수입료
4.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부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이 조에서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5. 그 밖에 보상위원회가 신고 및 법 제65조에 따른 협조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했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법 제6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임금 손실액의 산정 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공신력 있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④ 구조금 지급액의 감액 또는 구조금의 지급제한에 관하여는 제77조제2항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7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은 “구조금”으로, 제78조 중 “보상금”은 “구조금”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9. 10. 15.]

제79조(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보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5.>

②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68조제3항

	<p>에 따라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19. 10. 15.></p> <p>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서正本 및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개정 2019. 10. 15.></p>
<p>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 4. 16.></p> <p>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 4.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p>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9. 4. 16.></p> <p>④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그 밖의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19. 4.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회 소속으로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회계·감정평가,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p>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6.></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16.></p>	<p>제74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p>[본조신설 2016. 9. 27.]</p>

제7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의2(보상금 등의 상환 및 반환) ① 위원회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받은 자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7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환 또는 반환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6.]

제71조(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6.>

② 제6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하 이 항에서 “위원회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포상금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

<p>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위원회보상금등의 액수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회보상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위원회보상금등의 액수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위원회보상금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p> <p>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 법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p> <p>[제목개정 2019. 4. 16.]</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국민감사청구</p>	
<p>제72조(감사청구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7.></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p>제84조(감사청구인) 법 제7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란 300명을 말한다.</p> <p>제85조(감사청구 제외사항) 법 제7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3.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 또는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p>제86조(감사청구의 방법) 법 제72조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청구인의 성명·전화번호·생년월일·주소 및 직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이하 “감사청구서”라 한다)로 하되, 그 중 5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감사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6.></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다.</p>	
<p>제73조(감사청구의 방법)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감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한다.</p>	
<p>제74조(감사실시의 결정) ①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②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감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③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기각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75조(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①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②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76조(운영)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7장 보칙</p>	
<p>제77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거나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p>	<p>제88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의 방법) 법 제77조에 따른 제도개선 제안에 관한 의견제출과 관련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제출은 다음</p>

<p>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p> <p>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법률 또는 조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p>	<p>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선 대상 제도나 법률 또는 조례의 현황과 문제점 2.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의 내용 3. 관련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 4. 제2호 또는 제3호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등의 의견 5. 그 밖에 제도의 개선이나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폐지를 위하여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목개정 2020. 12. 22.]</p>
<p>제78조(고충민원사무의 정보보호)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등은 고충민원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79조(고충민원 신청사항의 게시 등)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고충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편람을 비치하는 등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담당직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80조(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협조를 요청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p>	<p>제5조(협의회의 개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 및 법 제80조에 따라 고충민원의 신속한 해결, 행정제도의 개선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참여포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권익구제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등과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p>
<p>제81조(교육과 홍보 등)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권리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학교에서</p>	

<p>고충민원의 처리와 권리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교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p> <p>③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정에 고충민원 제도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p>	
<p>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도교육청평가 <p>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방법, 결과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6. 3. 29.]</p>	<p>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가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 등인 경우에는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수립 등 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렴의식 함양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 <p>③ 위원회는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p>④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부패방지교육 실시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위원회는 법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p> <p>⑥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육자료 또는 교육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6. 9. 27.]</p>
<p>제81조의3(국민권의 향상에 관한 포상)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권익 보호·향상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p>	<p>제88조의3(포상) ① 위원회는 법 제81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9. 4.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 각 분야의 부정부패 방지, 청렴문화 확산 및 국가청렴도 향상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2. 고충민원 처리업무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3. 국민의 권익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운영, 민원분석 업무 추진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4. 행정심판 운영 및 제도 발전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5. 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향상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p>② 위원회는 법 제81조의3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9. 10. 15.]</p>
<p>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3.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로 받은 자 <p>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신설 2016. 3.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p>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p>	<p>제89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및 확인) ① 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발생일(이하 “취업제한 사유발생일”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업체 등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단체의 장(퇴직 당시의 소속기관·단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거쳐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체 등에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리사기업체 및 법 제82조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법인 등(이하 “영리사기업체등”이라 한다) 2.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인·단체 <p>②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단체의 장은 법 제82조에 따른 사항을 조사·확인하고 그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p> <p>③ 관할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송 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등 또는 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인·단체에의 취업이 법</p>

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
자문법률사무소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
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바.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
유관단체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
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
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
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
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
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3. 29.〉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 3. 29.〉

[제목개정 2016. 3. 29.]

제82조에 따라 제한되는지의 여부를 소속기관·단
체의 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7.〉

제89조의2(부패행위 관련 기관 등) ① 법 제82조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이란 비위면직자들의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비위면직자들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였거
나, 제공하기로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사람
이 소속하였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2. 비위면직자들의 부패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얻을 수 있었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② 법 제82조제2항제3호바목에서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제3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 9. 27.]

제90조(비위면직자들의 취업확인) ①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비위면직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비위면직
자들의 취업제한 사유발생일부터 5년 동안 법 제82
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여부
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7.〉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89조제2항·제3항
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위
면직자들이 취업한 영리사기업체등이 비위면직자
등이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p>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비위면직자들이 소속하였던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9. 27.></p> <p>④ 법 제82조의2 전단에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6. 9. 27., 2018. 9. 18., 2020. 6.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중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에 관한 자료 2. 비위면직자들의 성명·주민등록번호·소속기관 및 징계종류·징계사유·퇴직일 3.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급여제한자의 성명·생년월일·소속기관 4. 「군인연금법」 제38조제1항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42조에 따른 급여제한자의 성명·생년월일·소속기관 5.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사업장 및 자격취득·변동시기에 관한 자료 6.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항 제19호라목에 따른 소득 및 과세에 관한 자료 <p>[제목개정 2016. 9. 27.]</p>
<p>제82조의2(자료 제출 요구) 위원회는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29.]</p>	<p>제90조(비위면직자들의 취업확인) ① 공공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비위면직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비위면직자들의 취업제한 사유발생일부터 5년 동안 법 제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의 취업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7.></p> <p>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89조제2항·제3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위원회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위면직자등이 취업한 영리사기업체등이 비위면직자등이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비위면직자등이 소속하였던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9. 27.></p> <p>④ 법 제82조의2 전단에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6. 9. 27., 2018. 9. 18., 2020. 6. 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중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에 관한 자료 2. 비위면직자등의 성명·주민등록번호·소속기관 및 징계종류·징계사유·퇴직일 3.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급여제한자의 성명·생년월일·소속기관 4. 「군인연금법」 제38조제1항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42조에 따른 급여제한자의 성명·생년월일·소속기관 5.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 사업장 및 자격취득·변동시기에 관한 자료 6.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및 같은 항 제19호라목에 따른 소득 및 과세에 관한 자료 <p>[제목개정 2016. 9. 27.]</p>
<p>제83조(취업자의 해임요구) ① 위원회는 제82조제2항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p> <p>② 위원회는 제82조제2항에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취업자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p>	

<p>요구하여야 하며, 요구를 받은 관계공공기관의 장은 그 취업자가 취업하고 있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요구를 받은 부패행위 관련 기관, 영리사기업체 등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p>	
<p>제83조의2(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22조에 따른 전문위원 및 제25조에 따른 파견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별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②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본조신설 2019. 4. 16.]</p>	
<p>제84조(국회 등의 특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당해 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p>	
<p>제8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p> <p>②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별 칙</p>	
<p>제86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① 공직자가 제7조의2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1. 7., 2014. 5. 28.></p> <p>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p>	
<p>제87조(업무상 비밀누설죄) 제30조에 위반하여 부패방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p>	
<p>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2019. 4. 16., 2019. 12. 10.〉</p>	
<p>제89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82조제1항의 비위면직자 등이 같은 조 제2항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제목개정 2016. 3. 29.]</p>	
<p>제90조(불이익조치 및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의 죄)</p> <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의3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2조제1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2조제7호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p>③ 제62조의5(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p>	

<p>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2. 10.></p> <p>[전문개정 2019. 4. 16.]</p>	
<p>제91조(과태료) ① 제62조의2제4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석, 진술서·자료의 제출, 사실·정보의 조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4. 16.></p> <p>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 4. 16.></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3. 29., 2019. 4.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9. 4. 16.></p>	<p>제9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9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 10. 15.></p> <p>[전문개정 2009. 5. 28.]</p>

11. 인천광역시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와 「인천광역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위반행위 신고에 따른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며,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부조리 행위를 포함한다.
2.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공무원행동강령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 나.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 다.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 라. 시 본청·시의회·직속기관·사업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시에 신고한 자
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제3조(청렴의무) 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신고자의 소속기관, 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관의 지정) ① 부패행위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감사관으로 한다. 다만, 규칙 제19조에 따른 신고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책임관으로 본다.

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2장 신고의 접수 및 처리제

제5조(신고 상담·접수) 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행위 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을 실시한 직원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신고는 시스템 서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상담 및 신고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 및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익명으로 신고된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사항은 공직감찰에 활용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는다.

⑥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신고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고,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의 조사·처리) ① 책임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공직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해당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외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01호)」을 준용할 수 있다.

⑥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 취하)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신고의 종결)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제9조(비밀보장) ① 공무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0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3. 전보,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
4.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 차별지급
5. 교육·훈련 등 자기개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업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6. 주의·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고통 야기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9. 물품·용역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
 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 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 ② 공무원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불이익조치 등을 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관에게 구제를 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책임관은 신고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⑤ 공무원은 누구든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⑥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있는 관계 공직자에게 이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 있는 관계 공직자에게 이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불이익의 추정 등) 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2조(신변보호)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② 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제13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4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 ① 인사담당 부서장은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②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시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 등) ① 이 규정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
2.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자
3. 제11조제5항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시장의 조치 요구에 불응한 자

②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관계기관 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규정 적용) ①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훈령 제1155호 2016-01-2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2.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제18132호, 2021. 4. 20., 일부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269호, 2018. 10. 3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p>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4., 2017. 10.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p>제3조(행정처분의 범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말한다. <개정 2016. 1. 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검정·인증·확인·증명·등록 등을 취소·철회하거나 말소하는 처분 2. 영업·업무·효력·자격 등을 정지하는 처분 3.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이전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위반사실 공표명령 등 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위를 명하는 처분 4. 과징금, 과태료 등 위반사실을 이유로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p>제3조의2(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 법 제2조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10.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기 전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서 직무교육 또는 현장실습 등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 2. 피신고자인 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가.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p>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p> <p>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p> <p>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p> <p>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p> <p>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p> <p>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p> <p>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고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p> <p>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p> <p>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p> <p>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p> <p>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p> <p>7. “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p> <p>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p> <p>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p> <p>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p>	<p>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p> <p>나.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p> <p>4. 그 밖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의 지도 또는 관리·감독을 받는 자로서 공익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자</p> <p>[본조신설 2016. 1. 22.]</p>
<p>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p>	

<p>2015. 7. 24., 2017. 10. 31.〉</p> <p>② 기업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p> <p>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p>	
<p>제4조(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 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상금·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조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p> <p>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7. 24.〉</p>	<p>제4조(정책 수립·시행 등) 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2.〉</p>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행정기관, 단체, 기업 등(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④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p> <p>⑤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4조의2(실태조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현황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등 및 특별보호조치결정 등의 이행 현황 3. 다른 법령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현황 4. 공익신고의 처리와 관련된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현황 5.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교육·홍보 현황 6.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조사장소 및 실태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6. 1. 22.]</p>
<p>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p>	
<p>제2장 공익신고</p>	
<p>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p>제4조의2(실태조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현황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등 및 특별보호조치결정 등의 이행 현황 3. 다른 법령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현황 4. 공익신고의 처리와 관련된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현황 5.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관련 교육·홍보 현황 6.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 3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조사장소 및 실태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6. 1. 22.]</p>

제5조(공익신고 기관 등) ①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회의원
2.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② 국회의원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회의원등”이라 한다)는 공익신고를 받으면 법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보내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등은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보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대표자 등의 공익신고 처리 등) ①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공익신고를 받은 대표자 또는 사용자(이하 “대표자등”이라 한다)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등은 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보낼 수 있다. 다만,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등은 제1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조 각

호의 기관에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정보의 범위·보유·이용 목적 및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6조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정보 중 보완이 필요하면 그 자료·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자료·정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 22.]

제25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한도액은 2억원으로 한다.

1.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여부, 형의 종류 및 경중
2.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수 또는 행정처분의 기간
3. 법 제26조의2제1항제3호: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의 내용·기여 정도 또는 공익증진 정도
4. 제25조의2제1호: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금액
5. 제25조의2제2호: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의 내용 또는 공익 증진 정도

②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익침해행위의 조사·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그 조사 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③ 위원회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 중에서 법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正本 및 결정통지서를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⑤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2.]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2., 2018. 10. 16.>

1. 법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 공익신고 내용의 접수·확인·이첩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무

	<p>7. 법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에 관한 사무</p> <p>7의2. 법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사무</p> <p>8. 법 제27조에 따른 구조금에 관한 사무</p> <p>③ 법 제9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신고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4. 4. 8.]</p>
<p>제7조(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p>	
<p>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p>	<p>제9조(공익신고의 이첩) ① 위원회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공익신고를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기관 2.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p>② 위원회는 공익신고 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과 관련 기관은 공익신고가 한꺼번에 처리되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위원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공익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이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0.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게 하는 경우(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

	<p>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봉인·보관하는 자료</p> <p>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 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2., 2018. 10.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 공익신고 내용의 접수·확인·이첩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 조치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무 7. 법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사무 8. 법 제27조에 따른 구조금에 관한 사무 <p>③ 법 제9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신고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4. 4. 8.]</p>
<p>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p>	<p>제7조(공익신고 내용의 확인) ① 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공익신고의 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익신고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p>

<p>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p> <p>[본조신설 2018. 4. 17.]</p>	<p>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봉인·보관하는 자료를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하여 확인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0.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익신고자(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를 포함한다)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근무처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3. 공익신고 내용과 공익침해행위의 관계 4. 공익신고자와 피신고자의 관계 5. 공익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6. 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기 전에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7. 공익신고자가 위원회의 확인 및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p>② 위원회는 제1항제7호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등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에의 절차 등에 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p>
<p>제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위원회가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등을 확인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마친 후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조사·수사 종료 후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p>	<p>제7조(공익신고 내용의 확인) ① 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공익신고의 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익신고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봉인·보관하는 자료를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하여 확인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0.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익신고자(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를 포함한다)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직

회는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의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조사기관이 조사결과에 따라 취한 필요한 조치 외에 관계 법령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1. 제품의 제조·판매중지, 회수 또는 폐기 등
2. 영업정지, 자격정지 등
3. 그 밖에 해당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⑥ 제4항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⑦ 위원회는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거나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⑧ 재조사·재수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재조사·재수사 종료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에게 재조사·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업·근무처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3. 공익신고 내용과 공익침해행위의 관계
4. 공익신고자와 피신고자의 관계
5. 공익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6. 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기 전에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7. 공익신고자가 위원회의 확인 및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② 위원회는 제1항제7호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등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공익신고의 이첩) ① 위원회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공익신고를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기관
2.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② 위원회는 공익신고 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과 관련 기관은 공익신고가 한꺼번에 처리되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공익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이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0. 16.>

1.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 신고를 대리하게 하는 경우(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봉인·보관하는 자료

제11조(조사기관등의 처리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등은 그 공익신고를 다른 조사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조사기관등에 다시 이첩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등은 조사·수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 조사·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④ 위원회는 조사기관등으로 이첩한 신고내용의 처리 상황에 대한 자료를 조사기관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 상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의견제시) 위원회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제시의 내용 및 의견제시에 대한 처리 결과의 회신기한 등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22.]

제11조의3(이의신청 및 재조사·재수사 요구 등) ① 공익신고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요지를 통지받

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를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가 충분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2.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제2호에 따라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22.]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2., 2018. 10. 16.>

1. 법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 공익신고 내용의 접수·확인·이첩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무

7. 법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에 관한 사무

	<p>7의2. 법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사무</p> <p>8. 법 제27조에 따른 구조금에 관한 사무</p> <p>③ 법 제9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신고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4. 4. 8.]</p>
<p>제9조의2(보호·지원 안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2조에 따른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한 사항 6. 제2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7.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제27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p>② 제1항에 따른 안내 대상,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7. 4. 18.]</p>	<p>제11조의4(보호·지원 안내) ① 법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지원 안내 대상자는 공익신고자와 법 제19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공익신고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참고인(이하 이 조에서 “참고인”이라 한다)으로 한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익신고자에게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안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를 접수할 때 2.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수사기관에 이첩한 사실을 통보하거나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공기관에 송부한 사실을 통지할 때 3.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조사기관·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거나 같은 조 제8항 후단에 따라 조사기관·수사기관의 재조사·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할 때 3. 위원회는 신청인 및 참고인에게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안내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안내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p>[본조신설 2017. 10. 17.]</p>

제10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공익신고를 받은 때와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조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조사를 중단하고 끝낼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사기관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종사자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조사기관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또는 이첩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신고 기관 등) ①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회의원
2.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② 국회의원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회의원등”이라 한다)는 공익신고를 받으면 법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보내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등은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보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대표자 등의 공익신고 처리 등) ① 법 제6조제1호에 따라 공익신고를 받은 대표자 또는 사용자(이하 “대표자등”이라 한다)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등은 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보낼 수 있다. 다만,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등은 제1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확인하여 조사기관등

에 이첩(移牒)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가 법 제 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조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2.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 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2., 2018. 10. 16.>

1. 법 제8조,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 공익신고 내용의 접수·확인·이첩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 조치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무

	<p>7. 법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에 관한 사무</p> <p>7의2. 법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사무</p> <p>8. 법 제27조에 따른 구조금에 관한 사무</p> <p>③ 법 제9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신고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4. 4. 8.]</p>
<p>제10조의2(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현황 등을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기관에게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유·이용하는 자료·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5. 7. 24.]</p>	<p>제12조의2(공익신고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조 각 호의 기관에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정보의 범위, 보유·이용 목적 및 제공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법 제6조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정보 중 보완이 필요하면 그 자료·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자료·정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16. 1. 22.]</p>
<p>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p>	
<p>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②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p>	

<p>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p> <p>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p> <p>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p>	
<p>제13조(신변보호조치)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14조(신변보호조치)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하는 자는 요구자와 신변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및 요구 사유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 법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고, 신변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경찰관서의 장은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p> <p>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결정과 제4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해제 사실 및 신변보호조치 기간이 종료된 사실을 요구자와 보호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p> <p>②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p> <p>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④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p> <p>⑤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p> <p>⑥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p>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보호조치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 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③ 다른 법령에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행정적 구제(救濟)절차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호조치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보호조치의 신청 및 조사) ① 공익신고자등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일 7일 전까지 출석 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에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삭제 <2018. 4. 30.>

제16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권고(이하 “보호조치결정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등에 따라 불이익조치를 받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p>③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등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轉職) 등 보호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공익신고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p> <p>④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권고 사실을 보호조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8조(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익신고자등 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2. 공익신고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4. 각하결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또는 기각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5.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호조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 7.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이 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1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모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신청인이 불이익조치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0.></p>	
<p>제19조(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를 신청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조사기관에 통보할</p>	<p>제11조의4(보호·지원 안내) ① 법 제9조의2에 따른 보호·지원 안내 대상자는 공익신고자와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공익신고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참고인(이하 이 조에서</p>

<p>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참고인 4. 관계 기관·단체 또는 기업 <p>③ 위원회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④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疏明)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⑤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조사기관에 통보하면서 공익침해행위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p>	<p>“참고인”이라 한다)으로 한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익신고자에게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안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를 접수할 때 2.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수사기관에 이첩한 사실을 통보하거나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공기관에 송부한 사실을 통지할 때 3. 법 제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조사기관·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거나 같은 조 제8항 후단에 따라 조사기관·수사기관의 재조사·재수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할 때 <p>③ 위원회는 신청인 및 참고인에게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p> <p>④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내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안내 대상자의 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안내할 수 있다.</p> <p>⑤ 위원회는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7. 10. 17.]</p> <p>제15조(보호조치의 신청 및 조사) ① 공익신고자등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일 7일 전까지 출석 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에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문서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삭제 <2018. 4. 30.></p>
---	--

	<p>제17조(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하고, 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보수 및 이자의 산정기간은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날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일까지로 한다.</p> <p>③ 위원회는 제1항의 보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보호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요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p> <p>1. 원상회복 조치</p> <p>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p> <p>3.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p> <p>②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6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허가 또는 계약 등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이하 “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과 기각결정 및 제2항에 따른 권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모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p> <p>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p>	<p>제16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권고(이하 “보호조치결정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등에 따라 불이익조치를 받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등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轉職) 등 보호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을 공익신고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p> <p>④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권고 사실을 보호조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7조(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수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하고, 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보수 및 이자의 산정기간은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날부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일까지로 한다.</p>

<p>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p> <p>⑤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결정 이후 2년 동안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31.></p> <p>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31.></p>	<p>③ 위원회는 제1항의 보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17조의2(보호조치결정의 이행 점검) 위원회는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해당 보호조치결정 이후 2년 동안 6개월마다 불이익조치를 한 자(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소속된 기관·단체·기업 등을 포함한다) 및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의 발생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8. 4. 30.]</p> <p>[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2018. 4. 30.>]</p> <p>제19조(조치결과 등의 통보) 위원회로부터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권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은 자는 요구·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 또는 조치를 하지 못한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20조의2(특별보호조치) ①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특별보호조치결정에 대하여는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를 준용한다.</p> <p>[본조신설 2015. 7. 24.]</p>	
<p>제21조(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①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확정된다.</p>	

<p>③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p> <p>④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7. 24.></p>	
<p>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개정 2018. 4. 17.></p>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p> <p>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p> <p>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p> <p>⑤ 위원회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보호조치를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p> <p>⑥ 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p> <p>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5. 7. 24.]</p>	<p>제17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의2제1항(제20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p> <p>[본조신설 2016. 1. 22.]</p> <p>[제17조의2에서 이동 <2018. 4. 30.>]</p>
<p>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p>	<p>제18조(불이익조치 금지) ① 공익신고자등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p>

<p>② 위원회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받을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p> <p>③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④ 위원회는 조사 결과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p>	<p>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한 경우에는 그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권고 사실을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9조(조치결과 등의 통보) 위원회로부터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권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은 자는 요구·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 또는 조치를 하지 못한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7. 10.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2.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4. 공익신고자등이 이 법에 따라 공익신고등을 한 후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p>제24조(화해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권고를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p>	

<p>따라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안은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이 들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p> <p>② 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함에 있어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p> <p>③ 관계 당사자가 위원회의 화해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p>	
<p>제25조(협조 등의 요청) ①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이나 위원회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제20조(협조 요청) 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료·서류 등의 제출 또는 설명 2. 출석 및 의견 진술 3. 소속 직원의 파견·공동조사 및 자문 4. 공익신고자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질병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5. 법률 상담·자문 및 소송의 대리 등 피해 회복 및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구조 6.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제공 및 취업 알선 7.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제25조의2(정치 운동 등 신고의 특례) 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국가정보원직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정보원직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가공무원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p>	<p>제20조의2(정치 운동 등의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등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정치운동등”이라 한다)를 지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치운동등의 지시를 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사람이 소속된 기관의 장

<p>1.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따른 정치 운동</p> <p>2.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따른 정치 운동</p> <p>3. 「군형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정치 관여</p> <p>② 국가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 및 「군형법」 제8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③ 누구든지 제2항의 신고자에게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본조신설 2014. 1. 14.]</p>	<p>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구술로 이의제기를 한 후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의제기를 한 사람의 이름, 소속, 직위 등 인적사항 2. 정치운동등의 지시를 한 사람의 이름, 소속, 직위 등 인적사항 3. 정치운동등의 지시를 한 일시 및 장소 4. 정치운동등의 지시 내용 5. 이의제기의 취지와 이유 <p>④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사람은 이의제기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 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이의제기를 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제기가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이의제기를 한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4. 4. 8.]</p>
<p>제4장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 <개정 2015.7.24></p> <p>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p>	<p>제21조(보상금 지급 사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판결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2.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p>제25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보상금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의 절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부과 등에 대한 이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끝난 후에 지급한다.</p>

<p>(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 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p> <p>⑤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위원회로부터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p> <p>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6조의2(포상금 등)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7. 10. 31.></p> <p>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p>	<p>제25조의2(포상금의 지급사유) 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2.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본조신설 2016. 1. 22.] <p>제25조의3(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한도액은 2억원으로 한다.</p>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목개정 2017. 10. 31.]

1.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여부, 형의 종류 및 경중

2.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수 또는 행정처분의 기간

3. 법 제26조의2제1항제3호: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의 내용·기여 정도 또는 공익증진 정도

4. 제25조의2제1호: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금액

5. 제25조의2제2호: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의 내용 또는 공익 증진 정도

②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익침해행위의 조사·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그 조사 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③ 위원회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 중에서 법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고, 포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 정보

	<p>및 결정통지서를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p> <p>⑤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p> <p>[본조신설 2016. 1. 22.]</p>
<p>제27조(구조금)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p> <p>③ 위원회는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⑤ 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p>	<p>제26조(구조금 산정 기준) ① 보상심의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조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입원·투약·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노무사 등의 수입료 4.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5.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 <p>②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금 손실액의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p> <p>③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평균임금은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p> <p>④ 구조금 지급액의 감액 또는 구조금의 부지급(不支給)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신설 2014. 9. 2.></p> <p>제27조(구조금의 지급 결정) ① 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구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구조금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우선 지급한 후 보상심의위원회가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 4. 30.></p>

	<p>②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27조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가 구조금을 우선 지급한 후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구조금 지급 여부 또는 지급금액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위원회는 결정서 정보 및 결정통지서를 구조금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신설 2018. 4. 30.></p> <p>제27조의2(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의 절차)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신속히 결정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4. 9. 2.]</p>
<p>제28조(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p> <p>②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p> <p>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p>	<p>제28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른 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등에 보상금·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행정기관등이 제1항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p>

제29조(보상금과 구조금의 환수 등) ①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1.>

1.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구조금 신청인이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받았으나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3. 구조금 신청인이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급받은 구조금이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4.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5.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위원회로부터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과 지방자치단체가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공익신고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3.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해당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받은 형사처벌의 정도 5. 불이익조치의 유형·기간·횟수 등 6.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재산상태 7.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공익신고자등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p>[본조신설 2017. 10. 31.]</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벌칙</p>	
<p>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p>제30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본조신설 2015. 7. 24.]</p>	
<p>제31조(과태료) ① 제19조제2항 및 제3항(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제20조의2의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 7. 24.></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 7. 24.></p>	<p>제3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1. 22.></p>

13.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익신고등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을 말한다.
6.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내부공익신고자를 말한다.
7. “우수기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된 기업을 말한다.
8. “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침해 취약 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9. “공익신고 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행하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공익신고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체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시장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지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법 제28조에 따른 중복지급금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시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시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3장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제9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환경조성사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7.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4장 우수기업 선정 및 환경조성사업 지원

제11조(우수기업 선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
2. 공익신고 접수·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3.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
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5.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6. 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

② 제1항에 의한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① 시장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세무조사 등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기타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환경조성사업 선정) ① 시장은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주민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분야의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환경조성사업 대상 공익신고 보조금 지급) 시장은 환경조성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5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① 시장은 감사 또는 민원업무 담당자를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16조(민간협력)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원
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제17조(포상)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14-05-26 조례 제5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1-05 조례 제6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4.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게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익신고등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내부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 본청·시의회·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소속 공무원과 이에 파견된 공무원(공중보건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를 포함한다) 및 인천광역시 소속 청원경찰에게 적용한다.

제4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시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신고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감사관실에서 설치하며, 각 업무 소관부서에도 공익신고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6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등)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공익신고책임관(이하 “공익신고책임관”이라 한다)은 감사관으로 하고, 공익신고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공익신고담당관(이하 “공익신고담당관”이라 한다)이 되며,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보호·보상제도 안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제7조(공익신고 상담) ①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업무 소관부서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8조(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담당관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담당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공익신고담당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제10조(공익신고 접수절차) ① 공익신고담당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11조(대표자 선정 등) ① 공익신고담당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완의 요구) ① 공익신고담당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공익신고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담당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3조(신고의 철회)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철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담당관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담당관은 신고가 철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제14조(공익신고기록) ① 공익신고담당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 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② 공익신고담당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담당관은 공익신고자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

④ 시장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자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공익신고의 처리

제15조(공익신고의 조사) ① 공익신고담당관은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담당관은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첨부한다.

③ 공익신고담당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 조사·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 ④ 공익신고담당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⑤ 공익신고담당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공익신고담당관은 제1항의 조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⑦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공익신고담당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6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① 공익신고담당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담당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송부할 수 있다.

제17조(공익신고의 종결) ① 공익신고담당관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6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 ② 공익신고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 또는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익신고자가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조사결과 또는 제17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 ②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 ③ 공익신고담당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제19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공무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 ②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시장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속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시장은 소속직원이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소속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21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① 시장은 공익신고등을 한 소속직원이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공익신고등을 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소속직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실시하거나,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22조(신변보호 안내) 공익신고담당관은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23조(징계의 감면) ① 시장은 공무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② 공무원이 이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24조(불리한 처분의 감면) ① 시장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담당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6.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8.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26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2. 국가 또는 시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제27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공익신고담당관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시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이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 ② 공익신고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8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공익신고담당관은 공익신고자등이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법 제27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용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제29조(협조 등의 요청) 공익신고담당관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13-12-02 훈령 제113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08-28 훈령 제1171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1-15 훈령 제1189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5.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0.>

1.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신고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2.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 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을 포함한다)
 -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시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 라. 시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 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3.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
 - 다.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제3조(신고방법) ① 제2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시 감사관에게 한다.

- ②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언제라도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 ③ 감사관은 신고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3의 장소 및 시간에 방문·접수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표 1의 서식에 의거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사실조사) ① 감사관은 부조리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실험·검사·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휴직·장기입원 및 천재지변 등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실여부 조사시 필요한 경우 신고자 및 피신고자로부터 진술서 등 확인조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5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감사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히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감사관은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부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관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감사관은 제1항의 통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신고보상금 등) ① 신고보상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별표2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보상금 지급은 본인 명의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③ 신고보상금은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결정을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1>

④ 제3항의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6. 감사부서 직원이 신고한 사항
7. 그 밖의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사항

제13조(환수) 시장은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2조의 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4조(손해배상) 신고자 및 협조자는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분노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05-21 조례 제5097호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 칙 〈제 6294호,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 처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국민권익위원회 2020년)
- ☞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국민권익위원회 2020년)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국민권익위원회 2020년)
- ☞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국민권익위원회 2021년)
- ☞ 2021년 제2기 청렴 엑스퍼트 과정(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2021년)
-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법령 신고·조사 및 보호보상 업무 매뉴얼(국민권익위원회 2020년)
- ☞ 2020 부패영향평가 지침 및 매뉴얼(국민권익위원회 2020년)
- ☞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국민권익위원회)
- ☞ 2021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계획(국민권익위원회)
- ☞ 2020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국민권익위원회)

청렴이음

청렴한 당신을 응원합니다

발 행 인천광역시
기 획 인천광역시(감사관)
발행일 2021. 7. (초판)
디자인 032디자인(주)

www.incheon.go.kr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발간등록번호 : 54-6280000-000509-10

